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이행상황 요약

2024. 12.

국 가 인 권 정 책 협 의 회

목 차

Ⅰ. 2023년도 이행상황 총괄 1

Ⅱ. 분야별 2023년도 주요 이행상황 2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2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10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21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34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39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42

Ⅰ 2023년도 이행상황 총괄

○ **(현황)** 271개 과제 중 완료 6개, 추진중 265개(일부완료 5개 포함)

< 제4차 NAP 2023년도 분야별 이행상황 현황(개) >

분 야	계	완료	추진중	일부완료	지연
계	271	6	265	5	-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46	-	46	-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84	3	81	1	-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79	1	78	1	-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0	-	20	2	-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11	-	11	-	-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31	2	29	1	-

○ **(완료)**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고용부) 등 6개 과제

연번	과제번호	과 제 명	부 처
1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고용부
2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복지부
3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여가부
5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부
6	Ⅵ-2-(2)-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교육부
7	Ⅵ-2-(5)-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여가부

○ **(일부완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여가부) 등 5개 과제

연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완료부처
1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여가부
2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법무부
3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과기부·개인정보위
4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교육부
5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여가부

○ **(기타)** 제21대 국회 종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된('24.5.) 법안 관련 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추진 또는 논의지원 계속 필요

Ⅱ 분야별 주요 이행상황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총 괄

○ (개요) 생명 존중,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보장,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기본적 자유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생명권】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추진중
2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중
【신체의 자유】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추진중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추진중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추진중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추진중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추진중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추진중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추진중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추진중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추진중
12	Ⅰ-2-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중
13	Ⅰ-2-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추진중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중
【안전권】			
17	Ⅰ-3-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추진중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추진중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추진중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추진중
【표현의 자유】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중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중
【결사.집회의 자유】			
25	Ⅰ-6-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추진중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추진중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추진중
【사생활의 자유】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추진중
29	Ⅰ-7-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추진중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중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추진중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추진중
【거주.이전의 자유】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인격권】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추진중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추진중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 보호	추진중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추진중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중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추진중
41	Ⅰ-10-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추진중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추진중
【참정권】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중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46개 과제 모두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생명권

【교육부·복지부】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60,375명을 학교 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하였고, 학생 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학교 자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 등 자살·자해 예방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력을 제고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 관심군 78.8%, 자살위험군 81.9%

○ (복지부)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 자살 사망자 특성을 분석하고(228개 시·군·구 배포),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며(생명지킴이 1,902,054명 양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하고(9개 시·도),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치료비를 지원하며(9.1억원), 민관 협력 캠페인·홍보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 추진(공익광고·뉴미디어 등 온·오프라인 매체)

신체의 자유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강화

○ 서울지역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3.11.),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23.12.),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24년 예산 3,100백만원 신규 반영 등 범죄피해자가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범죄피해자 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간병비·임시안전숙소 지원 등 예산을 2,190백만원 증액하며,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 스마일센터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며,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을 통한 백서 발간·배포 등 심리치유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하였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비대면 자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며, 다링안심캠페인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를 전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23.1.), 성폭력처벌법 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며('23.10.),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23.12.), 피해자 국선변호사 592명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강릉·마산 등 8개 지역에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8명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23.12.),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미만 → 19세 미만), 신규 진술조력인 15명 양성·배치, 진술조력인의 보수교육·사례관리회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를 확대·강화

【법무부】 구금·보호시설·불법체류외국인 처우 개선

○ 부산·서울·안양소년원 생활관·생활실을 리모델링하여 보호소년 160명의 개별처우 기반을 강화하고, 거창구치소 준공('23.1.) 및 제주·목포·춘천·천안교도소 등 수용동 증·개축으로 교정기관 수용정원 932명을 확보하는 등 구금·보호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추진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6,955명) 및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3,508명)을 실시하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에 전기·승강기 등 4개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에 학점은행제 14개 과정을 도입하고, 서울소년원 등 10개 소년원에 체험학습 등 개방처우(297회 3,354명)를 실시하는 등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고 영상촬영 등 채증을 실시하며,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여 '23년 43천명이 자진출국하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운영하며, 보호외국인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하는('23년 23,234건) 등 불법체류·보호외국인 인권 강화를 추진

안전권

【행안부·문체부】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 (행안부) 17개 시·도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54개 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을 개정*

* 신종 위험유형인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정전 등 추가

○ (문체부) 유원시설·야영장·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1,105개 시설·소) 및 스포츠 안전교육을(73,776명) 실시함

* (유원시설) 상·하반기·동절기 안전관리 실태점검(887개소), 사업자·안전관리자 788명 안전교육 실시 및 온라인 교육(연중상시), / (야영장) 등록야영장 안전점검(연 3회) 및 사업주·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3,191명 수료), 차박 관리·감독 법적근거 마련('23.10.개정) / (관광숙박시설) 동절기·집중안전점검(924개소), 종사자 대상 위생·안전교육 실시(연중상시) 등

사생활의 자유

【법무부】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정보조회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개인정보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하여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관리*('23.4.)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법무부 소관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한 제·개정 법령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입법 지원

*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KICS 운영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 법무부 소관 법령 60건 중 평가 대상 법률 31건 검토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국방부】 군 장병 인권보호

○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보수교육*·수퍼비전**을 실시하고, 군 간부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대상 확대하며(심리검사 결과 위험군 군 간부 → 상담을 희망하는 전체 군 간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양성하고('23. 729명),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를 운영하여 총 7,907건의 상담과 211건의 진정을 처리하며,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인권정책 관련 제안 127건을 시행

* 상담 이해·해석기법, 트라우마 치료기법 등 체험 프로그램(2박3일)

** 상담사례 분석·평가 및 상담관의 감정소진 회복, 희망 상담관 대상 연1회 지원

○ (여가부)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하여 심리상담·치료 및 수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며('23. 3월),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23. 3개소), 조직문화 진단 지원(23. 11개소) 등 사건 대응 체계 내실화를 지원

【권익위】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조정·합의를 통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민원 177건을 해결하여 주민 12만 명의 숙원 해소

* 문화재 복원으로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 요구(주민 33,434명), 태안 안흥진성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요구(주민 19,544명) 등

○ 광역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고충민원 기본교육(42회, 2,100명)과 집합교육을(3회, 840명) 실시 및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참정권

【인사처】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장애인 등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 시행('23 ~ '27년)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22년 11.2% → '23년 11.7%,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2년 26.4% → '23년 28.4%

○ 국가직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장애인 185명을(7급 39명, 9급 146명),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을 통해 장애인 41명을 선발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140명 선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선발(49명) 및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추진으로 우수 인재 공직 등용(485명)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생명권

○ 자살 문제는 전반적인 경쟁적 구조,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정, 사회적 차별, 고립, 정신건강 문제, 사회안전망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다수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복지부)

신체의 자유

○ 국선변호인·피해자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에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을 증액하며 국선변호인 지역 편중 완화, 진술조력인의 대상 확대(지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피고인 등) 및 조력 요건 완화 검토, 범죄피해자보호법·형사소송법상 용어의 입법적 정비 필요(법무부)

○ 검찰·경찰 간 동일 사건 및 보완수사·재수사 사건이 형사사법포털에서 하나의 사건 번호로 추적 관리되도록 개선 필요(법무부)

○ 과밀수용 문제 관련 불구속·가석방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장기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1인당 수용 면적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 필요(법무부)

○ ‘강제단속 추방’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로 인식을 전환하고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반영(법무부)

결사 · 집회의 자유

○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중복집회의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력(질병청·경찰청)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자살 등 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도입·활성화 필요(국방부)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총 괄

○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시간 근로 개선 등 노동권, ▲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 상병제도 도입·운용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과제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노동권】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추진중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중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추진중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중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추진중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추진중
8	Ⅱ-1-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추진중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추진중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추진중
11	Ⅱ-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12	Ⅱ-1-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추진중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일부완료**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추진중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완료('23)**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추진중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추진중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중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중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추진중
21	Ⅱ-2-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추진중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중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추진중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추진중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중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추진중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추진중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추진중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추진중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추진중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중
36	Ⅱ-2-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추진중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추진중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추진중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추진중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추진중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추진중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추진중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중
44	Ⅱ-3-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추진중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추진중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추진중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추진중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추진중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추진중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중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추진중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추진중
54	Ⅱ-3-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추진중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추진중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추진중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추진중
58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완료('23)**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추진중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중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추진중
【교육을 받을 권리】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중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추진중
64	Ⅱ-4-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추진중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추진중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6	Ⅱ-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중
67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과제완료('23)**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추진중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추진중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추진중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추진중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추진중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중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추진중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중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중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중
81	Ⅱ-6-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추진중
82	Ⅱ-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추진중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추진중
84	Ⅱ-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84개 과제 중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고용부) 등 3개 과제는 완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1개 과제는 일부완료(여가부), 80개 과제는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노동권

【고용부】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완료)

○ 근로자참여법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및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고(1,900권), 전국 지방관서 등에 배포('23.1.)하여, 법령 개정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적법한 노사협의회 운영에 기여

【교육부·고용부·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일부완료)

○ (여가부 완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충*으로 전국적 보호 지원 체계·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4종을 개발하며, 청소년 근로보호 상담(8,041건), 현장 방문 등 중재 해결(83건, 69명) 및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전국 중고교 1,316회, 총 47,928명 교육)

* ('13.~'17.) 중앙지원단 1개소 → ('22.~'23.)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17개소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당처우 해결을 지원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중재 해결을 지원하여 만족도** 제고 ** '23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0.10점

○ (교육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하여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내용을 개편, 운영(63,567명 이수)

○ (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하여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시(4,734회 100,245명), 청소년 다수사업장 6,363개소 노무관리지도 실시, 피해 청소년의 노무사 등 상담·권리구제 지원(상담 37,733건, 권리구제 1,105건) 등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을 제고

【여가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여가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를 위하여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제출기한을 단축하고(3개월→1개월) 사건 통보 등 의무 미 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23.4.),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정·배포('23.1.)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2,891건 신고상담, 74건 접수·처리) 등 신고·상담 활성화

○ (유관부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직원 교육 실시, 조직 내 성폭력 실태 조사 실시

- (문체부)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을 마련하고('23.4.),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며('23.6.), 예술인권리 보장센터를 개소하고('23.12.),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실천규약 표준안」을 작성
- (법무부) 「법무부 주변인 개입 교육 표준교안」 및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숙달모델」 작성
- (경찰청)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및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및 성범죄 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고용부·복지부】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저임금 종사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인원을 늘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3.7.)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 자료 확보 및 맞춤형 홍보 등을 실시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

* 월소득 230만원 미만 → 260만원 미만,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 4,300만원 미만

** 고용보험 지원 인원 '22년 월평균 38만명 → '23년 월평균 54만명
국민연금 지원 인원 '22년 월평균 40만명 → '23년 월평균 44만명

【국토부】 주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매뉴얼」을 수립·배포하고('23.11.),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요건 완화 및 사업비 융자 지원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였으며,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23.1.),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22호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4,086호를 선정하며, 주택도시기금 113,124억원을 집행하여 신혼가구·청년가구 등 91,247건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고('22년 기준중위소득 46% → '23년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였으며(월평균 급여액 '22년 17.8만원 → '23년 18.1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 주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동 시행령 개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대상지역 확대,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기준 완화(2만㎡미만→4만㎡미만) 등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신설,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서울 5천만원 → 5천5백만원)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규정,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등

건강권 및 보건 · 환경에 대한 권리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완료)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23.4.) 및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12.) 수립·시행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수를 확대(2,446천명)하고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24. 4월 충남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도 17개 지자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완료하였고,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55개소) 등 지역의료기관 간 진료 및 자원·인력분야 등의 협력을

도모하며 재정투자(개소 당 권역 6.6억원, 지역 4.8억원 국비 지원)를 통한 지역의료 전반역량을 향상하였으며,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개소당 1.5억원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추진

【식약처】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청소년 575천명에게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23.7월)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범정부 통합플랫폼 및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운영, 데이터 기반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감시 체계 운영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을 통하여 마약류 유통 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환경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표준화하여 일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23.~), IPCC의 1.5℃ 상승시점 단축('52년→'40년)을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수립('23.6.)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기존 7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며,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23.9.)하여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5개사 → 7개사) 및 보유한도 상한 확대(시장조성자 150→600만톤, 증권사 50→100만톤) 등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여 2018년 배출 정점 이후 국가 총배출량 감소에 기여('18년 725백만톤 → '23년 626.1백만톤)

문화 · 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여가부】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확대(완료)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 전국 126개소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47개국 127명이 참여한 '글로벌 청소년 서밋'을 개최('23.7.)하여

전지구적 의제 토론, 문화교류활동, 공동과제 수행, 권고문 발표 등을 경험하였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을 확대

【문체부】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영화분야에서 감독·작가 등 영화 창작자의 창작환경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23.3.,12.) 근로표준계약서 및 연출·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만화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의견 조율

【문체부·과기부】 장애인·노인·문화소외계층의 스포츠·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3개소(부산·용인·목포)를 조성하였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다각화하여 생활체육교실 678개소와 동호인 클럽 27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고('23.6. 익산시, 1,122명 참여), 생활체육지도자 785명 배치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13개소를 선정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2개소(강원·충북)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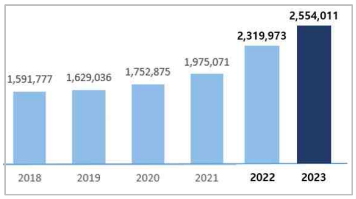
○ (노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 노년 중심 문화활동 15개를 지원하고 지역특색 노년문화활동 148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23.10.)하는 등 노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 (과학·문화소외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를 255만명으로 확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화면해설과 자막을 추가한 '가치봄영화' 122편을 제작하며, 전국 70개 영화관에서 최신 한국영화를 한글자막과 함께 동시 개봉하여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580개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논현도서관 등 136개 도서관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도서벽지 및 소외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22년 142천명→163천명) 과학문화바우처의 1인 지원금을 상향(3만원→5만원)하며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인트몰을 신규 구축하는 등 과학 문화바우처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문화 취약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찾아가는 과학관'을 5개 권역에 10회 운영하는 등 과학·문화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

< 최근 5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 평균 증가율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발급자수(명)	1,629,036	1,752,875	1,975,071	2,319,973	2,554,011
증감율(%)	2.3%	7.6%	12.7%	17.4%	10.1%



가족 상활에 관한 권리

【교육부】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신축·매입·리모델링 등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14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23년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6천2백개소, 이용 아동은 29만명으로 '22년말 대비 약 400개소, 1만명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공보육 이용률'은 약 40%로 '22년말 대비 약 3%p 상승하였음

【여가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확대('22년 4개소 → '23년 14개소)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를 확대하고('22년 연 840시간 7.8만 가구 → '23년 연 960시간 8.5만 가구), 긴급·단기간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여가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23.10.)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확대하고('22년 누적 245호 → '23년 누적 266호),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 ('22) 중위 52%이하 → ('22.10월) 중위 58%이하 → ('23) 중위 60%이하

** (전)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 후 아동양육비 지원 → (후) 아동양육비 지원 후 유전자검사 결과 사후 보완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였으며,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 책임성 제고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수 (`22) 778명 → (`23) 953명

* 양육비 이행률(`22) 40.3% → (`23) 42.8%

* 면접교섭 참여자 수 : (`22) 789명 → (`23) 910명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노동권

○ 부처간 협업·연계를 통하여 소수자(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성희롱 근절 대책 필요(여가부·복지부)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청소년 근로자 권익 향상에 미친 실질적 효과에 대한 후속 평가 지속적 실시 필요 (교육부·고용부·여가부)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전세사기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등에 대한 주거권 보장 강화 필요(국토부)

안전권

○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의 체계적 추진, 공공의료원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검토 필요(복지부)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단('24.8.) 관련하여 적극적인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환경부)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위 사업이 아동유기·불법입양의 근절 및 양육비 지급 강제의 기본 환경이 되는 지원 사업임을 인식하여야(여가부)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총 괄

○ (개요) ▲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과 재외동포, ▲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평등 증진】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추진중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추진중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추진중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추진중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추진중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추진중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추진중
		【여성】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중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중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추진중
11	Ⅲ-2-④	모·부성권 강화	추진중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추진중
		【아동·청소년】	
14	Ⅲ-3-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추진중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추진중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추진중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추진중
18	Ⅲ-3-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추진중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추진중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중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중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중
24	Ⅲ-3-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일부완료**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추진중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추진중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추진중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추진중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추진중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추진중
		【장애인】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34	Ⅲ-4-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중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중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추진중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추진중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추진중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추진중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중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추진중
43	Ⅲ-4-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추진중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추진중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추진중
		【노인】	
46	Ⅲ-5-①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9	Ⅲ-5-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추진중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추진중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완료('23.)**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추진중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중
		【외국인과 재외동포】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추진중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추진중
58	Ⅲ-6-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추진중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추진중
60	Ⅲ-6-⑦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중
61	Ⅲ-6-⑧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추진중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추진중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추진중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추진중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추진중
68	Ⅲ-6-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추진중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추진중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추진중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추진중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추진중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추진중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중
		【북한이탈주민】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추진중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중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중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79개 과제 중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복지부) 1개 과제 완료,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1개 과제 일부완료(복지부), 77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평등 증진

【고용부】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분석 등 임금격차 자율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강화('22년 996개 →'23년 1,028개)하여 성별임금격차가 다소 완화('17년 기준 34.6% → '23년 29.3%)

○ 스마트건설설계·클라우드보안관리 등 10개의 새로운 NCS를 개발하고 산업보건관리 등 110개 NCS를 산업 수요에 맞춰 개선하여 1,094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확정·고시('23.11.)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직무분석과 채용·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의 컨설팅을 740건 지원하는 등 NCS 기반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

【여가부·교육부】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여가부) 중앙부처·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12천명 참석), 공무원 사이버 교육 11개 과목을 운영하며(21천명 수강),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을(15회) 실시

○ (교육부)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운영에 활용 가능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안내서"를 제공하고('23.9.),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35개 기관 764개 자료를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ITDA)에 탑재·지속관리하여 교사 수업을 지원하며,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직무연수('23.7., 123명)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초·중등 국립학교 대상 상설연구학교 연구과제를(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하는(6개교, '22.3.~'24.2.) 등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방통위·문체부】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 (방통위) 인권침해, 문화 차별·비하, 혐오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을 15건 실시(법정제재 4건, 행정지도 11건)

○ (문체부) 아동·청소년 연령별 초등 미디어교육 교재 배포(12,266부)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교급별·교과별 교사연수 100개 과정 운영, 찾아가는 교사연수 35회 운영), 언론인 대상 장애관련 보도 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비하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인·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

여 성

【여가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여가부)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108개 과제) '1366 통합지원단'을 설치(부산·경기)하여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3.~'27.)」을 수립·시행하는 등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22. 34개소 → '23. 35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의료비를 증액하며('22. 20억원 → '23. 23억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는(25개소 각 1명) 등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성매매 집결지 내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여 인권유린 방지 및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성매매 피해자 취업현황 '22년 1,530명 → '23년 1,563명)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경찰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교육을 경찰청 법정 교육으로 지정·운영하고('23. 전체 경찰관 중 85.3% 이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탑재·관리하며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방지법」 제정·시행('23.7.), 「공공부문 예방지침 표준안」('23.11.) 및 「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23.12.) 수립,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2종 시범 배포·운영,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747명), 수사기관 대상 교육(1,543명) 실시 등 스토킹방지 기반을 구축하고,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운영(6개소→17개소), 전담인력 증원(3명→4명), 관련 예산 증액('23년 1,420백만원 → '24년 2,458백만원) 등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스토킹방지법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송출하는 등 홍보 전개

【복지부·여가부】 여성 건강증진 강화

○ (복지부)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고('23.),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평가결과를 공개('23.5.)·사후관리하고('23.1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한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여('23.9.)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가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1인당 연 156천원 한도)

아동 · 청소년

【법무부·통계청】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법무부 완료)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23.7)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사실을 확인·최고하고 필요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24.7.시행)

【복지부】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 출생미등록 아동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하여 범부처 추진단을 운영하고('23.7.~)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정하였으며('23.10.제정, '24.7.시행)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247명), 보수교육(384명), 아동보호팀장 과정(130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적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1,740회) 양육상황을 점검하는(92,853회) 등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범부처 대응으로 아동학대 위기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23.4.), 공공부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긍정양육 129'원칙 확산을 위한 리플렛 80만 부를 제작·배포하고 공익광고(2편)를 제작·송출하는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99,612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20,54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90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개입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22년 8개소 → '23년 15개소),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22년 1,000가정 → '23년 1,200가정) 등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 1388 채널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여 상담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 운영하고('23.3.) 종합심리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화지원을 강화하였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신규 운영(전남·대전·세종)하여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22년 20개→'23년 22개, 청소년동반자 1,363명→1,398명

장애인

【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광주, 20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공단가를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총 194호의 주택을 확보하고 66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총 103명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하고 자립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선택권, 사생활, 외부활동 등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가 상승(좋음 이상 평균 79.8% → 83.1%)

* 대상자 '22년 1만명 → '23년 1.1만명, 제공단가 '22년 14,,800원 → '23년 15,570원

** 대상자 '22년 107천명 → '23년 115천명, 가산급여단가 '22년 2천원 → '23년 3천원

*** 이용자 '22년 9,211명 → '23년 12,676명, 만족도 '22년 90.1점 → '23년 91.8점

【법무부·복지부·국토부】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법무부)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해 2023년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심화과정에 '장애인학대 사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과목을 개설하여 장애인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교육하였고, 성폭력처벌법을 개정·시행으로('23.10.) 성폭력·장애인 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22.1.)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에 장애인 특성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

○ (복지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장애인의 소득 활동·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해 민·관·산·학 연계 시스템을 구축

하고 국제세미나·공모전(491명 참여)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을 확대하며, 8개 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활성화(예비인증 1,676건, 본인증 744건)

○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3.7.)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확보 대수를 상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24시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23.7~, 운영비 237억 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

* 중증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노 인

【복지부】 노인 건강권 보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 시범사업을 10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23.12월 기준,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 명 참여), 저소득 노인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2023년에는 4,706명의 노인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하고 1,555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여 노인계층의 삶의 질 개선

【고용부】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장년층 0.7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1,354명의 참여자 대상 949회 운영),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여 고용서비스로 연계하는 협업모델을 구축('23년 서울시 등 40개 기관과 MOU 체결)

외국인과 재외동포

【고용부】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등

○ 고용부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규모를 확대하였으며('22년 3천여 개소 → '23년 5,500개소),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외국국적동포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숙소 환경 등을 지도·점검하여 6,657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하고,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23.11.)을 시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을 강화

【여가부·해수부·대검찰청·경찰청·해경청】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 (여가부) 「인신매매등 정책조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23.3.),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하여('23.3.) 1,432명에게 적용하고 55명의 피해자를 확인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유튜브 광고(243만 회 조회), 가이드북(5천 부), 리플릿(11개 언어, 16만 부), 동영상 교육(187,403명) 등을 전개하였고, 중앙권익보호기관 내 민관합동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피해자확인서 3건 발급) 인신매매 피해 상담전화를 설치·운영

○ (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23.4.), 선사·선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52,385명), 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 선원의 85% 수준으로 상향*하고,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송출국(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 '22년 1,914,440원 → '23년 2,114,494원

○ (대검찰청)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취업 빙자 외국인 여성 성매매 유인 사범'(광주지검)과 '미얀마 한국인 감금 및 투자사기 강요 사범'(대구지검)을 구속 기소하고, 중대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청에 전파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명의 성매매·노동착취 피해자를 식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23.6.), KICS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 진술권과 이송 청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였으며('23.6.),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원을 독려하고('23.1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23.12.) 생계비 등 지원금 상한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제출서류를 간소화

○ (경찰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경찰청 자체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고, 성매매 등 피해 정황이 있는 범죄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별도의 안내서를 신설하여 피해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교부

○ (해경청)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의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3.7.)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3명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장애인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여 지원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24.1.공포, '24.7.시행)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변보호 기간도 5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시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강화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23.12.) 세대별 정착기본금을 각 100만원 인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8,5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북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였고,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23.12.) 고위험군 상시관리 확대('22년 1,200명 → '23년 6,000명),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562명),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63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지원 등 99,46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23.3.) 회의비로만 사용되던 예산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평등 증진

○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과 관련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논의의 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법무부)

○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직 내 양성 대표성을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노력 필요(고용부·여가부)

여 성

○ 실질적인 피해 감소·예방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해자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고소할 수 없는 피해자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의료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파악하고 촘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계획 마련 등(여가부)

아동 · 청소년

○ 제정 위기임신출산보호법 관련하여 지적되는 아동의 알권리 침해, 장애 아동 유기 등 우려사항 보완 필요(복지부)

○ 촉법소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향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논의 촉발을 방지할 필요(법무부)

장애인

○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외에도 장애여성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국가 보고서에 따른 최종 견해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복지부)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임금체불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구체화 및 이행 강화 필요(법무부)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총 괄

○ (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및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1	IV-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추진중
2	IV-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중
3	IV-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추진중
4	IV-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추진중
5	IV-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일부완료**
6	IV-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추진중
7	IV-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추진중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8	IV-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추진중
9	IV-2-②	디지털 교육 강화	**일부완료**
10	IV-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추진중
11	IV-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추진중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12	IV-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추진중
13	IV-3-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추진중
14	IV-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추진중
15	IV-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추진중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16	IV-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추진중
17	IV-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추진중
18	IV-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추진중
19	IV-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추진중
20	IV-4-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디지털 교육 강화' 2개 과제 일부완료(과기부·교육부·개인정보위), 18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과기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국무회의 보고('23.5.) 및 대학 총장, 주요 학회장, 기업 CEO 등 간담회 개최('23.7.~9.) 등 각계의 사회적 논의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 국무회의 보고)

【과기부·방통위·개인정보위】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과기부·개인정보위 완료)

○ (과기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하고('23.12.), 19개 국내 유관사업, OECD 38개 공관, 해외 9개국 539개 산·학·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영역 주체별 실천윤리 이슈별 경험 유무와 인식수준 조사 등 추진을 통해 실제적용 및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추진하고, 해설서·사례집·교육영상 15종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초중고·대학·학부모 3,50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윤리교육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 및 피드백 반영을 진행하였으며, 메타버스 자율규제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현황을 공유하며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 이행방안을 논의('23.10.)

○ (방통위)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수립·발표('23.11.)하고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기본원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24.9.~11.) 하였으며, 메타버스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25.~)

○ (개인정보위)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정책연구 추진('23.5.~12.) 및 메타버스 실천윤리 내 "개인정보 보호" 기본조항 마련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교육부·과기부】 디지털 교육 강화(교육부 완료)

○ (교육부)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포함한 중장기 ('24~'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23.4.)

○ (과기부)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과정 확대를 통하여 산업 맞춤형 실무형 인재 8,684명* 양성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뒷받침

* (기술분야별) AI 5,888명, 블록체인 1,110명, 데이터 1,094명, N/W 200명, IoT 392명
(권역별) 수도권 1,549명, 동남권 1,784명, 동북권 1,946명, 충청권 2,022명, 호남권 1,383명

【복지부】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ICT 활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여 238,806대 설치하고 응급호출·화재발생·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155,373건을 조치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족도 조사 87점 달성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 보건소를 확대하고(88개소 → 141개소, 57,664명 서비스 이용) 관리를 강화하여(신체활동 개선율 62%, 식생활 개선율 52%, 악력유지율 61% 등) 사업만족도 평균 91.9점을 달성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23.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의 데이터 형식 표준 및 전송규격 등 기술규격(안)을 마련하며,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활용방법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노년층·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메신저, OTT 앱 등 디지털플랫폼 ▲활용방법, ▲주요 피해 사례, ▲효과적인 대응방법 등 피해예방 교육 실시('23.3~9., 3.5만명 대상)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법무부·방통위·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법무부) 동남아시아 사법 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23.1.) 및 대면 총회를 개최하고('23.4.),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며,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논의를 지원

○ (대검찰청)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고, 대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및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 성능을 고도화(지능적 추적 회피 사이트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하여 탐지실적을 제고하는 ('22년 48건 → '23년 136건 차단) 등 대응능력 강화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23.3.,6.)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기관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삭제지원(245천건),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며(36천건),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피해사건 25천건에 대한 심층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분기별 운영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종합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심위-여가부 등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보호 총 56,945건 연계('22년 대비 53.6% 증가)

【법무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방안 마련 및 강화

○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23.7.)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매타버스 플랫폼의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과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개입·조정 필요한 영역에서의 강력한 규제 필요(과기부·방통위·개보위)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스마트 복지 대상 가구를 한부모 가구, 소년 소녀가장 가구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로 발굴·확대 필요(과기부·복지부)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 아동이 피해자(또는 가해자)인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합동 대책이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잊힐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가 마련되어야(법무부·검찰청·경찰청·방통위·여가부)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총 괄

○ (개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추진중
1	Ⅴ-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추진중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추진중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추진중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5	Ⅴ-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추진중
6	Ⅴ-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추진중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추진중
		(2) 고충처리	
8	Ⅴ-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추진중
9	Ⅴ-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추진중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추진중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수립 등 11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인권 경영의 제도화

【외교부·법무부·고용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외교부) 개발협력 참여 파트너사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협력 사업현장 인권침해 예방 방안 및 KOICA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안내하였으며, 해외 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구축하고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행사에서 수어 및 문자 통역을 시행하여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간행물 제작 시 문자-음성변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23.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를 발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23.12.)

○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AA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감수 및 정합성 분석 실시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을 지속 추진

【외교부·법무부·고용부】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외교부·법무부)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고,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 규범 실무그룹 제9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제12차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하여 구제수단 확보 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하였고, 캐나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사우디 네옴프로젝트 등 관련 특별절차 서한을 접수·답변하는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하였음

○ (고용부) 제111차 ILO 총회에서 노동 개혁 추진 사항을 소개하고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였으며('23.6.), 제347차·348차·349차 ILO 이사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일자리 질 개선, 파업권 포함 여부, 산업안전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고, UN 인권협약 심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ILO) 논의에 참여 및 대응

고충처리

【산자부·국토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 (산자부)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리콜 제품의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하고 현장점검 등 1,511건의 리콜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리콜 이행 헬프데스크 1,385건을 상담하여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6개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리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였고(1,094건 판매중지), 쿠팡, 11번가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리콜 제품 회수 및 유통 차단 등을 협의하였으며,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해제품 등 동향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사(16개)에 공유(연간 15회)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3.5.)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부품 수급 계획 등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도모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인권 경영의 제도화

○ '24년 유럽 '인권및환경실사지침' 통과 관련하여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재추진하고 우선 입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유관부처 공조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관련한 적극적인 연구·학술활동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인권지수 설정 및 OECD한국연락사무소(NPC)의 기능 강화 필요(법무부·산자부)

고충처리

○ 한국 NCP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여건을 법안 폐기와 무관하게 조성 노력 필요(산자부·공정위)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총 괄

○ (개요)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	VI-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추진중
2	VI-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추진중
3	VI-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일부완료**
4	VI-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중
5	VI-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추진중
		(2)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추진중
6	VI-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중
7	VI-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추진중
8	VI-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추진중
9	VI-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중
10	VI-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추진중
		(3)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중
11	VI-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중
12	VI-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중
13	VI-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추진중
14	VI-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추진중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5	VI-2-(1)-①4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추진중
16	VI-2-(1)-②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중
		(2) 학교 교육	추진중
17	VI-2-(2)-①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추진중
18	VI-2-(2)-②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추진중
19	VI-2-(2)-③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0	VI-2-(2)-④	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과제완료('23)**
		(3)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가 교육	추진중
21	VI-2-(3)-①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2	VI-2-(3)-②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3	VI-2-(3)-③	③ 군 장병 인권교육	추진중
24	VI-2-(3)-④	④ 변호사 인권교육	추진중
25	VI-2-(3)-⑤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추진중
26	VI-2-(3)-⑥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중
		(4)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	추진중
27	VI-2-(4)-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중
		(5) 인식 개선	추진중
28	VI-2-(5)-①	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29	VI-2-(5)-②	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30	VI-2-(5)-③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완료('23)**
31	VI-2-(5)-④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교육부) 등 2개 과제 완료,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1개 과제 일부완료(여가부), 28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 · 외 협력

【외교부·법무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법무부)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23.1. 가입, '23.2. 발효) 및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3.9.~'23.12.)

【외교부·법무부·여가부】 국제인권조약 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여가부 완료)

○ (외교부) 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23.9.) 활동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관심 제고에 기여

○ (법무부)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여('23.1.),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후속보고서 제출 및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23.10.), 제4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답변서('23.7.) 및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23.11.) 등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참여

○ (여가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사전질의 답변서 제출('23.6.)

【외교부】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공동발언을 주도하고 18개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는 AI와 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여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내 인권 논의·결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이슈 선도를 통한 정부 위상 제고

【행안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자원봉사 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3.~'27.) 과제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포함하고('23.3.),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추진하며('23.11. 국회 상임위 의결), 기부금품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유사 서식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을 개정('24.1.시행)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심사(180개 사업, 6,500백만원 예산)를 통해 1차·2차 보조금을 교부하고('23.1~2., 9.~11.), 워크숍(3회)·역량강화 교육(4회) 실시 및 현장점검·중간평가·최종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

【통일부·법무부·외교부】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및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18개 단체에 20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상호대화」 북한인권 쟁점별 토론회를 기존 연 1회에서 9회로 확대 개최해 구체적 현안을 토론하였으며, 면담·토론회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였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3.12.)

비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목표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추진방향	·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자유권 및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 추구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과제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외교부) 한미 정상 공동성명('23.4.),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23.5.),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3.8.) 등 고위급 협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23.11.),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공동주최('23.10.) 등 한미간 공조를 실시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지속하였고(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경우 5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23.9.) 시 외교장관 예방 및 관계부처 면담을 지원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부】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완료)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의 조기 안착 지원 및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고('23.11.), 제17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23.3.) 교육청 인권교육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사건처리 핸드북 제작, 인권 공모전 개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여가부】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완료)

○ 가족센터·대표번호 홍보영상 집중 송출('23.3.~11.), 가족서비스 이용자 우수사례 및 주요 가족사업을 바탕으로 한 SNS 콘텐츠 제작 등 가족센터 홍보를 추진하고,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23.6.~11.)

【다수부처】 국민·공무원·소수자 등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법무부) '2024 국제인권조약집' 발간·배포('23.12.), '8컷으로 알아보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23.12.)

2023년 [제18호]

2023년 [제17호]

2023년 [제16호]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교육을 확대편성하고(북한이해·인권교육·현장견학), 북한인권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및 SNS 콘텐츠 홍보 전개

○ (교육부)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시 '학생 인권 존중' 등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23.12.), '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사항(인권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등) 포함을 안내하였으며('23.3.), 유치원, 초·중·고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94.14% 실시),

일반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며(3,601개교 참여),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1,640권)

○ (인사처)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주요 정책교육으로 인권의식(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23.1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1개 기관 대상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를 평가에 포함

○ (법원행정처) 법관 대상 '국제인권법과 법관',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등 인권 관련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187명 참가), 법정언행컨설팅('23.9., 78명 참가) 및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3.10., 30명 참가) 개최

○ (통일부)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63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3회),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전국 경찰 900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법무부)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훈련(19회, 470명), 검사·수사관 대상 1:1 인권프로그램(16회, 166명), 교정·보호·출입·검찰 방문 인권교육(33회, 1,544명),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6회, 119명) 실시 및 변호사 대상 윤리교육 실시(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 공직퇴임변호사 윤리교육 등)

○ (경찰청) '제2차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23.~'25.)'을 수립·시행하고('23.10.), 「'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24. 2월)에 인권교육을 적극 편성하며,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와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

○ (국방부) 지휘관·간부 대상 인권교육(7회, 117명), 부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16회, 608명), 의료·수사 등 군인권업무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정(11회, 523명),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120회), 사이버교육 인권교육 및 장병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등 군 장병 대상 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함양

○ (복지부) 지자체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등 사회복지인력 교육 총 20과정 124회 실시(4,868명 수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연 2회, 8시간 이상),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 교육 실시(17회, 513명)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23, E-9비자 74천명, H-2비자 19천명)

○ (여가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특화 프로그램·교보재(각 4종) 개발, 북한 이탈주민 및 관련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인권보호 교육(46회, 436명), 학생·교사·장애인양육자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개발·보급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 · 외 협력

○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행안부)

○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인권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외교부·통일부)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조치가 부처협업으로 진행될 필요(복지부·여가부)

※ 그 외 보완 · 개선 필요사항(과제 공통)

○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 필요

○ 과제 지표를 정량화하고 연도별 이행지표를 설정하며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등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이행상황

2024. 12.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목 차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1

□ 이행상황 총괄 ····· 3

□ 과제별 이행상황 ····· 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73

□ 이행상황 총괄 ····· 75

□ 과제별 이행상황 ····· 78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213

□ 이행상황 총괄 ····· 215

□ 과제별 이행상황 ····· 218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343

□ 이행상황 총괄 ····· 345

□ 과제별 이행상황 ····· 346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389

□ 이행상황 총괄 ····· 391

□ 과제별 이행상황 ····· 392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413

□ 이행상황 총괄 ····· 415

□ 과제별 이행상황 ····· 417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4.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이전의 자유 9. 인격권 10.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 참정권

이행상황 종괄

< 총괄표 >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46	0	46	0	-
1. 생명권	2	-	2	-	-
2. 신체의 자유	14	-	14	-	-
3. 안전권	5	-	5	-	-
4.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1	-	1	-	-
5. 표현의 자유	2	-	2	-	-
6. 결사・집회의 자유	3	-	3	-	-
7. 사생활의 자유	5	-	5	-	-
8. 거주・이전의 자유	2	-	2	-	-
9. 인격권	1	-	1	-	-
10.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	-	7	-	-
11. 참정권	4	-	4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생명권】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추진중
2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중
【신체의 자유】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추진중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추진중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추진중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추진중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추진중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추진중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추진중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추진중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추진중
12	Ⅰ-2-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중
13	Ⅰ-2-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추진중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안전권】			
17	Ⅰ-3-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추진중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추진중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추진중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추진중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추진중
【표현의 자유】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중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중
【결사・집회의 자유】			
25	Ⅰ-6-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추진중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추진중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추진중
【사생활의 자유】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추진중
29	Ⅰ-7-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추진중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중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추진중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추진중
【거주・이전의 자유】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인격권】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추진중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추진중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 보호	추진중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추진중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중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추진중
41	Ⅰ-10-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추진중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추진중
【참정권】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중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국내외적 요구와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 개폐 검토			
	주요내용	○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사형제도 존폐 관련 여론 추이 확인 - 사형제도 존치 관련 여론조사는 없었음 ('22년 여론조사 당시 사형제 존치 69.3%)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찬성(87%), 반대(9%), 모름/응답거절(3%) * 의뢰처 :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간 : '23. 8. 8.~10.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여 1,001명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 사형 폐지 관련 법률안 국회 논의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지속적 확인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인 검토 지속 예정

2	Ⅰ-1-②-㉮	자살 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사회정서성장지원과

과제목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주요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원	1,036	1,054	18	1.7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위탁+교육청)	8,330	8,240	△90	△1.1
▪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교육청)	9,000	6,690	△2,310	△25.7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 개편에 따른 후속 지원(위탁)	0	920	920	
▪ 자살위기 학생 몬자상담서비스 운영	2,050	2,350	300	14.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운영
-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23.4월~5월, 초1·초4·중1·고1 1,731,596명 조사 참여)
-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중 60,375명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관심군:('23) 78.8% / 자살위험군: ('23)81.9%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2023년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문자상담서비스 운영(연중)
- 자살을 암시하는 유해 매체(음원, 드라마, 영화 등)를 발굴하여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접근 사전 차단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 학교 자살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 및 뉴스레터 발행
- 학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 학부모 인식개선 도모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청 학부모 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를 위한 초중고 생명존중 동아리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운영 -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18.9월~23.12월 누적 총 406,288건) -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유해저작물 1,493개 청소년 접근 차단 신고 ○ 학생 자살·자해예방에 대한 현장 대응력강화 지원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한 뉴스레터 발행(학생용 25종, 학부모용 21종, 교사용 14종 등) - 학생 자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학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생명지킴이 전문교원 양성 5회, 정신건강 연수 3회, 원격 연수 5개 과정 등) -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 인식개선 도모(오프라인 18회, 온라인 1회) - 학생 중심의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초중고 학교급별 생명존중 동아리 실시 (초 27개교, 중 41개교, 고 32개교 선정, 상·하반기 생명존중캠페인 진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로 정신건강지원 필요한 학생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 및 위기문자 상담망 지속 운영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지원

3	Ⅰ-1-②-㉯	자살 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자살 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주요내용	○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민관 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한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48,847	50,817	1,970	4.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 및 다빈도 장소 분석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배포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생명지킴이 양성) 이통장 등 지역풀뿌리 조직과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직업군 등 전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1,902,054명 양성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자살시도자 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13. 25개소 → '23. 84개소)
- (유족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22.7.~, 9개 시도), 자조 모임 운영(154개소) 및 홍보,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학업 및 생활 지원금을 통한 위기 해소
- (자살 사후대응)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 지원('23. 65기관 3,080명) 및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T.1899-4567)운영('23. 총 473건), 자살 사후대응 전문 콘텐츠 2종 개발, 자살 사후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23. 총 4회, 150명 참여)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 민관(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공동자금 조성하여 자살 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백만원, 총 9.1억원 지원)

○ **민관 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한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전통매체 홍보사업) 공익광고 및 생활밀착형 스팟 활용 홍보 콘텐츠 송출, 포스터 제작 배포 등
- (뉴미디어 홍보사업)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77,513건), 자살예방 웹진 제작 발행 2회
- (오프라인 홍보사업)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23.9.8.), 같생 서포터즈 성과박람회 개최(23.9.13.) 등
- (정부·민간기관 간 협업) 생명지킴데이(LG트윈스 협업), '책읽는 서울광장' 생명존중 동화책 캠페인(서울도서관 협업), 자살예방 실천 메세지 티셔츠 제작(커버낫 협업), 생명존중 캠페인 1393 챌린지(고려대 심리학부xITZZY 채령 협업), 숲속 잔디밭 도서관 캠페인(서울어린이대공원 협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근거 기반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을 통한 전 사회적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 확산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근거 기반 자살 예방 대책 지속 추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속 확대
- 의료기관(SPEDIS)-지역사회(MHIS) 간 대상자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방안 마련
○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및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내용	○ '영장전담검사제 운영', '인권보호부 운영'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통제의 적정성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개정 형사법 시행에 따른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사법통제 방안 시행 - 개정 형사법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강제수사의 오·남용 우려가 증대된 점 등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시정사건 처리지침」 등 대검예규를 '21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엄정한 사법통제를 위한 업무체계 유지 및 운영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반영하여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하는 등 내부 지침 정비('23. 11.) - 각종 영장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영장 업무의 적정성 제고 ○ 일선 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및 사법통제 우수사례 체계적 수집·활용 - 사법통제 담당 검사들 상대로 실무 관련 자료 제공하고,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일선 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 분기별로 일선 청의 사법통제 우수사례를 취합·관리하고, 일선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사례를 선별하여 전파하는 등 사법통제 업무의 통일성·적정성 제고 ○ 사법통제 우수청·우수검사 및 우수사례 선정 - 구속장소 감찰 우수사례, 사법경찰관 교양 우수사례,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사례 등 일선의 사법통제 우수사례 적극 선정·포상하여 우수사례 발굴 독려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정 형사법에 따른 사법통제 관련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시행하고, 일선 청에 사법통제 관련 착안사항 전파하는 등 사법통제 역량 강화하여 사법통제 적정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정 형사법에 따른 사법통제 관련 업무체계 지속 점검 및 제도개선 ○ 개정 형사법 관련 일선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일선과의 소통 강화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1과
	과제목표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방지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지휘의 적정성 제고 ○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한'인권보호부'운영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 등 차단 노력 지속 ○ 인신구속 관련 형사절차에'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속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독직폭행·가혹 행위를 엄단하여 인권침해 방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실시 -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확인 - 범죄사건부, 긴급체포원부 등 신병 관련 장부의 작성 관리상태 확인 -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상대로 면담 실시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체포·구속 장소 감찰 : ('20.) 2,35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1.) 2,10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2.) 유선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3) 3,185회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 ○ 사법결창관 신청 체포·구속영장 엄격 심사 - 체포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77, 14.3%→('21.) 5,650, 17.75%→('22.) 6,389, 19.4%→('23.) 8,167, 21.3% - 구속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60, 18%→('21.) 6,172, 22.8%→('22.) 6,389, 23.1%→('23.) 8,142, 25.0%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 기소건수(건) : ('20.) 4→('21.) 9→('22.) 2→('23.) 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엄단 및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 각종 영장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가 설치('24. 7. 기준)되어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영장 업무의 적정성 제고 -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66개청에 설치되어(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고, 지검 시민위원회를 정례화(매월1회)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 ○ 특사경의 체포·구속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및 통제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구속을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체포·구속 장소 감찰과 엄격한 영장심사를 통해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지속 실시
○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행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체류 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추진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82,673	88,606	5,933	7.2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270	21,099	3,829	22.2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3,220	2,500	△720	△22.4
▪ 범죄피해구조금	10,015	10,015	-	-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564	3,446	△118	△3.3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1,632	272	2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7,354	△183	△0.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12,560	2,853	29.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울지역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시 업무협약(MOU) 체결('23. 11.)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개선('23. 1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책자 발간, 유관기관 배포를 통해 양질의 지원을 도모('23. 12.)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23. 12., 고급교육 및 연수교육)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23. 12.)
- '24년 13개 정책과제 및 34개 세부추진 과제 수록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 -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 '24년 예산 3,100백만원 신규 반영 - (직접지원 증액) 코로나19 완화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 간병비, 임시안전숙소 지원 등 '24년 예산 2,190백만원 증액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전국 스마일센터 권역별 간담회('23. 2.), 심리지원팀 전문역량개발교육('23. 6.)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의 전문성을 강화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범죄피해 유형·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스마일센터 백서'로 발간하여 전국 센터에 공유함으로서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23. 7.) - 신분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 시·공간의 제약으로 심리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등을 위해 비대면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23. 1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다링안심캠페인 실시('23. 6. 15.,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최, 약 700명 참여)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실시('23. 11. 29., 과천과학관 개최, 약 500명 참여)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2105587, 정부) 1소위 상정('23. 8. 31., 11. 15., 12. 18.) - 타 법령에서의 보호 정도를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범주를 명확히 한 법무부 수정안 제출 * ❶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❷영주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상세 수립,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킴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예산 마련,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증액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함 ○ 다링안심캠페인 및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와 범죄피해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국민적 관심을 제고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24. 5. 29.)

향후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를 통해 보다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도움을 제공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 유형별・지원 유형별 등 각 단계별로 체계화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마련 ○ 학술심포지엄 개최, 자가치유 프로그램 대국민 배포 등 지속적인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매해 다링안심캠페인(상반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하반기)를 개최하여 전국민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 22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 발의('24. 6. 17.)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논의 시 적극 협력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2200541, 서영교)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기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범죄피해자 외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 -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 진술조력인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 추진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프로그램, 업무매뉴얼 정비 -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1,632	272	2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12,560	2,853	29.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23. 1.)
- 「성폭력처벌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23. 10.)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입법예고('23. 12.)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 총 592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23. 7. ~ 10.)
- 반기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23. 1., '23. 8.)
- 강릉, 마산, 의정부 등 8개 지역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각 1명씩 총 8명 추가 배치('23. 1. ~ 12.)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 조망 및 발전방향 논의('23. 11.)

○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 12.)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신규 양성·배치
-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 확대('23. 10.)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배치('23. 1.)
- 대구해바라기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배치('23. 2.)
- 2023년 신규 진술조력인 15명 양성 및 자격부여('23. 12.)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상근 진술조력인 월별 사례관리회의 실시(매월)
- 2023년도 상반기 충청 권역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실시('23. 6.)
- 2023년도 상반기 서울·경기 권역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실시('23. 12.)
- 2023년 1차·2차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23. 11.)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 조망 및 발전방향 논의('23. 11.)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하였으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8명 추가 배치하는 등 제도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
* '2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 37,150건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
* 2023년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4,231건</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신속하고 효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및 비수도권 지역 배치 필요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23.12.)
<table>
<tr><td>계</td><td>서울</td><td>부산</td><td>인천</td><td>대구</td><td>광주</td><td>대전</td><td>울산</td><td>경기</td><td>충남</td><td>전북</td><td>경남</td></tr>
<tr><td>14</td><td>2</td><td>2</td><td>1</td><td>1</td><td>1</td><td>-</td><td>1</td><td>4</td><td>-</td><td>1</td><td>1</td></tr>
</table>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현황('23.12.)
<table>
<tr><td>계</td><td>서울</td><td>부산</td><td>대구</td><td>인천</td><td>광주</td><td>대전</td><td>울산</td><td>경기</td><td>강원</td><td>충북</td><td>충남</td><td>전북</td><td>전남</td><td>경북</td><td>경남</td><td>제주</td></tr>
<tr><td>41</td><td>6</td><td>4</td><td>3</td><td>2</td><td>2</td><td>1</td><td>1</td><td>11</td><td>2</td><td>2</td><td>1</td><td>2</td><td>1</td><td>1</td><td>2</td><td>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총 10명 증원, 배치('24.)
-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시행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24. 1.)
-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 4.)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24.)
-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개정 추진('24. 상반기)
- 진술조력인의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추진('24. 상반기)

○ 형사사법절차상 전문가의 조력 제도 홍보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24.)</td></tr>
</table>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변호인 참여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한 규칙 및 지침 마련			
	주요내용	○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강화를 위해 피고인과 구속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침 및 규칙 마련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21대 국회 회기 종료 후 진행사항 없음 ○ **변호인 참여권** - '23. 3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경찰청훈령)」상 제32조 변호인 메모 보장, 제33조 변호사 및 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제34조 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를 규정하여 제정·시행함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인 참여권** -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명문화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 추진 계획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추후 국회 법안 재추진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속 대응 예정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으로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 보장 실현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 및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 및 관련 교육 활성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제정)**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시행('23.3.30.)

- **<수사절차 실천기준 마련>** △수사과정에서 지켜야할 인권보호 대원칙 △구체적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및 대상자별 보호원칙 규정
- **<현장 정착을 위한 장치 강화>** △인권진단·인권교육 이수 등 인권보호 원칙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자료 배포(3.30) 및 카드뉴스 게재 등 교육·홍보 강화

※ 산재된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 규정에 대한 **현장경찰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사인권 매뉴얼」 제작·배포('24. 1. 3.)**

○ **(인권보호 제도 내실화)** △범죄수사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규정된 요건·절차 등을 개선하여 수사현장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인식 제고

- **<범죄수사규칙>** 조사 전 피의자에게 참여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을 고지하도록 규정 신설(11.1시행)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유치인 머리보호장비 사용요건 등 신설 △보호유치실 수용요건 명확화 등

○ **(인권교육 확대)** △교육기관(시도경찰청 교육센터 등) △온라인 강좌에 '수사인권윤리교육' 개설(2. 17.)

- **<교육내용>** △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제도의 이해 △수사관을 위한 인권교육(피의자·피해자 인권,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사례 등 사례위주 교육)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 **<교육방법>** 단순 이론 전달 교육에서 탈피, 체험사례 중심의 학습 강화를 통한 수사관의 인권·윤리의식 제고

○ **(인권취약 요소 진단)**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인권진단 실시(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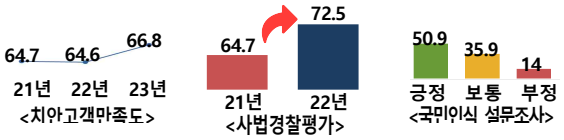
- **<자체·권역별 인권진단>** 본청 주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권역별 및 시도청 교차진단
- **<개선안 도출·시행>** 진단결과 분석 및 현장간담회를 통한 개선안 도출·시행
- **<이행실태 점검·환류>** 개선안 시행여부 등 지속 점검, 인권진단 이행력 확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 수사과정 전반의 인권 최우선 환경조성

➡ 치안고객만족도(수사분야) 및 사법경찰평가 점수 상승, 경찰수사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경찰의 인권보호 준수 노력을 높게 평가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법적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보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인권진단)**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진술녹음 △변호인 참여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활성화 등 수사과정 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이행여부를 수사 인권진단을 통하여 점검·진단·평가

- 진단결과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미흡사례에 대한 개선안 도출·시행, 우수사례 전국 공유 등 환류 강화

※ 진단방법 : ①자체진단 → ② 시도경찰청 교차진단 → ③경찰청 주관 권역별 진단

○ **(교육·홍보)** 수사인권 분야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강화, 대국민 대상 수사인권보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4과
	과제목표	○ 성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여성폭력 및 아동 학대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전국 주요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 철저 준수 및 적시 개정 - 전문가 초청 강연, 유관기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 관련기관 협업시스템 강화를 통한 능동적·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여성·아동 및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신설**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아동학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 강화 도모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전국 검찰청 인신매매등 수사 및 재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및 전담검사 지정·운영을 통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속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인권기획담당관실
	과제목표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주요내용	○ 피해자 심리안정·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도록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귀가 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신변보호 제도 지속 운영 -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즉각 입소 가능한 총 4개의 보호시설 운영 중 - 보복 우려 발생 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신속 지원 - 일선 청 정보보고 등을 통해 신변보호 필요 피해자 발견 시, 해당 청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합당한 신변보호 지원 검토 독려 ○ 전국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법정 출석 시 경호인력·차량 등 지원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선 청 피해자지원 담당관 매월 1회 가해자의 가석방 및 출소 여부 조회하여 피해자에게 통지 ○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작성 적극 활용(특히, 성범죄 피해자) 및 각 청마다 신원관리카드 담당 검사 지정하여 철저하게 보안 관리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복 우려 사건 피해자 대상 신변보호 지원 제도 적극 안내 독려 ○ 이전비 등 신속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기 운영 중인 안전가옥 외,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안전가옥 제공방안 검토 추진 ○ 일선 검찰청, 유관기관, 타 관공서 등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또는 피해자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여 신변보호 제도 홍보 지속 추진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현장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 대상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확행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피해자 임시숙소	960	1,201	241	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현장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경찰청 법정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했으며, 이에 2023년 전체 경찰관 중 96.0%가 교육을 이수

(교육 내용) △2차 피해의 개념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죄종별 유의사항

○ **범죄피해자 대상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확행**
- 범죄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공통 안내서 외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안내서를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했으며,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안내서 신설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범죄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2023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0,750건 실시(전년 대비 4.7%↑)
- 특히, 2023년에는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재피해 방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범죄피해자 안내서 재정비·신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향후추진계획

○ **2차 피해 예방교육 지속 시행**
-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하여 교육자료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 증진

○ **범죄피해자 안내서 개선**
- 법령의 제·개정이 잦은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등의 변동에 맞춰 안내서 개선·신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 재피해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전조치 시행 및 민간경호 등 신규 안전조치 도입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 수립			
	주요내용	○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국민 중심 책임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 - 수사과정 인권취약요소 진단 체계 구축 - 사건처리기간 관리 및 수사 인권 교육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개선하여 전건 접수 실시 △ 각하대상 사건 심의 절차 마련('23. 11. 1.)

<수사민원 접수 전산개발>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이 수사관의 임의로 반려 등을 할 수 없도록 민원실의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서 KICS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완료

○ **(인권취약 요소 진단)**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인권진단 실시(10.31.)

▸ **<자체·권역별 인권진단>** 본청 주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권역별 및 시도청 교차진단
▸ **<개선안 도출·시행>** 진단결과 분석 및 현장간담회를 통한 개선안 도출·시행
▸ **<이행실태 점검·환류>** 개선안 시행여부 등 지속 점검, 인권진단 이행력 확보

○ **(경찰수사 신뢰성 제고 노력)**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관리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경찰수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 향상

▸ '18년(48.9일) 기준, '22년 처리기간(67.7일)이 총 18.8일(38.4%) 증가
▸ 과거 5년간('18년 ~ '22년) 7.7% (38.4% / 5년) 상당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3년 평균 사건처리기간 63일로 증가폭 다소 감소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잠정)
평균 사건처리기간	48.9	50.4	55.6	64.2	67.7	63

○ **(인권교육 확대)** △교육기관(시도경찰청 교육센터 등) △온라인 강좌에 '수사인권윤리교육' 개설(2. 17.)

<교육내용> △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제도의 이해 △수사관을 위한 인권교육(피의자·피해자 인권,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사례 등 사례위주 교육)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교육방법> 단순 이론 전달 교육에서 탈피, 체험사례 중심의 학습 강화를 통한 수사관의 인권·윤리의식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 △수사인권 진단 실시 △평균 사건처리기간 감소 △수사인권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책임 수사체계 구축

향후추진계획

○ **(수사경찰 청렴·반부패 제도 강화)** △수사정보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가상자산 보유규제 등 부패방지 제도 강화 △인권교육 확대로 경찰수사의 공정성·청렴도 제고

○ **(인권진단)** 인권침해 관련 사후적 대응방식에서 탈피, 선제적인 진단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현장 경찰관 에게 공감받는 수사인권 취약요소 개선 추진

- 진단결과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미흡사례에 대한 개선안 도출·시행 및 지속 점검을 통해 인권 진단 이행력 확보

○ **(교육·홍보)** 수사인권 분야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지속 추진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과・팀명	경찰민원과
	과제목표	○ 경찰 수사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보호			
	주요내용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처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24	△7	△0.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수사 과정에서 권리 미고지, 진행상황 및 결과 미통지 등 수사절차 위반, 불친절·폭언 등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고충민원 해결 * '23년 경찰수사 관련 고충민원 633건 처리(보완 수사 지연, 신고사건 진행상황 미통지 등 114건 인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총 633건의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경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권익을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처리(계속)

10	Ⅰ-2-⑧	구금 · 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소년보호과·수용팀
과제목표	○ 소년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보호소년 등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 수도권 위탁소년 수용과밀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지속 추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여위탁소년 분리수용을 위한 여위탁소년전담 시설 조성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춘천소년원 교육관 등 재건축	7,639	7,870	231	3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4,196	-	(완료)	-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	-	-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여위탁전담시설 조성	154	3,625	3,471	2,254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	191	순증	-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	238	순증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대체부지 확보 중(기존사업부지 환경평가 2등급지로 개발 불가)

'23년 이행실적

○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완료(2021 ~ 2022)에 따른 보호소년(90명) 재수용('23. 1.)

○ 안양소년원 생활관 추가 리모델링 완료('23. 6. ~ 23. 12.)
- 다인실 및 목욕탕 리모델링 → 1인실 4개, 2인실 3개, 교실 1, 공용화장실 1 조성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22. 12. 착공 ~ '25. 6. 완공 예정)
- '23년 재건축 공정률 26% 달성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21. ~ '24 . 7.)
- '23.11. 1차 리모델링 완료

• 1층 : 1인실 2개, 3인실 10개, 근신실 5개 • 2층 : 1인실 3개, 3인실 12개, 근신실 5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시설 조성 기본 설계 완료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부산소년원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90명)
○ 서울소년원 1차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70명)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 반영('24)
(대구소년원 : 41.6억, 광주소년원 : 110억)</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부지 개발 불가로 대체부지 마련에 따른 공사 지연
○ 서울심 여위탁전담시설 인력 증원 미반영에 따른 진행 차질 발생
○ 서울소년원 생활관 공사로 보호소년의 타 기관 분산 수용에 따른 일부 기관의 수용과밀 초래</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소년보호기관 리모델링·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용공간 확보로 친인권적 보호행정 구현
<table>
<tr><th>구분</th><th>증·개축</th><th>신설</th></tr>
<tr><td>기관명</td><td>• 서울심 여위탁전담시설 리모델링('23 ~'25) 사업비 : 37.8억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24 ~'26) 사업비 : 41.6억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24 ~'27) 사업비 : 110억</td><td>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예정)</td></tr>
</table>
○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한 증·개축 사업 지속 발굴</td></tr>
</table>

10	Ⅰ-2-⑧	구금 · 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복지과

과제목표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계획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주요내용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현대화
-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정시설 신축, 이전(국유기금)	41,861	74,027	32,166	76.84
▪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일반회계)	29,117	32,404	3,287	11.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정시설 1개 기관 신축
- '23. 1. 거창구치소 준공

○ 7개 기관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
- 제주·목포·춘천·천안교도소, 서울·인천구치소, 논산지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년 대비 수용정원 932명(▲1.9%) 확대 -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수용정원 390명 확대 - 수용동 증·개축을 통해 수용정원 542명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년 대비 수용정원 932명을 확대했으나 같은 기간 수용현원은 5,460명이 증가하여 과밀수용 해소 성과가 미미함

향후추진계획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사업 지속 추진
- 신축(6개 기관) : 화성여자·태백·남원(교), 경기북부·대전·광주(구)
- 이전·현대화(7개 기관) : 안양·전주·원주·창원·대전·부산(교), 부산(구)
- 울산(구) 등 5개 기관 수용동 증·개축 사업 지속 추진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과제목표

○ 수용자 스스로의 내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수용자의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도모 (사회복귀과)

○ 수용자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직업훈련과)
-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한 실질 취업역량 강화

주요내용

[사회복귀과]

○ 맞춤형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형자 내면의 근복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학습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시간(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활성화
– 외국인 및 장애인 수용자 교육 실시

[직업훈련과]

○ 수용자의 출소 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학점은행제 도입
- 다기능(복수 자격취득) 과정 확대, 향상(산업기사 이상) 과정 확대, 학점은행제 도입

관련예산

[사회복귀과]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정교화	10,537	11,920	1,383	13.1%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직업훈련	3,964	4,164	200	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사회복귀과]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형기 등을 고려, 인문학·준법교육·동기부여 교육 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23년 6.955명 실시)

○ 외국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내 한글 교육 실시(1,018명)
* 대전(교) 32회 280명, 천안(교) 28회 315명, 청주여(교) 20회 255명, 여주(교) 32회 168명 교육

○ 여주(교)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시(22명)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실시
– 수용생활에 따른 가족해체를 막고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23년 이행실적
가족만남의 집(명)	895
가족만남의 날(명)*	0
가족사랑캠프(명)	25
가족만남의 시간(舊가족접견, 명)	2,588

* 대규모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대신 소교모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지향

○ 미성년자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가족만남실(舊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리모델링 완료(공간부족 등의 기관 제외, 54개 기관 중 49개 설치)

[직업훈련과]

○ 직업훈련과정 개편
- 다기능 과정 확대('23.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전기·승강기 등 2개 기관 3개 과정 신설, '23. 7. 원주교도소 화훼장식·유통관리 1개 과정 신설)
- '23. 1.향상 과정 확대(화성직업훈련교도소 친환경자동차 기능사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등 5개 기관 9개 과정)

○ 학점은행제 도입
- '23. 1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화성직업훈련교도소 용접 등 9개 기관 14개 과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사회복귀과]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정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 정상 추진

[직업훈련과]

○ 직업훈련 다기능 과정 총 21개 과정 992명 대상 훈련 실시(전년 대비 22% 증가), 향상과정 총 21개 과정 434명 대상 훈련 실시(전년 대비 33% 증가)

○ 직업훈련 학점은행제 168명 대상 시행('24. 최초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사회복귀과]

○ 대규모 프로그램 특성상 교정 사고, 개인정보침해 등의 우려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실적 저조

[직업훈련과]

○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제약으로 과정 신설 및 개편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사회복귀과]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의 적극적 운영
○ 외국인·장애인 등 소외될 수 있는 수용자의 적극적 교육 실시
○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 발굴 및 공적지원 연계 등 지원 확대

[직업훈련과]

○ 다기능 과정, 향상 과정, 학점은행제 승인 과정 지속 확대 추진

12	Ⅰ-2-⑩	보호 · 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소년보호과·수용팀
과제목표	○ 소년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개방처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권 처우 강화			
주요내용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 시설 조성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 ○ 소년원 내 작은 도서관 조성 ○ 개방처우 활성화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춘천소년원 교육관 등 재건축	7,639	7,870	231	3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4,196	-	(완료)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여위탁전담시설 조성	154	3,625	3,471	2,254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	191	순증	-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	238	순증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완료(2021 ~ 2022)에 따른 보호소년(90명) 재수용('23. 1.)

○ 안양소년원 생활관 추가 리모델링 완료('23. 6. ~ 23. 12.)
- 다인실 및 목욕탕 리모델링 → 1인실 4개, 2인실 3개, 교실 1, 공용화장실 1 조성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22. 12. 착공 ~ '25. 6. 완공 예정)
- '23년 재건축 공정률 26% 달성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21. ~ '24 . 7.)
- '23.11. 1차 구역 리모델링 완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시설 조성 기본 설계 완료

○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서울소년원 등 11개 기관)

○ 소년원내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한 보호소년 등 독서활동 증진
- 부산소년원(23.11.개관), 전주소년원('23.9.개관), 광주소년원('23.10.개관)

○ 개방처우 활성화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호소년 인권처우 강화
- 개방처우(체험학습 등) 운영(서울소년원 등 10개 소년원 297회 3,354명 실시)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9개 기관 29사례 68명 참가)

<table>
<tr><td rowspan="2">결 과 분 석</td><td>추진성과</td><td>○ 부산소년원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90명 수용)
○ 서울소년원 1차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70명 수용)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 반영(‘24)
(대구소년원 : 41.6억, 광주소년원 : 110억)
○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한 보호소년 등 독서활동 증진
- ‘24년 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도서관 조성(KT&G 기부금 8천만원 확보)
○ 기초학력증진 교육 평가를 통한 보호소년 학력 증진 기반 조성
<table>
<tr><th>대상기관</th><th>대상학생
(기초학력 미도달)</th><th>보정교육
기 간</th><th>기초학력
기준도달</th></tr>
<tr><td>4개 기관
(서울,대구,전주,안양소년원)</td><td>168명</td><td>4개월</td><td>45명(27%)</td></tr>
</table></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서울소년원 생활관 공사로 보호소년의 타 기관 분산 수용에 따른 일부 기관의 수용과밀 초래</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향후추진계획</td><td>○ 소년보호기관 리모델링·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생활관 소규모화 확보로 친인권적 보호행정 구현
<table>
<tr><th>구분</th><th>증·개축</th><th>신설</th></tr>
<tr><td>기관명</td><td>• 서울심 여위탁전담시설 리모델링(‘23 ~’25) 사업비 : 37.8억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24 ~’26) 사업비 : 41.6억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24 ~’27) 사업비 : 110억</td><td>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예정)</td></tr>
</table></td></tr>
<tr><td>○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한 증·개축 사업 지속 발굴
○ ‘24년도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으로 인권친화적인 보호행정 지속 감독 강화
○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개방처우 확대 운영으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
○ 기초학력증진 교육 확대를 통해 학력 증진 기반 조성</td></tr>
</table>

13	Ⅰ-2-⑪	성충동약물치료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치료처우과
	과제목표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한 약물 투여 부작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			
	주요내용	○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검사 실시 ○ 성충동 약물치료 전담 보호관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집행협의체(보호관찰관, 의료진, 심리치료사 등) 운영을 통한 치료경과, 부작용 방지 등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충동약물치료 심리치료비용 등 (심리치료, 약물투여,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106	106	-	-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부작용 등 예방을 위한 검사 철저 - 검증된 치료약물 사용 및 정기·수시 검사로 부작용 최소화 · (치료약물 고시) 치료약물 목록 고시('23. 6.) 및 시행('23. 7.) · (부작용 등 검사) 약물투여 시 부작용 검사로 피치료자 특이사항 수시 점검 * '23년 집행인원 31명 대상 총 64회 정기·수시 검사 실시 ○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 범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도·감독 및 약물치료 집행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치료명령 지도감독 과정('23. 5. 31. ~ 6. 2. 법무연수원) 성폭력 사범 지도감독 과정('23. 6. 14. ~ 16. 법무연수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피치료자 부작용 예방 - 전담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통해 피치료자 신체·심리적 변화 파악 및 정기·수시 검사로 부작용 사전 예방 ○ 치료명령 종료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 - 성도착증세 완화 등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으로 재치료 희망(3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치료명령 집행 현황 수시 점검 - 법무부에서 소속기관 치료명령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약물투여, 심리치료, 부작용 검사 등 약물치료 집행 절차 관리·감독 강화 ○ 치료명령 임시해제 활용 - 치료명령 집행개시 6개월 후 치료경과 및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해제 신청제도 적극 활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인권 보호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주요내용	○ 사업장 및 주거지 등 진입·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철저 이행으로 단속 담당 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단속을 통한 출국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단속 시「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준수 (연중) - 사전답사 등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 수립, 단속 전 인권교육 실시 등 - 외국인 등 방문 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 개시* * '22. 8. 1.「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개정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실시 (연중) -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 시 영상녹화 실시 및 영상 관리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 '23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88명 증원 * '24년 광역단속팀 3곳 추가 신설 운영 및 인력보강 배치 ○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등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23년 총 43,133명 자진출국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에 대한 범칙금과 입국규제 면제 혜택의 특별 자진출국제도 2회 운영(△1차 '22. 11. 7.~'23.2.28., △2차 '23.9. 11. ~ 12. 31, '24.2.까지 연장 운영) * 1차: '23. 1.~2. 약 6,900명, 2차: '23. 9. ~ '23. 12. 약 13,000명 자진출국 -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주한공관원과 간담회 실시(9.26.)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속 시「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준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특별자진출국 제도 운영 등 자진출국 유도 강화로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세 감소 추세로 전환 ('23.1월 41만명 → 6월 42.5만명 → 10월 43만명 → 11월 42.6만명 → 12월 42.3만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필요 * 단속인원 1인당 약 1,08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담당('23.12월말 기준)

향후추진계획	○ 단속 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시 교육 실시 - 외국인 등 방문 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 개시 ○ 악성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 외국공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외국인 고용업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홍보 강화

[참고 자료]

○ ’22년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22. 11. 7. ~ ’23. 2. 28.)

-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22. 11. 7. ~ ’23. 2. 28. 특별 자진출국 운영 방안 시행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조치

- 단, 밀입국자·위변조여권 행사자·중대법 위반 형사범·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22.11.7.부터 ‘23.2.28.까지 시행기간 중 총 13,054명 자진출국

○ ’23년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23. 9. 11. ~ 12. 31, 연장 :’24.1.1. ~ 2.29.)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 가동과 병행,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조치

- 단, 밀입국자·위변조여권 행사자·중대법 위반 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23. 9. 11. ~ 12. 31. 총 17,436명(일평균 156명) 자진출국 ⇒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시행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2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24.) 추진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등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900	1,580	△680	△17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운영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시설 공사 ('23.7.3. ~ '23.12.3.) 정상 추진 완료
- 개방형 시설로 정식 운영 ('24.1.11. ~)
○ 보호외국인 고충상담 실시(총 23,234건)
- (가정문제) 54, (국적) 1, (보육지원) 2, (생계비) 6, (의료구호) 7,927, (의료지원) 1,291, (주거시설) 13, (직업상담) 4, (체류관련) 14, (체불임금) 559, (초청) 4, (기타) 13,359
○ '23. 4월 보호정책 T/F 구성
○ 해외 주요국 보호기간 상한, 국내외 처분 통제기구 운영 사례 등 분석·연구 진행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보호기간 상한 설정, 독립적인 심의기구 설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호외국인 보호생활 만족도 증가 - 기존 쇠창살 제거 및 운동장 상시 개방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 가능 - 휴대전화 전용 공간에서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 가능 ○ 보호업무 담당직원의 만족도 증가 -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이동, 쾌적한 실내 환경, 외부와의 소통 기회 증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로 보호실 내 문제 발생 빈도가 감소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보호기간 상한 등) - '24.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안 보고 - '24. 2월~4월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 - '24. 4월~5월 입법예고 및 사전영향평가, 자체규제심사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청주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으로 보호외국인 적정 수용인원이 일반형 보호실 대비 최대 76명 상당 자연 감소 발생

구분	보호 인원(A)	최대 보호 인원(B)
일반형 보호실	256명(남170명, 여86명)	280명(남186명, 여94명)
개방형 보호실	175명(남121명, 여54명)	204명(남137명, 여67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로 결정, 규제 본심사로 인한 일정 순연

향후추진계획

○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및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 '24. 7월 ~ 8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본심사)
- '24. 8월 ~ 9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국회 제출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주요내용	○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개정 추진 - 법 개정후,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등을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신보호법 개정안(의원입법) 검토(계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정 방향 모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가인권위원회 등 반대의견 ○ 인신보호관 인력 대비 과다한 전국 수용시설과 수용인원

향후추진계획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신보호법」개정 방향 재검토 ○ 법률 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17	Ⅰ-3-①-㉮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 · 팀명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과제목표	○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현장 컨설팅 추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주요내용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많은 판매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별 현장 컨설팅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가핵심기반관리	412	481	69	16.7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훈련관리	145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위기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컨설팅 실시 - 17개 시·도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23) 54개소 * 수요조사 실시하여 신규시설 또는 소규모 취약시설 우선 선정 * 전문가의 사전 시설 답사에 기반,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나리오 훈련 실시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개정 진행 - 신종 위험유형인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정전 등을 추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가들이 사전에 컨설팅 대상 시설을 답사 후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 실시 현장에 방문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컨설팅 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만족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점검 및 훈련 실적 관리(반기별)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주요내용을 반영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개정본 배포

17	Ⅰ-3-①-㉯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관광산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과제목표	○ 문화·체육 분야 시설, 서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주요내용	○ 하절기·동절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과 등록야영장 정보망에서의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스포츠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경영 문화 확산 -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및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3,212	4,117	905	28.2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안전민박 활성화)	877	877	-	-
(안전캠핑 기반조성)	1,000	700	△300	△30.0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7,443	15,771	△1,672	△9.6
(유원시설 안전관리)	1,358	1,258	△100	△7.4

(체육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5,044	4,403	△641	△12.7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2,000	1,850	△150	△7.5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3,044	2553	△491	△1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상·하반기동절기 안전관리 실태점검(887개소),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안전교육 시행*, 중소유원시설업체 기술지원(200개소), 유원시설 안전정보망을 통한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6회, 332명), 종합·일반유원시설 사업주 교육(5회, 266명), 물놀이형 안전요원 양성교육(3회, 190명),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연중 상시)

2) **(야영장)**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연 3회), 사업주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3,191명 수료), 지자체 야영장 담당 공무원 교육 진행,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차박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10.6.개정, '24.5.1.시행)

3) **(관광숙박시설)** 주기적인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설 연휴 계기 1월 375개소, 집중안전점검 4~6월 549개소 등) 및 종사자 대상 위생·안전교육 실시(연중) 빈대 관련 점검회의('23.11월) 등을 통한 숙박시설 위생관리 강화, 복지부·문체부·농식품부·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단속 실시('23.5~7월)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운용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200개 시설 상·하반기 점검 -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103개 국가체육시설 상 · 하반기 점검 -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802개소 안전점검 실시 **2)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 (스포츠안전 교육운영) 직무역량교육 운영(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계자, 심판, 선수), 생활체육인 스포츠안전 소양교실 운영,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운영지원 등 73,776명 교육 수료 -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안전점검/안전요원 매칭), 스포츠행사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유원시설·숙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및 미등록야영장 현장점검 등을 통한 안전한 캠핑산업 활성화 도모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상하반기 200회 점검, 민관합동 체육시설 802개소 점검 등 - 스포츠 안전 교육 수료 73,776명 / 스포츠행사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지속적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상·하반기·동절기 등),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유원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유원시설 대상 안전관리 기술지원('24.3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개선* * '22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반영하여 전기장치 분야 검사기준 현행화 2) **(야영장업)**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연 3회), 미등록야영장 현장점검 실시, 사업주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24.8월~), 지자체 야영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3) **(관광숙박시설)** 주기적인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및 호텔업 종사자 대상 위생·안전교육 추진,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한 위생·안전 평가항목 추가 등 관리 강화, 불법숙박 근절 홍보 강화, 민박업 합법운영 점검 및 사업자 대상 안전·위생 교육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운용**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200개 시설 상·하반기 점검 -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103개 국가체육시설 상 · 하반기 점검 -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900개소 안전점검 실시 2)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 (스포츠안전 교육운영) 체육행사 안전관리 안전교육, 직무역량교육 운영(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계자, 심판, 선수),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운영지원 등 64,930 교육 실시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시설안전과 교통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국토교통 분야 SOC(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21~25) 및 연도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실시

* 도로, 철도, 항공 등 사회기반 시설

○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 졸음운전 예방,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운수업체 점검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주요내용

○ 내진설계대상 총 28,014개소 중 27,753개소 내진성능 확보(99.0%)

- 도로, 철도, 항공 등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추진 中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112,457	158,709	△46,252	△4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12월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도로, 철도, 항공) 124개소 내진성능* 확보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SOC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추진

* 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②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진한 내진보강공사가 준공된 경우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확충

- '24년 휴게시설 확대 설치계획 수립(휴게소 6개소, 졸음쉼터 14개소 등)

○ 차량 중심 상시 현장 단속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업체 전수·불시점검

- 관계기관 합동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총 17회, 38대 단속, 110대 시정조치 등 조치)

- 23년 1,170개 운수업체 점검 완료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23.1~) : 신차 장착의무화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토록 정상 추진 중 -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99.0%로 정상 추진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내진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지속 예산, 시간 소요 中

향후추진계획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SOC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 관리

-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 내진성능 확보율 100%로 목표로 지속 관리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과제목표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 문제(치안, 안전) 해결			
주요내용	○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생태계 확대 -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시스템, 아동 학대 영상분석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플랫폼, AI기반 위·변조 영상판독시스템 등 19개 기존 선정과제 관리·지원('24) - 신규과제 발굴 및 현장 적용 지원('24 ~ '25), 폴리스랩3.0 기획 및 추진('26~'27) ○ 부처·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까지 수요 발굴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다양한 현안에 긴급대응 연구 착수,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 제고 - 상시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실증·확산 지원(~'23), 후속 사업기획 및 추진(~'24)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6,920	4,353	△2,567	△37.1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4,125	461	△3,665	△88.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폴리스랩2.0) 계속과제 19개 대상 진도관리 및 신규과제(선기획 9개, 본연구 4개) 선정·협약

- (계속과제 진도관리) 실증을 위해 연구진-실증관서(또는 경찰청 협력국·관) 간 연계를 추진하고, 추진 실적 점검 및 기술적 보완·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상시회의 및 연차컨설팅 운영
- (신규과제 선정) 긴급대응형 4개 과제 선정·협약 완료

○ (긴급대응연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형 긴급대응연구 지속 추진

- 타액 기반 마약진단 키트, 지능형 CCTV 및 관제시스템 기술 등 3개 신규 과제 선정・지원
- 기 선정과제 계속지원 및 최종평가를 통한 우수성과 발굴*・확산** 추진

* 최종평가 결과 4과제(매우우수, 우수)등급 획득(과수 화상병 조기감지, 건축물 해체 안전모니터링 등)

** 「'23년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30선」중 1건 선정(도로살얼음 위험도 예측)

결과분석

추진성과	○ (폴리스랩2.0) 15개 실증관서 운영(과제별 1개 경찰관서 이상, 중복 가능)을 통해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치안 현장 의견 수렴 및 과제 종료 후 도입 방안 논의 - 과제별 개발 솔루션의 평균 국민 만족도 67.3, 평균 경찰 만족도 68.3 확인 - ('23년 종료과제) 3개 시제품(겹친지문 분리 시스템, 중형방패, 대형방패)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 및 치안 현장 보급 추진

		○ (긴급대응연구) 국민생활안전·재난 이슈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이슈별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도모 - (연구개발성과 관련)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추진*으로 관련 문제 해결, 재발 방지 추진 * 23년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이슈 관련 20개 과제(신규 3, 계속 17) 지원 - (대국민 소통 관련)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국민생활과학 토크라운지 및 포럼개최를 통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으로 국민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과학적 팩트 전달 ※ 23년 국민생활과학자문단 Youtube 채널 구독자 수 약 7천명 보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폴리스랩2.0) 수요처 실증(과제별 1개 경찰관서 이상)과 의견 수렴을 통한 고도화를 거쳐 최종 시제품을 창출하고, 혁신제품 지정 등 종료 과제*의 현장 도입 적극 추진 * 총 23개 과제 중 '23년 4개, '24년 10개, '25년 9개 순차 종료 ○ (긴급대응연구) 1단계 사업일몰(~'24)에 따른 성과 확산 도모 및 2단계 후속사업('25~) 추진 - (성과확산 관련) 수요기관의 예산을 활용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기술공유를 통한 보급·확산, 제도개선 통한 지속 가능 활용방안 마련 - (후속사업 추진)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통한 매년 10과제 내외의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문제 대응 관련 현안 발굴 및 연구개발과제 지속 선정·지원 예정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지진방재관리과

과제목표

○ 지진·지진해일 대응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및 국민들이 일상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주요내용

○ 지진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유지

○ 행안부 상황실·지진부서·협업부서, 관계부처의 합동훈련을 통한 유기적 대응체계 역량 제고

○ 국민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형 홍보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1,050	1,050	-	-
(지진방재 광고 및 홍보물 제작)	550	550	-	-
(지진 안전 캠페인)	250	250	-	-
(지진교재 제작 및 맞춤형 교육)	250	2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중대본 3회 가동 등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 총 105회 대응(상황관리, 보고서 작성 등)
- 전북 장수 지진(7. 29. M_L 3.5), 충남 공주 지진(10. 25. M_L 3.4), 경북 경주 지진(11.30. M_L 4.0) 지진계기 위기 경보 발령 및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 등 성공적 대응
- 국내 지진 발생 위기징후 감시·분석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12회)

○ 지진 대응부서·기관별 임무·역할 숙달 훈련 추진(13회)

○ 지진안전 웹툰 공모전 실시,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 등 온라인 적극 홍보

○ 국민참여형 지진안전주간(9. 11.~9. 17.) 운영을 통한 지진행동요령 집중홍보 실시

○ 특수학교·농산어촌지역충북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5~10월, 81개교)

○ 지진 대피조력자 교육자료 개발 사업 추진('23. 9.~'24. 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북 장수 지진(7. 29. M_L 3.5), 충남 공주 지진(10. 25. M_L 3.4), 경북 경주 지진(11.30. M_L 4.0) 지진계기 위기 경보 발령 및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 등 성공적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진·지진해일 발생 등 복합재난에 대한 전파·대피·주민보호 등 역량 검증을 통한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국민 참여를 통한 지진안전 체감도 및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진교육에 따른 지진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수습지원과
과제목표	○ 재난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기관·분야별 분산된 피해자 지원내용 통합안내 등 맞춤 지원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정례적 소통 협력 추진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수습지원단 및 현장상황관리관 운영	85	-	△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및 재난 관리자 업무지침 개발 연구

○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구성・운영('23.9~)
- 여러 기관에 분절되어 이뤄지고 있는 재난피해자 지원 기능 연계 및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 행안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소방청, 경북도 등 13개 기관 / 실무회의 11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피해자 지원기구(통합지원센터) 운영(안) 마련('23.12.) ○ 외국인 재난피해자 통·번역 지원방안 및 편의 지원절차 마련('23.12.) ○ 재난피해자 가족(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편의 지원방안 마련 및 지자체 통보('23.1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재난피해자 지원기구(통합지원센터) 표준조례안 개정

○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직원을 지역대책본부(현장)에 파견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입법 추진(재난안전법 제15조, 제17조 개정)

21	Ⅰ-3-⑤-㉯	재난 ·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위기 임신·출산 등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주요내용

○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전국적 확대 추진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양평기금)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	22,466	22,466	순증
▪ 가족역량강화 지원(일밤회계) (가족희망드림지원)	7,121	-	△7,121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전국적 확대 ('22. 93개소 → '23. 98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기·취약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1인가구, 전문상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가족서비스 제공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주요내용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국가보안법」 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최근 5년 간 입건 및 기소 건수 * 2019년 23명 입건, 1명 기소 → 2020년 32명 입건, 5명 기소 → 2021년 35명 입건, 20명 기소 → 2022년 24명 입건, 2명 기소 → 2023년 50명 입건, 12명 기소(신수 기준) ○ 국가보안법위반 총 73명(신수 50명, 구수 23명) 중 6명 기소유예 처분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상반기 검사 24명, 하반기 검사 22명) * 공안분야 검사 타켓 교육 등을 통한 국가보안법위반 의율 신중 교육 지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법적용 지속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해당 부분 : 이러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은 법적용 및 집행의 과정에서 이미 정착되어, 2022. 12. 15.자 법무부 의견서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는 2015년 29건, 2016년 26건, 2017년 25건이었으나, 2018년 5건(전부무죄 11건), 2019년 13건(전부무죄 6건), 2020년 7건(전부무죄 12건), 2021년 5건(전부무죄 1건)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단 1건의 유죄판결만이 선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무죄로 선고된 사건의 수도 적지 않다.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국가보안법의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으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제목표	○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및 전용 콘텐츠의 제작 보급과 자막·수어 변환 기술개발 및 고도화 등을 통한 미디어 접근권 향상			
	주요내용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육 콘텐츠(초·중·고교)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영유아·학령기·성인기)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수어로 변환하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인터넷 등 신규 미디어접근권 향상 ○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제작·송출, 배리어프리* 공모전 개최 및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15,718	20,176	4,458	28.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필수지정·고시의무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59개사)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운영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000여편)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48편) 제작·보급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 확대('22년 1.5만대 → '23년 2만대) -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우선으로 무료 보급하되, 보급 확대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유료 보급(일부 자부담) ○ (청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을 개발·고도화(시범서비스 운영) - 청각장애인 대상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제공(지상파·종편 등 채널 6개사, SKB 등 플랫폼 3개사) ○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홍보 강화)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관련 홍보영상 제작·보급,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구 배리어프리 공모전)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별도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까지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TV 보급률 50% 달성 목표 ○ 지역 장애인방송 활성화 사업을 통한 장애인방송 제작인력 양성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배포 등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 온라인상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삭제·임시조치될 경우 정보게재자에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등 삭제·임시조치 후속절차 마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삭제·임시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토, 당사자·이용자·사업자 간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담당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임시조치 제도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3.8~12월) -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분석, 현행 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등 ○ 온라인상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해 현행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임시조치 제도개선)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이관 및 직권조정절차 개시, 임시조치 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삭제 조치 등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분쟁조정 외 삭제·임시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도 담당 -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담 등을 하는 상담센터가 디지털폭력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연령별·계층별 체계적인 디지털 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 전국 초·중·고교 교육 강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교육 의무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임시조치 제도개선 등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계속)

25	Ⅰ-6-①	아동 ·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기반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 등 지원 ○ 공모전, 온라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을 통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정책 참여지원(청육기금)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1,218	-	△1,218	순감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일반회계) (청소년특별회의)	-	321	321	순증

* 청소년참여기구 중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일반회계로 이관('24년)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2023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 종료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위원회(233개소), 특별회의, 운영위원회(331개소) 등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
  * 기후환경·디지털역량 및 마음건강을 주제로 총 12개 부처 34개 과제 제안

○ 다양한 참여창구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의사반영 확대
-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23.7월~'23.8월) 및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23.7월) 개최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참여 지원 강화
  * ('22년) 12개 → ('23년) 15개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포탈' 정책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20~)

○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참여 지원
- 특별회의 참여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교육(연 4회) 및 전문가, 선배위원 자문단 운영하여 연간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성화 사업 추진 지자체별 1:1 전문가 배치 및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의 부처 최종 수용률 97.1% 달성(총 34개 정책과제 중 33개 수용) ○ 지역사회 특화 참여 활동사례 확산 및 온라인 참여포탈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페이지뷰: ('22년) 215,935건 → ('23년) 347,598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청소년참여 활동 격차 발생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권역별 지역회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중앙단위 청소년정책과정 참여 연계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활동 우수사례 선정·배포
-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파악 및 활성화 권고, 관련 조례 우수 모델(안) 제시('25년 이후)

○ 청소년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퍼실리테이터 배치 등 참여 활동 지원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 · 시위 기준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 · 팀명	감염병정책과 위기관리총괄과
	과제목표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코로나19 사회대응 방역조치 영향분석 및 정책근거 마련 연구' 실시(~23.5.) -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효과를 경로별로 추정, 향후 감염병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방역 대응 분석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23.5.) - 중장기 계획 내 '사회대응 체계 정비' 과제(2-9) 제시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관계부서 회의 진행 - 감염병환자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인권 보호와 양립가능한 방역 근거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감염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 정책 시사점 도출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초안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집회·시위 제한 조치는 여러 사람 간의 물리적·공간적 거리 확보를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 목적이므로 타 집합의 종류와 구분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 - 이에 따라, 기본권 보장 취지가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기본원칙 개정안을 마련 중

향후추진계획	○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 추진(~'27년) -「감염병예방법」 전면개정 추진단 구성('24.1.1.) 및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회의 진행 지속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치안정보국, 경비국)	과・팀명	치안정보상황과 경비과
	과제목표	○ 시간 또는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을 경우 집회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어 각각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			
	주요내용	○ (대화경찰 운용) 집회신고 단계부터 중복집회에 대해서는 시간,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되도록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의 집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을 지정·배치 ○ (법률 개정) 중복집회와 관련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시 의견 개진 등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대화경찰을 대부분의 집회·시위(배치율 91.4%)에 배치하여 장소 또는 시간이 겹치는 단체 간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 활동 ○ 중복집회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 논의 지원 활동(단, 임기 종료로 인하여 해당 개정안은 폐기 되었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화경찰을 현장에 적극 배치·활동한 결과, 집회·시위의 자유·인권· 안전 보장 및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며(78.2%),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는데 효과(71.65%)가 있다고 평가('23. 10月 여론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지도 등을 활용하여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첨예한 갈등현장에서의 활동하는 대화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고도화 추진 ○ 22대 국회에서 중복집회와 관련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 시 의견 개진 등 지원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주요내용	○ 안보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 -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필요한 유의사항 전파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충실한 사안 조사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적극적 지도 및 보호조치 실시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를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취지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보안관찰 업무 담당자 세미나 등 유관기관 회의를 실시 -「보안관찰법」 개정 법률안 관련 토의,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유의사항 공유 및 전파, 실무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및 애로사항 등 논의 * 세미나 일시 : '23. 4. 18.~19. / 참석 기관 :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소속 총 56명 ○ 충실한 사안 조사 후 적극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2건 의결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하여 실질적 심의를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외부위원 구성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 ○「보안관찰법」 개정 추진 경과 - '23. 3. 2. 정부안 국회 제출 → '23. 6. 19. 법사위 1소위 상정,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협의 이견이 상당하여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정 시한('23. 6. 30.) 도과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한 적극적 사안조사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도모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안조사시 대상자들이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안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보안관찰법」 개정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유관기관 협의 및 정부안 수정을 검토한 후 지속 추진할 예정

향후추진계획	○ 안보 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 ○ 양심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29	Ⅰ-7-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주요내용	○ 전국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법정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 철저히 준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 추진('23.)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법정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 철저히 준수 - '23. 사경신청 통신영장 검사 기각률 19.1%, 검사 청구(직청구, 사경신청) 통신영장 판사 기각률 2% * 사경신청 통신영장 56,266명 중 검사 기각 10,532명 / 검사 청구 통신 영장 55,583명(직청구 10,053명, 사경신청 45,530명) 중 판사 기각 1,131명(직청구 136명, 사경 신청 995명)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경과 - '23. 3. 정부안 국회 제출 → '23. 12. 19. 위원회 대안 상정 → '23. 12. 20. 국회 본회의 의결 → '24. 1. 1. 개정법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규정' 신설 * 통신이용자정보 : ①이용자의 성명, ②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이용자의 주소, ④ 이용자의 전화번호, ⑤ 이용자의 아이디, ⑥ 이용자의 가입일/해지일 * 사후 통지 규정 신설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정보조회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준수를 통한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호 철저 노력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 법제 정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준수를 통한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호 철저 노력 지속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과제목표	○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 및 정확성 제고로 오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 신상등록관련 비전자기록물 이미화를 통해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유관기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			
	주요내용	○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점검 및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신상등록관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업 강화 - 법무부(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 '23년 12회 실시(19,091건 점검, 536건 정보 현행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점검 및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강화 - '23년 104회 실시(411건 직권정정) ○ 판결문 등 신상등록관련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 '23년 71,372건 이미지화(스캐닝) 작업 실시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정기 3회, 수시 1회 개최) - 신상정보의 신속·정확성 제고 및 등록정보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및 정책 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신상 등록정보 일제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등 등록대상자 인권침해 최소화 기여 ○ '24년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따른 전자문서 사용 환경 구축 대비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등으로 신상정보 오등록 전무(全無)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신상 등록정보 일제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등 등록대상자 인권침해 최소화 기여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신상등록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정확성 제고 ○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비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실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1. 10. 19.)됨에 따라 '24년 10월부터는 신상등록분야에서도 현행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 추진 예정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주요내용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또는 하위 법령 개정 검토 * 최근 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에 관하여,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적 해석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회 계류 중인 관련「형사소송법」개정안(14302, 이수진의원 등) 입법 논의 지원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관련 연구용역 회신 결과 검토 ○ 대법원 추진「형사소송규칙」개정규칙안('23. 2. 3.~3. 14. 입법예고) 대응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 방안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회 계류 중인「형사소송법」(1336, 박주민의원),「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1098, 조국의원) 입법 논의 지원 ○ 관련 개정 방안 검토를 위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구성(7. 22. 위촉식 및 제1회 전체회의) 및 운영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디지털포렌식센터
	과제목표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디지털증거 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압수·수색 현장지원 확대			
	주요내용	○ 디지털증거 처리 관련 제도 개선 - 피압수자 참여권 확대를 위한 소관 행정규칙 개정, 판례 해설자료 작성·배포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압수·수색 현장지원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소관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피압수자 참여권 확대('23. 7월)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 별지서식 '참여 철회 확인서'를 '참여(철회) 확인서로 개정, 참여 의사 관련 범용확인서로 활용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주요·최신 판례를 분석한 '판례 해설집' 발간('23. 1월)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시 압수 대상 범위 한정, 별건 정보 발견 시 추가 탐색 중단 등 준수사항 안내 ○ 임의제출을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 분석관의 현장지원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일선 수사관·분석관의 적법절차 준수의식 제고를 통한 피압수자 등의 인권 침해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규정을 악용한 수사지연 사례 발생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현장용 분석장비·프로그램 개발·보급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확대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관련 교육과정 신설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팀명	조사총괄과 침해평가과
	과제목표	○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기반 구축 ○ 형사사법 절차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안 제시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 입법 지원			
	주요내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 ○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근거하여, 법무부 소관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후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 통보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발표('23.4.7.) -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 ○ '23년 법무부 소관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안을 위원회 심의·의결하여, 법령 소관 부처에 결과 통보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발표·공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KICS 운영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 ○ 법무부 소관 법령 60건 중 평가 대상 법률 31건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선 권고 이행 사항 관리 및 침해요인 평가 계속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생활교통복지과 교통서비스정책과
과제목표	○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주요내용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 1.)을 통해 보급률 제고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1.)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 확대

  * 저상버스 도입률(%) ('22.) 34 → ('26.) 62

- 국가연구개발 R&D('23.~'26., 국비 250억원)를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및 도입 의무화('27.1.)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7.)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24시간 운영, 광역권 이동)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 추진

○ 대부분 대중교통 취약지역(버스정류장 400m 또는 배차시간 3시간 이상) 대상으로 추진하되, 교통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확대(예: 벽오지 학생 등·하교 등)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24,560	232,427	7,867	3.5%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 공공형택시	5,873	6,933	1,060	15.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 및 광역권 이동 규정 신설 등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개정('23.7)

-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간 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국비 지원 ('23.7~, 운영비 23년 예산 237억원)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1월)을 통한 보급률 제고

- '23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산(189,514백만원) 확대를 통한 저상버스 4,269대 도입 지원

  * 저상버스 도입률 : ('22) 34% → ('23) 약 38.9% → ('26) 62%(목표)

○ 총 63개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도입, 목표(61개市 도입) 대비 초과 달성

  * '23년 공공형 택시 이용자 현황 : 3,740,043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고 ○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수혜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궤도·삭도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휠체어승강설비, 손잡이 등) 및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24.1) ○ 전국 어디서나 앱·전화 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4) ○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저상버스 보급률 제고 - ‘24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167,495백만원) 지원을 통한 저상버스 3,765대 도입 예정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광역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화 예정(‘27.1월)에 따라 표준모델에 대한 시제품 차량 제작, 안정성 인증 및 성능평가 예정 * (‘23～’24) 차량 기본 설계 → (‘25) 차량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 (’26) 시제품 개선 및 표준모델 제작 ○ ‘24년 공공형 택시 운영실태 점검 및 분기별 국비집행액 및 이용자현황 조사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연안해운과
과제목표	○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확대를 통한 이동권 증진			
주요내용	○ 육지 대중교통 수준(3,500원)으로 여객 운임지원 및 차량 운임지원 대상 확대* * 수입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배기량 2,500cc 이상 승용차 및 15인 이상 승합차 등 지원			

관련예산

(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9,836	19,676	△160	△0.8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3,176	13,176	전년동	전년동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섬 주민 연안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수입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배기량 2,500cc 이상 및 15인 이상 승합자동차 등 운임지원을 위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23.2.1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섬 지역 이동권 증진 도모 - '23년 수입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2,500cc 이상 승용차 및 15인 이상 승합자동차 등에 대한 운임지원을 통해 섬 주민 차량 선적 비용 부담 완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객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난항

향후추진계획

○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지속 추진 및 여객 운임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성능개선을 통한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등 인권침해적 요소 최소화 필요			
	주요내용	○ 휴대용 추적장치의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필요성이 없도록 편의성이 향상된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및 소형·경량화 ○ 전자식 탈부착방식을 적용해 탈부착 시간이 단축된 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확대실시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법령에 근거한 수신자료 제공 및 '수신자료 폐기 대상 확인의 날'(월 1회) 운영 등 체계적 관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전자감독	30,677	32,427	1,750	5.7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및 소형·경량화 * ('18.) 1,800세트 → ('19.) 1,420세트 → ('20.) 330세트 ○ 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20.) 1,293세트 → ('21.) 2,229세트 → ('22.) 2,300세트 → ('23.) 2,150세트 ○ 심리치료* 확대 실시 * 집행 횟수(회) : ('19.) 14,427 → ('20.) 9,740 → ('21.) 14,381 → ('22.) 14,902 → ('23.) 17,977 ○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실시 인원(명) : ('19.) 142 → ('20.) 123 → ('21.) 530 → ('22.) 407 → ('23.) 289 ○ 수신자료 제공 건수 : * 실시 인원(명) : ('19.) 46 → ('20.) 22 → ('21.) 140 → ('22.) 374 → ('23.) 49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전자장치 성능개선 추진으로 생활 편의성 증진 ○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부착명령 임시해제 건수 감소에 대해 작성 여부 등

향후추진계획	○ 전자감독 심리치료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 추진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 대구구치소 등 32개소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120건, 설문조사 2,383건, 면담 516건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 공항 내 출국대기실 3개소(인천·김해·제주국제공항) 출국대기자 상대 설문조사(26명), 면담조사(14명), 현장 검검 실시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강화 * 접수 4,085건, 직접조사 2,625건(직접조사율 64.26%)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설치 * '21. 57개소 → '22. 63개소 → '23. 69개소 구축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실태점검 실시로 인권침해적 요소 사전 제거, 대상기관 인권지수 향상 ○ 다양한 인권교육으로 인권의식 향상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강화, 화상조사시스템 지속적 확대 구축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개선 시행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구축 * 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한 직접조사가 가능하도록 화상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146개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확대 ○ 주제별 실태조사를 통한 조사 업무와 제도개선의 연계 강화 * 인권실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 1회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군인권총괄담당관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과제목표	○ 장병의 고충 및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적극적 관리 및 지휘 조언으로 복무 적응 여건 보장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 기본권 보장 추진			
주요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체결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국방부 타 직종 및 타 기관 유사직종 대비 과도한 근로조건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기간 단축, 직무평가 횟수 조정, 감정회복휴가 신설 등 - 직무보수교육, 슈퍼비전 등 전문성 강화 및 감정소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군 간부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확대 - 상담대상・상담영역・상담시간・사업기간・예산 확대 및 홍보 강화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 당직근무비 인상,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시범운영 등 병영문화 개선 추진 ○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운영 등 - 군인권개선협의회·국방인권모니터단·인권상담/진정제도 운영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33,815	34,753	938	3.0
▪ 민간심리상담 프로그램(EAP)	300	600	300	100
▪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232	232	0	0
▪ 인권상담관	228	234	6	2.5
▪ 인권모니터단	18	17	△1	△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여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체결('23.10.26.)
- (무기계약직 전환기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5년 → 2년
- (직무평가 횟수) 연 7회 → 연 2회
- (감정회복휴가) 자살장병 상담 시 심리안정휴가 4일 신설, 감정노동휴가 연 1일 → 연 2일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문성 강화 교육
- (직무보수교육) 상담 이해·해석기법, 트라우마 치료기법 등 체험 프로그램 구성, 2박3일
- (슈퍼비전) 상담사례 분석, 평가 및 감정소진 회복, 희망자 대상 연1회 지원

○ 군 간부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확대
- (상담대상 확대)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간부 모두에게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대상 지속 확대

구 분	'22년	'23년
상담대상	위험군(심리검사 결과)* 군 간부	상담을 희망하는 전체 군 간부

* 검사결과 분류 : 위험군, 주의군, 양호군

- (상담영역 확대) 기존 심리상담에 더하여 법률·재무 분야 및 도박·알콜중독 예방 등 전문가 상담을 연계 지원
- (상담시간 확대)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에도 상담 실시
  * ('22년) 월 ~ 토(주 6일) 09:00 ~ 21:00 → ('23년) 매일 09:00 ~ 24:00
- (사업기간 확대) '22년 8개월 → '23년 12개월(1월부터 지원)
- (홍보 강화) EAP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방일보・유튜브 활용 및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 (예산 확대) '23년 3억원(3,000회기) → '24년 6억원(6,000회기)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 '23년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교육 횟수 : 총 31회 - '23년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인원 : 729명 ○ 병영문화 개선 추진 - '24년 당직근무비 예산 인상 반영 : ('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3차 시범운영 : '23.7월 ~ 12월 / 총 45개 부대 / 전군의 20% 수준 * (기간병) 아침점호 후 ~ 21:00, (훈련병) 주말·공휴일 1시간 - 당직직위 감축 추진 : ('23. 7월) 8,178개 직위 → ('23.12월) 7,384개 / △9.8% ○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운영 등 - 군인권개선협의회를 통한 「'23 ~ '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수립 - 카카오톡 등 상담채널 다양화를 통한 인권 상담/진정제도 활성화 * (상담/진정 실적) 상담 7,907건, 진정 211건 처리 -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군내·외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인권정책 개선 * (인권정책 관련 제안활동 시행) 총 127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병 고충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장병 복무 적응 지원을 강화 ○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기본권 향상) 당직근무비 인상,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복무여건 개선 및 사회와 소통 기회 확대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 확대 추진 * ('29) 1,000명 목표 추진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개선 연구 * KIDA 정책연구를 통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평가 및 현재 업무환경, 수당제도 등을 분석, 중장기 제도 발전 방안 도출('24년)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반영 : '24년 ○ 당직근무비 인상 추진 : ('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5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 당직직위 감축 지속 추진 : 목표 20% 감축 ○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등 지속 운영 및 내실화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폭력방지과
	과제목표	○ 군 장병 인권보호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군외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을 활용하여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서비스 강화			
	관련예산	(범피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7,354	△183	△0.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23년 이행실적	○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운영지원을 통한 상담, 심리상담·치료, 수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군 성폭력 특화상담소 신규 국비지원('22~)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접수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내실화 지원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23.3월)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23년 3개소) 및 조직문화 진단 지원(23년 11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서비스 제공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관리체계 지속 강화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과·팀명	민원조사기획과
과제목표	○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고, 워크숍·교육 등을 통한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			
주요내용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합의 등 해결 ○ 각급 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24	△7	△0.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집단민원 해결
-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민원 177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

○ 고충민원 역량 강화 지원
- 광역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고충민원 기본 교육 실시(총 42회, 약 2,100명 수강)
- 분야별 고충민원 전문조사 과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과정, 집단고충민원 과정 등 전국단위의 집합교육 실시(총 3회, 840명 수강)
- 행정기관의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 12만명의 숙원 해소 * 문화재 복원으로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 요구(주민 33,434명), 태안 안흥진성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요구(주민 19,544명) 등 ○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해 범정부 고충해결 역량 향상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집단민원 해결 추진(계속)

○ 각급 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 교육 실시(계속)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계속)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피해 재발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도모			
주요내용	○ △현장교육 △전문가 양성 △대내·외 홍보를 통한 제도운영 활성화			
관련예산	(피해자보호활동)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회복적 경찰활동	535	5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 가·피해자 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운영 경찰서를 '22년 240개서에서 '24년 전 경찰서(259개서)로 확대 시행

○ **회복적 경찰활동 세미나 개최**
- 회복적 사법 전문가 '케리 클램프'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성과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 **현장경찰 대화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총 70명 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를 통해 △층간소음 등 폭행·협박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총 1,515건 실시

향후추진계획

○ 운영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 추진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팀
과제목표	○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대응 정책 개선 및 법규·제도 발전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군 성폭력 실태조사	191	174	△17	△8.9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6,628	8,135	1,187	17.9
▪사건처리관계관 대외위탁 직무향상 교육	42	52	10	23.8
▪성인지교육	1,524	1,669	145	9.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 '23. 11. 21. 법사위 2소위 심사 후 계류 / '24. 5. 31. 임기만료로 폐기

○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검토 ('24년 전반기 군인권개선협의회 안건 상정 예정)
* 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현 사건발생 부대 재발방지대책 포함 요소 중첩 여부

○ '23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기간 / 설문방법 : '23. 4. 10.~11. 30.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설문참여(7~8월)
* 내용 / 최종응답자 : △ 성에 대한 포괄적 인식, △피해 경험 △2차 피해 및 디지털 성폭력 실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등 / 총 17만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정원 확대에 따른 연차별 채용/운영 ('23년 총 3회, 총 43명)
* 증원계획 : '21년 50명(군단급) → '22년 103명(사단급) → '23년 150명(사단급)

○ 성희롱·성폭력 24H 상담 전화 운영 개설 ('23. 10.16부)
- 군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접수를 위한 24H 핫라인 구축
* 일과 이후·휴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상담 공백 문제 개선
* 국방 헬프콜 1303 내 성고충전문상담관(5명) 신규채용 / 배치, 24H 상담 지원

○ 사건처리관계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23.4월~11월)
* 대외위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총 6개 과정(14회, 총 계획 420명 / 수료 509명 (121%))

○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효성 제고
- 성인지교육(원격+강의/토의교육) 강조 : 전군 97.1% 이수
- 교육대상별 맞춤형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교육

교육대상	병 사	실무자급 간부	관리자급 간부
맞춤형 주제	△ 동성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 디지털 성폭력 예방	△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 주변인 개입	△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학습몰입도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에듀테인먼트 형식의 군 맞춤형 콘텐츠 개발(~12월)

	* '24년 성인지 원격교육 콘텐츠(7종 / 4대 폭력 예방) 개발 진행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성희롱과 성폭력,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③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④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⑤ 동성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⑥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⑦ 주변인의 역할 ⑧ 사건처리절차), △성매매 예방, △가정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통한「부대관리훈령」, 군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매뉴얼 개정 ('23.12월) * △ 용어변경 '가해자 → 행위자', △ 성별 무관하게 적용하는 '2차 피해' 재정의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주변인 대응 등 구성원들의 성인지 수준 향상 확인 - 군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응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 증가 ○ 피해자 보호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 - 성고충전문상담관 신규채용 진행으로 '23.12월 정원대비 90% 운영 - 사건처리관계관 대외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추진으로 직무역량 강화 - 24H 성고충전문상담 창구(국방헬프콜) 개설을 통한 피해자의 상담신고 여건 확대 ○ 성인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성인지교육 90%이상 이수 추진 : 전군 이수율 97.1%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재정립 후 미비점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토의를 통해「부대관리훈령」 개정 *△ 용어변경 '가해자' → 행위자', △ 성별 무관하게 적용하는 '2차 피해' 재정의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정 관련 부대관리훈령 개정 추진(~'24. 12월) ○ '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24. 5월~12월) ○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연 3회, 100%보직 목표) ○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24. 12월 예정) ○ 사건처리관계관 대외위탁 직무향상 교육('24. 4월 ~ 11월, 총12회 540명 계획) ○ 전군 성인지교육(원격+강의/토의교육) 이수 (연중) ○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 ('24. 5월~12월)

41	Ⅰ-10-⑥	진실 · 정의 · 배상 · 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 · 팀명	사회통합지원과
과제목표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 (개요) 4·3사건법 개정('22.4.12.)에 따라, 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실시('22.6.~) ○ (대상)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 (기준)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이하 ※ (사망·행방불명) 9천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5천만~9천만원, (수형인) 유형별 3천만~9천만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제주 4·3피해 보상(보상금 등) - 제주 4·3피해 보상(보상금 등)	193,554	226,198	32,644	16.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

- 8차 신고자 희생자·유족 추가 접수* 실시('23.1.1. ~ '23.6.30.)
  * 1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8,825명) 신고 접수
-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심의·결정
  ※ 희생자 3,617명에 대해 3,196억원 지급 결정('23. 말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충실 이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

- 8차 추가 신고 접수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24.下)
-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속)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	과·팀명	소비자안전교육과
과제목표	○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23)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및 기능 개선('27)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인증정보 등 기능개선)	483	219	△264	△5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참여기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추가('23.5.31)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추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23.11.) -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에 대한 자료 공유, 해외 안전기준과 상이하거나 국내 기준이 미비한 제품에 대한 제도개선 등 검토 및 논의 ○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잠재적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및 기능 개선('27)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전체 여성공무원 대비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 등을 통해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주요내용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확대 추진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1.5%	11.8%	12.4%	12.9%	13.5%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7.2%	27.8%	28.5%	29.3%	30.0%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년)」(여가부, '23.7월) 상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을 통해 공직 입직 단계부터 성비 불균형 완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목표치 초과 달성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분기별 점검·독려 등의 노력을 통해, '2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11.7%,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28.4%를 기록하여, 각 목표(11.5%, 27.2%) 대비 101.7%, 104.4% 달성

○ 공직 입직 단계에서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연장('23~'27년)

○ 양성평등 근무여건 확립 등 통합인사정책 중장기('23~'27년) 로드맵을 담은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시행('23년 3월)

○ '23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23년 9월)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현황 공개

○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노력도 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 시행('23~'27년) 등을 통해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22년 11.2% → '23년 11.7%,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2년 26.4% → '23년 28.4%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3~'27년)」 수립('23년 3월) 등을 통해 양성평등 근무여건 확립 등 공직사회 통합인사 지속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점검(매분기)

○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매년)

○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현황 공개(매년)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 추진 - 장애인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7·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법정 의무고용률 2배 이상 선발) -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적합직위 적극 발굴 * (자격) 경력·자격증·학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응시가능, (시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 ○ 장애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인사실무 시 활용 가능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중증장애인 소통 간담회' 개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7·9급 국가직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지속 적용 * '23년 법정의무고용률 3.6% → 7·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비율 7.2% - '23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185명 선발 완료(7급 39명, 9급 146명) ○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 시험 확대 - 부처별 중증장애인 적합직위 적극 발굴, 제도 도입('08년) 이래 최대규모(64개) 직위 발굴 * 중증 경채 발굴직위 : ('08년) 25개→('19년) 31개→('20년) 50개→('21년) 46개→('22년) 61개→('23년) 64개 - '23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으로 41명 선발 완료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인사실무 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업무 매뉴얼「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배포('23. 4월) * 채용, 보직관리,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총망라('21년 매뉴얼 보완 및 개정)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23. 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 ○ 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일하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3년 3.6%→'24년 3.8%)에 따라, 7·9급 공채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의무고용률 2배(7.6%) 이상으로 지속 적용,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적합직위 지속 발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부처별 조직진단·직위발굴·채용계획 수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속 추진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 보장을 통해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완화,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주요내용	○ 저소득층 공직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구분모집'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內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공채 선발예정인원 대비 2.8%) 운영 - 선발예정인원 151명 공고, 최종 140명 선발 완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홍보 추진 - 제도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저소득층 접근도가 높은 복지로(사회복지서비스 정보 포털) 등에 게시 * 저소득층 구분모집 적용시험(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시험), 응시자격(기초생활수급자 등), 응시수수료 납부 면제 등 안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공직 채용 지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공직사회 대표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內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매년)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지방간 불균형 완화 및 지방학교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속 추진 ○ 전국 지역인재 7·9급 추천채용제 선발 지속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선발 - 5급 공채 · 외교관 후보자 : '23년 7명 ('07~'23년까지 총 122명 추가 합격) - 7급 공채 : '23년 42명 ('15 ~ '23년까지 총 208명 추가 합격) ○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추진으로 우수 인재 공직 등용 - 7급 전국 지역인재 선발 : '23년 185명 ('05 ~ '23년까지 총 1,910명 선발) - 9급 전국 지역인재 선발 : '23년 300명 ('12 ~ '23년까지 총 2,464명 선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및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노력 -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지방인재 합격자 13명 중 7명이 지방인재로 추가합격 - (7급공채) 지방인재 합격자 211명 중 42명이 지방인재로 추가합격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선발 지속 추진 및 지역별 균형 있는 공직 등용 노력 - 지역인재 선발 지속 추진('05~'23년) : 총 4,374명 (7급 1,910명, 9급 2,464명) - 특정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학교가 일정비율(7급 10%, 9급 20%)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방인재(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 목표제 지속 운영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7급) 연장 추진 : 3차 '25~'29년 (1차 '15~'19년, 2차 '20~'24년) ○ 전국 지역인재(7·9급) 선발 지속 운영 - '24년 7급 선발 인원 : 175명 - '24년 9급 선발 인원 : 250명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1. 노동권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84	3	81	0	
1. 노동권	19	1	18	-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8	-	18	-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24	1	23	-	
4. 교육을 받을 권리	4	-	4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2	1	11	-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	-	7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노동권】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추진중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중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추진중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중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추진중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추진중
8	Ⅱ-1-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추진중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추진중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추진중
11	Ⅱ-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12	Ⅱ-1-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추진중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일부완료**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추진중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완료('23)**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추진중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추진중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중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중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추진중
21	Ⅱ-2-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중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추진중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추진중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중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추진중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추진중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추진중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추진중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추진중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중
36	Ⅱ-2-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추진중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추진중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추진중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추진중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추진중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추진중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추진중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중
44	Ⅱ-3-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추진중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추진중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추진중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추진중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추진중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추진중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중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추진중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추진중
54	Ⅱ-3-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추진중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추진중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추진중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추진중
58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완료('23)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추진중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중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교육을 받을 권리】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중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추진중
64	Ⅱ-4-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추진중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추진중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6	Ⅱ-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중
67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과제완료('23)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추진중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추진중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추진중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추진중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추진중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중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추진중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중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중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중
81	Ⅱ-6-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추진중
82	Ⅱ-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추진중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추진중
84	Ⅱ-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공정채용기반과
과제목표	○ 청년 등 취업촉진			
주요내용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 1:1 상담을 바탕으로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등을 기반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역량 제고 지원 및 훈련·일 경험 연계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 - 민관협업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확대,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개편하여,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 구직자 알권리 제고 추진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40,667	83,147	42,480	104.4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8,571	38,937	30,366	354.3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126,293	244,113	117,820	93.3
(청년일경험지원)	55,330	171,820	116,490	210.5
(청년도전지원사업)	40,780	45,833	5,053	1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 '23년 시범 운영 대학 12개교를 선정하여 재학생 4.3만명을 지원, 목표(3만명) 대비 초과 달성

* ▲빌드업 프로젝트 24,376명 참여 → 19,694명에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점프업 프로젝트 19,537명 참여 → 15,788명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

- '23년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지원 확대 제공

* '22년 기업탐방형, 1만명 → '23년 기업탐방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1.97만명

- 일경험 정보가 통합 제공되고, 맞춤형 매칭이 실현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완료

* '23년 수립한 ISP를 토대로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추진 (중앙부처 + 공공기관('24년) → 지자체 + 민간기업('25년) 順)

- '일경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일경험 제도개선방안 등 논의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추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지원

- 청년의 구직단념의 원인과 정도가 다양함에 따라 맞춤형 구성 등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 (기존) 단기(1~2개월) 프로그램 → (개선) 단기 (1~2개월) 프로그램과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구직단념 수준・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 구직단념 청년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 수당(도전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확대 추진

* (기존) 인센티브 20만원→(개선)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50만원×5개월+인센티브 50만원)

* 사업규모: '22년 7천명 →'23년 8천명(+1천명 증가)

○ 공정채용법안 마련 → 의원입법으로 「공정채용법」 발의('23.5.22) → 법안소위 회부(12.18)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학년에는 취업 역량 향상 지원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1:1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대학 및 참여 청년 모두 공감대 형성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 - 청년의 실무경험과 직무역량 향상 기회 제공(참여인원 20,836명)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지원 - 49개 지자체 및 청년 7,147명 참여 ○ 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지원 및 입법 분위기 조성 - 전문가 포럼, 청년·기업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 마련 * 법 개정 연구, 전문가 포럼(공정채용포럼 '22~'23년 각 10회, 대한경영학회 포럼), 기업·청년 간담회 7회(장관 등), 대국민 설문조사(9~10월, 1,100명), 언론모니터링 등 - 입법을 위한 홍보·공론화, 관계부처·기관 협의, 당정협의 지원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확대 -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사업확대 예정 * ('23) 12개교 → ('24) 53개교 → ('25) 60개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 -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 확대, 지역 청년 일경험 기회 확충(권역별 지원센터 신설 등), 일경험 플랫폼 구축 추진 * '24년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청년 4.8만명 지원 목표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 계속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 강화 * '24년 전국 72개 지자체 선정, 9,639명 지원 예정 ○「공정채용법」 개정(안)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 → 22대 국회를 통한 조속한 발의·통과 적극 지원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공공기관 고용컨설팅 대상 확대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근로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고객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지속 추진
○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전문고충상담을 통해 노동문제 상담, 직업생활 유지 지원

주요내용

○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성 부처·기관에 고용컨설팅 집중 제공 및 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 기준 강화, 정보공시 추진 등을 통해 고용저조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독려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연계하여 미이행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고용컨설팅 지원
- 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 대상 기준 강화 및 장애인 고용현황 ALIO 공시 의무화 추진

○ 고용장려금 및 신규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
- 수도권 훈련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설립
- 양성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초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양성훈련 진입 기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개조·제작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관련 고충상담·노무교육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유지 지원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 취업지원	33,488	34,011	523	1.56
(고용의무이행지도)	2,533	2,153	△380	△15
▪ 장애인 고용장려금	297,747	323,371	25,624	8.6
(장애인고용장려금)	281,635	311,872	30,237	10.7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16,112	11,499	△4,613	△28.6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1,906	88,585	6,679	8.2
(경기남부직능원신축사업)	16,405	19,695	3,290	20.1
▪ 보조공학기기지원	19,248	19,603	355	1.84
(보조공학기기 지원)	19,248	19,603	355	1.84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32,998	248,006	△15,008	△6.4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673	1,67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4년까지 3.8%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 유도를 위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처·기관으로 고용컨설팅 확대* 및 장애인고용 현황 통합공시(ALIO)** 의무화로 공공부문의 ESG 경영 선도
* ('20) 47개소 → ('21) 118개소 → ('22) 165개소 → ('23) 182개소
**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 의무이행 여부 등 고용현황을 알리오에 공시('23.7월)

○ 공공부문 명단공표 대상 기준 강화*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에서 100% 미만(3.6%)으로 상향하고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월평균(12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로 개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경증 남성, 경증 여성 5만원↑,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0만원↑) * '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진행('22.2~'24.8.) * 지하1층~지상4층, 실습관・협력관・생활관・다목적강당으로 구성, 연면적 22,386㎡(6,771평) -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을 위한 경영성과 목표 확대 및 초과 달성 * (목표) '22년, 599명 → '23년, 615명(824명 수료)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질관리, 연구개발 및 기기체험이 가능한 전문센터 1개소(서울) 운영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서울, 부산, 광주, 경기, 대전, 대구)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컨설팅을 통한 채용제도 개선 및 적합직무 개발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채용제도 개선) 비장애인과 동일한 채용 기준 완화, 제한경쟁 및 특별채용 도입 등 - (적합직무 개발) LH 주거급여 보조조사원 등과 같이 기관·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개발 -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총 2,411명(중증 2배수) 신규 채용 ○ 명단공표 기준율 강화로 이행지도 대상 확대* 및 의무이행 지원 강화로 장애인고용률 제고** * ('22) 1,126개소 → ('23) 1,478개소(352개소↑), ** ('22) 3.12% → ('23) 3.17% (0.05%p↑) ○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증가(지급연인원): '22년, 608,302명 → '23년, 665,816명 ○ 훈련인프라 확충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확대 - 수도권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24.8월 준공 예정) * 훈련 규모 300명, 연간 1,000명 서비스 수혜 기대 - 양성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준비과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성훈련 기회 확대 * ('23년) 직업훈련준비과정 수료자 824명 → 양성훈련 진입 455명 ○ 보조공학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특성·직무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맞춤형 기기를 지원하고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성능과 안전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실시 * ('23년) 460건 맞춤기기 지원, 105건 기기품질인증, 8건 기술개발 ○ 인권침해·노사분쟁·장애차별·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충상담실시 및 노무교육, 기타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 ('23년) 4,128건 고충상담, 1,773건 노무교육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consulting.esingo.or.kr)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고용컨설팅 지원 강화 - (온라인) 기관의 장애인고용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점 및 개선점 등을 도출,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는 他 채용사례 및 고용가이드를 제공하여 기관 스스로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5개 영역,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및 조직문화, 장애인 직무관리 진단, 장애인 채용 노력, 장애인 고용유지관리 역량, 장애인 건강관리와 작업장 환경 - (오프라인) 권역별·업종별 공공기관 통합컨설팅 추진으로 컨설팅 시너지 효과 창출 ○ 명단공표 사전예고 공공부문 대상 '장애인 고용 역량 진단' 의무화 및 맞춤형 의무 이행지도 실시 ○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유지와 신규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편성 ○ 직업훈련 인프라 지속 확대를 통한 훈련수요 불균형 해소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24~) 및 훈련 게시·지속 확대

3	Ⅱ-1-③-㉮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안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보급 등 지원 강화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부모 대상으로 확대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1,790	△690	△27.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946	1,127	181	1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속 운영
-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개최('23.4월, 10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23.5월)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23년 1,028개소)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2항제1호)

○ 모집·채용상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23년 20,000개)

○ 육아휴직 대상 확대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관리자)율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지속 상승 * 여성고용률: ('21년) 37.78% → ('22년) 38.05% → ('23년) 38.28% * 여성관리자율: ('21년) 21.30% → ('22년) 21.75% → ('23년) 22.11%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률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차질없는 시행
○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과제목표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주요내용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임신부터 직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직장문화 개선 등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72,591	73,468	877	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AI, 디지털 등 신기술·미래유망 및 지역 산업·수요 기반 직업훈련 확대 * (고부가 직종 직업훈련 확대) ('20) 50개 과정 → ('23) 74개 과정 * (지역·산업 기반 훈련과정 개발)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신기술 미래유망 직종 발굴 연구('23)」 → '24년 시범운영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및 지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 - (인프라 확충) 지역의 산업·직종·고용환경 등을 고려한 경단예방 서비스를 맞춤형·선제적 제공 * ('22) 75개소 → ('23) 80개소 - (특화사업 운영) 경력단절 위기요인별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23년 2개소) ○ (다부처협업 취업지원 확대)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성에게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지원 * ('22) 7개 부처 10개 사업 → ('23) 8개 부처 11개 사업 ○ (일경험 제공)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지원, 사후관리 강화로 인턴십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여성고용 촉진 및 정규직 장기고용 제고('23년 9,253명 연계) ○ (예비창업자 지원) 창업상담·훈련,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전담인력 40명 운용) * ('22) 1,707명 창업 성공 → ('23) 1,865명 창업 성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 159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진로지도,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16.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에 성공 ○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8.5만명)과 기업(2.9천개사)을 대상으로 노무·심리 고충·경력개발 상담·멘토링, 직장문화개선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새일센터('24년 159개소)를 통한 종합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직업교육훈련) 신기술 응용분야 및 지역 핵심산업에 기반한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진입 지원 * 디자인, 마케팅 등 디지털 분야, AI 활용 기술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기술, 반도체 설계 등 79개 과정 - (다부처 협업) 부처 간 협업으로 (각부처)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여가부)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취업상담, 인턴 연계·취업 및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 * ('24) 8개 부처, 12개 사업 107개 과정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및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정규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7,777명 지원)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유입·활용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경력복귀 지원 적극추진 및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주요내용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연구개발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향상 교육훈련 지속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력복귀 단계별 맞춤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설계 ○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출산·육아휴직자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채용(대체)인력 매칭 및 인건비, 직무교육 지속 지원			

관련예산

(과학기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15,000	15,100	100	0.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 총 504명 지원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매칭 및 연구과제 수행 지원
- 경력복귀 예비자 대상 인력 수요가 높은 직군에 대한 직무 훈련 제공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유지·성장 위한 교육·멘토링 통합 경력개발 워크숍 운영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및 추가 연구인력 활용 지원 : 총 115명 지원
- 출산·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대체인력 지원
- 육아기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속 위한 인턴 및 전문박사연구원 지원
- 과학기술분야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위한 지역별·경력별 대체인력 풀 구축(2,137건)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대체인력 풀 누적 구축·관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심화 및 고용침체 상황 속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를 통한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안착 및 재단절 방지 기여 ○ 업무 대체가 어려운 과학기술분야 특성에도 불구하고 R&D 전문역량을 보유한 대체인력 풀 확대 구축 및 연구개발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지원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선제적 대응 및 육아기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경력 단절 방지 위한 경력 이음 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
- 경력 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성장 및 경력 재단절 방지 위한 전담 상담사 1:1 맞춤형 커리어 상담 및 경력 설계 지원

○ 지역 일·생활 균형 제도 안착 및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통한 지역 인재 활용 제고
-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역 위탁 운영기관 설정으로 지역 과학기술인재 경력단절 예방 및 지역 이공계 인재 활용 지원체계 구축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주요내용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학교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사안처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관련예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고특회계)	491	245	△246	△50.1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43	-	△43	△100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445	245	△200	△44.9
▪ 양성평등(5-24) (특별교부금)	1,950	1,950	-	-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150	200	50	33.3

* 내역 사업 폐지로 인해 감사관실 예산으로 이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안 접수 및 처리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강의 종류 : 9종, 연수 횟수 : 36회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
- 강의 종류 : 3종, 연수 횟수 : 17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총 142건을 접수하여 131건 조치완료(조치율 92.3%)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수강 인원 : 1,037명, 참여자 만족도 : 90.4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 - 수강 인원 : 973명, 참여자 만족도 : 91.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계속)
-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안 접수 및 처리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슈퍼비전 및 모의훈련 실시
- 담당자의 효과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방식 개편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계속)
- 대면 직무연수 확대 추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유도 및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양성평등정책지원	253	233	△20	△7.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 법무부 주변인 개입 교육 표준교안 제작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숙달모델 제작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소속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지도점검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 실시

○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소규모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영화 상영 등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관 하에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추진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 유도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 체계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강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향후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및 폭력예방교육 지속 실시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 및 근절방안 마련			
주요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관광 등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문화예술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270	260	△10	△3.8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70	260	△10	△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분야별 실태조사)**
- 실태조사 5개년 조사 계획('22, '23, '24년 콘텐츠산업 분야, '25. '26년 관광 분야) 진행 중
- '23 콘텐츠산업(광고·만화·애니메이션·웹툰산업)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23.7~12)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강화)**
- 센터 간 정례협의체 운영(연 2회)을 통한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 마련('23.4) 및 심의·의결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3.6)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23.12) 후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절차 전 과정 통합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신고상담센터 예방교육 실적 183,252명 전년대비 87,151명(90%) 상승
-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실천규약(행동강령) 표준안 제작 및 확산콘텐츠(3종/문구·리플렛·영상)개발·보급('23.12)
-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서면점검 실시(연1회 정례화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센터 운영 및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 ○ 센터별 접수현황, 지원현황, 예방교육 건수 집계 방법에 대해 기관별 통합관리방안 마련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 및 빠른 자료 취합으로 대응 능력 향상 ○ 신고상담센터 예방교육 실적 지속적 증가('21년 80,418명, '22년 96,101명, '23년 183,252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고상담센터들의 인지도 제고 필요 ○ 코로나 이후 현장으로 돌아간 강사들이 많아 강사들 인력 충원 필요

향후추진계획

○ 각 센터별 사례 공유 정례화를 통해 센터 간 네트워킹 강화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활동 지원 활성화(출강 지원, 강의안 코칭 프로그램, 프로필 촬영 지원)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교육 신청·운영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교육 신청·관리 시스템 도입
- 학습관리시스템(LMS)도입 통한 온라인 교육 운영·관리 기능 강화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의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전문가 지원 및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인식 개선 선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3조 및 제17조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지속 추진(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 근무여건 인식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 조사 주기로 '24년 실시 예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612	551	△61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의료현장 내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 및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상담·자문) 인권침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의 1:1 심리상담 및 법무·노무 자문 지원 * 지원실적 '22년 711건 → '23년 1,800건 - (인권교육)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권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실시 ○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접수채널 다양화) 기존 유선·카톡채널 외에 전용 홈페이지·앱 구축 및 대표번호 개설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sns 영상제작·게시, sp매체(ktx역, 지하철) 홍보,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침해상담센터 개소('21.8월) 이후 홍보 강화와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상담실적 증가 등 운영실적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확대 - '23년 대비 교육방식 다양화(강의식 또는 집단상담 등) 및 교육대상 확대(의대, 간호대 등 예비의료인)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부문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고·상담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 사건처리 등 지원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240	140	△100	△41.6
▪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이관	858	-	△858	순감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708	708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 다수, 기관장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요구('23년 30개소)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4.18.)
  *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 단축(3→1개월) 및 사건 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23년 75건 접수·처리) 및 신고상담 활성화('23년 2,891건)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지원('23년 120개소)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23.10월)
-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총 5,618명_남 2,647명, 여 2,971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및 스토킹 방지 교육 실시('23.7.~)

- 수사기관 대상 스토킹방지 교육의무화(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정, '23.7.)
- 수사가관 대상 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영상2종, 교보재 1종) 개발·보급

	○ 공공기관(총 18,001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고위직, 종사자 등 참여율 제고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침개정 -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까지 확대 및 부진기관 고위직 참여율 기준 전년 대비 5%p 상향 조정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및 배포('23.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공공기관('22년 18,001개) 대상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 기관장 참여율 99.7%, 고위직 참여율 93.2%, 종사자 참여율 93.3%로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상향 안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관리체계 지속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지속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추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 · 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공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			
	주요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35	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 1.~12.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 - (신고·상담) 198건, (조사·심의*) 14건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5회)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2회 점검(2월, 8월) ○「중앙행정기관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개최('23. 12. 6.)

결과분석	추진성과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여 신고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정기 개최를 통해 각 부처 성희롱 고충 업무 담당자의 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고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연 2회)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지속)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주요내용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 조직 內 성희롱·성폭력 실태 진단 및 현장점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획·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408	402	△6	△1.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수립('23.5월)
-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4회) 및 분과회의(2회), 상시협의체(4회)를 통한 이행점검

○ 조직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23.9월)

○ 조직 내 성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경찰관서 현장점검 실시(총 40개소)
- 관서장 면담, 관리자 간담회 및 현장 근무자 간담회, 기본시설 점검 등

○ '23년 경찰교육 대개혁의 원년을 맞아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및 성범죄 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
- 관리자 대상 표준교육안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사 워크숍 실시 및 전문강사 인력풀(79명) 재정비

결과분석

추진성과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총 5개 분야 23개 과제 수립·추진 ○ 조직 내 성폭력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24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수립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96%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참여형 교육 키트 활용 등 성범죄 예방·근절 맞춤형 교육 고도화 및 전문강사진 역량 제고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 · 감독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지역협력) 3,005개소 〈자체 1,831, 합동 1,174개소〉 * 제조업 1,425개소, 농축산업 888개소, 어업 290개소, 건설 73개소, 서비스업 329개소 * 점검대상 중 숙소 제공 사업장 2,412개소 주거실태 확인 - (근로개선) 1,000개소, (산재예방) 1,500개소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실태조사 - (기간 및 대상) '23.10.11.-12.22., 사업장 4,606개소 - (조사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현황 - (조사 결과) 3,290개소 실시, 비협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추가 실시('2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강화 - 법 위반 비율이 높고 타 업종 대비 근로조건이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분야에 대한 점검을 전체 물량 대비 39.2% 실시하여 - 지역협력과 소관 점검대상 3,005개소 점검결과 위반사항 6,657건 중 시정시시 6,542건, 고용제한·취소 30건, 과태 25건, 사법처리 5건*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 * 전용보험 미가입 4건, 연장근로제한 1건 ○ 주거환경 개선 지도·점검 강화 및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기여 -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의 경우 고용허가 불허됨에 따라 사업주의 숙소 개선 유도 - '23.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의결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 '23.11.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지방관서별로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대상 확대하여 추진('23년 5,500개소→'24년 9,000개소) ○ 농축산업·어업 등 취약사업장 점검 비중을 확대(40% 이상)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차별개선과
과제목표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주요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분위기 조성·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1,683	1,403	△280	△16.6
▪ 노사발전재단지원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600	419	△181	△30.2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12,307	4,000	△8,307	△6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비정규직 보호,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등 차별 발생 가능성 높은 업종 중심 비정규직 보호 감독 실시(1,150개소)
- 차별적 처우 문제가 제기된 금융업 사업장(14개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 12개소,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특히 불합리한 차별 21.6억원 시정지시)

- 감독관 실무교육(3월, 2회) 및 사례공유 워크숍(12월)을 통해 근로감독관 역량 제고

○ 차별 예방 컨설팅 등 비정규직 차별 자율개선 종합서비스 제공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차별 예방 교육·상담 실시 및 사업장 인력활용 실태 진단 후 차별 처우 개선 권고(352개소)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3.12)' 마련

-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 등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
- 또한 기업의 '자율적 차별 예방 및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간접노무비 등 지원, 기업 부담 완화

  * 1,504개소, 4,044명에 대하여 9,314백만원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차별시정 지도·감독을 추진하여 차별시정 지도 건수 지속 증가 * 차별시정 지도건수(건): ('20) 143 → ('21) 175 → ('22) 206 → ('23) 251 ○ 감독결과 발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 인식 변화에 집중, 자율적인 개선* 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체계 마련, 법상 의무 외 차별 개선 등 우수사례 다수 창출 ○ 비정규직 관련 고용지표는 양과 질 모두 개선 - '20년 이후 비정규직 규모 처음으로 감소 * '23.8월 기준, 비정규직 812.2만명(전년비 -3.4만명), 임금근로자의 37.0%(-0.5%p) -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 확대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비율(%): ('19)55.2→ ('20)56.6→ ('21)59.9→ ('22)62.8→ ('23)65.6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사유('23.8): 근로조건 만족 59.9%, 일자리 안정 21.0% 등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 등 근로여건과 일자리 질 개선 * ① '22년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38.3→38.4), 건강보험(51.7→52.6), 고용보험(54.0→54.2) ② '22년 대비 근로복지 수혜율(%): 퇴직급여(43.0→45.3), 유급휴일(35.9→37.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비정규직 차별 발생 高위험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산 및 격차해소 분위기 조성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컨설팅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구조 자율개선 지원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전문가 논의체 등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 제도개선 관련 논의 지속

8	Ⅱ-1-⑧	사내하도급 노동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고용차별개선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과제목표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및 고용구조 개선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1,683	1,403	△280	△16.6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2,008	1,805	△203	△10.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운영하여 업종별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제공(425개소)
  → 현장 인력운용 파악 및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추진
- 자율적 고용구조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 담보를 위하여 컨설팅 참여 사업장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상황 점검
- 근로감독과 컨설팅 연계를 확대·강화*하여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 및 컨설팅 실효성 확보

  * ①법 위반 조사·시정 외 노무관리지도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업장 수용성 제고('22년 14→'23년 100개소) ②컨설팅 거부 사업장을 수시 감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감독-컨설팅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컨설팅 참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 면제 근거 마련('23.7.24. 개정)

○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한 불법파견 근절 근로감독 추진

- 파견제도의 적정운영 및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근로감독 추진,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선택·집중 감독

  * (서울) 호텔업, (5개청) 남동·구미·광주하남 등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 내 제조업(총 155개소)

- 비정규직 감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플랫폼종사자 쉼터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금(16.8억) 예산 편성

○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발표('23.12.26)

- (공통) ①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등 계약 조건, ② 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 ③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 중요 사항 명시
- (가전제품) 공통 표준계약서 내용 기반으로 ①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 ②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규정 등 직종특성 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통한 민간 자율적 원·하청 상생 분위기 형성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분위기 형성 * '23년 50개소와 협약 체결 ○ 불법파견 지도감독을 통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성과 * 465개소, 2,09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들의 노무제공 여건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원·하청 근로자 격차 해소 및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속 * ① 임금격차 해소, ② 근로자 복지 증진, ③ 원·하청 소통기구 마련 등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감독 지속 추진하여 불법파견 근절 ○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 사업 등 운영 철저 ○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마련 추진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근로자 산업재해 보호 강화 ○ 근로자 안전보건 예방			
주요내용	○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 재해조사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재해조사 방안 마련 ○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과 산업재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			

관련예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181	9,757	576	6.3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067	2,940	1,926	189.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신규 유해요인 노출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처리 기준 개선
- 유기용제 노출에 따른 파킨슨병, 용접업무 수행자의 백내장,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가이드 마련

○ 산재 조사 시 유관기관 자료 자동 입수토록 연계
- 특수건강검진자료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자동 입수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절차 개선 및 인프라 강화
- 전문(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21년 이전 의뢰사건) 집중처리기간 운영('23년 6월~)
- 노출평가·업무관련성 평가 병행 등 조사방식 효율화
- 재해조사 전문인력 파견 및 조사장비 구입 등 인프라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규 유해요인에 대한 가이드 마련으로 업무상 질병 신속 판정 * ('23년 기준) 파킨슨병 19명, 백내장 14명, 승무원 우주방사선 4명 등 ○ 유관기관 연계자료 자동입수 2종 확대 및 데이터 기반 처리 간소화로 급식실 조리종사자 조리흄 폐암 95명 신속 처리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절차 개선 및 인프라 강화로 장기 미처리 해소 - 장기미처리('21년 이전 의뢰사건) 198건 처리 완료('24.6월말) - '23년 회신사건 451건 중 177건 노출평가와 업무관련성 평가 병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업무상 질병 신청 급증으로 처리기간 지연 * 질병 처리건수(건): ('20년)18,634→('21년)24,871→('22년)28,796→('23년)31,666 * 질병 처리기간(일): ('20년)172.4→('21년)175.8→('22년)182.0→('23년)214.5

향후추진계획

○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질병 인정기준 개정
- 질병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등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절차 개선 및 인프라 강화
- 전문(역학)조사 수행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범운영('24.7.8~), 조사장비 등 인프라 강화('24.3분기내)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최저임금 결정의 수용성 제고 및 현장안착 지원			
주요내용	○ 수용성 높은 최저임금 결정 지원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등 지원 ○ 최저임금 현장안착 강화 - 정책캠페인 실시,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근로조건 개선지원	16,675	11,896	△4,779	△28.7
(최저임금 안내, 정책영상 광고)	256	0	△256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지원
- '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근거 논의
  * 연구위원회 5회, 전문위원회 2회, 전원회의 15차, 이해관계자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4회

○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지원)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 소규모·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무관리지도, 현장 예방점검 등 실시
  * 노무관리지도·점검 6,363개소, 현장예방점검 10,013개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이의제기 건수 전년 대비 75% ↓ * 적용 연도 기준 이의제기 건수: ('23년) 4건 → ('24년) 1건 ○ (최저임금의 원만한 현장안착)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 현장안착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21) 1,852 → ('22) 1,631 → ('23년) 1,519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연구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사업장 방문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11	Ⅰ-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기업훈련지원과
	과제목표	○ 소외없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27,011	32,271	5,260	19.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정규사업화·확대('22년 시범도입, '23년 정규도입)하여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기관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96명 배치 → '(23.) 한국산업인력공단 32개 기관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188명 배치·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지역별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HRD 상담·진단, 훈련정보제공, 훈련 참여 등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 HRD 기초진단 컨설팅 9,528개 중소기업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폭넓게 지원하고, 주치의 HRD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기초과정·전문 심화과정 직무역량 교육 추진

12	Ⅱ-1-⑫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주요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직장 내 연령 차별없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고령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이행 지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의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확충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중장년층 취업지원	22,281	20,052	△2,229	△10.0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95,762	62,102	△33,660	△35.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6,795	34,982	8,187	30.6
(고령자고용지원금)	55,848	26,975	△28,873	△51.7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470	423	△47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재정지원 확대**

* ('23) 268억→ ('24) 350억(전년 대비 30.6% 증가)

○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구성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논의(7.27~12월, 2주 간격)

→ 향후 **경사노위** 내 **노사**가 **참여**하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 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

○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

- **고령자 고용 인식개선 광고 제작** 및 **송출**(1월~7월), **인기 유튜브** 채널(**삼프로TV**) **콘텐츠 제작·송출**(10월), **툰 공모**전(10~11월)
- 계속고용 도입 사업장 **현장방문**(10.11, 25, 27) 및 **일본**의 고령자 고용사례 **취재지원**[사전 기자간담회, 현지출장, 전문가 인터뷰 등(11월)]

	○ **기업 수요 기반의 중장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 **운영기관 간 기능**을 **개편**하여 **산업·지역·기업별 채용 수요를 발굴, 적격 구직자를 선발**하여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지원전담반 등 **특화 서비스 제공 확대** ○ **고용서비스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 마련(46개)** 및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통한 **원스탑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방문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 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 ▴(기존) 기초상담→프로그램 참여자 모집→프로그램 운영(고용센터 외부)→취업알선 **(개선)** 심층상담→생애경력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고용센터 내)→집중 취업알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령자 취업자** 수(592만)·**고용률**(71%)이 **상승**하고, 장년층 **상용직 비중**(48%)도 **증가**하여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전년 대비 3.2개월 증가** ('22년 15년 4.7개월 → '23년 **15년 7.9개월**)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구성, **계속고용** 논의 착수(7월~)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인원 **145명 증가**('22.10월 7,376명 → '23.10월 **7,521명**) ○ **5.9만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취업** ('22년 53,284명 → '23년 **58,855명, 10.5%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노사 참여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및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맞춤** * 국민연금 수급연령('24년~, 63세)에 맞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상향(2년→3년) ○ **중장년 전직지원 및 계속근로 활성화 방안** 마련, **경력단절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및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주요내용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운영			
	관련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직업계고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200	200	△0	△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내용 개편 및 운영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1~3학년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기관별 역할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콘텐츠 관리, 학습 운영, 이수자 관리 등 - 교육 기간 및 시간 : '23.5.2.~12.18.(8개월), 12차시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권익침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주요 내용 - 교육 방법 : https://www..keli.kr 접속 후 수강 - 운영 예산 : 200백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교육 실적 : 수강 인원 63,567명 이수 - 기대 효과 : 직업계고 학생의 권익 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의식 함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속 추진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1~3학년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육 시간 : 12차시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무사 등에 의한 상담 등 문제 해결 창구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근로조건개선지원	16,675	11,896	△4,779	△28.7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23	1,613	△10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4,734회·100,245명 대상 교육 실시

○ (청소년 다수사업장 점검) 소규모·취약사업장 대상 최저임금 준수 등 노무관리지도 실시

* 청소년 등 다수 고용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지도 6,363개소

○ (피해 청소년 상담·권리구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 실적: 상담 37,733건, 권리구제 1,10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충분한 제도 안내, 교육 등 계도활동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관계법 심층 상담 실시, 근로권익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무료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속 운영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로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부당처우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24시간 상담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방문 등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 청소년의 생활 여건 및 근로 사유에 맞는 청소년 관련 기관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1,273	0	△1,273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2023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종료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 근로보호 상담·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네이버 지식in 상담, 기관 연계, 메일·게시판 상담)
○ 전국 상담 사례 상시 모니터링 및 노동법 관련 자문 제공
○ 청소년 근로보호 콘텐츠, 법령 및 상담 사례집 개발 및 전국 보급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특화 프로그램(4종) 및 교보재(4종) 개발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및 부당처우 업주와의 면담・중재 해결 재원
- 청소년 근로보호 상담 8,041건, 현장 방문 등 중재 해결 83건(69명)
○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운영 및 강사 양성
- 전국 중・고등학교 등 1,316회, 총 47,928명 교육
○ 사업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한 '행복일터(우수 사업장)'발굴 및 캠페인 등
- 행복일터 발굴 218개소, 실시 1,393개소 /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홍보활동 총 257회(45,213명)
○ 전자근로계약서(신규체결 및 관리건수) : 33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충으로 전국적 보호 지원 체계 및 기반 마련 - ('13~'17년) 시범운영, 중앙지원단 1개소 → ('18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17개소 → ('19~'21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 ('22~'23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17개소 ※ ('22~)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 : 17개 시·도별로 사업 확대(보조율 50%)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당처우 해결 지원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업주와 면담·중재 해결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23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0.10점 ○ 정부합동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정당한 근로문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2023년) 종료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상담 및 중재, 무료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연계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협력정책과
	과제목표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내용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논의 ○ 온라인 플래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세부사업명, 휴먼명조 9pt (내역사업명, 휴먼명조 9pt)	000,000	000,000	△000,000	△0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 및 필요 의제 발굴 논의(18회)

- '23.2.3. 부산지역 노동계 및 기업인 간담회
- '23.2.13.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MZ노조) 간담회
- '23.3.21. 제10차 이행점검위원회 개최
- '23.6.1. 제11차 이행점검위원회 개최
- '23.7.18. 노사정 실무자 간담회
- '23.9.5. 선원노동조합 집행부 간담회
- '23.9.20. 청년경청 콘서트 개최
- '23.9.22. 노동관계 제도관행 개선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 '23.10.11. 고용노동 전문가 초청 간담회
- '23.10.19. 대리운전기사 경청 콘서트 개최
- '23.11.2.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 '23.11.7. 여성대리운전기사 경청 콘서트 개최
- '23.11.8. 주한 스웨덴 대사(다니엘 볼벤) 초청 간담회
- '23.11.9. 3대 노동 학회장 간담회
- '23.11.24.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 개최
- '23.12.4. 노사정 실무자 간담회
- '23.12.14. 노사정 대표자 회의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존 홈페이지 중심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큐브, 카카오 채널 등 신규채널 추가 운영
  * 위원회 소식을 채너별로 OSMU(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화 하여 접근성 제고
- 이미지 중심 컨텐츠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접근성 제고
  * 경사노위가 만난 사람들, 이슈&잇슈, 등 신규 콘텐츠 추가, 20회 이상 간담회 홍보(전년대비 구독자수 30% 증가)
  * 카카오 채널 개설 5개월만에 119개 홍보 게시물, 구독자수 1,000명이상 확보
-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청년들이 고용노동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고 정책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노말청년' 구축 운영(웹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 접근성 제고), 오픈 3개월 15,000명 방문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논의 진행 및 의제 발굴 ○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 및 필요 의제 발굴 지속 노력(23년~)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23년~)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관계법제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과제목표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주요내용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근로자참여법 개정 완료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23.1월) ○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지원 및 자율적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중앙·지방 사회적 대화에 미조직 노동자 의견 참여 통로 확대 추진 -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 질서 확립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근로자참여법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및 질의회시집 발간하여, 배포('23.1.30) - 전국 지방관서 등 1,900여권 배포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l.go.rk)-"정책자료실"에 PDF파일 게시 ○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판매·점검 직종 표준계약서 발표('23.12.26.) - 주요내용 리플릿과 활용가이드 함께 발표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l.go.rk)-"정책자료실"에 파일 게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근로자참여법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법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도 중앙·지방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통로 확대 기여 ○ 노무제공자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여, 공정한 계약의 기준을 제공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 음

향후추진계획	○ 이행완료로 향후 계획 없음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과제목표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신용제재 * 최근 1년 내 ❶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❷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단, 법 개정 후 관련 예산 반영 예정)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23.5.3.)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23.6.22. 발의) -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법무부·기재부 등),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기초통계 마련, 연구용역 실시 - 환노위 법안 소위 상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입법 추진 동력 확보 -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 등 체불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언론,전문가 기고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회 일정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과제 추진 지연

향후추진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24.6.7.「근로기준법」 개정안 재발의 - 정기국회 통과('24.9.26.) 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예산 반영 등 제도 시행 준비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동개혁총괄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산업과 기업에 적합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상생협력 확산지원	-	21,010	-	-
(상생임금 확산지원)	-	9,72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및 현장 지원

- 학계·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공론화 추진
  *현장 방문(5.16.), 토론회 개최(5.23.), 회의(10차) 등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직무 정보 제공 및 인프라(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임금 정보 브리프 발간(임금체계 개편 사례 등 포함), 맞춤형 임금정보(규모, 산업, 직업 등 8개 변수 중 최대 3개 변수 조합을 통한 임금정보) 제공, 다양한 임금·직무 관련 정보 제공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상생임금위원회 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임금정보브리프 발간(총 7호), 인프라(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인프라 운영, 정보 제공 등 공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현장 지원 지속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유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1,790	△690	△27.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946	1,127	181	1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관리자)율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지속 상승 * 여성고용률: ('21년) 37.78% → ('22년) 38.05% → ('23년) 38.28% * 여성관리자율: ('21년) 21.30% → ('22년) 21.75% → ('23년) 22.1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노동 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신고 및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및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근로조건개선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1,796	862	△934	△5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특별감독)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된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 및 엄정 조치

2023년 특별감독

▪ (장수농협) '23.1~4월 / 괴롭힘 등 위법 15건 적발 및 즉시조치(사법처리·과태료)
▪ (더케이텍) '23.5~8월 / 폭언·폭행, 괴롭힘 등 위법 17건 적발 및 즉시조치(사법처리·과태료)
▪ (테스트테크) '23.6~8월 / 괴롭힘, 성희롱 등 위법 16건 적발 및 즉시조치(사법처리·과태료)
▪ (순정축협) '23.9월~12월 / 폭행, 괴롭힘 등 위법 18건 적발 및 즉시조치(사법처리·과태료)

-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는 중소금융기관 170여개소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노력

2023년 중소금융 기획감독

▪ (1차) '22.10~'23.1월 / MG·새마을금고 60개소 / 괴롭힘 등 위법 297건 적발·조치
▪ (2차) '23.3~8월 / 농협·수협 중심 113개소 / 괴롭힘 등 위법 763건 적발·조치

○ 예방 교육, 컨설팅, 상담, 홍보 등을 통한 상호존중의 직장 문화 개선 등 제도 안착

- (교육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과 취약 업종을 선정하여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최신 판례·업종별 사례 반영, 동영상 강의자료 등 교육수단의 현행화·다변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신청 시 임원 등 사용자 참여 적극 권장
  * 510회 목표, 564회 실시. 이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432회(76.6%)

-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총, 한국EAP협회 등 노동 및 상담 분야 전문기간에 위탁하여 전국 10개소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상담센터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별 통계·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취합·공유하여 상담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등 양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 ('23) 전화 및 대면 등 상담 17,930건

- (취약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취약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소속 근로자 면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안 등 맞춤 컨설팅 등 직장문화 개선지원 컨설팅 실시(300개소)

- (홍보·캠페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사업장 내 상호존중 문화 안착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23. 3~12월 유튜브, 지하철, KTX 홍보 및 연중 지방관서 현수막·배너·포스터 등 홍보

상호존중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직장문화 캠페인 영상>
(지하철, KTX역사, 유튜브 등 송출)

<제도 홍보 및 안내 포스터>
(지방관서, 사업장 배포)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제목표	○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현			
주요내용	○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 개연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정기감독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근로조건개선지원	3,024	-	-	-
(장시간근로개선)	3,024	-	-	-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안착 지원	-	29,824	-	-
(일터혁신지원)	-	29,824	-	-

* 컨설팅 사업 지원사업 통합운영으로 예산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변경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문가(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

- '근로시간 운영지원 컨설팅'*(1,155개소)과 '근로시간·임금 관리체계 개선 컨설팅'**(200개소) 운영

* ▲맞춤형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

** ▲임금 구성항목 개편,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도입, ▲포괄임금·고정OT 개선방안 마련 등

○ 제조·IT 사업장 등 법 위반 이력・의심 사업장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지도감독('23.4~11월, 799개소)

-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법조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존 근로시간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임금 관리체계 개선을 추가하여 보다 심화한 서비스를 제공 → 컨설팅 대상 사업장 1,355개소 중 909개소가 제도 개선을 하거나 개선 예정으로 유연근로제 도입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도움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으로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실근로시간 단축 기여 ⇒ 연간 근로시간 감소: ('19)1,978→('20)1,952→('21)1,952→('22)1,928→('23)1,907 <상용5인이상, 사업체노동력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 존재

향후추진계획

○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계속 추진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 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제목표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강화			
주요내용	○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금액 상향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원대상 추가 등에 따른 지원수준·요건 등 제도 개선(고시* 등) 추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76,405	837,516	△238,889	△2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신규가입자 지원인원 지속적 증가* * '20년: 76만명 → '21년: 80만명 → '22년: 78만명 → '23년: 97만명

'23년 이행실적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지원대상 월보수 수준 확대('22년 230만원→'23년 260만원)

○ 지원대상에 대한 종합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존) 3,800만원 → (개선) 4,300만원('23년 기준중위소득의 170% 적용)

○ 저임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단, 10인 이상 사업은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으로만 보험금 지원

○ 미가입 사업 발굴 및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협력 기업 정도 연계·협력을 통해 미가입 사업,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발굴 및 가입

- 보험가입조사원으로 가입지원 서비스팀 구성(2인1조)하여 유선·문자 등으로 가입지원 서비스 제공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전국 48개 지역에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 확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규가입자 지원인력 증가 - '22년 78만명에서 '23년 97만명으로 신규가입자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적정 조정(최저임금, 물가상승류 등을 고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요건 조정

○ 미가입 사업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을 발굴·가입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계속)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지자체 협업, 유관기관 정보 연계, 집중홍보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취약계층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

주요내용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지원수준, 요건 개선 추진
-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공유를 통한 가입 추진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8,214	39,947	1,733	4.5%

※ 두루누리 지원사업 '23년 8,477억원, '24년 6,670억원(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속 지원 및 홍보 강화(연중), 신청률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3.4월)
- (저임금 근로자)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지속 지원(연중), 월 근로소득 기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23.1~)
  * 월소득 : 230만원 미만 →260만원 미만, 종합소득 : 3,800만원 미만 → 4,300만원 미만

○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추진('23.7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 (월평균 지원인원) '22년 17,912명 → '23년 75,057명(+319%) (집행률) '22년말 36.0% → '23년말 10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근로자 대상 지원 확대('24~)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월소득, 종합소득) 완화 추진(관련 고시 개정)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기준 개선 검토('25~)

○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24~)
- 특고직 등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추진
- 국세청, 고용부 등 자료연계 확대로 지역 소득신고자 가입대상 지속 발굴 및 가입 확대 추진

21	Ⅱ-2-②	고용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고용보험기획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TF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 부과·징수체계 등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한 가입누락자 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을 추가로 적용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소득기반 개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관련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TF' 구성·운영('23.3월~, 8회) 및 고용보험위원회(운영전문위) 보고('23.11.28) ○ (가입누락자 발굴)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 59.2만명('23년 누계) 발굴 및 가입 조치 - 기재부·국세청 협의를 통해 정확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개정('23.7.1. 시행) * (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 추가에 따른 노무제공자 등 국세 소득정보 정합성 제고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최종 근무일 추가에 따른 직권가입 정합성 제고 ○ (사각지대 해소) 산재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및 적용 직종 확대('23.7.1 시행)로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23.6월 80만명 → '23.12월 119만명 가입) -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3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50% 경감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용성 높은 적용방안 및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토대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24년) ○ 실보수 전환에 따른 신고부담 등 노무·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사무' 지원 강화 ○ 국세 소득자료 등을 활용한 가입누락자 지속 발굴 ○ 적용 대상 대폭 확대에 따라 사업주단체 및 노무제공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제도 안착 지속 추진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수도기획과
과제목표	○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상수도 연구관리	150	300	150	100
상수도 연구관리	150	300	150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신규물질 탐색 강화를 위한 분석시스템(고성능 질량분석기 HRMS) 구축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분석방법 최적화 및 정도관리 등 조사·분석 기반 구축
- 정수장 대상 조사 항목(68개) 수질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정책기초자료 구축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정수장 원·정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 (대상) 정수장 70개소, (주기) 2회/연, (항목) 과불화화합물, 마이크로시스틴 등 68개 항목
- 조사 항목별 노출수준 및 위해도 평가 등 감시항목 설정 필요성 검토
- 신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확대・신설을 통한 안전・위생 관리강화
  * 조류독소 항목 확대(마이크로시스틴-LR → LR, RR, YR, LA, LY, LF 6항목) 및 깔따구유충 항목 신설
- 수돗물 수질 현안 물질 감시 강화*
  * 조류독소 : 1회/반기 → 조류경보 발령시 1~3회/주, 깔따구유충 : 1회/월 → 검출시 1회/일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설정(안) 마련 전문가 회의 개최('23.4)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개정 및 시험방법 교육* 실시(2회, '23.8)
  * (대상) 수질감시항목 운영기관(지자체・수도사업자) 및 검사기관(공공 및 민간 분야) 100여명
- 신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설정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23.1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23-149호, '23.10 시행)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체계 선진화 전문가 포럼 개최(3회, '23.9~11)
- 먹는물 수질기준 등 설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상선정 및 평가절차(안)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확대・설정 등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및 국민 물복지 제고 * 조류독소 항목 확대, 깔따구 유충 항목 신설 등 수돗물 감시강화(수돗물 수질기준 61개 항목 포함 93개 항목)

향후추진계획

○ 정수장 원·정수 미량유해물질 조사・평가 및 관리강화 지속 추진('24~)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체계 개선연구 지속 추진 및 관련 법규정 개정안 마련('24~)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지속 이행을 위하여 깨끗한 물환경 확보 방안 수립			
주요내용	○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26~'35)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물환경정책연구)	2,291	1,975	△316	△1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에 따라 계획 폐지 가능성 있○,□

'23년 이행실적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추진('23.4~)

○ "제2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 이행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기본구상 추진하여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26~'35)" 수립을 위한 기틀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추후 해당 변경안에 따라 물환경분야 법정계획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 추진('24~)

○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 추진('24~)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 제고			
	주요내용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생물 독성 및 농축성, 잔류성 등을 고려한 수생생물 보호 환경기준 마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국가수질측정망 운영(신규 오염물질 관리))	800	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수계 내 잠재 미관리오염물질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국내 강·하천 공공수역 대상 모니터링 추진 - (조사기간·항목) '22.5~'23.4, 의약품·농약·산업용화학물질 등 75종 - (조사지점·횟수) 130여개 지점, 연3회 ○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하천·강에서의 수생생물 보호기준(안) 도출 - 국내 서식 생물종 대상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절차에 따라 오리사스트로빈·카벤다짐 기준(안) 도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계 내 잠재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점검하여 공공수역 안전 선제 점검 ○ 오리사스트로빈·카벤다짐 수생생물 보호기준(안) 도출하여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보호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수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미관리·미량 오염물질 지속 모니터링 필요

향후추진계획	○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선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연차별 수생생물 보호기준 2개항목 도출(~'27년)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축산위생품질팀
과제목표	○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안심 제고
- 단체인증 인증심사 표본농가수 확대, 인증품 잔류농약 분석 강화, 수확후 GAP관리 시설의 점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 실시 및 부적합 농가 체계적 관리
-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

관련예산

(농산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산물안전성조사	25,217	25,540	323	1.2%
▪ 허용물질목록제도(PLS)정착지원	517	362	△155	△30.0

(GAP,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1,701	11,325	△376	△3.2
GAP 농산물 안전성 위탁분석 사업	798	700	△98	△12.3

(축산물, 축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0,893	20,103	△790	△3.8
▪ 축산물HACCP지원	1,543	2,742	1,199	77.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농산물>

○ 생산단계 유해물질 사전차단과 안전기준 부적합품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 '23년 안전성조사 : 60,669(건) / 부적합: 715(건)

○ 재배환경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반 마련
-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배환경(토양, 용수)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3년 재배환경 실태조사 : 6,690건[농지 6,430, 용수 260]

○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PLS 교육·홍보
- 교육·홍보 동영상 배포(5.6), 온라인 매체 활용 농산물 PLS 홍보영상 송출(3.13~4.12.), TV홍보(KBS(5.18.), KTX객실 내 홍보영상 송출 및 유튜브 광고영상 송출(11.24.~12.13. KTX), 문자발송(토양살충제 사용유의 권장 및 주요성분 안내, 5.30. 216,000명) 등

	<GAP> ○ GAP 단체인증(작목반 등)은 표본을 선정하여 심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가 누락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하여 이를 예방을 위하여 인증심사 표본농가수 확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 * (기존) 10% 이상 표본 추출 → (개선안) 15% 이상 표본 추출 ○ 인증품의 생산과정,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유통·판매과정의 잔류농약 분석강화(4,200건) ○ RPA(로봇처리 자동화)기법 도입으로 온라인상의 비인증품의 인증품 둔갑행위 집중 점검(연 4회) ○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1,038개소) 및 대량 취급업체(45개소) 특별점검 추진 <축산물> ○ 축산물 HACCP 컨설팅(315건), 현장기술지도(525건)를 통한 HACCP 운용수준 제고, 도축장·집유장 조사·평가(186개소)를 통한 우수 작업장 선정 ○ 식육·식용란에 대한 축산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 ('23년 실적) 미생물 : 113,338건 / 잔류물질 : 181,917건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연간 위생감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생 취약시기 특별감시 * ('23년 실적) 도축장 109건(포유류 65, 가금류 44), 집유장 38

결과분석	추진성과	○ (농산물) 사후대응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및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최소화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22) 1.4 → ('23) 1.2% ○ (GAP) GAP 부적합 인증품 유통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안심제고, 일반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안전성 기준 위반사례 감소 - '23년 GAP 인증농가 122,121호(전체농가의 11.9%), 재배면적 134천ha(8.8%) 차지 ○ (축산물)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한 HACCP 운영 내실화 및 안전성 상시검사와 위생감시를 통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GAP 단체인증의 인증심사 표본농가수 확대는 규제사항으로 국조실 통과 지난 * (기존) 10%이상 표본 추출 → (개선) 15%이상 표본 추출

향후추진계획	○ (농산물)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추진 ○ (GAP)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과정, 유통·판매과정 잔류농약분석 및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분석,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 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 및 대량 취급업체 특별점검 지속 추진 ○ (축산물) 생산단계 축산물의 미생물·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실시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국내 유통 농축산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새벽배송, 국민 다소비 품목, 부적합 다발생 품목, 소면적 재배 취약 품목 등 집중관리 -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 및 단순처리 농산물 관리 강화 - 축산물 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6,278	5,874	△404	△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국민 다소비 품목, 부적합 다발생 품목 등 **집중관리**

- (**농산물 위생점검**)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농·임산물 점검(4월),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4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 검사(4월, 10월),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검사(5월, 10월)
- (**축산물 위생점검**) 수요가 증가하는 갈비탕·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관련 식육가공품 안전관리(2월), 온라인 유통 거점업체 등 축산물 콜드체인 점검(4~6월), 온라인 판매 축산물 수거·검사 확대(720건)

○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축산물 위생 기획점검**

- 명절(1·9월), 하절기(6월) 등 주요 시기별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취급 여부 집중 점검,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등 축산물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

○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차단**과 **단순처리 농산물 관리 강화**

- (**부적합 농산물**)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센터 설치
  *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마련·시행(1월),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개소(11월)
- (**단순처리 농산물**) 위생관리가 취약한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교육으로 자율안전관리 유도
  * 절임배추, 깐밤, 등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교육 실시(5월, 11월)

○ **축산물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관리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허용 등(3월)
- 영업자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①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처분 규정, ②대장균 검출기준 위반 축산물 등 회수 대상 범위, ③과태료 상한액 기준에 맞춘 과태료 금액 등 정비(3월)
- 민간 주도식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업계 전반의 위생수준 상향 평준화
  *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종 마련(대상업종: 알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12월)
  소규모 유가공·식육가공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10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사항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지속** - (**부적합 농산물**)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의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참고해,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 우려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검사대상 물류센터 확대: ('23) 3개소 → ('24) 4개소 - (**유통 축산물**) 생식용 식육 제품의 식중독과 식육 부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건조 숙성육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달걀 살모넬라균 안전관리 지속 및 1:1 현장 맞춤형 멘토링(기술지원) 강화 ○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전문가·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식생활소비정책과
과제목표	○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 수립 - (국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지역)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안정, 물류거리 단축을 통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24년 세부사업 이관,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10,431	7,490	△2,940	△28.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22.11~'23.5, 17개소)

* 기초지차체 17개소 : 경기(용인, 광명), 강원(고성, 철원), 충북(단양), 충남(아산), 전남(진도, 장흥, 고흥), 경북(경주, 문경, 영양, 봉화, 군위, 청도), 경남(고성)

○ 지역먹거리계획 운영(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지자체 선정(1.3, 22개소)

* 기초지자체 22개소 : 강원(평창), 충북(증평, 괴산, 옥천, 청주), 충남(서산, 청양), 전북(익산, 김제, 부안, 고창), 전남(장성, 나주, 해남, 순천), 경북(의성, 울진), 경남(거제, 남해, 김해, 진주, 합천)

○「지역먹거리계획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3~12월)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주체 대상 교육과정 온·오프라인 **9개 과정 1,651명 교육**

○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4.11, 8개소)

* 패키지지원 대상 사업(16개)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산물직거래(직매장설치,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지역단위 지역먹거리계획 구축지원(계획수립-거버넌스 활성화, 기획생산체계구축),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 농산물 안전분석실운영,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 지역단위 지역먹거리계획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 기초지자체 8개소 : 전북 진안, 경북 영천, 전남 함평, 충남 서산, 충북 청주, 제주, 경남 함양, 경남 합천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 시행(5~10월) -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한 지역의 이슈 해소 및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실천모델로 확산 * (사례) 수페그린 협동조합,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 등 13개 단체의 로컬푸드를 이용한 반찬나눔, 요리교실 등 운영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사항을 홍보 ○「지역먹거리계획 협의회」 개최(2회, 7.13, 10.31)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해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상·하반기 총 2회/ 지자체, FD등 99명 참여 (7.13, 10.31)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추진상황 현장점검(6~12월) * 연구용역 추진현황,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체계, 애로사항 등 파악 ○ '지역먹거리지수' 서면평가(7~9월) 및 현장평가(10~11월) ○ '지역먹거리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12.7) - 소비자의 선택과 먹거리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종합적인 평가인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결과 발표 * '23년 평가결과: S등급(4개소), A등급(13개소), B등급(43개소) ○「지역먹거리계획 포럼」 5회 개최 (12.14, 12.19, 12.20, 12.21, 12.27)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정도에 따라 그룹별 포럼 4회 진행 및 현장견한 1회 운영 * 추진단계별(수립준비-수립중-수립초기-사업심화) 운영/ 5회, 민·관 173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지자체 확대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21) 111 → ('22) 64 → ('23) 115 ○ 소비자의 선택과 먹거리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종합적인 평가인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상위등급 지자체 개소수 증가 * 참여지자체 : ('22) 114개소 → ('23) 156(36.9%↑) ** 우수 지자체(S-A등급) : ('22) 15개소 → ('23) 17(13.3%↑) ○ 중소농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지속적 증가 * 로컬푸드 직매장(매출액): ('20) 7,143억원 → ('21) 8,970 → ('22) 9,772 → ('23P) 10,405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 주민 등 실행주체들의 인식 개선 필요 (지나친 관주도형 지양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먹거리계획이 자생적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먹거리계획 내실화를 위한 자문 및 포럼 등 지원 강화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 바우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식생활소비정책과
과제목표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월 4만원/1인가구)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14,800	14,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3.3~12월)

- 농식품 바우처 시범지역 및 지원 대상 확대
  * ('22) 15개 시군구, 4만 7천 가구 → ('23) 18개 시군구, 6만 6천 가구
- 이용자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거동 불편자 대상 등 꾸러미 배송서비스** 추진
  * ('22)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 → ('23 추가) GS25, GS더프레시, 남도장터(온라인)
  ** 꾸러미 배송서비스 지원 현황 : ('22) 11개 시군구 → ('23) 12개 시군구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22.10월~'23.12월) 및 통과*
  * (조건부 추진) 지원대상 및 유사사업 조정, 전달체계 구축 등 사업설계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인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영양 섭취 격차 완화 등 식생활 개선 * 식품 충분성 15.8%p 증가(12.3%→28.1%), 식품 다양성 11.5%p 증가(10.9%→22.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지속 요구 -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확대 및 업무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24년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25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농식품 바우처 정의, 지원 근거,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전담 기관 지정 등

○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처 확대, 금융사 선정, 업무시스템 구축 등 전달체계 보완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유통정책과 수산물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생산단계에서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전년대비 7%)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주요내용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속 강화 및 HACCP 등록 확대
○ 주요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조사 및 오염원 관리
○ 수산물 위판장 위생기준 적용, 유통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위판장 현대화 사업,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및 유통기준 기술개발
  * 저온·친환경 위판장('23~계속),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21~'25)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수산물 위생관리	23,707	25,510	1,803	7.6%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9,768	13,756	3,980	40.8
(저온·친환경 위판장)	600	11,940	11,340	1,890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8,544	4,725	△3,819	△44.7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 개발)	3,323	2,355	△968	△29.1
(수산물 유통 현안해결 기술 개발)	2,311	550	△1,761	△76.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지속 강화
- 23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22.12.19)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등 잠재 위해요인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항목 확충(101개→188개)
- 수산물 안전성조사 건수 확대*
  * 조사계획: ('21) 15,000건 → ('22) 15,500건 → ('23) 19,000건(실적 25,398건)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 양식장 HACCP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23년 누적 500개소 이상 HACCP 등록 추진
  * HACCP 등록 양식장(개소): ('21) 354 → ('22) 447 → ('23) 506
- 기등록 양식장의 사후관리 및 HACCP 위생관리점검관(지자체) 교육, 관계기관 워크숍, 현장평가 등 추진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패류 생산 해역의 촘촘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정점 추가(113개→118개)
- 생산해역 수질 확인, 패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111항목(분변계대장균, 살모넬라, 이질균 등)에 대해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위생조사 추진
- 미처리오수의 해역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가정집 정화조 수거 및 이동식화장실, 바다공중화장실 8개소 지원

	○ 연근해 수산물을 안전·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전국 노후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위생시설 설비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4개소 선정 / 태안, 군산, 보령, 강진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핵심기술인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주요 수산물 품질 과학적 지표 및 유통기준 기술 연구개발 진행 - 액체 산소통 대체 활어 산소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수산물 품질·유통기술 표준(안) 도출 * 고등어, 조기, 오징어에 대한 신선유통(안) 도출, 유통 위생관리기준 제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전성조사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패류생산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바다공중화장실 8개소를 지원하는 등 생산해역 환경 개선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美 FDA 현장점검(4.3~4.17)결과, 적합하다고 평가되어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6월) 등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 ○ 수산물 유통의 시작인 위판장을 위생적으로 전환하고 주요 수산물을 품질 지표를 마련하여 수산물 유통 현장 개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HACCP 등록 추진 * HACCP 등록 양식장(개소): ('21) 354 → ('22) 447 → ('23) 506 → ('24) 550 - 안전한 양식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 외에도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 적용('24.4~) ○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협업 추진, 바다공중화장실 24년 16개소 지원 ○ 생산해역 수질 확인, 패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111항목(분변계대장균, 살모넬라, 이질균 등)에 대해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위생조사 추진 ○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자 지속 선정*을 통해 전국 노후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산물 품질 지표와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관련 개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실증 추진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 조기 공모와 산지 위판장과 협업을 통해 실증 * (저온·친환경위판장 공모) '23.12～ '24.2 / (품질 지표 실증) 목포 위판장과 MOU체결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과제목표

○ 급식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내실화
○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주요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 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별 급식 형태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 취약급식소 집중관리
-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시설별, 급식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영양관리 지원 세분화
-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 세분화,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 도입

○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시설까지 사회복지급식 지원범위 확대 및 센터 추가 확충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본격 시행
-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센터 확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개별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이벤트, 유튜브 등), 생활 매체(버스, 지하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배달앱 플랫폼 등급지정 표출 확대 및 소통채널을 활용한 제도 홍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4,809	54,809	-	-
▪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2,470	5,510	△3,040	△123.1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8,445	7,795	△650	△7.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현장지원과 급식소 전담 영양사제 도입
-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전담 영양사가 급식소별로 위생 영양 순회방문(4~8회)과 대상자별 교육(8~10회)을 지원
  * 전국 236개 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 35,541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영양 관리 지원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센터를 통한 **지원 급식소 확대**
- 신규센터 48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 총 68개 센터를 운영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1,801개소 지원('22년 837개소)

	<음식점 위생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기술지원 강화** - 예산시장(6월), 오송 위생등급 특화거리(12월) 조성 등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 현황 : ('22) 15,821개소 → ('23) 16,061개소 - 대형쇼핑몰, KTX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내 **위생등급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12월) * 식약처-신세계 프라퍼티(스타필드) MOU(12월), 식약처-한국코레일유통-철도공사 MOU(12월) -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위생등급 평가 항목**의 **개선***(5월) * 과도한 기록의무 삭제·완화, 위생과 관련이 낮은 항목 삭제 등 64개→44개 항목으로 고시 개정 - 소규모 및 고령 영업자 등 대상 위생등급 전담 컨설팅 제공(2~11월, 537개소) ○ **위생등급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온·오프라인 신문(서울신문, 경향신문 등)·방송(TVN 등), 영화관, 유튜브 위생등급제 홍보 실시(연중) - **배달앱**(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에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정보 표출**(연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 안전관리 환경 조성 - 모든 시·군·구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6개 센터)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급식위생·영양 관리지원,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 체계 확산 ○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음식점 자율 위생수준 향상 -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추진 및 위생수준 향상 활성화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내실화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기반 확대 강화(연중)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6개소 추가 설치('24. 하반기) ○ 소비자 근접 홍보로 위생등급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유도(연중) -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음식점 위생등급 홍보부스 운영 등 소비자 대상 현장홍보 실시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및 현장 밀착지원 등 지속 추진			
주요내용	○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주거복지센터 등과 함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제 발굴 및 이주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0,000	10,0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매뉴얼」수립 및 배포('23.11)

- LH 이주지원 센터(59개소)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52개소)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홍보하고 이주 과정을 밀착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단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설치·운영 매뉴얼 수립 및 배포 - 취약계층 이주지원 확대('22년 7천호→'23년 1만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 및 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주거상향 대상자 발굴·이주 지원 지속 추진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공공기관 등)에게 사업비를 기금 지원하여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모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관련예산

(주택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00	413,600	△54,000	△11.5
가로주택정비사업	449,600	402,100	△47,500	△10.6
자율주택정비사업	14,000	4,700	△9,300	△66.4
이차보전지원	4,000	6,800	2,800	7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

* 자율주택정비 133억원(8개소), 가로주택정비 4,745억원(111개소), 이차보전지원 3억원(18개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3.4.18)

*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도 시장·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3.10.18, '23.11.28)

*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기준 완화(2만㎡미만→4만㎡미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및 사업비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활성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및 법령 정비 등 지속 추진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공공주택정책과
과제목표	○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 '23~'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영구임대출자	179,683	82,321	△97,362	△54.2
▪ 국민임대출·융자	519,335	275,019	△244,316	△47.0
▪ 행복주택출·융자	1,688,696	1,367,102	△321,594	△19.0
▪ 통합공공임대출·융자	2,260,412	2,617,429	357,017	15.8
▪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6,076,300	6,046,322	△29,978	△0.5
▪ 전세임대경상보조·융자	4,298,650	4,692,221	393,571	9.2
▪ 공공임대융자	117,958	818,896	700,938	594.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수립('23.1.3,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 중앙·지자체간 공공주택 정책방향·제도 공유 등 소통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 워크숍 실시(6.28~7.19)

* 수도권(6.28, 경기), 충청권(7.5, 대전), 호남권(7.12, 광주), 경상권(7.19, 부산)

○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상·하반기 공모사업 3,022호 선정

* 상반기 12곳 2,452호, 하반기 4곳 570호

○ 무장애 설계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1,060호 선정

* 상반기 7곳, 710호, 하반기 4곳, 350호 선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감소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 기존 생활거점 또는 원하는 지역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임대되고 있어, 집값하락 등을 걱정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음 -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지자체, 주민, 공공주택사업자 등) 갈등조정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갈등 최소화 노력

향후추진계획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택기금과
	과제목표	○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로 지원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억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구입전세자금	113,605	123,645	10,040	108.8%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기금운용계획 113,605억원 중 113,124억원을 집행함에 따라 추진목표 달성(집행률 99.6%) - 신혼가구 21,275건, 청년가구 50,304건 등 총 91,247건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지원 - 특히, '23년에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등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 상품을 신설('24.3)하였고, 더 많은 신혼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요건 완화 추진('23.10)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기금운용계획 113,605억원 중 113,124억원을 집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기금운용계획 123,645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출을 지속 시행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지원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 주거급여 보장 수준 확대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
○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별 보수한도액을 상향하여 수급가구의 주거여건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급여지원	2,556,417	2,726,586	170,169	6.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 증가
- 수급가구 '22.12월 134.5만가구 → '23.12월 141.5만가구
* '22년 기준중위소득 46% → '23년 기준중위소득 47% (3인가구 기준 193.0 → 208.4만원/월)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준임대료 인상(급지·가구원수별 최대 3.3만원 인상)을 통해 월평균 급여액 '22.12월 17.8만원 → '23.12월 18.1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최저보장수준 지속 확대
- '27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및 보수한도액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속 인상 추진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지속 공급			
	주요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계가 반영된 건설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수도권 8%, 비수도권 5%) 지속 공급			
	관련예산	○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에 포함되어 산출 불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편의시설이 기본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총 2,177호 공급(LH 공급) * 수도권 1,874호(공급비율 9.2%), 비수도권 303호(공급비율 8.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거약자용 주택 2,177호 공급(LH 공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주거약자용 주택 지속 공급 추진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택임대차기획팀
과제목표	○ 임대차 시장 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추진			
주요내용	○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제도 마련 ○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7,134	7,326	192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3.4.18)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3.2.21)
-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서울, 5천만원→5천5백만원 등), 임차인의 범위확대(서울 1.5억→1.65억 등)

○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규정('23.4.18)
-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개정('23.10.5)

○ **임대차 당사자간 분쟁해소를 위한 '23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전국 12개소)
-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811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30,589건

○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법무부 TF 운영**
- 임대차제도 개선연구 등(2.10, 7.14), 표준계약서 개정 등(9.18), 확정일자 열람권한 확대 등(12.27)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 정보제시 의무가 신설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향상 기여 ○ 임차권 등기 신속화를 통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신속 지원 가능 ○ 최우선변제금액 상향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법무부 TF회의 지속 운영

○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 검토

36	Ⅱ-2-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험정책과(상병수당추진단)
	과제목표	○ 질병·부상 발생 시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적시치료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내용	○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433	14,605	△5,828	△28.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433	14,605	△5,828	△28.5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위한 신규지역 공모 및 선정(4월)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활용한 홍보 - 보도자료 배포(1,4,7월), 지역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 홍보콘텐츠(인포그래픽, 포스터, 리플릿, 사업장 안내용) 제작 배포, 공단 홈페이지 게시 * 1단계 지역 443개소, 2단계 지역 1,107개소에 총 37만부 배부 ○ 신청인 편의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개선 - 상병수당 신청 서류 간소화 * 통장사본(4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5월), 진단서 사본(11월), 근로중단계획서(12월) 제출 생략 - 의료기관 참여 유인 제고 위한 진단서 비용 인상(1만5천원→2만원), 의료기관 시범사업 인근지역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지역범위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1단계 시범사업 지속 시행 및 2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시행('23.7~)으로 총 10개 지역 시범사업 운영 - 11,117건 신청 및 9,774건 급여 지급('23.12월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범사업 지속운영 및 효과성 평가, 이를 바탕으로 본제도 추진('27) 위한 도입방안 검토 등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사회서비스과

과제목표

○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주요내용

○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농촌 왕진버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추진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돌봄마을 등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31,286	28,795	△2,491	△8.0
(농촌형보건의료지원)	1,121	3,326	2,205	196.7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	25,749	21,973	△3,776	△14.7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1,990	4,300	2,310	11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 사업대상자 간담회 개최(5.8, 제천)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5.8~6.7)

○ 농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추진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8.16)을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추진 경과: '21.12월 서삼석의원 발의 → '22.4월 상임위 → '23.7월 법사위 → '23.8월 법률 제정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 개최(4회, 9.5～10.12)

○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된 영농활동 지원과 노후소득을 보장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월최대지원금액을 인상
* 기준소득금액(월최대지원금액): ('21~'22) 100만원(45,000원) → ('23) 103(46,350)
-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인상
* '22년 80천원 → '23년 84천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9천명) - 지자체 선정(18개 시·군) 및 이동검진 도입(전북 진안) *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괴산, 청주),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영암, 영광, 나주), 경북(의성, 예천, 상주),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

결과분석	추진성과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노력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협의 및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타면제 등 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사회안전망 확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농촌 고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인·농촌주민의 복지 향상 - 농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육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농촌돌봄농장)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 등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의료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왕진버스) 제공,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교육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공공의료과
	과제목표	○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지방의료원, 권역 필수의료센터, 민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필수의료 연계·협력 구축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관련예산	(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82,888	85,409	2,521	3.04
- 공공보건의료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15,645	19,346	3,701	23.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료계획 수립지침 설명회('23.1월) ○ 시·도 17개 지자체 중 미지정 1개(충남)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논의(연중) ○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 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파견 등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23.1월, 7월) - 개소 당 권역 6.6억원, 지역 4.8억원 국비 지원, 16개소 ○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23.1월 7월) - 개소 당 1.5억원 국비 지원(15개소, 서울,세종 제외)

결과분석	추진성과	○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55개소) 지정하여 지역의료기관 간 진료, 자원 인력분야 등의 협력 도모 및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의료 전반 역량 향상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권역 17개소(완료) 및 지역 70개소 지정('24년 대비 15개소 추가 지정필요)을 통해 지역의료 역량 강화 도모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개소 추가 지정(세종: 신규설치, 서울: 기존 서울시 산하 재단 운영 → 국비 지원으로 변경)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건강과
과제목표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관련 정보가 통합 구축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관리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개편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중증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치매환자가 전담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시·군·구별 치매안심마을 조성 확대 및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이용·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확대 시행 등 추진
-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 및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경도인지장애·7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관리 추진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중 선별검사 무료 제공, 진단검사는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예산

(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치매관리체계 구축	189,753	191,989	2,236	1.2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 국비 100%	4,053	4,094	41	1.0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 국비 100%	1,061	293	△768	△72.4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국비 50~80%	163,585	167,047	3,462	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등 치매 환자 관련 정보 연계 추진
-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23.7~12월, 18개 치매안심센터 대상),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실시(1차년도 130개소)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통한 치매의료 인프라 확대 : ('21) 7→ ('22) 10→ ('23) 16개소
-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대상 '성과기반 인센티브' 2차 시범사업 연장 실시('23.1.~'25.12.), BPSD가 심한 치매환자 대상 집중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치매·관리 및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착수('23.12월~)

*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보고('23.12.),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23.12.~'24.2.)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실시('23.7~12월., 48개소 선정) 및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지속('23년까지 후견심판 청구 580건, 인용 473건, 후견인 후보자 1,301명 양성) - 치매 용어개정협의체 운영(3회), 국립국어원 조사를 통해 대체용어 후보군 도출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진 사업 실시 등 선별검사 1,358,011건, 진단검사 114,789건, 감별검사 39,205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등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도모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건정심 본회의 통과로 양질의 치매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실시 및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속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거주 지원 강화 -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용어 법률개정안 발의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조기발견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정보 연계 지속 추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실시 및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차연도 실시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5년 목표 22개소)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월~'26.6월) 및 본사업 실시 ('26.下)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실시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추진 -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지속 - 국회 발의된 용어 포함 대체용어에 대해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용어 변경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진 사업 지속 실시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 · 보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의료기관정책과
과제목표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적용 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주요내용	○ 환자안전지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확산('23.~'24.) -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및 산출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25.) - 국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문화 측정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지표 활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26.~'27.)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14,435	11,845	△2,590	△17.9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지원)	9,495	10,672	△1,177	△1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표 활용 결과 모니터링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에 환자안전지표 선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보건의료기관 차원의 지표 활용 방안 및 개선활동 결과 모니터링 시행

○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사업('22.)으로 마련된 신규 지표 및 개정(안) 검토
- 23개의 신규 지표 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으로 보건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지표 정의서 도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의 보급 및 활용 안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활용률 100% 달성('24.1.31.기준) ○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사업 결과 검토를 통해 실효성 높은 신규 지표 선정,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레지스트리 구축 기반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환자안전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보급 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표 산출방법 등 전담인력 대상 교육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환자안전지표 보급 계획 수립, 지속적인 신규 지표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신규 지표 중 유관기관, 전문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단계적 보급 방안 마련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환자안전지표 개발('24.~)

○ 환자안전기준 개정 및 지표와의 연계 방안 마련
-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을 포함한 환자안전기준 개정 검토 및 환자안전지표와의 연계 방안 모색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공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의약품관리지원팀

과제목표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환자의 적기 치료 지원

주요내용

○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료 및 완제품 국산화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 특정 수입국의 높은 의존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중단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수급 모니터링 실시
- 위험요인 사전포착·전파, 관련 품목 국내 생산·비축량 점검, 대체 의약품 허가 여부를 감안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화·비축 등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도입 인정을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속
- 현재 지원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도입 인정을 지속함으로써,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 긴급도입 제도: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나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의약품을 구입하여 공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희귀·필수의약품센터지원				
- 희귀·필수의약품센터지원	4,563	3,330	△1,233	△27.0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예산 운영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희귀·필수의약품의 원료·완제 국산화 지원**
- 공급내역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혈압 치료제·항생제 등의 원료 3개, 완제 2개 품목을 선정해 해당 성분·제형의 생산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지원
  ※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원료·완제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23.12월), 진균 치료제 케토코나졸,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벤세라지드 원료 제조 기술개발('23.12월)

○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 (**모니터링**) 약국, 의료기관, 제조·수입·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참여해 공급 불안정 정보를 파악하고 원료의약품 공급 불안정 생산·수입량 모니터링
- (**수급 안정화**) 완제의약품 허가 전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를 허가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조원 등록을 신속 처리하는 등 원료의약품 공급처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 **해외 의약품 긴급도입**을 통해 국내 **미허가 희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지속** - **(국내 미허가 제품)** 질병청·경찰청·원안위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내 허가되지 않은 말라리아 감염병 치료제와 마약류(펜타닐) 급성 중독 치료제 등을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도록 조치(15건) ※ 핀타닐 급성중독 치료제 나르칸'(23.11월), 결핵치료제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23.12월), 장티푸스백신(23.12월) 등 - **(국내 공급중단 제품)** 채산성 부족 등 사유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폐렴 치료제, 고뇨산혈증 치료제 등 **의약품**을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도록 조치(5건) ※ 응급 고혈압 치료 주사제(히드랄라진 주사, 23.9월), 항생 주사제(박트림주사, 23.8월) 등 긴급도입 필요성 인정 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가능케 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정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귀·필수의약품 등 국민 보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외 의약품 공급(지속)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 장병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병원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격오지 장병들에 대한 원격진료 확대 및 군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후송능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기타 진료지원비	37,843	37,057	△786	△2.1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19,576	16,559	△3,017	△15.4
(장병 외진셔틀버스)	4,653	6,126	1,473	31.7
▪ 여군 부인과 이용비 지원	71	75	4	5.6
▪ 일반의무장비획득	30,846	21,627	△9,219	△29.9
(원격진료체계 구축)	2,543	1,335	△1,208	△4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민간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장병의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한 진료지원 실시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장병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
- (간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간부의 군병원 정신과 이용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진료비 전액 지원
- (여군 산부인과 이용비 지원) 여군의 모성 보호를 위해 부인과 이용비를 지원

○ **(원격진료 확대)** 군의관이 미보직된 격오지 및 함정 내 원격진료를 통해 군 의료 공백 최소화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에게 질병·부상 발생시, 원격진료장비(화상장비, 의료용 스코프, 전자청진기 등)를 통해 의무사 군의관의 진료 下 투약 처방 및 후송 조치, 격오지 원격진료 확대소요 의견수렴 (4~6월) 및 확대소요 승인 완료(7월)
- (함정 원격진료체계) 해양수산부의 초고속 해양 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해군 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실시간 연결,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23.3월~11월)

○ **(후송능력 강화)** 외진셔틀버스 확대,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장병 후송능력 강화

- (외진버스 확대) 사단의무대 및 군병원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외신버스 노선확대 및 운행횟수 증대 등 추진
- (통합관제)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내 ICT 기술 기반 미래형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및 처치를 One-Stop으로 지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간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다양한 진료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장병 진료 접근성 개선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연간 322,485건 지원 실시 ○ **(원격진료 확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군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서비스 보급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23. 12 기준 89대 부대 운용 / 연간 7,670건 진료 실시 - (함정 원격진료체계) 3개 함정 대상 시범사업 운용 ○ **(후송능력 강화)** 외진버스 확대 도입 및 통합관제 구축 지속 추진 - (외진버스 확대) '23년도 외진셔틀버스 확대 도입 실시 ('22년 55대 → '23년 66대) - (통합관제) 통합관제체계 구축 지속 실시 ('25. 2.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구 지원사업 지연** -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은 '23년 내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연동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으로 인해 당초계획 대비 사업 지연으로 '24년 2월에 최종 도입되었음.

향후추진계획	○ **(민간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개선 ○ **(원격진료 확대)** 격오지 및 함정 대상 원격진료시스템 추가 구축 (격오지 105개소, 함정 25척) ○ **(후송능력 강화)** 장병 외진셔틀버스 지속 확대('24년 77대)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도입('27년)을 통해 후송능력 강화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사립*유치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요구

*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50명 이상)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교육청의 학교·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 급식 전문가(교수)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강화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학교·유치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

관련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교급식 내실화 지원	1,820	1,445	△375	△20.6
- 학교급식 내실화 지원	1,820	1,445	△375	△2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시

- 개학대비 유치원·학교 급식시설 자체점검(연 1회 이상) 및 교육청 주관 모든 학교 전수 점검실시(연 2회), 신설학교 등 취약학교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학교급식 종사자 등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

-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영양교사·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 관리 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23.7.)
-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23.10~11.) 및 컨설팅 지원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도교육청 급식 관계관 회의 개최('23년 5회)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23.11.) 및 누리과정 연계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발굴·홍보(1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연 2회 이상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급식소 위생점검 : 연 2회

○ 학교급식 종사자 등 위생관리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 식중독 예방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3.) 90명
- 유치원 급식 컨설턴트(영양교사 및 공무원) 양성 : ('23.) 75명 (신규)
- 유치원·학교급식 위생관리 교육 자료 개발·보급 : ('23.) 안내서·동영상·카드뉴스 등

○ 우수사례 발굴·전파
-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굴 ('23.) 14건
-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23.) 11종 (신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지속 추진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 지속 추진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속 추진

44	Ⅱ-3-⑦	흡연 · 음주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주요내용	○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안내('23.1.3.) ○ 각급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 전국 각급학교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음주 예방교육자료 지원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 ※ 금연 웹툰,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금지 사전 안내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12.7.) 제도개선 참조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양한 자료들로 관련 교과 시간에 학생 대상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인식개선 - 금연 후 식단관리,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거절하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실생활에 밀접한 흡연 예방교육 ○ 교사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정규수업, 재량시간 등을 통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 실시(계속) ○ 교사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계속) ○ 중·고등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지도서 수정·보급('24.하반기)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마약정책과

과제목표

○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스토리가 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
○ 자연스러운 경험 습득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양방향 소통 강화
○ 깊이 있는 정보전달과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메시지 전달

주요내용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 마약류 관련 범정부 통합 플랫폼 및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 SNS 채널을 이용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 설치* 추진

* (~'22.) 2개(서울,부산) → ('23.) 1개소 추가(대전) → ('24.~)17개로 확대(14개소 추가 설치)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운영
-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3,479	7,615	4,136	118.9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893	3,005	2,112	236.5
(대국민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	251	4,742	증 4,491	1,789%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회복귀 지원 - 중독재활센터 확대(신규) 14개소	-	6,346	(신규)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	400	(신규)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 **(교육실적)** 유아·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575,040명 실시(1~12월)
- **(교육자료)**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예방교육 자료 개발(12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범정부 통합플랫폼**과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운영
- **(플랫폼)** 개별 부처에 산재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재활 관련 정보·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12월)

* 뉴스·보도자료, 상담신청, 온·오프라인 교육, 마약류 정보 및 정책 정보,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 등

- **(메타버스)** 마약류 예방교육에 체험, 퀴즈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AR·VR 콘텐츠 3종을 개발해 학습 참여도와 예방교육 효과 제고(12월)

	○ **옴니버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와 **방송**에서 **홍보·광고** - **(옴니버스 콘텐츠)** 청소년 대상 웹툰(청춘 블라썸_나약하지 않아) 제작·배포(8월~), '나 약하지 않아' 영상 제작·배포 및 3D 촬영앱 필터 체험실시(7~8월) - **(SNS·방송)** 홍보 영상 KBS, tvN, mnet 등 방송광고 및 유튜브 송출(6~8월) - **(캠페인)** '마약과 끝낼 신호, SOS' 대국민 캠페인 진행(6월~), '마약퇴치의 날(6월)'와 '청소년 박람회(5월)' 등 **마약류 예방 행사** 진행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 이름) **추가 개소**(7월) – 청소년 특화센터로 운영 중이며,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요리·미술·야외활동 등) 및 찾아가는 예방·중독상담 진행 ※ '23년말 기준 함께한걸음센터 총 3개소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 - 식욕억제제 등 32개 마약류 성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1차: 5월, 2차: 9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수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12월) (2차)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정보 등 제공(12월) ○ 데이터 기반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운영** - **(오남용 사례추출·정보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하고 의사가 적정처방에 활용하도록 오남용 정보(주의●·관심●·안전●) 제공(12월) - **(의료용 마약류 점검)**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가 함께 명의도용 불법취급,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 점검·수사의뢰 ※ 월별 점검주제: 명의도용(6, 9월), 오남용(7, 11월) 등 ○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운영** - **(제공 횟수·성분 확대)** 오남용 처방 정보의 **제공 주기**(연 1회→2회)와 **제공성분**(28→29*종) **확대**(8월)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추가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정보 알림톡'** 제공 -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내역을 모바일로 제공(4월~) * (1차)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ADHD 치료제에 대한 처방의사 정보제공(4～5, 8월) (2차)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정보제공(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국민 광고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의 **국민 인식 향상** - 광고 후 조사 결과 명확성이 가장 높고, 내용이해도와 메시지 공감도가 높다고 응답* * (청소년편) 광고명확도 89.7%, 내용이해도 83.0%, 메시지 공감도 75.3% (일반인편) 광고명확도 81.6%, 내용이해도 77.1%, 메시지 공감도 78.0% ○ 대전 함께한걸음센터 신설·운영으로 개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이용자(30%↑) 증가 * 개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 : ('21) 531명 → ('22) 815명 → ('23) 1,058명 ○ 마약류 처방 정보제공을 통해 오남용 의심 처방 감소 -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를 대상으로 처방내역 정보제공 후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 89.7% 감소* * 의사의 환자 1인당 평균 마약류 처방량 감소(진통제 : 5.0%, 프로포폴 : 2.5%)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료기관 적발률 제고 - 마약류 처방 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적 분석 결과를 의료기관 점검에 활용하여 오남용 의료기관 적발률(고발·수사의뢰) 30% 상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마약류 오남용 광고의 효과는 높으나 광고를 시청한 인원은 적음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광고를 시청한 경험이 청소년편 14%, 일반인편 12.1%로 전반적으로 낮음 ○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능 부족 - 마약류 처방 정보 보고 시스템과 데이터 활용시스템이 분산되어 있고, 공공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체계화된 분석·활용 기능 부재 - 사건사고, 의심사례 발생 시 처방기간, 질환, 용량, 제형 등 조건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추출하므로 사전 예측, 차단 조치에 한계

향후추진계획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스토리 있는 오남용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뉴미디어 매체 활용 - 옴니버스형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광고 영상을 제작·송출 * 거절할 용기, 인정할 용기, 다시 일어날 용기 / 마약이 없어 만약이 있다. - 10~20대에게 영향력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송출 * 숏폼 1분만(3편), 닥터프랜즈 1편 등 제작 송출 ○ **범부처 통합플랫폼**과 **메타버스 교육프로그램**의 기능 확대 - **(플랫폼)**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마약류 문제에 관한 지역 상담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홍보자료와 콘텐츠 공유 *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영상·교재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콘텐츠 등 - **(메타버스)** 초·중등 대상으로 카드보드형 HMD* 교구를 도입해 메타버스 내 AR·VR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종이 판넬 형식으로 제작되어 조립 후 기존 메타버스에 탑재된 AR·VR 콘텐츠 체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 ※ 24년 2학기 시작 시기인 9월경 배포하여 교육 진행 예정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설치와 치료-사회재활 연계 기능 강화 - (센터 확대·설치)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교육-상담-재활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14개소 신설, 총 17개소)를 전국 확대·설치 - (치료-사회재활 연계 강화)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중독 평가 후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운영 * 전국으로 순차 확대 예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탐지분석 지능화** -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준의 오남용 분석·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오남용 사례추출 - 마약류 오남용 여부 판단 제고, 오남용 예측·예방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와 연계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 사각지대 집중감시 추진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 확대 운영** - 의사의 오남용·과다 처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2회→6회/연)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보건 공공기술 개발 및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성질환 질병부담 저감 및 환경보건 선진화 구축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환경 거버넌스 기반 강화 및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민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 71종의 노출수준 파악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환경유해물질 노출관련 설문조사, △혈액학 검사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임상검사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환경보건콘서트 및 환경보건이동학교 등 교육·홍보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환경건강연구)	1,830	1,830	-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	13,860	16,276	2,416	17.4
▪ 환경보건 디지털조사 기반구축 기술개발사업	7,806	2,007	△5,799	△74.3
▪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환경보건센터 운영)	4,121	4,740	619	1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5기('21~'2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 전국 440개 조사구·기관 내 우리나라 국민 6,608명(전국 만 3세 이상 남녀)의 환경유해인자 64종 및 임상검사 22종을 통한 체내 노출수준 조사 실시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반 확대,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감시 기술개발 등 22개 과제 추진

> ❖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 디지털 기술개발사업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21~'28, 849억원))** △세포 기반 독성유발 경로 분석 기술, △인자-질환 간 원인규명 기술, △환경성질환 사전예측 기술, △환경성질환 추적·평가 기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기술 추진
>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21~'24, 292억원))**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감시 기술,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기술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 지역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23.3),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환경보건기반 강화를 위해 15개 환경보건센터 운영(4,121억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확대 추진('23년 2개소 신규 지정), 환경보건 DB구축, 환경보건콘서트(5회, 1,343명), 환경보건이동학교(55회, 1,071명 참여) 등 교육·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예측모델 및 바이오마커, IoT 기반 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 빅데이터 수집·관리 기술 등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 연구, 질환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기초자료 확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환경보건센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이슈 대응,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5기 기초조사 결과 발표 및 제6기 확대 추진 - (제5기) 제5기('21~'23) 연령별·성별 환경유해인자 체내 농도 및 노출환경을 종합 분석하여 전국민 노출 농도의 대푯값 등 결과 공표('24.12) - (제6기) 체내 잔류성 등을 고려한 환경유해인자 분석물질* 및 설문항목** 등을 확대·개선하여 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 64종 → 71종으로 확대 / ** 신규 노출원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노출평가 기반 강화 ○ (환경보건기술개발) 환경보건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보건R&D 지속 지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추진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자연 방사성 물질로서 흡연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의 적정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주요내용

○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 한국환경공단) 지속 추진
- 현장 방문을 통해 라돈검출기 설치·측정, 저감 컨설팅 내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서 제공
- 300Bq/㎥ 이상 고농도 마을회관, 주택 대상으로 저감시공 제공 및 사후관리 실시
○ 라돈 고농도지역 대상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9,965	8,964	△1,001	△10
실내라돈 관리대책	2,082	2,542	460	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북지역 라돈 집중 실태조사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총 3,000여 호 대상 실내 라돈 농도 조사 및 주변 환경(토양, 암석 등) 총 200여 지점 대상 라돈 노출요인을 조사하여 전라북도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단독주택·마을회관 대상 실내 라돈 무료측정(2,049개소), 저감 컨설팅(알람기 보급 400개소, 저감시공 100개소) 지원 및 '22년 저감시공 시설 80개소 사후관리
* 실내 라돈 농도 148Bq/㎥ 초과 알람기 보급, 300Bq/㎥ 이상 알람기 보급+저감 시공
○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 충청북도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실내 라돈 농도 조사, 주변 환경(토양, 암석 등) 라돈 노출 요인 조사 및 라돈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결과 신뢰성 확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23.12)하여 실내 라돈 측정지점 수 확대(최대 12세대 → 최대 20세대) 및 측정 원자료(시계열 데이터) 보고 의무화
○ **라돈 저감·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실현**
- 라돈 저감 컨설팅 결과, 실내 라돈 권고기준(148Bq/㎥) 초과 500세대 중 474세대(94.8%) 기준 이내 관리
- '22년 저감 시공 시설 사후관리 결과, 만족도 95%, 권고기준(148Bq/㎥) 미만 유지 90%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필요

향후추진계획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및 대상 지역 전국 확대
○ 라돈 고농도지역에 대한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 · 관리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임산부 7만명 모집(대규모 코호트 6만 5천명, 상세코호트 5천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유해인자의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지원*
  * 벽지·장판지 등 교체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557	529	28	△5.0
(건강나누리 캠프)	557	529	28	△5.0
▪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9,475	11,067	1,592	16.8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5,146	5,146	-	-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988	1,788	800	8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141회, 7,22명 참여)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어린이(36~72개월) 7만여명(상세 0.5만명, 대규모 6.5만명) 환경설문, 환경노출, 생체시료 채취·분석 등 건강 조사 실시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게 시설개선(장판, 벽지교체 등) 지원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진단·컨설팅 1,767개소, 시설개선 624가구, 진료지원 267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류형(2박3일) 건강나누리 캠프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20명, 23가족) 대상 효과성 분석* 결과,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됨 * 피부수분손실량 22.1→17.9(낮을수록 증상 개선), 피부수분도 21.4→29.6(높을수록 증상 완화), 최대호기량 133.3→145.0(높을수록 폐활량 개선) 등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목표 인원 7만명 대상 추적관찰(계속),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혈, 뇨) 분석 등 노출 수준 조사 지속 추진 ○ 환경성질환 진료지원 사업 참가자 중 약 50%(146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86점으로 대다수가 서비스에 만족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참여 어린이 조사 공백기 발생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 개편·운영 필요

향후추진계획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적률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24.1~) - (개편 전) 지역·지원센터 개별 운영 → 3개 권역별 운영 ○ '24년도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24.3~12) - 1,500가구 진단, 500가구 시설개선(벽지·장판 교체 등), 환경성질환 진료 지원(250명)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성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위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및 안전강화			
주요내용	○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의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 ○ 실생활 중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체 노출 총량을 고려한 유해물질 저감 ○ 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관리 방안 협의 등 협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1,602	1,602	-	-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60	60	-	-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975	975	-	-
(식품 섭취량 등 노출평가자료 조사)	254	254	-	-
(제품별 유해물질 이행률 및 노출계수 확보)	313	31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의 **통합 위해성 평가**와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 프탈레이트류(7종)·알루미늄 등 인체적용제품(식품, 화장품 등), 환경을 통합한 **위해성평가 수행**
  * 프탈레이트류 및 알루미늄 통합 위해성평가 보고서(안) 마련(12.30)
- 폴리염화비페닐(6종) **인체노출안전기준** 공개(4.28)
- 알루미늄·비스페놀류(2종)·니켈·카드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재평가)
  * 알루미늄, 비스페놀(S, F), 니켈, 카드뮴 5종 /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 실생활 중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 확보**
- 체내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1년차 인체바이오모니터링('23~'25) 착수
  ※ 조사 집단(누계): ('23) 1,000명 → ('24) 3,000명(예정) → ('25) 5,000명(예정)
- 인체적용제품 중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 ('23년) 알루미늄, 니켈, 비스페놀A 등 25종
- 건강 취약계층 식품 섭취량, 이행률 및 노출계수 조사
  ※ 식이패턴이 다른 영유아·당뇨질환자(1,000명) 식품 섭취량과 총 노출량 평가를 위한 물질별·매체별 노출계수 조사
- 다소비·다빈도 식품에 대한 「한국형 총식이조사」 수행('23~)
  ※ 조사대상: 과불화화합물 14종, 바이오제닉아민류 8종

○ **인체 위해성 평가의 품질 개선**과 **차세대 평가 기술개발**
- (**지침서**) 인체시료 품질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체시료 관리·운영 매뉴얼」 개정(9.4),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 개정(6월)
- (**교육·훈련**) 인체시료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실험실 품질보증 프로그램 마련, '23년도 「식품 위해성평가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9월)
- (**평가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위해성평가 체계로 전환 위한 기술* 확보, 차세대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환을 대비한 현황분석 및 중장기 연구(기획연구)
  * 유해물질 종류별 검색어 제시 기능, 문헌검색 및 초록 저장 등 문헌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위해 평가법**) 인체 위해성을 예측하는 비동물시험법을 개발하고 동물자료을 통해 인체노출용량을 예측하는 모델 구축

	○ 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정보공유**) 다이옥신류 노출 저감 기술개발 및 생활 가이드라인(안) 마련(11월), 자가 유해물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편 정보지* 개발(12월) * (주요내용) 아크릴아마이드, 과불화화합물, 요오드, 푸모니신 - (**관계부처 협의**) '22년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 및 '23년 평가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1.18, 3.28, 3.29),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심의(4.26)를 통해 확정 - (**국제협력**)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술 등 국제조화를 위한 식품화학물질위해성평가국제협의회*(ILMERAC) 참석(1.12, 6.15, 9.25),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APCRA) 참여(12.7, 온라인),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 국제 위해성평가 전문가 과정 참가(6.24～7.9) * 미국·EU·프랑스·독일·스페인·일본, FAO, WHO 등 29개 기관 ** 새로운 접근 방식(NAMs) 기반 위해성평가 사례 및 신규 연구 제안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성평가 체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 안전 중심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으로 안전 강화 ○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미래대비 차세대 평가 기술 개발 전략 마련으로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해물질**의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공개** - 프탈레이트 7종 및 알루미늄 통합 평가('23년 수행) 결과 공개('24.4월) ○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 대체가소제 5종의 위험성 자료를 확보(8월)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안) 마련('24.12월) ○ **인체 위해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 - 동물대체시험법 활용한 위험성 결정 기법, 인체 노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약동학적 모델(pharmacokinetics) 등 차세대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 일상 속 위험성 인식, 안전관리 필요성 등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24.6월) 및 조사(～'24.12월) ○ **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 수집·활용 강화를 위한 위해성평가전문위원회 간사회를 개최('24.2월)하고 위해성평가 정보수집·활용 지침 마련('24.6월) - 위해성 평가 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민간 개방 추진(～'24.12월)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기후적응과, 기후경제과
과제목표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			
주요내용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 유도			

관련예산

(기후대응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45,547	32,032	△13,515	△29.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8,810	6,026	△2,784	31.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10,000	10,000	-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지원	23,988	31,090	7,102	29.6
(2050 탄소중립 이행)	1,500	495	1,005	△67.0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161,655	148,429	△13,226	△8.2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148,231	134,008	△14,223	△9.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부처별 산재된 적응정보를 지자체·국민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정보를 표준화하여 일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구축 ISP 수립추진('23~)
- (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전국 행정구역별로 기후노출 DB(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구축,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12개) 개선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적응 강화대책 수립) IPCC의 새로운 전망(1.5℃ 상승시점 '52년에서 '40년으로 앞당겨짐) 반영, 현장 실행계획 중심으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마련('23.6)

  ※ (적응 강화대책 수립 목표) ①과학적 기반 고도화, ②기후재난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③기후적응 사회적 기반 구축, ④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적응 추진
- (의견수렴) 강화대책 마련 시 정부·지자체, 학계·연구계, 산업계, 시민사회·청년 등 모든 적응 이행주체와 협력·소통* 추진

  * 부문별 전문가 검토위 운영(1~4차 포럼), 적응주체별 거버넌스 포럼 운영(지자체 5.19, 청년-시민단체 5.22, 공공기관-민간기업 5.23), 대국민토론회(6.13)
-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 실효성 강화) 지방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 발굴한 미흡한 점, 탄녹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수립 지침에 반영하여 실효성 강화(9.11 개정)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지원)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정하게 마련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수립 지원('23.1~12)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대상사업을 기존 7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 시행('23.9)

  * 기존(7개, '22.9.25.~) : ①에너지 개발, ②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③도시개발, ④수자원 개발, ⑤항만 건설, ⑥산지 개발, ⑦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확대(3개, '23.9.25~) : ①도로 건설, ②공항 건설, ③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인프라 조성) 폭염·한파·폭우 등으로부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적응시설* 설치 지원('23.3~12)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열페인트 도장, 물길쉼터(발담금 시설), 전통시장 등에 미세 물분무 시설, 그늘막(파고라), 어린이 놀이터 열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 유도 - 불필요한 정부개입은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방안" 발표(9.20, 관계부처 합동) -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5→7개사) 및 보유한도 상향(시장조성자 150→600만톤, 증권사 50→100만톤) 등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을 통한 거래량 확대** *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6→8월)으로 거래기간 확대, ▲장내·외 가격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 (거래량) ('22.1~10) 3,381만톤 → ('23.1~10) 6,480만톤(+91.7%↑) - (감축설비지원 확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대상 및 재정투자확대('22년 979억원 → '23년 1,388억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1~'25)」에 현장 적용성을 보강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마련('23.6) 및 적응대책 평가를 위한 국민평가단 운영('22.6~'23.4) 등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 이행점검 추진 ○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점검 미흡사항·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수립 지침에 반영,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기후위기 취약 업종에 대한 적응기술·사례제공 등 모든 적응주체(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역량 제고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기존 7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지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교육 등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안착 노력 ○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국가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며 2018년 배출정점 이후 국가 총배출량 감소에 기여 ※ 국가 총배출량 '18년 725백만톤 → '23년 626.1백만톤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3차 강화대책 이행점검 및 제4차 대책 기반마련 - 제3차 강화대책('23~'25)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상황 점검(전문가, 국민평가단) 및 환류 - 국가 기후위기 리스크 평가 및 부문·지역·부처간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한 제4차 대책 기반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공간 맞춤형 적응사업 모델 개발 및 취약계층 적합 적응사업 신규 유형 발굴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강화 - 대행자·검토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 평가서 작성·검토 방법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 사업자, 대행자, 검토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평가 절차 全 과정을 진행하여 실제사례에 적용가능한 시범평가서 개발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그간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개선하고, 차기 계획기간('26~'30)의 제도 청사진 마련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과제목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사업장 부문 대기환경 개선
-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및 취약시설 민생서비스 제고

주요내용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감축 지속
- 소규모 및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생활 주변 유해물질 배출 저감
- 한·중 맑은하늘(晴天) 계획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108,650	49,200	△59,450	△54.7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08,650	49,200	△59,450	△54.7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2,400	-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2,400	-	-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73,031	59,552	△13,479	△18.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34,200	9,000	△25,200	△73.7
▪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4,457	4,024	△433	△9.7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3,493	3,057	436	△1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49개소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비 개선 융자 승인 692억원(1개 사업장, 6개시설)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366,057대(일반 356,061대, 저소득층 9,996대)
-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 체결('23.5)

○ 한·중 청천(晴天) 계획 세부이행방안 확정('23.3) 및 이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공유회의('23.4, 중국),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대기질 공동연구 워크숍 ('24.4, 중국/'24.10, 한국) 등 추진

결 과 분 석	추진성과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목표 대비 108% 상향 지원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비 개선 융자 목표 대비 86.5% 달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366,057대), 초미세먼지 저감 기여 (1대당 PM2.5 저감량 0.217kg, '23년 지원물량에 따른 총 감축량 약 80톤/년) ○ 국내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개편('25) : 소규모 분산지원 → 집중관리지역, 집중지원 ○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융자)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 향상('25) ○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물량 및 대상 확대(일반가정 지원 종료)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대상 확대(기준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추가)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물량 증가(1만대 → 2.5만대) ○ 한·중 청천(晴天) 계획에 따라 협력사업 계속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공유회의,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대기질 공동연구 워크숍 등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장·교통소음·층간소음 등의 소음·진동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정책 마련			
주요내용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도로변 교통 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등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등 층간소음 갈등 완화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생활공해관리 (소음진동관리대책)	7,198	6,839	△359	△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형장비(그라인더, 커터, 해머드릴, 코어드릴, 몰탈믹서기 등)의 소음도 현황 파악 및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23.5월~'24.1월)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77개),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1개)및 관리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층간소음 기준의 적정성, 성가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 개정*('23.1)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 39dB 강화)

- 국민편의를 위한 층간소음 상담장소 확대(집→집·직장근처), 관리사무소 대상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기간 연장(2→3개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사장 휴대용(소형)장비 소음 관리방안 마련 연구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77개),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1개)및 관리 ○ 층간소음 상담 시행 : 전화상담(36,435건), 현장진단(7,064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다양한 소음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소음발생원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 미흡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 주간·야간 근무 등 생활 패턴의 다양화, 개인 중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층간소음 민원 추이 : '15년 대비 '23년 1.8배 증가(15년 19.3천건 → '23년 36.4천건) -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의 확장, 교통수단(버스, 철도, 승용차 등)의 소음발생원 증가 및 소음원 다양화(풋살장,드론 등)로 인한 소음관리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제5차 소음진동종합관리계획('26~'30)」수립을 통한 소음·진동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및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한 소음관리 지속 추진
○ 환경소음 IoT 측정망을 활용한 소음관리 및 데이터 확보
○ 현장진단 전문 상담 제고를 통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개선 등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국토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주요내용	○ 국가단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자체 환경계획 담당자 설명회 개최('23.6) ○ 전국 9개 시·군 환경계획 통합관리 컨설팅 진행('23.6~12)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협의체 실무회의 개최('23.9)

결과분석	추진성과	○ 통합관리 컨설팅 추진을 통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컨설팅 대상 지자체별로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미흡 -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단계 및 권역별 컨설팅 차등 진행 등

향후추진계획	○ '24년 컨설팅 신청 지자체(21개 시·군) 대상 통합관리 컨설팅 진행('24.8~)

54	Ⅱ-3-⑰	필수 ·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보험약제과
	과제목표	○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필수 · 고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 운영 * (위험분담제) 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별도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립선암, 소아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등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총 15품목 급여등재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항암제, 중증 ·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총 4,63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장애요인) 보험급여 등재는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보험당국 일방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계속)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팀명	에이즈관리과
과제목표	○ HIV 감염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을 포함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에이즈 인식 개선 및 감염인 차별·낙인 해소 기대			
주요내용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차별·낙인 해소를 위한 대국민·대상군별 교육홍보 강화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에이즈및성병예방	15,925	16,314	389	2.4
(에이즈및성병예방)	6,067	5,648	△419	△6.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의료인 대상 HIV/AIDS 차별 금지 관련 교육 실시(2회, 61명)
- HIV/AIDS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의료인 483명, 예비의료인(간호대학생) 445명, 강사 18명, 상담사 10명, 의료기관 감염인상담사업 상담간호사 34명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HIV/AIDS 지식 및 차별 관련 교육 신설
- 보건소 HIV/AIDS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1회)

○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젊은 층 대상 SNS 채널,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옥외광고를 활용한 HIV/AIDS 예방 홍보 콘텐츠 확산(21건)
  * **(온라인)** 브랜디드콘텐츠(1월), 웹투니메이션(5월), 예방영상(10월), 브랜드웹툰(10월), 웹드라마(10월), 카드뉴스(11월), 공익광고(12월)
  (오프라인) TV 광고·교통광고(KTX, 서울지하철) (12월)*, 포스터 및 리플릿 지역사회 인쇄·배포(10월)
- 건강한 성(性)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별 현장 캠페인 개최(2회)
- 세계 에이즈의 날(12.1.) 현장 캠페인(3일간, 2,810명 참석)
- 에이즈 예방주간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12.1.~12.7.) 개최

○ '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협조 요청
- HIV 감염인 입원·요양서비스 이용 협조 요청 및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에이즈 예방 홍보 포스터 배포(대한요양병원협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감염인 상담 질이 향상되고 의료차별 인식 개선 - 상담간호사의 AIDS에 대한 낙인은 5점 만점에 교육전 2.27점 → 2.05점으로 감소, 상담수행 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90점 이상 ○ 일반인이 HIV 감염인에게 가지는 부정적 태도, 개인·사회적 낙인 인식은 2012년 대비 6.5점(64.8점 → 58.3점) 하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감염인 편견과 차별 개선 메시지, 전파 예방을 위한 U=U 홍보 - 세계 에이즈의 날(12.1.), 청년의 날(9월),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등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의료차별 예방 교육 확대 - 'HIV/AIDS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내 의료차별 예방 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을 위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협의 추진 -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과정 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및 '노출 후 예방요법' 내용 추가를 위한 협의 추진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 · 팀명	화학물질정책과

과제목표

○ 국내에서 유통·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과 하위사용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안전사고 예방 등 기여

주요내용

○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거쳐 확보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52,534	47,559	▽4,975	▽9.5
- 환경건강연구	11,721	10,676	▽1,045	▽8.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된 유해성자료 등에 대한 심사 및 확보된 유해성정보 공개 지속 확대

- (심사) '23년 421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추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유해성심사)에 따라 '22년에 등록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 대상

- (정보 확보·공개) 유해성 심사 결과 고시된 분류·표시 등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252종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공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심사, 보급 및 유통 지속 확대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여

- (자료확보 및 심사)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 확보, 심사 등 수행
- (정보 공개)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여 보급·유통 확대 및 화학사고 예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확보 정보 지속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화학사고 예방 관리 기여

- ('21) 2,328종 → ('22) 2,623종 → ('23) 2,875종 → ('24) 3,000종 이상(예정, 누적)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의료과
과제목표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주요내용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의료인력 확보 및 외부 전문의 진료 활성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의료비	12,663	13,248	△585	△4.6%
▪ 원격화상진료시스템구축	505	505	-	-
▪ 정신질환전문인력양성	54	5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의무관 등 의료인력 확보
- 의무관 채용 8명
- 공중보건의사 93명 배치

○ 의무관 연봉 등 처우개선 노력(2024년부터 적용)
- 의무관 전체 정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 일반임기제 의무관 연봉상한 폐지

○ 원격화상진료 협력 병원 신규 협약
- 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7개 병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의무관에 의한 진료 7,448,490건
- 외부의사 방문진료, 원격화상진료, 이송진료 합계 156,076건
* 2022년 대비 내부진료 586,749건(8.6%), 외부의사 진료 22,715건(17.0%) 증가

년도	내부진료	외부의사 진료			
		방문진료	원격화상진료	이송진료	합계
2023년	7,448,490	58,598	49,129	48,349	156,076
2022년	6,861,741	52,171	39,947	41,243	133,36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민간대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의무관 채용 어려움
○ 원격의료시스템 장비의 노후화

향후추진계획

○ 의무관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 사항 적극 홍보

○ 원격의료시스템 장비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58	Ⅱ-3-㉑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간호정책과
	과제목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7회, '22.12월~'23.3월) 운영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실시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인력배치 상향 등 개선방안 마련('23.4.25) - 또한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12.2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23.4.25.) ○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23.12.2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수 확대: 2,446,537명('23.12월) - 병동 참여신청서 개편(체크리스트 신설), 대국민 홍보, 참여 확대 독려 및 조사 등을 통해 전년대비 이용환자 수 20.8% 증가(직전년도 증가율 5.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통합돌봄추진단 의료·돌봄 연계팀
과제목표	○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주요내용	○ 급격한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의 변화로 병원·시설보다는 재가 중심의 일상적·주기적 지역의료·돌봄의 중요성 증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 확충이 지연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가 저조한 상황으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검토 필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4,240	6,880	2,640	62.3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3,240	6,480	3,240	100
(긴급돌봄 한시사업)	700	-	△700	순감
(전문인력 양성·교육)	300	300	-	-
(모니터링 및 평가)	-	100	10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7개 법률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4회 논의됨
- '23.2.2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보건복지위원회)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12개 시군구, '23.7~),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 상임위 법안소위 4회 논의('23.4월, 9월, 11월, 12월), 발의의원실 협의
  * (4월) 정부대안 마련 후 추가논의 결정, (9월·11월) 정부대안 관련 수정의견 제기, (12월) 정부·발의의원실 협의안에 대해 이견없이 소위 통과('23.12.20)

○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23.12.2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상이한 7개 발의 법률안(여2,야5)에 대해 합의안 도출 → 4회 법안소위 통해 복지부 제시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통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기본법'적 내용으로 상임위 대안 구성됨 *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대상자,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

향후추진계획

○ 21대 국회 임기 내 법 제정(공포) 추진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건의료정책과
	과제목표	○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도화 추진 원칙 합의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의료법」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수렴 위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실시 ○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의료법」개정 추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논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도화 추진 원칙 합의(2.9.) ○「의료법」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 위해 시범사업 실시(6.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의료법」개정 필요

향후추진계획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의료법」개정 추진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침 수정·보완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물자관리과

과제목표

○ 군 급식・피복류 품질향상을 통해 장병 병영환경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급식)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 충족
- (피복) 군 피복류 품질개선 및 장병 생활 밀착형 품목 보급을 통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

주요내용

○ (급식)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군 병영환경 개선
○ (피복) 피복류 품질개선 및 신규품목 보급 등을 통한 군 병영환경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기본급식	1,733,485	1,731,520	△1,965	△0.1
▪ 기본피복(전투피복체계)	* 2025년 하반기 전력화 예정			
▪ 특수피복(상용이불)	17,838	- * 추진완료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급식) 지역상생장병특식 및 장병 선호를 반영한 자율적 선택 급식 추진
-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외식, 푸드트럭,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공
  * 월 1회(1인 13,000원, 연 9회) 제공 ('23년 신설)
- 기본품목과 기준급식량에 따른 의무급식 폐지 ('23.1.1.~)
- 현대화된 조리기구(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터 등) 보급(250여 개소) ('23.1.1.~12.31.)

○ (피복) 상용이불류 보급 및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추진
- (상용이불) 육군・해병대의 '모포・모단'을 → '상용이불류'로 교체 완료 ('23. 11월)
- (전투피복체계)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기본계획 승인('23.7월) 및 시제품 계약 추진을 통한 사업 여건 조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급식) 자율적 선택 급식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추진을 통한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와 급식 만족도 제고

○ (피복) 피복류 품질개선을 통한 장병 피복만족도 제고 및 군 복무여건 개선
- (상용이불) 피복만족도 조사 결과 '21년 3.34점, '22년 3.39점이었던 모포・모단 대비 신규 보급한 '23년 상용이불・이불커버의 만족도는 4.09점 (+20.6%)으로 대폭 향상
- (전투피복체계) 심의위원회를 통한 품질개선 기본계획 승인, 시제품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을 통해 '24년 전투피복체계 부대시험 및 군 사용 적합성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품질개선 사업여건 정상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동결

향후추진계획	○ (급식) 장병 선호 반영 확대 및 기본 급식비 인상 추진 등 군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지속 - 연 9회로 운영중인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연 14회로 운영일수 확대 추진 - 다수공급자 계약(MAS) 품목 확대를 통한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 추진 - 장병 선호 반영 및 식재료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본 급식비 인상 추진 - 현대화된 조리기구(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터 등) 보급 지속 추진 ○ (피복) 피복류 품질개선 및 장병 생활 밀착형 군수품 보급을 통해 미래세대 병영환경에 부합하는 군 피복정책 추진 지속 - (상용이불) 새로 보급한 상용이불의 위생적인 사용 및 지역상생을 위한 '침구류 위탁세탁' 시범사업 추진('24. 3월~) - (전투피복체계)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야전 운용 적합성 평가'를 통한 '25년 하반기 전력화 추진('25. 7월~) - (플리스형스웨터) 동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플리스형스웨터' 전 장병 대상 확대보급 추진('24. 1월~)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재정과

과제목표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보육 점진적 확대
-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259,406	△7.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259,406	△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3.1.30. 교육부, 복지부)
- 5세부터 유아교육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과제 포함

○ 3세~5세 어린이집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완료('23.3월)
-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어린이집에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

○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설명 및 협조요청('23.6월)

○ 유보통합 전 선제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교육청 사업 추진
- 경기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23.9월~)

○ 3세~5세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1.16.공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추가 지원(인당 월 5만원, 총 1,767억원))하여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기획과
과제목표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분야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탐색 및 현장중심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장애대학(원)생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3,417	3,417	-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7,554	5,534	△2,220	△28.6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115	2,185	1,070	96

- '2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7,200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수립('22.12.6.), 3-3.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 및 맞춤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23.181교) 운영
- 범부처(교육・고용・복지) 연계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 전국 7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735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인력 563명 지원
- 사업 참여대학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3월) 및 워크숍(7월) 진행
- 현장 컨설팅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및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10-11월, 총 6회, 101명 참여),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4.89점(5점 만점)
- 원격프로그램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제작비,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 지원
-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8월)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포함) 수립('23. 上)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무화(「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개정 '23.4.18.)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각 3종, 총 6종)
- 장애성인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1종) 및 문해교육 교과용 도서 보급(72책, 총 2,219권)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연수 운영(총 8회, 789명 연수 이수)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도시 및 지원 예산 확대('22. 15억/32개도시 → '23. 53억/70개 도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 ('23)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업윤리 등 ○ 현장 수요를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만족도 제고 ○ 사업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컨설팅 위원을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 지원(5월~12월) 및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실시(권역별, 총6회) ○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 운영(6월~12월) 및 성과공유회 개최(12월) 등 우수사례 전파 ○ 지역별(지자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여('23. 上) ○ 「평생교육법」 시행('24.4.19.)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4.4.16.)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내실화를 위한 권역별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6월~8월, 20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11월) 등 평생교육기관 연계 체제 협의회 추진(총 13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추진('24) ○ 통합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내실화 지속 추진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현장 수요 반영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노력 확대 - 수요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지속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확대 ○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장 컨설팅 및 성과공유회 개최(7월~11월),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개발자료 활용 워크숍 개최(11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및 운영 담당자(공무원 등) 역량 강화 연수 추진(7월~11월)

64	Ⅱ-4-③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집중점검 및 이전・폐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학교주변 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강·안전 위협, 불건전 행위 및 시설 진입 규제, 잔존 유해업소 정비 등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 ①설정범위: (절대구역)학교출입문 50미터이내, (상대구역)학교경계 200미터 이내 ②금지행위 및 시설: (절대금지)공해·성풍속업 등, (상대금지)유흥·오락·사행·숙박업종 등 ○ (**교육환경평가 관리**) 학교주변 재개발, 학교신설 관련 '일조, 소음, 악취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항목* 평가(전문기관 사전컨설팅) 및 사후관리 * 학교위치, 통학권, 통학안전, 통풍, 조망, 일조, 교지면적, 교지형태,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이용상황, 토양환경, 대기질, 소음 및 진동, 금지행위 및 시설·위험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및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			
	관련예산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23예산 / '24예산 / 전년대비 증△감 / 전년대비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개발	0	235	235 / 신규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실시 * 교육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참여 개학기 각 1회 ** 시·도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수시 및 정기 점검 ※ ('23.12월 기준 유해업소 현황) 총 221개소 (폐기물업 132, 성풍속업 45, 유흥·사행·게임업 등 44) ○ 학교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23년: 937건) 및 '23년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시설 중 신변종 업종 감소: ('19년) 70개 → ('23년) 40개 ○ 교육환경평가 사전(전문)검토 건수 지속 증가: ('19년) 687건 → ('23년) 937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관계기관(경찰서, 구청 등) 간 유해업소 관리카드 공유 등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인·허가 시설 외에도 신고로 영업하는 업종(마사지업, 성기구취급업소 등) 및 다수의 변종업종(뮤비방 등) 신설은 계속되고 있어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을 위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실시(계속)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및 사업자 조치계획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24년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계속)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센터로 연계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학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7,316	28,888	1,572	5.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현행)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 (확대)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 포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 및 시행('24.9.27.)

○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중심 플랫폼인 메타버스 공간 '꿈드림 ON'을 신규 구축·운영('23.11.30.~)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2년) 220개소 → (23년) 222개소,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 (22년) 44개소 → (23년) 54개소

○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인터넷 수강권 제공, 청소년생활기록부 확대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확대** 및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 진로지원을 강화

※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대학 : (21년)6개→(23년)12개 대학,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21년)9→(23년)16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의무교육단계(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2년 43.8% → '23년 46.2%)과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22년 93.2점 → '23년 93.6점)가 향상되어 성과 제고

지원인원	성과인원		17,693명	지원서비스 건수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향상	
38,329명	14,078명	4,406명	3,415명	2,054,817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활동 및 또래소통이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22년 44개소→ '23년 54개소)

○ 비대면교육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을 신규·구축하고, 저연령용(초·중)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 지속 개발

○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16개 시·도)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추진

66	Ⅱ-5-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주요내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운영 지원 ○ 교사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0,714	88,315	△32,399	△26.8
(학교예술강사 지원)	57,472	28,736	△28,736	△50.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6,730	10,730	4,000	59.4

(언론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미디어교육 사업	3,542	3,085	△457	1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24년** 꿈의 댄스팀->꿈의 무용단 명칭 변경 및 **꿈의 극단 신설**

'23년 이행실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예술강사 지원**

- 초·중·고 8,693개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5,021명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 **(꿈의향연(공연 프로젝트))** 전국 31개 지역, 41회 공연 개최(일반국민 관객 10,069명 참여)
- **(전문 음악 기관·단체 협력 기획사업)** 총 2회 추진, 1,605명 향유(KBS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405명,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력 용산어린이정원 공연 1,200명)
- **(교육매개자 연수)** 총 4회(권역별 1회) 운영, 감독·강사·행정담당자 등 총 203명 참석
- **(국제 컨퍼런스)** 컨퍼런스 및 관계자 워크숍 각 1회, 총 252명 참석
- **(후속 발전모델 구축)** 꿈오 2.0 관련 의견수렴 10회, 브로슈어 제작 1종

○ **꿈의 무용단**

- **(대국민 공감 프로젝트 멈(Mu:m)춤)** 저명 예술가 연계 댄스필름 및 다양한 연령· 직군의 시민 참여 숏폼 23종 제작, 온·오프라인 확산(44개 지역 옥외광고 노출, 온라인 영상 조회수 약 95만회, 오프라인 워크숍/영상 챌린지 등 일반시민 404명 참여), 공연 향유자 174명
- **(성과 관리·컨설팅 모델 개발)** 18명 전문가 참여를 통한 성과 지표 개발, 관리 프로세스 설계, 9개소 현장 시범적용을 통한 유효성 검증, 가이드북 1종 제작 등

<미디어교육 확대>

○ 교육부 인가 종합연수원 운영(미디어교육원) 및 교원 직무연수 실시(8,755명)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1,068개교 운영

○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교과서 1종 및 실천매뉴얼 7종) 개발 및 수업지도안 배포(320건)

<table>
<tr>
<td rowspan="2">결과분석</td>
<td>추진성과</td>
<td>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예술강사 지원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최근 3년간 수혜자(학생) 만족도 89.9점
- 학교문화예술교육 협력 프로젝트 등 융합형 교육 지원 및 지역 연계 다각화 사업 운영
· 총 10,304명 학생, 208개교 참여

○ 꿈의 예술단 거점기관 운영
- 지역 거점형 꿈의 무용단 운영을 통한 사회·문화적 격차 완화
· 총 594명 참여(사회·문화적 취약계층 347명 참여/60.30%)
- 단원의 세계를 담은 춤(작품)과 무대를 만드는 공동창작 과정을 통한 단원의 성장
· 만족도조사 결과, 교육효과 89.2점으로 창의성, 소통능력, 행복감, 자기표현력 등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사업 중 가장 높은 교육 효과 확인
- 무용단 활동(공연)을 통한 지역 사회 소통에 기여
· 20개 지역 정기공연 추진을 통한 지역 향유자 수 총 4,278명 확인

*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table>
<tr><th>구분</th><th>2022년(A)</th><th>2023년(B)</th><th>2022년도 대비(B-A)</th></tr>
<tr><td>꿈의 오케스트라 PCSI 종합</td><td>88.0점</td><td>89.1점</td><td>1.1점</td></tr>
<tr><td>꿈의 댄스팀 PCSI 종합</td><td>-</td><td>90.8점</td><td>-</td></tr>
</table>

<<미디어교육 확대>>
○ 교원의 미디어교육 방법론 등 관련 직무연수를 전년대비 56.3% 확대('22년 64과정, '23년 100과정)
○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전년대비 59.2% 증가('22년 20,492명, '23년 32,622명)
</td>
</tr>
<tr>
<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
<td>
<<미디어교육 확대>>
○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강화 필요
</td>
</tr>
</table>

<table>
<tr>
<td>향후추진계획</td>
<td>
○ (문화예술교육 대상 다양화)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및 취약계층 범주 확대

○ (맞춤형 미디어교육)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과 돌봄을 병행하는 맞춤형 과정 개발·보급

○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강사 풀 지속 확충
</td>
</tr>
</table>

67	Ⅱ-5-②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주요내용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 국내·외 청소년이 모여 전지구적 의제에 대한 토의 및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512	-	△1,512	순감
▪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글로벌청소년서밋)	447	-	△447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23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및 글로벌청소년서밋 사업종료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126개소 지원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
-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및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현장 의견 청취(전국 순회 간담회, 모니터링 등)를 통한 맞춤형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등

○ 전세계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서밋' 개최
- 전지구적 의제 토론 및 문화교류활동, 공동과제 수행, 권고문 발표 등
  * '23.7.19~7.26 (7박8일,국제청소년센터), 47개국 127명 참여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 대면·대규모 행사로 추진,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주도성 강화 ○ 시도별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반영으로 활동 참여 청소년 만족도 향상 등 ○ 국내·외 청소년간 의견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사업종료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장애인체육과

과제목표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기술 진보 및 장애 인구 특성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노인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지원금 인상, 수혜자 확대, 가맹시설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참여 확대
-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확대, 학교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99,791	90,536	△9,255	△9.3%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8,058	28,575	517	1.8%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1,633	18,991	7,358	63.3%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및 계속지원 -장애인형)	60,100	42,970	△17,130	△28.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노인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 3개소 조성(부산, 용인, 목포)
- 노인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생활체육교실(678개소 지원), 동호인클럽(272개소 지원
-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6.9~11, 3일/익산시), 1,122명 참여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지도자 785명 배치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지원대상(19~64세), 지원내용(월 9.5만원, 12개월), 지원인원(14,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참여 확대
-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13개소 신규 선정, 누적 89개소 건립 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체력인증센터 2개소(강원, 충북) 확대, 총 14개소 운영
-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확대: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64회 운영
- 학교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 전국 14개 학교(초등학교 1개, 대학교 13개 참여, 25,877명 참여)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병행 추진 등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찾아가는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의 건립 지원의 정상추진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table><tr><th>연 도</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r><tr><td>참여율(%)</td><td>12.3</td><td>14.1</td><td>15.8</td><td>17.7</td><td>20.1</td><td>23.8</td><td>24.9</td><td>24.2</td><td>20.2</td><td>26.6</td><td>33.9</td></tr></table></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가상현실 체험관조성 '24년 예산(10억) 미확보로 인한 체험관 확대 곤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결원율 발생(정원 1,000명/현원785명)</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24년 15개소 신규 선정 목표)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3. 14개소 → '24. 17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3년 785명 → '24년 1,000명)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23년 19~64세→'24년 5~69세, '23년 14,000명→'24년 20,000명, '23년 9.5만원→'24년 11만원)
○ 스포츠버스 운영 확대(스포츠버스 65회 이상 및 장애인 특화 기기 등 장비 보완)</td></tr>
</table>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노년층의 경우, 유아·청소년·청년·중년에 비해 직접적인 문화예술 경험이 낮아 자발적인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
  * 문화예술관람률 : 60대(30.3%), 70세 이상(14.8%)로 세대 평균 관람률(58.1%)보다 매우 낮음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

○ **노년 중심 문화활동 지원**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주체적 시민활동(세대교류, 사회문제 해결, 지역연계 콘텐츠 개발·운영 등) 지원
- 지역기반 통합 프로그램: 지역 내 노년층의 욕구 및 지역현황을 고려한 장기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의 토대 마련

○ **지역특색 노년문화활동 활성화**
-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노년문화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역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 자발적 노년문화활동 활성화 및 홍보 확산을 위한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 **관계자 역량강화 및 어르신 문화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 노년문화활동 운영기관 및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노년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개인 시상

관련예산

(일반회계・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일반회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3,589	0	△3,589	△100.0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3,589	0	△3,589	△100.0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0	1,250	1,250	신설
(문화균형발전 증진-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0	1,250	1,250	신설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노년 중심 문화활동 지원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총 11개 프로그램, 총 711명 참여
- 지역기반 통합 프로그램: 총 4개 프로그램, 총 477명 참여

○ 지역특색 노년문화활동 활성화: 총 148개 프로그램, 4,348명 참여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10.27.~10.28. 총 23,499명 참여
- 실버문화페스티벌 세부 내용

내용		일자	참석(명)	주요내용	비고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공연)		10.27.~28.	222	지역별 공연(무용, 연주, 합창 등) 대표팀 무대	14개 단체 참여
실버문화포럼		10.27.	396	노년세대 문화활동의 가치 및 방향, 사례 관련 공론의 장	온라인 생중계
문화 교류 한마당	컬처로드	10.27.~28.	5,228	16개 지역별 특색을 담은 어르신 문화활동 홍보부스	16개 지역주관처 53개 단체 참여
	드림로드		7,842	노년문화활동 모델(총 15개 단체) 활동 홍보부스	-
	에듀로드		4,209	어르신 관련 일자리, 정보, 정책 등 유관기관 부스	14개 부스
	비즈로드		4,092	어르신 관련 건강, 콘텐츠 산업·기업 홍보 부스	10개 부스
	조이로드		1,510	세대공감 문화체험 운영	2개

○ 관계자 역량강화 및 어르신 문화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역량강화 10회, 문체부장관상(1매), 연합회장상(16매) 시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년층 문화향유권 증진 - 전국에서 163개 프로그램 실시, 총 5,536명이 노년중심 문화활동 사례 개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국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노년 세대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세대의 사회적·문화적 자긍심 제고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노년문화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 인식 제고 ○ 노년층 삶의 질 개선 -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이전 대비 2.5점 상승(76.3→78.8) (202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2024년부터 취약지역 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 대상지를 전국에서 취약지역(소멸위험지역 4등급 또는 5등급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으로 변경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노년층의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긍정적 노년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발굴, 시상하여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련 참여자의 사기 독려 및 동기부여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강화			
	주요내용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소외계층 초중고생 대상 과학체험교실 운영 -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과학기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과학문화확산사업	15,538	14,767	△771	△4.9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생활과학교실 운영**
- 도서벽지 및 소외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 운영 확대*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과학기술 관심 제고**
  * ('22년) 도서벽지 7,766명, 배려계층 134,520명 → ('23년) 도서벽지 19,355명, 배려계층 143,977명
** ('22년) 생활과학교실 참여 전 72.1/ 참여 후 74.8점 → ('23년) 참여 전 75.2점/ 참여 후 77.3점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 1인 지원금 상향(3만원→5만원) 및 지원상품을 확대*하고,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인트몰 신규 구축으로 수혜자 이용 편의 제고 등 사업 개선을 통한 격차해소 확대**
  * 과학문화바우처몰 등록 상품 ('22년) 528개 → ('23년) 747개(141% 증)
** 지역 현장체험형 상품 발굴 강화 ('22년) 58개 → ('23년) 81개(140% 증)

○ **두드림 프로젝트**
-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5개* 권역, 총 10회)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 5개 권역 총 9,932명 관람, 운영 참여 만족도 92.7% 달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 사업평가 결과** - (과학문화확산사업) '23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 달성('21년, '22년 '매우 우수') ○ **과학문화 향유 시·공간의 제약 타파 및 양적 확대를 통한 과학문화 격차 해소** - 생활과학교실 종합 포털 오픈('23년 7월)으로 시·공간의 제약없는 과학 체험교육 기회 확대 및 과학문화바우처 1인당 지원금액 상향(3→5만원), 상품 발굴 확대(528→747개), 찾아가는 바우처 시범 운영 등 수혜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수혜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격차 해소 지원 필요** - 과학문화 소외계층·지역 대상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체험형 서비스의 경우 규모가 적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적 제한 없이 과학기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향후추진계획

○ '생활과학교실 종합 포털'을 통한 온라인 과학교실 활성화로 수준별·맞춤형 과학교육 상시 제공

○ '찾아가는 과학문화바우처' 신설·운영으로 경제적, 지리·문화적 소외계층 지원체계 이원화

○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과학관'운영 확대 및 유관기관·사업과의 연계로 서비스 품질 제고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도서관정책기획단

과제목표

○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 강화
○ 시각·청각장애인 영화관람 접근 장벽 해소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취약한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가구와 내국인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
○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취약계층의 도서 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원, 미수혜자 권리구제서비스 확대(3회→4회) 지원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치봄영화(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포함 영화) 제작 및 상영
- 가치봄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영화관 상영회 진행으로 장애인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
○ 온라인 가치봄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IPTV등 온라인 관람 지원
○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
- 가치봄영화 및 장애 소재 영화, 장애영화인 제작 작품 상영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내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군장병, 재소자,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등)
○ 도서관 다문화 이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급속히 확대되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독서 문화 수요에 맞추어 큰글자책 보급 지원

관련예산

(문예기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205,555	234,780	29,225	14.2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15,590	15,789	199	1.2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관람환경개선	1,866	4,603	2,737	146.7%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제작 지원 및 상영	1,300	1,300	-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80	80	-	-
온라인 가치봄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360	-	△360	순감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지원	100	-	△100	순감
영화관 동시관람장비 도입 지원	-	3,159	3,159	순증
사업운영비	26	64	38	146.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420	420	-	-
▪ 큰글자책 보급 지원	300	3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 ('22년) 232만명 → ('23년) 255만명, 23만명 확대
- 자동재충전 인원 확대 : ('22년) 170만명 → ('23년) 196만명, 26만명 확대
- 미수혜자 권리구제 횟수 확대 : '22년 연 3회 → '23년 4회, 1.9만명 추가 발급

○ 가치봄영화 제작 및 상영
- 가치봄영화 제작 : 총 122편 제작
- 가치봄영화 상영회 개최 : 영화관 94개관, 상영편수 20편, 상영회차 945회, 관람객수 31,095명
- 전국 70개 영화관에서 최신 한국영화 한글자막(CC) 동시개봉(<밀수>, <더 문>, <1947 보스턴>, <화란>, <서울의 봄>, <노량: 죽음의 바다> 6편), 최신영화 한글자막(CC) 및 화면해설(AD) 동시개봉 시범 추진(<노량: 죽음의 바다>, <신 차원! 짱구는 못말려> 2편)
- 시각·청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영화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배급사 5사(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쇼박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주요 상영관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장애인 당사자단체 2사((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 최신 한국영화 시각·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 및 화면해설 사전제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 협조 등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 운영협의체 논의(총 8회) 및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 장비도입 운영협의체 논의(총 3회)로 현장 의견수렴하여 영화관 동시관람 시스템 도입 합의
- 지역의 시각·청각장애인 영화 향유권 강화를 위해 가치봄영화 제작을 지역 소재 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지역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치봄영화 제작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 온라인 가치봄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 가치봄영화 온라인 이용 86,259건. 플랫폼사에서 가치봄영화 상영수익의 3%를 장애인단체에 기부

○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
- 제24회 가치봄 영화제 개최(10. 26.~ 29.) : 30편 상영, 524명 관람, 만족도 조사 결과 100% 달성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 총 23개 상영관 35개 스크린 상영관별 베리에이션 피난안내 영상 제작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복지시설 : 72개 시설(152개 반) 선정
- 노인 복지시설 : 234개 시설(234개 반) 선정
- 장애인 복지시설 : 274개 시설(298개 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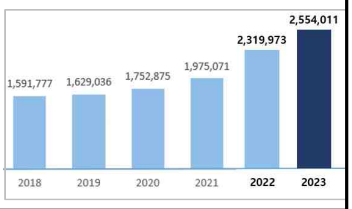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논현도서관(서울) 등 136개 도서관 다문화 이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에 큰글자책 보급 (25종 15,500책 제작 / 공공도서관 600개관 보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근 5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 평균 증가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발급자수(명)	1,629,036	1,752,875	1,975,071	2,319,973	2,554,011
증감율(%)	2.3%	7.6%	12.7%	17.4%	10.1%



○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서적 변화> : 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전보다 더 생활이 활기차진 느낌이다.
<사회적 변화>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졌다.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소비활동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등
<문화적 변화> : 문화여가 관련 정보 및 활동에 관심이 많아졌다. 문화여가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다.

○ 국내 최초 <밀수> 등 6편 한국영화 한글자막(CC) 동시개봉으로 청각장애인의 최신영화 관람 접근권 제고

- 주요 영화관, 배급사, 장애인단체간 합의로 최신영화를 사전에 가치봄영화로 제작, 개봉일에 동시개봉 실현
- 한글자막 동시개봉 사업 추진으로 차별없는 영화관람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부문 수상

○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최신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 동시관람 가능한 시스템 시범 도입으로 장애인의 영화 향유방식 개선

- (기존) 개봉 후 가치봄영화 제작하여 장애인들만 모여서 영화관람 → (개선) 개봉 전 가치봄영화 사전제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영화관람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종합)				
				(단위:점)
사업명	세부대상	2022(A)	2023(B)	2022년 대비(B-A)
특수취약계층	군장병	88.1	86.8	-1.3
	재소자	79.4	84.1	4.7
	지역아동센터	85.3	85.8	0.5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87.9	81.6	-6.3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87.0	86.5	-0.5
	사업 만족도	**85.5**	**85.0**	**-0.5**
복지시설 이용자*	아동	-	88.8	-
	노인	-	91.5	-
	장애인	-	88.5	-
	사업 만족도	-	89.6	-

○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신규 대상 발굴 지원 확대('22년 20개 시설 → '23년 29개 시설)

○ 다문화 가구와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상호 문화 이해 존중 확산

* 136개 참여도서관 515개 프로그램 운영, 약 71,000여명 참여

○ 도서관에 큰글자책을 보급하여 독서 취약계층 도서 접근성 강화, 장서개발 확대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현재 3심 진행 중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동시관람 시스템 도입 관련 영화관 환경 변화 가능성 ○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으로 보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향후추진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 11만원→13만원),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 등록 및 결제 ○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 분야 확대 및 교육방식(개인예술가, 팀티칭) 관련 문화예술교육 현장 수요 반영 ○ 가치봄영화 제작 및 상영 - 최신영화 동시개봉 10편 이상, 가치봄영화 100편 이상 제작 ○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청각장애인용 스마트글래스 도입, 시각장애인용 앱 활용 등을 통해 영화관에서의 가치봄영화 개방형 관람방식에서 폐쇄형 관람방식으로 전환 추진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 활성화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등 ○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큰글자책 보급 지원 지속 추진 및 사업 확대 노력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기반과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 문화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 도서관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공간구성, 운영실태 등 진단·분석 및 도서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시행
- 설립・운영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및 설립 결과의 질적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 등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추진	239	200	△39	△16.3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6,362	6,519	157	△2.47
(박물관 운영 활성화-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324	319	△5	△1.5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878	3,982	104	2.7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2,160	2,218	58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4,900	2,950	△31,950	△91.5
(문화도시 조성 지원)	34,500	-	△34,500	순감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 지원)	-	2,600	2,600	순증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400	350	△50	△12.5
▪ 문화도시 조성(제주)	1,500	1,500	-	-
(문화도시 조성 지원)	1,500	1,500	-	-
▪ 문화도시 조성(자율)	-	34,500	34,500	순증
(문화도시 조성 지원)	-	34,500	34,50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추진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규 건립 또는 리모델링 예정 도서관 대상으로 건축·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69개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27개관 신청→10개관 적정 -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1개관 신청→1개관 적정 * '2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평가인증: 국립박물관 49개관 중 33개관 인증(67.3%), 공립미술관 67개관 중 40개관 인증(59.7%)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일자리 창출('23년 264명: 박물관 197명, 미술관 67명) 및 양성 계기 마련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22. 12., '23.~'27.) -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22.12.) →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23.6~11월)·평가('23.11~12월) → 13개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23.12./수성,수영,안성,세종,충주,홍성,속초,안동,진주,통영,순천,전주,진도) * (향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24.12., '25.~'27.)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 대상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 및 주변환경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한 지역문화기반 확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확충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역량강화 - 지역문화기반 확대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을 통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문화도시 주요성과 - 2023년 한 해 동안 1~4차 24개 도시 곳곳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3,658곳을('22년 3,407곳) 발굴·재생·활용하였고, 253만명의('22년 250만명) 지역주민·방문객이 문화를 향유함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평가를 거쳐,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13개소 조성계획 승인('23.12./수성,수영,안성,세종,충주,홍성,속초,안동,진주,통영,순천,전주,진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지속 추진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컨설팅 지원('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문화다양성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확대를 통한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체계 강화			
주요내용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문화다양성 가치 홍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환경 분석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4,135	1,470	△2,665	△64.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문인력(초등교원, 문화기관종사자, 콘텐츠제작자 등) 양성, 교과연구 지원(중·고교) 등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 전문인력 양성과정(온·오프라인) 운영('23.7월~12월)
-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교과연구 지원('23.7월~'24.2월)

○ 유엔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축제형 대국민 캠페인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5.21.~5.27.)

○ 문화다양성법상 정책 이행현황 분석·보고 의무 준수 및 문화다양성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23.8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인력(초등교원, 문화기관종사자, 콘텐츠제작자, 일반성인) 양성과정 운영(1,916명 참여),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교과연구 지원(중·고교 각2개교, 1,852명 참여) *'문화다양성의 이해' 중등(선택)·고등(상업) 각 1종 인정도서 개발('20~'21, 교육부 협업) -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도 17.9% 증가(사전 70.9점→사후 83.6점)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전국 12개 지역에서 2023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5.21.~5.27.) -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정책포럼,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음악 및 강연·토크콘서트, 참여형 캠페인 및 미디어 협업프로그램 등 운영(52만여명 참여) * 대학다양성협의회 발족식 연계 민관 합동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 거버넌스 확대 ** 저명인사 10인이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도서·음악·영화 추천작(115개) 온라인 전시 ○ '2022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적기 제출('23.8월) *문화다양성법 제9조 근거 - 전년대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개수 및 예산 증가(중앙부처('21년 56개→'22년 73개), 지자체('21년 675개→'22년 698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회다변화에 따른 국민의 타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 확대

○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국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 제시 및 기초자료 확보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예술인지원팀
과제목표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주요내용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 본격 시행 및 교육지원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 - 신진예술인 등에 대한 창작준비금(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66,000	66,0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운영('23.1.~)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23.12.)
-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시행('23.1.~11.)

○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급**
- 일반예술인 20,000명(인당 3백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2백만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총 3,640건의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30회) 및 온·오프라인 안내 콘텐츠 제작 배포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산재보험) 2023년 가입유지자 5,188명의 보험 사무 대행, 가입자 중 보험료 1회 이상 납부자 4,508명에게 475,830,040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2023년 예술인 총 1,561명 및 48개 단체(문화예술사업자) 527,810,180원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술인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침해 구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한 예술인 인권개선 -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23.1.) 및 회의 개최(42회)를 통해,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의 제도적 추진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23.12.)를 통한 예술인 권리 보호 통합 창구 마련 - 예술 계약・저작권・성폭력 예방 등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시행(40,073명 수료)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한 예술인들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상시 상담·안내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업무 편의 제공 및 제도 홍보 촉진 -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총 3,640건의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 찾아가는 설명회 총 30회 개최 및 온라인 안내페이지 개편, 안내콘텐츠 제작 -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 계산기 개발 및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자의 업무 편의 지원 * 23년 보험료 계산기 이용 누적 건수: 93,837건 - 신고 대행 전문협력기관 운영(‘23.12.31. 기준 18개 기관 협약 체결) ○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및 홍보 강화 통해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에 기여 - 2023년 산재보험료 총 475,830,040원 지원금 지급(전년대비 27.6% 증가)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원로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추진(실버마이크 참여 예술인) - 안내책자·리플릿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등 산재보험 홍보 강화 · 산재보험 안내책자·리플릿 제작, 전국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배포(138곳) · 온라인 홍보물(카드뉴스) 제작 및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배포(총 64곳) ·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총 16회 진행 ○ (국민연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홍보 강화 통해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에 기여 -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총 527,810,180원 지원금 지급 · 프리랜서 지원규모 전년도 대비 19,4% 증가(‘23년 1,002명) - (전문심의제도 운영) 심의·자문을 통해 지원사업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위원 및 예술분야 전문가 15인 내외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개편 연구 추진(4월~9월)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국민연금공단 협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약 5만 명) 대상 홍보(8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사건 조사 인력 부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2.9.25.~)으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범위 대폭 확대 및 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관련 담당 전담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팀장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4명)이며, 예술인지원팀의 조사관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사건조사 업무를 담당

향후추진계획	○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지속 추진 및 권리 보호 교육 내실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지속 추진 - 예술 분야별·대상별 찾아가는 권리 보호 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행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사건 조사인력 확보 및 증원 노력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일반예술인 20,000명, 신진예술인 3,000명)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예술활동 준비’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명 변경(‘24~)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편의 제고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상시 운영(유선 및 방문(대면), 온라인(비대면) 등) - 홍보물(리플릿,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근로복지공단 협력 및 자체 설명회 등)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행 전문협력기관(18곳) 운영 및 제도 운영지원 등 - 예술인의 사회보험 제도 관련 연구 용역 실시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도입확대를 통한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주요내용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확산 - 영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영화산업 지원 사업 심사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및 심사 시 우대 등 활용 확대 독려 - 애니메이션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정부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만화 : 웹툰 작가·사업체 대상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및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1.1.~12.31.)	○ **(영화)** - (실태조사) ▲영화 창작자(감독, 작가) 창작환경 실태조사 시행('23년), ▲2021년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23.3월), 2022년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발표('23.12월) - (표준계약서 제・개정) ▲근로표준계약서 개정협의('23년 1분기) 및 해설서 제작('23년 3~4분기)*, ▲연출·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제·개정 협의 진행**, ▲'24년 사업계획 내 사업수행 조건에 표준계약서 사용 내용 포함 * 한국영화산업노조, 제작자 단체, 노무 전문가 참여, ** 연출, 시나리오, 제작, 법무 전문가 참여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19.8월 제정) 사용설명서 제작·배포('21.6월), 활용 확대방안 마련 ○ **(만화)** -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창작자·업계·학계)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24.4월)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24.6월) * ▲(개정)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 6종, ▲(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양도 계약서 등 2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영화)** 표준계약서 활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해설서 배포 확산('24.6월), 개봉상영작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 ▲근로표준계약서 : 2018년 77.8% → 2022년 88.9%, 11.1%p 상승, ▲시나리오표준계약서 : 2018년 30.2% → 2022년 49.0%, 18.8%p 상승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률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실시, 지원사업 참여 대상 활용 권고 및 선정평가 지표 도입(2022~),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추진('24년) * 지원과제 선정평가 지표 활용 도입 이후 증감률 ▲ 2021년(도입 전) 활용 평균 0.6건 → 2022년(도입 후) 1.3건 증가, 도입 이후 1개 과제 당 표준계약서 활용도 약 2.2배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영화) 연출·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정 참여 단체의 의견 불일치로 개정 중단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협의 무산

향후추진계획	○ (영화)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확대 진행 - 2023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4종(근로, 시나리오, 투자, 상영) 포함하여 조사 설계 ○ (만화) 매 3년마다 표준계약서 타당성 재검토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특허청	과・팀명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중소기업)에게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필요**			
	주요내용	○ 전국 주요 도시의 유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상담하는 **'공익변리사 지역상담서비스' 운영**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관명칭을 '지식재산 법률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심판·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 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법률자문,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관련 상담·자문 ○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와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관수사 및 행정조사 연계 지원 추진**			
	관련예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내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내내역)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내내내역)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2,192	2,219	+27	+1.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비수도권 거주 사회적 약자에 대면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상담* 서비스 정례화 및 지원 도시 확대** * (기존) 8개 시·도 비정기 방문(1회당 1일) → ('23) 전국 17개 시·도 정기방문(1회당 2~3일) ○ 지재권 출원·분쟁 관련 상담, 출원·심판 서류 작성, 심판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기업에 분쟁대응 자문 후,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분쟁해결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익변리사 지역상담 서비스 총 130회 제공 ○ 지재권 상담 10,934건, 출원·심판 서류 작성 563건, 심판·소송대리 147건 수행 ○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특사경 수사,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등과의 사업연계 9건 진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익변리사 지역상담,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및 사업연계 계속 수행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기관명칭 변경을 위한 발명진흥법(법 제26조의2) 개정 추진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보호과
과제목표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주요내용	○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대응체계 마련 ○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예방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교육 강화 기반조성 ○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한국저작권체험관 내 전시체험장 구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3,047	30,359	△2688	△8.1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2,030	1,653	△377	△18.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대응체계 마련**

- **(신속 온라인 대응체계 마련)** 민원 등 심층검토 대상안건에 대한 일반심의와 구분되는 단순복제물의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일 1회 이상 신속 안건심의 개최 정례화*온라인 침해대응 조치 다각화

  * 총 심의 건수 256,260건, 신속심의 건수 237,877건

  ** 민관협력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침해대응 조치 실적: 광고 게재 중단 요청 5,898건, 검색제한 요청 26,216건, 민관협력 35,705건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 및 신속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대응 종합시스템 2단계 구축('23.8.~'24.5.)

1단계('22.5~'22.12)	2단계('23.8~'24.5)	3단계 예정('24년~'25.7)
저작권 침해 단계별(모니터링 및 심의 등) 대응 시스템 개선·확대	빅데이터 기반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분석·보고 시스템 구축	핵심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 **(언어별 침해정보시스템 구축)** 영어·중국어 시스템 개발 완료

○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인터폴 중심 국제협력 강화)**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23.8.),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검거('23.10.),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를 통한 저작권 침해 피의자 검거 지원(2건) ▲인터폴·美국토안보수사국 국제공조 요청(34건)
- **(국제적 수사 네트워크 다양화)** ▲동남아 4개국(필,태,인니,베) 법집행기관 초청 행사(3회)·인터폴 지역공조회의('23.5.) 개최, ▲'인터폴 국제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 참석(5회), ▲국제공조 회의 개최 및 참석(38회)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교육 강화 기반조성** -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대상 저작권 전문연수 추진, 진주지역 초등학교 교육 관계자 대상 저작권 전문연수 추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연수(11.13, 20명), 진주지역 초등학교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11.24, 44명) ○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 가능한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및 대학연계 저작권 강좌 운영을 통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저작권·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운영(고려대학교): ('23년) 재학생 26명 및 ('22~23년) 졸업생 16명 배출 ** 6개 대학(경상국립대, 조선대학교 등) 연간 30강좌 운영을 통해 수강생 1천여 명 배출 ○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대국민 캠페인)** 저작권 존중의 사회적 인식 정착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슬로건·BI 개발 및 저작권 침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 개최 및 홍보대사 위촉,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 프로젝트 계획 발표('23.9.8.)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근절 홍보: 전광판 광고(2회), 검색어 기반 키워드 광고 및 방송사 공익광고 추진(총 2회) * 출판 저작권 보호 홍보: 폐쇄형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5, 9~10월) 및 언론매체(2~3월) 내 온라인 광고 *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운영: 릴레이 한컷 웹툰 제작(61편, 61명 만화작가 참여), 단편웹툰 제작(4편), 홍보영상(1편) * 제2회 짤막 영상 공모전 개최('23.11.): 총 76편 접수('23.7.~'23.9), 총 17편 선정, 19편(팀) 시상 ○ **한국저작권체험관(현 국립저작권박물관) 내 전시체험 환경 구축** -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내 유일의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23.11.22) 이후 '24년부터 청소년 대상 특화된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본격 운영 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작권 침해 대응 다각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추진으로 불법복제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 이용률 '19년 22% → '23년 19.2% ○ 저작권 교육 및 예방 활동,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저작권 인식개선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 한류 콘텐츠의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25년) ○ **(국제공조 협력)** ▲인터폴 협업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강화로 온라인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국제적 접속차단 협력망 구축 ▲주요 침해국가(동남아 등) 관계자와 지속 협력하는 공조체계 구축 ○ **(저작권 교육 확대)** 최근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생태계 변동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현행화된 저작권 교육 제공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체육진흥과
과제목표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클럽 제도 정비 -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전문성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시군구 체육회 배치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체육지도활동 지원 - 「스포츠클럴법」 제정('22.6.시행)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 시행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99,898	100,186	288	0.2
(맞춤형생활체육활동 지원)	27,176	25,389	△1,787	△6.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3,448	44,523	1,075	2.5
(스포츠클럽 육성)	29,274	30,274	1,000	3.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 유아체육교실 운영(349개소, 22,893회 운영, 257,063명 참가)
- (청소년) 여학생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20종목 선정, 630개소, 218,555명 참가)
- (여성) 종목별 여성체육교실 운영(199개소, 4,731회 운영, 52,321명 참가)
- (어르신) 어르신 종목별 교실 운영(635개소, 12,720회 운영, 192,815명 참가) /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운영(204개소, 11,312회 운영, 220,553명 참가)

○ **(체육지도자 양성)** '23년 23,716명

○ **(스포츠클럽 지원)**
- (등록・지정스포츠클럽) 학교연계형, 취약계층형, 지역특화형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지역 체육복지 향상 등 체육참여 활성화(등록스포츠클럽 503개소, 지정스포츠클럽 106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222개소, 82,395명 회원, 1,940개 일자리 창출
- (전문선수반 운영) 스포츠클럽 중심 전문선수 육성 및 인적자원의 양적확대로 종목저변 확대 기틀 마련(20개소, 83개, 2,444명 선수, 153명 지도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맞춤형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 마련 ○ 전문 선수반 육성으로 스포츠클럽 내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선수저변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지속 추진

○ 양질의 특화프로그램 마련,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도모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가정양육 시에도 양육자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시간제보육 지원	20,413	25,005	4,592	22.5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시간제 보육 사업안내 배포 및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제작·배부('23.4월) - 지자체 및 관리기관 대상 교육(연 2회), 제공기관 대상 교육(연 4회) ○ 운영모델 다양화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반* 2차 시범사업** 추진('23.7~12월)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 ** 공모를 통해 28개 시·군·구, 135개 기관, 204개반 선정 ○ 시간제 보육 통합반 확대 및 본사업 추진을 위한 '24년 예산 확보 * ('23) 204억원, 1,030개 반 → ('24) 250억원, 2,315개 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긴급·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 기반 제공 * ('22) 946개반 → ('23) 1,030개반 → ('24) 2,315개반/ '23년 시간제보육 이용아동수 28,177명 ○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 추진('24~) 및 관련 예산 확보('24년 국고 250억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주요내용

○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추진
* 농어촌지역,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산업단지 지역,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방식(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린이집 확충	49,170	41,654	7,516	△15.3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차 교부방식 도입(종전 : 단년도 전액 교부, 개선 : 3개년도 분할 교부)에 따라 감액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14개소 신규 확충
* 일반 신축(14개소), 장애아전문 신축(1개소), 매입(4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358개소), 장기임차(37개소)

○ 민간·가정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참여 대상의 외연을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1차 평가(사전적격심사) 기준을 지자체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변경하여 형평성 증진
* 정원충족률 충족 기준을 시도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거하도록 지침 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6천2백개소, 이용아동은 29만명으로 '22년말 대비 약 400개소, 1만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공보육 이용률'은 약 40%로 '22년말 대비 약 3%p 상승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저출생 등 보육수요의 자연적 감소와 낮은 신축비 지원으로 지자체 참여 저조 ※ 현 지원단가(㎡) : 1,676천원, 노유자시설 평균 공사단가 : 4,203천원('23.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기준)

향후추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하되, 단순 양적 확충이 아닌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 형평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노력('24년 확충 계획 : 500개소)
※ 보육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미설치지역 등) 우선 설치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정책과,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공백 및 저출산 해소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맞벌이 가구 등 양육부담 경감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이돌봄지원	354,613	467,866	113,253	31.9
(아이돌봄지원)	354,613	467,866	113,253	31.9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488	146,131	38,643	36.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437	11,813	1,376	13.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3.4.)
-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복수 지정* 허용 및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 확대
  * 시흥시 서비스제공기관 복수 지정('23.6.) / 광역지원센터 지정 현황 : ('22.12.) 4개소 → ('23.12.) 14개소
-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민간 돌봄 자격자 대상 교육과정 시범운영* 실시(~'23.10.)
  * 교육 신청자 152명 중 151명(99.3%) 수료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 → ('23) 연 960 시간 / 지원가구 : ('22) 7.8만 가구 → ('23) 8.5만 가구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23.9.~)
-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실시('23.12.~)
  * (긴급돌봄) 돌봄연계 신청시점 4시간 전 → 2시간 전, (단시간돌봄)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지자체(공간발굴)-기업(리모델링)-정부(운영지원) 간 협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공동육아 공간 조성 확대를 위해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꿈도담터 200개소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아이돌보미 지속 확대 * 이용자 : ('20) 59,663가구 → ('21) 71,789가구 → ('22) 78,212가구 → ('23) 86,100가구 * 돌보미 : ('20) 24,469명 → ('21) 25,917명 → ('22) 26,675명 → ('23) 28,071명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가 * ('22) 90.9 → ('23) 91.4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 '22년 376개소 → '23년 395개소(19개소 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부모 등 이용자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 특성 상 지역 유휴 공간 발굴,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지속적 확충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 개편 및 교육기관 추가 지정
- 아이돌보미 유사자격자 대상 단축교육과정(40시간) 마련

○ 마을생활권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23년 395개소 → '24년 435개소(40개소 증)

81	Ⅱ-6-④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친화기반과
과제목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포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6,208	2,505	△3,703	△59.6%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7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지속 확대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관심 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사전 컨설팅 등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 ('22) 5,415개사 → ('23) 5,911개사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기업 지정·운영
* 최고기업 : ('22) 12개사 → ('23) 22개사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인식 개선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23년 인증기업·기관은 5,911개사로 전년(5,415개)에 비해 9.2% 증가 - 특히,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이 69.5% 차지 ○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지원 ○ 가족친화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교육 지원 ○ 인증기업에 대해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홍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추진
* 가족친화인증기업 : ('23) 5,911개사 → ('24 목표) 6,300개사
○ 가족친화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등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 가족친화제도 운영 컨설팅,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유도

82	II-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단가 확대 ○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및 이행제도 개선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강화 ○ 미혼모부의 보호 지원 강화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535,595	39,695	8.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3,303	△1,902	△36.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457	5,245	788	17.7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997	1,962	965	96.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22) 중위 52%이하 → ('22.10월) 중위 58%이하 → ('23) 중위 60%이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3.10.12. 시행)

시설유형		입소기간	입소기간
개편전	개편후	개편전	개편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출산지원시설	1년	1년6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	양육지원시설	2년	3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3년	5년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확대('22년: 245호 → '23년: 266호(누적))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 (전)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 후 아동양육비 지원 → (후) 아동양육비 지원 후 유전자검사 결과 사후 보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22) 40.3% → ('23) 42.8%)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52%→60%)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증가 : ('22) 20.4만 명 → ('23) 21.2만 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중심으로 개편,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녀 양육 및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전에도 양육비를 먼저 받도록 제도 개선으로 지원 사각지대 방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지속 추진

* ('23) 중위 60%이하(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24) 중위 63%이하(22세 미만 고교재학 자녀), 월 21만원

○ 청소년한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0~1세 자녀 아동양육비 단가 상향 추진(월 4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활용한 주거 지원 강화(임대주택 신규 물량 배정 등)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및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근거 마련 추진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주요내용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13.5월)이후 10여년간 비준하지 못한 협약 비준 및 이행 *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의 원칙과 절차'제시('95.5.1. 발효, 106개국 가입)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	(370)	(37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협약 이행* 및 비준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23.7.18, '25.7.19 시행) * 입양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 책임 수행 의무화 - 아동의 적격성과 결연은 아동 출신국,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은 아동 입양국에서 각각 심사해 정부간 상호보증하여 국제입양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법률이 완비됨으로써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입양절차로 개편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실무 매뉴얼 마련, 공적입양절차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84	II-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주요내용	○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5,808	24,513	△1,295	△5.0
(양육비이행지원)	4,163	3,898	△265	△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 ('22) 14개소 → ('23) 18개소

○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자 대상으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 ('23) 명단공개 42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30건, 출국금지 요청 367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자녀수 ('22) 778명 → ('23) 953명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 * ('22) 40.3% → ('23) 42.8%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 책임성 제고 * 면접교섭 참여자 수 : ('22) 789명 → ('23) 910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면접교섭서비스사업 단계적 확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요건 완화 추진
* (현행)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및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근거 마련 추진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1. 평등 증진 2. 여성 3. 아동·청소년 4. 장애인 5. 노인 6. 외국인과 재외동포 7. 북한이탈주민

이행상황 종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79	2	77	0	-
1. 평등 증진	7	-	7	-	
2. 여성	6	-	6	-	
3. 아동·청소년	19	1	18	-	
4. 장애인	13	-	13	-	
5. 노인	8	1	7	-	
6. 외국인과 재외동포	21	-	21	-	
7. 북한이탈주민	5	-	5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평등 증진】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추진중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추진중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추진중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추진중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추진중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추진중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추진중
【여성】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중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중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추진중
11	Ⅲ-2-④	모·부성권 강화	추진중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추진중
【아동·청소년】			
14	Ⅲ-3-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추진중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추진중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추진중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추진중
18	Ⅲ-3-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추진중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추진중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중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중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중
24	Ⅲ-3-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일부완료**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추진중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추진중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추진중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추진중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추진중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추진중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추진중
【장애인】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34	Ⅲ-4-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중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중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추진중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추진중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추진중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추진중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중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추진중
43	Ⅲ-4-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추진중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추진중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추진중
【노인】			
46	Ⅲ-5-①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9	Ⅲ-5-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추진중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추진중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완료('23.)**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추진중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중
【외국인과 재외동포】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추진중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중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8	Ⅲ-6-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추진중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추진중
60	Ⅲ-6-⑦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중
61	Ⅲ-6-⑧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추진중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추진중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추진중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추진중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추진중
68	Ⅲ-6-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추진중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추진중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추진중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추진중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추진중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추진중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중
【북한이탈주민】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추진중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중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중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예방 및 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고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없음(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원입법) 법사위 계류중)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원입법) 내역 >

의안명	제안자(대표)	제안일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20. 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21. 6.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21. 8.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	'21. 8.

결과분석	추진성과	법안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 지속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지연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논의 시 적극 협력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별통계 개선·이용, 국가 및 지방 성평등지수 측정·평가 등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추진

○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 발표
-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성평등 수준 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신규 승인 통계, 주요 정책 분야 통계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4,407	4,075	△332	△7.5
(성별영향평가 운영)	3,996	3,664	△332	△7.5
(성인지 통계)	40	4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고려하여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 ('21) 중앙부처 44개 기관, 197개 사업 → ('22) 40개 기관, 148개 사업 → ('23) 중앙부처 27개 기관, 74개 사업
  * ('23) 정책개선 반영률 75.2%
- 국민취업 지원 제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활체육 지원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주요내용 >

개선권고 내용	대상 부처
참여자의 인적특성 및 참여프로그램, 취업이행여부 등 세부사항에 관한 성별분리통계 구축·활용	고용노동부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심리지원 강화	교육부
참여 리그 다양화 및 대회 확대 등 대회형 사업에 대한 성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측정 · 발표('23.12월 측정/ '24.6월 발표)
- ('22년 측정결과) 개편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상승
  * 기존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
  ** ('22년 지역성평등지수)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

	○ 성별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21년 신규 승인 국가통계(38종)에 대한 신규항목 및 결과표의 성별 구분 추가 등 개선 의견 통보(21종) * 예산군 아동복지통계, 보령시 청년통계 등 13종 개선 의견 수용(61.9%) - ‘22년 신규 승인 국가통계 47종의 조사표 및 결과표 점검을 통한 개선 의견 마련(15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 주류화 제도가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개선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목표에 근거한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을 발굴, 정책개선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과제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시범 적용* 및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간소화 개선 * 지자체 일자리사업 및 도서관사업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안 도출 ○ 국가 및 지역성평등보고서 연구 추진(’24.12월)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케하여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1,790	△690	△27.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946	1,127	181	1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감수 및 정합성 분석 등 실시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수행('23년 1,028개소 실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2항제1호)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현황 등'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4.6%였으나, '23년에는 29.3%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21년 868개 → '22년 996개 → '23년 1,028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직업능력평가과
	과제목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주요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16,944	7,287	△9,657	△57.0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산업현장의 직무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23.11월 총 1,094개 NCS 확정, 고시) * 스마트건설설계, 클라우드보안관리·운영, 전기자동차검사 등 10개 NCS 개발 인공지능플랫폼구축, 산업보건관리 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110개 NCS 개선 ○ 중견·중소기업의 직무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 '23년 480개 기업 대상 740건 실시(NCS기반 직무분석, 채용훈련프로그램 설계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무·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및 NCS 기업활용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현장 직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확산 및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지속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인력개발과
과제목표	○ 공공·민간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 성별다양성을 높이고, 여성인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반 강화			
주요내용	○ 의사결정직위 성별 균형제고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관리 ○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86	386	△300	△43.7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100	100	순증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156	156	-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50	50	-	-
(여성인재풀 확충)	80	80	-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400	-	△400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중앙*·지자체** 소관 법정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 : ('23) 40.5%
 ** 지자체 위원회 : ('23) 42.6%
○ 여성인재풀 발굴·활용 및 홍보 추진 * 여성인재풀 등재 인원 : ('23) 157,886명
○ 기업 맞춤형 성별균형 컨설팅* 및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23) 43개사 **('23) 2회, 100여개사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23년 최초 발간(고용노동부 공동)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 기준(40% 이상) 연속 달성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한 지속 확대 * 중앙: ('20) 43.2%, ('21) 42.4%, ('22) 41.4%, ('23) 40.5% * 지자체: ('20) 41.8%, ('21) 42.5%, ('22) 42.7% ○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성별균형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에 기여 * 교육 만족도 : 4.6점/5점 만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사회 각 분야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 노력 지속 필요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관점을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 기업의 성별다양성 확보 및 현장 안착 지원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지원			
주요내용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활용 지원 ○ 교원연수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지원 지속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사업 (디지털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300	300	-	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활용 지원

-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을 위한 안내서" 제공('23.9월)
-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교사들의 수업 활동 지원
  ※ 35개 기관의 764개 자료를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ITDA)에 탑재 및 지속 관리('22.5~)

○ 교원 연수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지원

- 교원들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향상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 연수 운영('23.7월., 123명)
- 초·중등 국립학교 대상 상설연구학교* 연구과제(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6개교, '22.3.~'24.2.)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양성평등 교육공간 조성, 교원 학습공동체, 자율연수 등 연구활동 및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구성 등
-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양성평등과 학교 교육의 역할 재조명
  ※ 대구 '산업체 부설학교 여학생들의 삶과 교육에 대한 열망' 주제로 자료 발굴 및 전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별 학교별 특색과 상황에 맞는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대상별 교육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지원 ○ 학교 현장 교사들의 양성평등 교육 전문 역량 향상 지원과 국립학교 대상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상설연구학교 지정"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도교육청별 자체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 구축 지원 지속

○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 지원을 통한 단위 학교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지속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추진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지원			
주요내용	○ 양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연구·중점·선도학교 및 일반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콘텐츠, 컨설팅 등)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일상 영역의 소재를 활용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550	550	-	-
(양성평등학교문화조성지원)	88	8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12,342명)
- 공무원 사이버 교육 11개 과목 운영(21,485명)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15회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와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양성평등한 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참여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제14회 양성평등 작품 공모 및 우수사례 발굴(장관상 등 총 70건 시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무원 등 전략집단 대상 온・오프라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연구·중점·선도학교 및 일반학교 대상 컨설팅 지원 15회 ○ 아동·청소년 대상 제14회 양성평등 작품 공모 및 우수사례 발굴(70건 시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등 운영(6,000명)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운영 및 학습환경 고도화(21,500명)
○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청소년의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시범교육 추진
○ 제15회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아동·청소년 포함 전국민의 양성평등 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모전 운영 및 시상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차별·비하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인·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교강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실시
- 혐오표현 및 차별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언론인 연수 개발 및 실시

주요내용

○ 차별·비하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3~'25)
- 교·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매년)
-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 제공
- 최신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언론인 재교육 강화로 언론속 차별・비하표현 지양

관련예산

(언론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미디어교육 사업	3,542	3,085	△457	12.9

(언론재단 자체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언론진흥 사업비	1,229	896	△333	2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 미디어교육 교재(똑똑, 미디어세상) 및 지도서 개발, 아동·청소년 연령별 교재 12,266부 배포
-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 관련 교육을 위해 중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팩트체크 교실>을 정규화하고, 중학생 5,217명 교육
- 온라인 속 차별·혐오에 대응하는 역량 신장을 위해 AI 친화기업인 KT와 협업해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학생 2,173명에게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 교·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속에서 차별·비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급별, 교과별 교사연수 100개 과정 운영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을 위해 <찾아가는 교사연수> 35회 운영 및 554명 수강

○ 언론인 대상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보도실천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장애인과 언론, 장애인 취재시 고려사항 및 접근법, 장애인 보도 윤리 등 5개 차시 과정 개발

○ 최근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로 언론인 재교육 강화로 언론속 차별・비하표현 지양 등
- 인권, 소수자, 젠더 등 다양한 주제의 경력기자 전문연수 과정 신규 개발, 시행
  * '인권보도상 수상자와 만나다', '사회적 소수자와 젠더 이슈', '낮은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AI 신기술 친화 교육 콘텐츠와 초·중등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차별 및 비하 방지 예방 교육 지원 ○ 교·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급별·교과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강사 연수 ○ 기자 대상 인권 이슈 관련 전문연수 추진(수습기자 322명 교육참가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연령별 교육 세분화, 놀이와 사회정서 기반 미디어교육 개발 필요 ○ 다양한 인권 관련 언론인 연수 주제 발굴

향후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차별, 비하 표현을 삼가고, 자신과 친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실습 기반으로 학습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교·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트랙별로 기초, 중급, 심화 과정 운영 ○ 언론인 대상 정신건강, 자살보도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 젠더, 사회적 다양성 이슈별로 다양한 형식의 경력기자 전문연수 과정 신규 개발 및 시행

6	Ⅲ-1-⑥-㉯	차별 · 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 · 팀명	방송기반총괄과

과제목표

○ 인권침해,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제재 및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문화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위반 방송사 제재 지속 추진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 인권 보호, 양성평등 관련 심의사례에 대해 방송사 공유 및 심의책임자회의 등을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속 지원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심의 활동)	7,958	7,346	△612	△7.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침해 및 문화 차별 · 비하, 혐오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의결 15건 실시

<관련 조항 방송심의 의결 현황>

(2018년～2023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
법정제재	17	13	3	4	3	4
행정지도	41	42	35	12	9	11
계	58	55	38	16	12	15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적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침해 및 문화 차별 · 비하, 혐오 등에 대한 적극적 심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이후 제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방송에서의 인권 및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침해 및 문화 차별 · 비하, 혐오 관련 방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심의책임자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사 심의책임자 · 실무자 대상 업무협의 및 교육 수행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민간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시민 대상 교육·캠페인 등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추진으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도모			
	주요내용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위한 민간 협력기관 운영 지원 ○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 개선 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별도예산 편성 없음	300 -	30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협력기관 운영(2기관) 및 매체·장르별 내용분석(14종) * 시사교양·시사보도, 인터넷 기사, 유튜브 키즈콘텐츠, 광고, 웹툰, 웹예능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개선 요청(354건) ○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및 교육 지원 - 언론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모니터단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18회) - 시민참여 캠페인 및 미디어 포럼 실시(5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간 협력기관 운영으로 다양한 장르·매체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개선 요청 ○ 언론·미디어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와 시민참여 캠페인 및 포럼 실시로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 개선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협력기관 운영 및 매체별 내용분석(14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개선 요청 및 업무협력 ○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및 교육 지원 - 언론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모니터단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 시민 대상 캠페인 및 미디어 포럼 실시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인권침해방지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 자활을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수사, 보호·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공공부문 및 일반 국민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필요

주요내용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논의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기관장에 의한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제재 조치 마련 등의 대응체계 내실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운영
○ 여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공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여성폭력 통계 생산 등 정책기반 강화
○ 5대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및 보호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폭력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
○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지원 인프라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편의 증진, 장애인 피해자 특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 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금,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가사·형사사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지원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해자 수요에 맞는 법률·의료·자립지원 등 유관기관으로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실시
-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촘촘한 의료지원 서비스 내실화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자활 등 지원체계 운영으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과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예방환경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양평기금・범피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4,147	-	△100	순감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84	3,415	2,631	335.6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24	291	△233	△44.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156	18,510	354	1.9
▪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39,199	41,497	2,298	5.9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7,760	7,961	201	2.6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7,354	△183	△0.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5대폭력 통합지원)	200	648	448	2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여성폭력 대응체계구축>

○ '23년도 제9차~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등 주요 대책 이행점검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여성폭력 근절 기반 마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2회, 전문위원회 4회 개최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3년 시행계획 수립 및 '22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 신종범죄 및 폭력유형에 관계없이 통합적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 '1366통합지원단' 설치·운영하여 여성폭력 사각지대(기초지원시설 미설치지역) 및 복합, 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2개소, 부산·경기)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 다수, 기관장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요구('23년 30개소)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지원('23년 120개소)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공표('23.6월, 3년 주기)

* (조사 대상) 만 19~64세 이하 남녀 약 1만 가구 / (조사 내용)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 피해 대응 등

○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상정 심의·확정('23. 3. 27.)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개발·고시('23.3.27) 및 식별지표 활용(1,432명 적용)

– 인신매매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교재 개발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상담·보호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294,328건,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472,320건,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3,666명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대상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 상담 등 무료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12,074건

○ 성폭력 피해 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경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경남 소재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23.7월)

○ 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성폭력 증거 채취용 응급키트 처치료 현실화 및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재배정 등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 내실화

* 의료비 : ('22) 20억원 → ('23) 23억원(3억원↑) / 처치료 : 개당 7.5만원→10만원, 33%↑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현황을 상·하반기(4,10월)로 파악, 재배정을 실시

-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 '23년 전담인력 신규 배치(25개소 각 1명)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을 통한 상담, 심리상담·치료, 수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 상담 실적 : ('22) 292,945건 → ('23) 337,171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 : ('22) 142,501건 → ('23) 144,632건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지원 실적 : ('22) 398,980건 → ('23) 401,167건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1개소)을 통한 상담·구조·보호·자활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추진 * 연도별 지원건수 : ('21년) 154,888건 → ('22년) 145,390건 → ('23년) 145,521건 -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 19.~25.) 계기로 성매매 예방·방지 영상,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으로 성매매 피해 예방 * 성매매방지 방송(KBS, EBS 등), 온라인(SNS, 유튜브 등) 등 집중 홍보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대상 교육 관리 강화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별도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에 따라 고위직 특화교육 지원 실시(87회 5,773명)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본부 → ('22년)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까지 확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 ('23)5,293회 142,632명 *('22)5,274회, 122,461명 ○ 폭력예방교육 인적기반 확충·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22년 934명→'23년 965명) - 모니터링 다각화, 통합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운영 등 전문강사 관리·감독 사업 추진 ○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콘텐츠(4종15편) 등 개발·보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여성폭력 대응체계구축> ○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개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 108개 과제를 아우르는 여성폭력방지 총체적 계획 마련 ○ 통합지원 사업 추진으로 여성폭력 복합피해 사각지대 점진적 해소 및 전국적인 지원 체계 구축 초석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및 인권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22) 34개소 → ('23) 35개소 ○ 의료 지원 내실화,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집결지 내 현장상담소를 통한 심층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특성에 맞춘 지원으로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집결지 현황 : '04년 35개 → '16년 24개 → '19년 18개 → '22년 14개 ○ (성매매 피해자 사회복귀율)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복·자활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자활역량 향상으로 취업 등 사회복귀 인원 증가 * 취업현황 : ('21년) 1,543명 → ('22년) 1,530명 → ('23년) 1,563명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22년 18,001개) 대상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 기관장 참여율 99.7%, 고위직 참여율 93.2%, 종사자 참여율 93.3%로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상향 안정화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감독으로 폭력예방교육 인적기반 확충·내실화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인식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여성폭력 대응체계구축>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 ○ '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실시항 ㅋ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폭력 통합지원 사업 확대운영 및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 지속 추진 ○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점검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및 인권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및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체계 활용 및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매 방지 활동 지속 추진 ○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단기간 사회복귀가 성매매피해자에게 자활지원센터의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등 자활참여사업의 참여를 독려해 자립 의욕 고취 및 자활 역량 향상 *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인상(1인당 월 831천원→ 월 1,000천원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 및 재위촉 보수과정 강화, 청년 모니터링제 등 강사별 관리방안 다각화 ○ 대학생 및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속 추진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 · 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 인신매매 등 여성 대상 신종 범죄 대응 ○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 1. 1.)에 따른 대응**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교육'을 경찰청 법정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했으며, 이에 2023년 전체 경찰관 중 85.3%가 교육을 이수 **(교육 내용)**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인식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등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탑재 및 식별 현황 관리 ○ **가정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 개정사항 등 반영, 「범죄수사규칙」 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대응 △가정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에 대한 신규 교육을 개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범죄 대상 위험성 판단도구의 개선 및 간소화 검토** - 위험성 판단도구의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통합 등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내실화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 돌봄방 등 농촌 특화형 보육서비스 확대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총 예산	5,516	3,971	△1,545	△28.1
▪ 농촌보육여건개선	4,416	3,496	△920	△20.9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00	100	-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500	200	△300	△60.0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	500	175	△325	△6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1~'25년)에 따른 '23년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 수립**
-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 40개 세부과제 추진

○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추진**
- (조사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8조
- (조사 기관/방식/기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면접조사 / 2023년 8~9월
- (조사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15세이상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1) 목표 모집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2) 조사 모집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및 남성농업인
- (조사 대상) 여성농업인 7개 영역 70문항 ※ 남성농업인 : 7개 영역 42문항
  기본 사항(6), 가구 현황(8),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22), 교육 현황(8), 건강현황(4), 양성평등 현황(13),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9)
- (통계 개선) 2018년 실태조사와 대비하여 조사표를 단일화하고 유사 통계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사 내용 수정*(2022년 통계청의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 결과 바탕으로 개선)
  * ① '농어업인등 복지실태조사' 중복 회피를 위해 복지 영역 삭제, ② 양성평등 현황 영역 신설, ③ 정보화 관련 조사내용을 기기 보유에서 무인·온라인 활용 역량 조사로 수정 등
- (결과 공개)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통계표 공표(2024년 4월)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고령여성) 정책수혜율이 낮은 고령여성에게 전문강사가 직접 마을 방문, 여성농정책·편이장비사용법을 소개하는 **영농여건개선교육 추진** * 현장수요가 높은 정책 51개를 선정, 세부내용을 소개하는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제작·배포('23.1월, 26천부) 및 지자체·여성농단체 교육 병행 ** ('20) 1억/2,622명 → ('21) 3억/9,189 → ('22) 5억/16,800 → ('23) 5억/16,800 - (청년여성)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근정 정서 함양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진로 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 ('22) 5억/2,40명 → ('23) 5억/250 ○ **(양성평등)** 농촌형 양성평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양성교육 확대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신규 80시간, 보수과정 14시간/예산 1억원) * ('20) 21명→ ('21) 34(신규 18, 재위촉 16) → ('22) 42(신규 14, 재위촉 28) → ('23) 47(신규 15, 재위촉 32)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지원 1개소 750명(기획공모 3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 **(보육여건 개선) 농촌형 보육**서비스 사업 **확대,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강화** * (농촌보육사업 지원 수) ('21) 183개소 → ('22) 182 → ('23) 196(전년 대비 7.7%↑) ** (제도개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지원 기간 확대(6개월→ 최대 8개월) ○ **(제2회 여성농업인의날) 유관기관·7개 여성농단체**와 협업 300여명 참석, **이웃사랑나눔행사**(쌀3톤·물품 2천만원), **여성농업인 단체 결의문 낭독**('23.10.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23.10.12.) * '07년 UN에서 10월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부는 10월1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21.11.) ○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의사소통 활성화, 정책홍보 강화 ○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확대 기반마련 ○ 보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확대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추진 필요 - 경영주 중 여성비율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 - 명목상 지위에 머무르는 공동경영주 제도 등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경영역량 강화, 노동여건 개선으로 경영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 맞춤형 교육 확대, 제6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등 ○ 농업·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교육 확대, 정책 담당자의 성평등 이해도 제고로 농촌주민 인식개선과 정책추진 실효성 확보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 등 실질적 지원 추진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향상 추진			
주요내용	○ 여성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지원 - 어업활동 지원 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여성어업인 포럼 사업			

관련예산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활동 지원)	180	180	전년동	전년동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71	1,687	1316	354.7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여성어업인 포럼)	26	21	△5	△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3.4.)을 통해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2년도 성과를 점검, 미이행과제 추가 이행을 검토

○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지원

- 여성어업인의 임신·출산을 포함하여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 대해 대체인력 비용을 지속적 지원하여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
-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특화된 건강검진 사업을 시범 운영('22~'23)하여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여성어업인의 위상 강화

- 여성어업인 포럼(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포함) 개최를 통해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실현·확대 유도 및 여성어업인 포럼의 위상 제고(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참석 및 향후 과제 논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임신·출산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 대해 어업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일수 확대('22년 2,904일 →'23년 2,951일)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대상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의 조기발견·예방을 목적으로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대상 인원 확대('22년 1,500명 → '23년 1,800명) ○ (여성어업인 포럼) 여성어업인의 직면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확산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23.10.4.)하고 우수 여성어업인 12인 포상(장관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

- 지원 대상 확대('23년 1,800명 → '24년 15,000명)

○ 어업활동 지원 사업 지속 추진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인지원팀
과제목표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			
주요내용	○ 여성문화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581	581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	-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조성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520	500	△20	△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양성평등정책위원회(2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2회)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 실행 지원
-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 기초연구 추진
-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 개최(5개 분야 11점 시상)
-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일반국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2023 벡델데이 행사 개최
-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포럼(8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추진(영상(10편) 및 카드뉴스 제작)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센터 2개소 운영
-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대학로, 마포)
- 총 4,620명 예술인 자녀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예술인 자녀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23. 12. 31. → '24. 1. 3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양성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 수준을 고려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발굴 및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양성평등 문화생태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실행 지속

○ 반디돌봄센터(서울 대학로) 및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서울 마포) 지속 운영

11	Ⅲ-2-④	모 · 부성권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 지속,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등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및 모·부성권 강화			
	주요내용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스마트 근로감독 등) 지속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할 사용횟수 제한(현행 1회) 완화 검토('23.~)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모성보호육아지원	2,100,641	2,496,830	396,189	18.9
(육아휴직급여)	1,696,352	1,986,864	290,512	1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23년 1,028개소)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23.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추진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를 1회→3회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3.10.5)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21년 868개 → '22년 996개 → '23년 1,028개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24.1.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추진 지연 - '23.10.5.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21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2대 국회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등 법률개정 재추진 중임

향후추진계획	○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추진 계속 - 22대 국회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등 제도개편을 위한 재입법 추진 지속('24.9.26.본회의 통과)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과제목표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제정·시행 ○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 긴급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	전년대비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420	2,458	1,038	73.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스토킹방지 기반 구축) 「스토킹방지법」('23.1.17. 제정, '23.7.1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23.7.18.) 추진으로 스토킹방지 기반 마련

- (예방·보호)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23.11.8.)* 및 스토킹 사건처리매뉴얼** 마련('23. 12월)을 통해 기관의 자체적인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대상
  **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세부절차 등 안내

- (진단도구 개발)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2종)를 시범 배포·운영하여 스토킹 피해 여부 조기 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 방향 결정 등에 활용
  * (대국민용) 스토킹 진단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기관용) 1366, 통합상담소, 스토킹 시범사업 운영기관 등 60여 개소 시범 운영('23. 9~11월) → 수정·보완 연구용역 실시 후 최종안 전국 배포('24년)

- (대응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피해 지원 역량 제고
  * 총 6회 실시, 747명 수료('23.9월) / 이러닝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교육 등

- (2차피해 방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및 수사기관 담당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교육 추진*
  * '23년 하반기 7개 수사기관 대상 42회 실시(1,543명)

○ (맞춤형 지원)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 (주거지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개별거주 방식의 긴급임시숙소(원룸, 오피스텔 등) 및 임대주택 등 지원
  * (긴급주거지원) 7일, 최대 30일 보호(6개 시도 운영, 60명 지원, 1,209건 상담)
  ** (임대주택 주거지원) 3개월, 1회 연장 가능(4개 시도 운영, 12명 지원)

	- (안전보호) 경찰청과 협업하여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경찰청 112 - 긴급전화 1366 간 스토킹 피해 신고 연계('23.7.11~)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강화 - (치료회복)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16개소 운영)하여 피해자의 심신·정서 회복 지원 * '2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실적 : 916건(359명) - (현장점검) 주거지원시설 현장방문(23.9.6),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3.10.23)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논의 - (지원확대) 365일 24시간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운영(6개소→17개소) 및 전담인력 증원(3→4명),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반영한 예산 증액 *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 ('23) 1,420백만원 ⇒ ('24) 2,458백만원 (증 1,038) ○ (인식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발행을 통해 스토킹 심각성 인식을 통한 초기신고 유도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인지도 제고 - (정책 홍보) 스토킹방지법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를 위한 홍보 영상 온·오프라인 송출 * 정책 홍보영상 유튜브 송출(9.25~10.24), 및 여성폭력추방주간 계기 메인 캠페인 영상 온·오프라인(유튜브, 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송출(11~12월) 등 - (제도 안내)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제도 및 1366 관련 홍보 인스타툰(6종)* 발행 * 가정폭력 및 스토킹(각 2종), 1366센터(2종) 홍보 웹툰 여가부 SNS 발행(7~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공포), 스토킹 피해자 진단도구 시범 운영(8월),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11월) 등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기반 마련 ○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실시 등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지속 강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 ('23년) 6개소 → ('24년) 17개소 -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 제정 여부 점검 ○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안정적 추진 및 실적 점검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출산정책과 장애인건강과

과제목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 여성 및 태아의 건강권을 위한 난임시술 통계 관리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여성장애인 맞춤형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출산 및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난임시술 통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모자보건사업	13,396	24,450	11,054	82.5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6,510	7,756	1,246	19.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900	750	△150	△16.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공임신중절 관련「모자보건법」 국회 입법 논의지원('23. 1~4분기) 및 입법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료계 등 각계(의료, 법률, 학회)전문가 간담회 추진(11~12월)

○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23.5) 및 평가결과 연계 사후관리 수행('23.11.) 완료하였으며, '25년 3차 평가 계획을 수립·공개 함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추진

-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23년) → 보편적 지원('24년~)
- (선천성이상아 지원기한 완화)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진단·수술('23년) → 2년으로 확대하면서 예외기간*도 인정('24년~)

* 저체중 등으로 수술이 곤란한 경우, 2년 후라도 의사소견시 예외기간 부여

○ 기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10개소)가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모성보건사업의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275명)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을 통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23.9.28.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모자보건법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9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차례(제410회 제1차(9.20), 제2차(11.22)/ 제411회 제1차(12.18)) 논의 ○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23.5.) 및 '25년 3차 평가 계획을 수립·공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기한 완화('24년~ 적용) ○ '23년 말 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중 8개소가 운영 개시하여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 ○ (계속심사 의결) 낙태죄 형법 개정안 논의 경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개정안 논의를 위해 모자보건법 계속 심사 의결(12.18) ○ (회기 종료)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른 계류 중인 법안 자동 폐기

향후추진계획	○ 인공임신중절 관련「모자보건법」 국회 입법 논의지원(계속) ○ 2023년 난임시술 진료분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2024년도 통계관리를 수행하고 ▲난임시술 수집자료(데이터) 운영 효율화(표준화, 정형화, 전산화) 추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24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서비스 미개시 기관 2개소가 지정기준을 갖추고 운영개시토록 지속 관리 및 지원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내용	○ 9~24세 여성청소년 중 지원대상자*에게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3,574	14,827	1,253	9.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1인당 연 156,000원 한도) (반기별 1회씩 분할 및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매토록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취약계층 19만여 명)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 바우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14	Ⅲ-3-①	아동 · 청소년 활동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며 데이터 시스템화가 가능한 전국 청소년활동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등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예산 확보 ○ 코딩·드론 등 디지털 체험활동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	151	151	신규
▪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889	-	△889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사업종료로 일부사업 과제완료

'23년 이행실적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예산 확보(151억원)

○ 디지털 전환시대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65개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지원(참여인원 61,305명)
- 디지털 활동 21개 프로그램, 12,132명 참여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온라인 시스템 적용 확대('22년 64.3% => '23년 80.6%)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프로프램 참여 청소년 만족도 '21년 90.0점 => '22년 92.6점 => '23년 94.0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기반 마련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움츠러들었던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경험을 통한 일상회복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사업 추진('24년)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관련예산

(청육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729	31,485	△244	△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31,306	31,104	△202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해 돌봄취약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돌봄) 참여 불균형 해소

*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 확대 : ('22) 342개소, 14,059명→ ('23) 350개소, 14,588명

○ 방과후아카데미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제고 및 모니터링 추진

* 운영기관 컨설팅(65개소), 종사자 교육(1,363명), 종합평가(188개소) 및 특별점검(9개소)

○ 민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및 인적 자원 제공

* 지원실적: 총2,416개소(연인원200,497명 / 4,654백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프라 확충, 청소년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활동·학습·돌봄 프로그램 다변화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 학교 내 설치(천안서 여중, 7월 개소) 등 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및 이용자 증가

<방과후 아카데미 기관 및 참여 청소년 수>

('22) 342개소→ ('23)350개소

< 운영 기관 수 >

('22) 14,059명→ ('23)14,588명

< 참여인원 >

-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전/사후 효과성 증가율(심리적응, 핵심역량 등) : 21.1% 향상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코딩, 로봇탐구, VR·AR, 영상·미디어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추가사업비 지원(기관별 年 250~450만원), 우수사례 공모전 디지털 분야 신설 등을 통해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장기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현실화 지속 요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가('23년) 5천원 ※ 지역아동센터 8~9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인프라 확충) 방과후 활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 확충

* ('23년) 350개소 → ('24년) 355개소

○ (운영내실화 추진) 현장 컨설팅(3~10월), 종사자 교육(2~11월), 종합 평가(138개소, 4~11월) 민관협력(기업 사회공헌 등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12월)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사회정서성장지원과

과제목표

○ 시·도 교육청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증원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기관 운영 실태 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주요내용

○ 학교에서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상담 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 위(Wee) 프로젝트 사업기관 확대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수 지원 등 학생 상담 내실화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지정을 통한 심리치료 및 자문 지원
-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간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시스템 운영 및 지원

관련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생 상담 내실화 지원	1,702	1,686	△16	△0.9
- 학생 상담 활성화 지원	586	570	△16	△0.9
- 학생 상담 자문 지원	1,116	1,11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연수 지원
- 위기학생의 상담 사례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원격 자문 서비스 제공
  * 위(Wee)닥터(정신과전문의) 자문 현황: ('21) 2,158건 → ('22) 3,433건 → ('23) 3,672건
-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면 1:1 원격 화상 상담 시스템(랜선 위(Wee)클래스) 운영
- 상담 지원 및 기관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희망대상 개최('23.11.2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Wee) 클래스/센터 신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위(Wee) 클래스: ('21) 8,059교 → ('22) 8,619교 → ('23) 8,863교
- 위(Wee) 센터: ('21) 238개소 → ('22) 238개소 → ('23) 239개소
- 공립학교 전문상담(순회)교사: ('21) 3,936명 → ('22) 4,664명 → ('23) 4,765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등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추진
○ 위센터 자문의 위촉 및 위닥터 운영을 통해 고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폭력대책과

과제목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주요내용

○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발달해가는 또래상담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운영학교 컨설팅, 지도교사 연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또랜(LAN)상담소,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방어자 되기' 등 교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및 운영사례 발굴
-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지원 및 성과발표회 개최, 학생 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수 등 추진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폭대응	14,848	24,646	9,798	65.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4,507	5,932	1,425	3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또래상담자가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또래상담학교(6,281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학생 주도성 및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서포터즈단(51팀) 운영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또래상담사업 담당 실무자 설명회 및 지도교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또래상담학교 이해도 제고 및 상담인력 양성(지도자: 3,445명, 또래상담자: 250,719명)
○ 학생서포터즈단 사전교육 및 지도교사 중간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 참여 중심의 예방활동(또래상담학교, 학생서포터즈단 등) 지속 추진으로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18	Ⅲ-3-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아동학대대응과
과제목표	○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 대응체계 공고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2,263	1,450	△813	△35.9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41,305	48,565	7,260	17.6
▪ 요보호그룹홈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21,410	24,074	2,664	1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범부처 대응)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발표('23.4.1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신고활성화) '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시행(연중상시)

- '23년 공공부문 신고의무자 대상 콘텐츠(공통영상) 개발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외 5곳 탑재완료(교사, 의료인 등 직군별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중)

○ (인식 개선) '긍정양육 129원칙' 확산을 위한 리플렛 제작·배포(80만부, '23년 상·하반기), 카카오톡 긍정양육 이모티콘 배포(2.5만건, '23년 상반기) 및 인생네컷 긍정양육 프레임 제작('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제작(2편)

* 공중파 TV광고 312회 송출, 유튜브 등 920만회 이상 조회, 각종 정부기관 등 영상홍보기기 노출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개입)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을 통해 아동 99,612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20,54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90명은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수사 의뢰

-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장 방문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 개선(~'23.8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보 연계 기준을 개선하여 대상자 누락 방지

* (기존) 요양급여 대상자 중, 의료기관 미진료 정보 → (개선)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기관 미진료 정보 제공

○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92개소(신규 7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44개소(신규 20개소) 운영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확대('22년 8개소 → '23년 15개소)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22년 1,000가정 → '23년 1,200가정)
- 사례관리 개입수준 세분화(2→ 3) 및 주요 대상자 특성별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례관리 지침 개정('23.3월)

	○ (대응체계 공고화) 성별을 고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남아 5개소, 여아 15개소),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23년 6개소 운영, 4개소 설치 중) -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80명 배치, 대응인력 온라인 상시학습 시스템 구축('23.4.17), 1인 배치지역 보완을 통해 전문성 강화 독려 - 합동교육 확대('22년 7회 → '23년 10회),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 배포, 교육(지원)청을 정보연계협의체 참여기관에 추가하여 협력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시행 및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물 제작·배포, 공익광고 송출 등 시행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을 통해 아동 99,612명 가정 방문하여 양육환경 확인 등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 (대응체계 공고화) 맞춤 인프라 확충, 합동교육 확대 등을 통한 대응체계 내실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재학대 예방 강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시행(연중상시) - 의료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24년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 실시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지자체 설치수요에 맞춰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정하되, 아동보호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량이 많은 아보전 및 쉼터에 추가인력 지원 * 쉼터 및 아보전 확충 계획 변경 및 성별 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추진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확대 ○ (대응체계 공고화)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지속 추진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체육정책과
과제목표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체육계 인권 보호 및 공정성 확립 추진			
주요내용	○ 조사관·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상담 운영 ○ 인권침해 피해자 대상 의료·법률·체육활동 비용 및 심층 상담 지원 ○ 다중매체를 활용한 스포츠 인권 홍보, 체육 현장 점검, 예방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효과 증대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육계 비리 인권침해 사건 관리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868	7,613	△255	△3.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지원)	5,045	4,374	△671	△13.3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2,823	3,239	416	1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 활동)**
- 전국규모대회 점검(4회) 및 학생선수 지도자 집중 면담(10회) 실시
- 언론보도, SNS, 홍보 부스, 캠페인 운영으로 체육인 인권 및 윤리 인식 제고
- 스포츠윤리교육인원 확대 및 유소년·학생선수 대상 교육 콘텐츠 최신화
  * 교육 이수자 ('22) 7.1만명 → ('23) 16.2만명
-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및 프로·실업팀 입단 대가 금품수수 비리 실태조사 실시
  * 선수, 지도자 및 심판 대상 전수조사(30,168명)
- 선수-지도자 간 인권상생방안 포럼 개최('23.11.) 및 가이드 1종 개발
- 스포츠윤리정책 개선 연구 용역 실시
- 지도자 등 체육인 징계이력확인이 가능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개시('23.8.~)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 상담 1,662건·신고 630건 접수
  * 학교폭력 관련 사건 접수 51건 포함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건 심의 (12회/320건)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및 절차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지역사무소 2개 지역(강원,광주) 추가 개소를 통한 상담 및 조사 접근성 제고

○ **(피해자 지원)**

(단위: 건/천원)

분야	의료	법률	정서심리	체육활동	계
지원 건 수	16	25	29	3	73
지원비용	9,159	71,420	19,805	2,650	103,03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육계 현장 점검,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권 상생 가치 공유 ○ 신속한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대상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 사건처리율 ('22) 87.6% → ('23) 96.7% * 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 ○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전자화(가입자 3,624명) - 체육인 징계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채용, 대회출전 등에 제재를 적용,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예방에 기여 * 총 3,127개 단체, 9,095건 징계·행정처분 수집(수집률 8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징계정보시스템-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부재로 즉각적인 징계 정보 수집 및 확인이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 활동)** - 신고율이 저조한 지역의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체육계 현장 집중 점검 추진 - 체육인 인권 교육 지속·확대 및 장애체육인 대상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실시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기반 강화 * 사건 축소·은폐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2.) 및 시행('24.8.)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지침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존중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대상 교육 강화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4,000여명) 등록교육(40시간) 및 법정교육(최초교육 1년 6시간, 연간교육 1년 3시간)과정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관련 교육내용 신설 ○ 우울증·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기획사 또는 연예인 신청 방문 상담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대상 성폭력 예방, 스트레스 관리, 인성교육 등(1회 1~4시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41,834	46,619	4,785	11.4
(대중문화산업진흥)	5,038	4,359	△679	△1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24.3.27.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유관기관 등 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존중 강화를 위한 업계 대상 교육)**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정기(법정)교육 실시 * 2회(온라인 8.7~11.30, 오프라인 12.2), 3,570개 업체 참여(최초교육 620개 업체, 연간교육 2,950개 업체) ○ **(대중문화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상담 1,630회(218명), 집단상담 5회(4명) 대상 심리상담 진행. ※ (방문상담 등*) 기획사 요청 1,503회, 211명 / 개인 요청 132회, 11명 * 전화 1회, 1명, 온라인(화상) 18회, 7명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 성, 심리(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인성 등 203회, 2,360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기본인권 인식 제고 - 만족도조사 결과 소양교육 4.84점, 심리상담 4.85점(5점 만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련 법령 개정은 이견으로 인하여 미이행 - 청소년 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연령대 세분화, 주당 용역제공시간 축소 및 1일 최대 제공시간 설정 등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되었으나, K-팝 시장 위축 우려, 용역제공방식 산정방식 등 이견으로 법사위2소위 계류(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 쟁점 해소에 난관이 있어 중장기 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업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업계 및 연예인 지망생 대상 청소년 인권보호 관련 교육 커리큘럼 강화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24년 소양교육 200회, 심리상담 1,716회 예정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과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노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상담 등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청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이관	1,217	-	△1,217	순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이관	-	1,239	1,239	순증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261	265	4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15	1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부터 성매매 뿐만 아니라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지원 포함(지침 변경)

'23년 이행실적

○ 랜덤채팅앱 주기적 점검 및 단속('23.1～23.12, 5차례 점검)
- 점검결과 : 시정 요구 65건 및 형사고발 및 방심위 차단요청 2건(국내 채팅앱), 상품 판매 중단 요청 3건(국외 채팅앱)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성매매등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952명*)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자립・자활 등 지원

(단위: 건)

계	상담	심리・의료 지원	법률 지원	학업・취업 등 자립・자활지원	보호자상담	기타
26,498	13,990	2,806	2,759	396	5,496	1,051

* 연도별 지원실적: ('21년) 727명 → ('22년) 862명 → ('23년) 952명

-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4,301건) 및 아웃리치(7,920건) 실시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23년 13건, 1,180만원)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성착취 유인·의심정보 모니터링 사업 시범 운영
* *사이버 상담 319명 및 아웃리치 4,194건, 성착취 유인정보 신고 4,079건

○ 청소년 성착취 예방 홍보 실적
* 성착취 예방 홍보 영상(2종), 온라인 광고·송출(홍보 콘텐츠 누적 조회수 107만회)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 향상 (100점 만점기준 95.8점) - 특히 보호자 상담을 별도 실시하여 2차피해, 성매매 재유입 등 방지에 노력 -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방지 병행 추진 ○ 온라인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범죄 사전 차단 및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한 성착취 노출 위험 아동 발굴, 신속한 피해 지원서비스 연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피해 발생 증가에 따른 지원센터의 상시 구조, 상담, 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보강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 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주기적 점검·단속, 법 위반 랜덤채팅앱 시정 요구 및 상품판매 중단 요청, 형사 고발 등 조치 ○ 성매매 범죄와 연관된 그루밍, 온라인 성착취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을 위한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의 종사자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아동·청소년 참여형 홍보 진행 및 성착취 예방 홍보 * 성착취 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 홍보(카카오톡, 라인 엑스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심각성 및 피해 예방 중요성 인식을 위한 SNS 활용 온라인 이벤트 및 광고 진행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속 운영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필요
  *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지속 증가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 등 통합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전화 1388' 상시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신규 배치,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후 원스톱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마음건강 지원강화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72,596	72,073	△523	△0.7
(청소년안전망 운영)	29,792	31,242	1,450	4.9
(청소년상담1388 운영)	2,546	2,601	55	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역 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 '22년 20개→'23년 22개, 청소년동반자 : '22년 1,363명→'23년. 1,398명

○ 청소년상담1388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SNS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상담 접근성 제고
  * 청소년상담1388 채널 확대 : 4개→6개(+인스타그램, 네이버 라인)

○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신규운영('23.3월) 및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종합심리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특화지원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신규 운영**('23.7월)하여, 상담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시 센터로 연계
  * 신기업가정신협의회(대한상의ERT) 제2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23.4월)
  ** 전남('23.7월), 대전(10월), 세종(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개선 및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전국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신규 운영('23.3월), 종합심리평가 전문인력 배치로 원스톱 지원 강화('23.7월), 민관협력 통해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신규 운영('23.7월)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배치
-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하여 맞춤형 특화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 운영기간 확대
- '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 6개월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

○ 다양한 상담채널(전화, 온라인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성 강화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청소년복지시설 인권 보호 점검 실시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			
주요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인권보호 점검 실시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지속 실시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인권교육 : 별도예산 없음)	29,506	30,855	1,349	4.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청소년복지시설(166개소) 대상 인권보호 점검(진정함 설치 여부, 학대 신고절차 인지 여부 등)

○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위해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 여름방학('23.7~8월), 수능시험 전후(11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 가출 예방 및 관련 정책 홍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유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인권보호 점검(계속)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계속)

24	Ⅲ-3-⑪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학교폭력대책과
과제목표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지속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인식 제고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주요내용	○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강화 ○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소식지 배부, 교육자료 제공 및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연수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지속 운영 -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폭대응	14,848	24,646	9,798	65.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4,507	5,932	1,425	3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편성·운영 지원

○ 학교폭력 유형, 예방 및 대응 방법,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단 구성·운영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활용도·효과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이 연중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학교폭력 컨설팅단 구성·운영(444명)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재구조화 프로그램(초1·2, 초3·4, 중1, 고1 총 4종)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소식지(5회), 사이버폭력 교육·홍보 영상(6종) 및 학부모용 리플릿 ○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사이버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진로와 직업, 한문 등 총 8종),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지속 지원
-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한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재구조화 프로그램 및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개발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확산
-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예방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실시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무심의관실
	과제목표	○ 출생통보제 시행			
	주요내용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 3.) 법무부·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업무협의 ○ ('23.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4. 6. 30.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7. 19. 제도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계청	과·팀명	인구동향과
	과제목표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을 통해 아동 인권정책 수립 지원			
	주요내용	○ 연간 인구동태 통계 작성 및 서비스 제공 ○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출생 통계에 반영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구동태 통계 작성 - 월간 인구동향 공표(매월말) - 출생·사망 통계(잠정) 공표('23.2.22) - 출생 통계(확정) 공표('23.8.30) - 사망원인 통계 공표('23.9.21, 영아·모성 사망 보완조사 포함)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공표('23.11.29)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통계포털(KOSIS) 상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이용 : 2,193,514건 ('22년 대비 12% 증가) ○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자료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연간 인구동태 통계 작성(계속)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변화 반영하여 출생통계 작성 - 출생통보 후 직권기록된 경우,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인 경우의 출생아 포함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보호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현장슈퍼비전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추진			
주요내용	○ 아동보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강화 ○ 사례결정위원회 활성화 및 양육상황점검 지속 실시			

관련예산

(지방균형발전회계(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0,606	21,047	441	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출생미등록 아동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 운영 및 제도 개선**

* 복지부(제1차관 주재)·여가부·법무부·행안부 등 참석, 4차례 회의 개최(7월~)

**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6월, 10월)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과정 고도화 추진

- (기본교육) 8회차(3~11월) 총 247명 수료, (보수교육) 11회차(4~11월) 총 384명 수료, (아동보호팀장) 4회차(5~9월) 총 130명 수료, (소진예방과정) 2회차(6월) 총 29명 수료(아동보호서비스 바로알기(e러닝)) 1,241명 수료

○ 공적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활성화(1,740회 실시) 및 아동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양육상황점검(92,853회) 지속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근거법 제·개정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아동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의 토대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체계 아동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적극 현장의견 수렴

- 지자체 및 아동보호체계 관련 관계기관 합동 워트숍 실시
- 지자체 아동보호팀 현장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국적 및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로부터 보호			
	주요내용	○ 외국인 아동의 교육, 생활지원 및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개정 추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법률안 통과 시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신청과정 및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및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범부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제3차 회의 참여('23. 7.) - 국회 계류 중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 공유 ○ 제409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23. 8.) - 권인숙,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23. 9.) ○ 제411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23. 12.) - 권인숙,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 제411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24. 1.) - 권인숙,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3회에 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유관 기관 입장 확인, 법률안 각 조항에 대한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입법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발의 시 입법 논의 지원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소년범죄예방팀
과제목표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통한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 학교·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 특별교육 운영 활성화 ○ 초기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비행예방	5,820	5,447	△373	△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학교·검찰·법원 등 의뢰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7,081명, 보호자 교육 4,730명

○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개별상담 2,737건
-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173개 과정 운영
- 교육 담당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23.2) 및 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23.12.) 개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 ○ 교육 담당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문가 및 전문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집행 활성화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소년범죄예방팀
	과제목표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적절한 처우와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이 아님에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는 바, 소년원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제한 ○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과 복지적 조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우범소년에 대해「소년법」제32조의 보호처분 중 1·2·3·4호만 부과하여 과도한 보호처분을 제한하면서도,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을 존치하여 대안교육, 상담·교육명령, 보호자교육 등 교육적·보호적 부가처분을 통해 비행예방 기능 유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및 입법논의 지원 - '22. 12. 28.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 - '23. 2. 15.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 - 21대 국회 임기(~'24. 5. 29.) 내 입법논의 지속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우범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마련, 국회 제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 제출 후 입법 논의를 지속 지원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향후추진계획	○ 「소년법」개정 재추진 검토 - 우범소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소년법」개정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반대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바,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검토 예정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청소년보호과

과제목표

○ 비행초기 경찰선도제도* 운영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성 제고

*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 우범소년에 대한 제한적·보충적 운영으로 인권보호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주요내용

○ 비행초기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경찰선도제도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예산 확충
- 경찰청·국회·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행초기 적극적 선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선도제도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우범소년 제도 개선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적절한 처우와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 법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 마련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위기청소년 선도(경찰청)	62	62	-	-

※ 시·도경찰청별 예산은 자치경찰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시·도경찰청별 사업명과 예산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선도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계 불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경찰의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전문가 참여제 연계인원(명)	12,611	13,965	15,119(8.3%↑)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인원(명)	3,756	4,638	4,987(7.5%↑)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명)	20,411	26,714	30,155(12.9%↑)

○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선도프로그램 개발) 최근 소년범죄 추세를 반영하여 저연령(촉법소년) 및 △중독성 범죄(마약·도박) △성범죄 △습벽범죄(상습절도) 등 재범률이 높은 유형 중심 선도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 확충)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22년 458개소→'23년 470개소)

'23년 이행실적	○ 재범 우려 고위험 위기청소년 대상 제한적·보충적 우범소년 송치 - (우범소년 송치 대상)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취약환경에 노출될 경우 가·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폭력서클·가출팸 등 고위험 위기청소년 대상 우범소년 송치 ► 가출팸·폭력서클 가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하였으며, 무단결석 등으로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가르침이나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범죄·비행(△오토바이절도·무면허운전 △집단폭행 △금전목적 범죄 △성비행)에 노출되거나 성인조직과 연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혁 外, 2022. 가출팸·폭력서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구분	'21년	'22년	'23년
우범소년 송치인원(명)	792	584	731
폭력서클 해체(건/명)	70/529	50/350	56/427
가출팸 해체(건/명)	77/360	52/274	74/358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선도제도 효과) 소년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적극 운영으로 연계 인원 증가와 함께 소년범 재범률(27.9%→25.7%)도 낮아져 재범방지 효과성 입증

구분	'21년	'22년	'23년
소년범 재범률(%)	30.2	27.9	25.7(2.2%p↓)

-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경찰단계 종결(조건부 훈방)로 소년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본인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실질적·인권친화적 계도 가능

○ (입법 추진) 의원실 협조, 경찰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

- 소년부에서 소년사건 조사·심리 시 경찰관서의 전문가 참여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진단결과와 의견을 반영토록 「소년법」 개정 추진('23.6.23.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 김철민 의원실 방문, 경찰의 소년선도제도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 등 제언('23.1.16.)

○ (법적 보완) 법무부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이 포함된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및 정부 입법으로 「소년법」 개정안 발의('22.12.28.)
※우범소년에 대해 1~4호 보호처분만을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경찰청은 개정방향에 동의 입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소년범죄 유형 다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유형별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중독성 범죄 청소년 대상 회복·치유 중심의 선도프로그램 개발 필요 ○ 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비행초기 조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경찰단계의 교육·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 확충 필요 ○ 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사법적 처우가 아닌 복지적 처우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을 대체할 복지적 행정처분이 필요.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복지시설의 확충 필요

향후추진계획	○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를 저지른 소년 대상 회복·치유 중심의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신경정신의학회(중독정신의학회) 등 전문기관 협업, 중독성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개발 - 범죄유형 다변화에 대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중독예방센터 등을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확대 지정 ○ 국회·법무부 등 협조, 경찰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개정 지속 추진 ○ 가출팸·폭력서클 등 비행위험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에 대해 보충적·제한적으로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 가급적 경찰단계 선도제도 활용, 비행 초기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조기 선도 유도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보호자립과
과제목표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및 시설·그룹홈 등 종사자, 시설 퇴소 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로드맵 구성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마련 -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전환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가정위탁 지원·운영	7,874	6,340	△1,534	△19.5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84	455	△29	△6.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	479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251	2,927	△324	△10.0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36	95	△41	△30.1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3,024	2,184	△840	△27.8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	300	-	△300	순감
(가정위탁 사업운영비)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내 보호조치 순서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재배치

* (기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가정위탁, 입양기관 등

→ (변경)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정형 보호율 확대 - 보호대상아동 대비 가정형 보호율의 지속적 상승 * '20년 25.9% → '21년 29.9% → '22년 35%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위탁가정 pool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필요 ○ 특수욕구(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등)를 가진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25.上)을 통한 가정형 보호 활성화

○ 양육코칭(조손, 학대피해, 장애아동 가정) 통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출산정책과
	과제목표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그 외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최대 2년까지 지원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모자보건사업	13,396	24,450	11,054	82.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56	228	△228	△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산전·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549명) 및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원연령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24년 예산안 심의 시, 유사사업 및 저출산 관련 타사업 확대 등을 이유로 예산이 전년대비 50% 삭감되어 연령확대 한계

향후추진계획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지속 및 대상자 단계적 확대 검토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주요내용	○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가족센터 사례관리 추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매체를 활용,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3,786	2,852	△934	△24.7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39	4,879	40	0.8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사업 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추진(별도예산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자녀양육·학업·취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범위 확대

* ('22) 중위 60%이하 → ('23) 중위 65%이하

○ 청소년성문화센터(전국 57개소)를 통해 청소년에 전문화된 체험형 성교육 실시 ('23년 교육인원 1,833천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급별 역량 강화·네트워킹 직무연수,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센터 종사자 176명 참여)
- '22년 개발 신규 매뉴얼 보급·교육(151명 참여), 우수 성교육 콘텐츠 발굴·공유(5개 콘텐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센터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도모: ('22년) 130가정 → ('23년) 162가정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60%→65%)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청소년 성교육 실시 * 교육인원 : ('21) 1,640천 명 → ('22) 1,829천명 → ('23) 1,833천 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가족센터 사례관리 지속 추진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추진

* ('23) 월 35만원 → ('24) 월 35~40만원(0-1세 영아 양육 시 40만원 지급)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도구·매체를 활용한 전문화된 체험형 성교육서비스 지속 제공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아동 참여와 함께 제도 적용 확장 ○ 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제도 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영향평가 시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의견청취 여부 등을 평가 ○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된 정책개선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이행 모니터링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5,739	26,427	688	2.6
(아동정책개발지원 및 역량강화)	300	200	△100	△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180개 지자체(시·도 14, 시·군·구 166) 참여, 총 619건 평가 실시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별 참여 현황: ('21년) 99개소 → ('22년) 140개소 → ('23년) 180개소 ○ 제19회 아동총회('22년) '아동대표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결의문을 수용하여 '23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총회 활동경력이 있는 아동대표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임명'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도 평균 2.9건, 시·군·구 평균 2.5건 실시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검토 후 개선사항을 지자체에 통보(278건), 지자체는 개선사항 반영계획 수립(247건) 및 이행 중 ○ 제19회 아동총회('22년)에서 제시된 결의문의 정책이행 모니터링 실시 - 총 13건 결의문 중 수용의견 10건(수용 2건, 일부수용 8건), 기시행 3건(수용률 10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참여 제고 ○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24.8.6.~8.8.) 실시 후 도출된 결의문이 정책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이행 모니터링 예정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KOICA 인권 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1.~'23.)'의 15대 실행과제를 계획대로 이행 ○ 인권분야 사업 인권지표 개발, 인권분야 사업 발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21.~'25.)' 지속 수행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인권분야 중기전략 수립 및 이행, 취약계층 인권·젠더·평화 등 인권사업 성과관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신규사업별 예비조사, 사업심사, 기획조사, 사업 착수 단계별 인권위험 진단 및 위험완화 조치 수립 - 인권영향평가 결과 모니터링 활동 등 실사(Due Diligence) 수행 ○ 인권분야 중기전략 수립 및 이행, 취약계층 인권·젠더·평화 등 인권사업 성과관리 - 인권·젠더·평화 등 분야 전략('21-'25) 상 세부사업 성과관리, 젠더·장애 마커 지속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 아동, 여성 등 취약집단의 인권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해관계자(사업 수행기관 등)의 "개발협력과 인권" 의제에 대한 인식 부족

향후추진계획	○ 인권분야 중기전략('26-'30) 개정 ○ 사업 수행파트너 대상 인권교육 보급 및 성비위 등 인권위험 예방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지속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관련 주기적 점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인권실태조사)	100	100	-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	9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상 인권 교육 실시
-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대상 연 4시간 이상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
- 월 1회 정기회의 시 인권상황 점검 진행 내용 추가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전국 인권지킴이단 17개 시도 783개소 운영)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대상 운영 실무(인권교육, 상황점검, 지침 해설 등) 교육 6회 실시
- 인권침해 발생 상황 점검 및 사후조치 (17건), 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등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인권 관련 상황 점검

○ 장애인 거주시설 57개소에 인권실태 조사 실시하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권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인권 의식 신장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관련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 여부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 점검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관련 개선 필요사항 발굴

34	Ⅲ-4-②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건강과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교육지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출산비용지원)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 (교육지원) 시·도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43개소)를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 포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장애인지원	2,513	2,544	△31	△1.2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34	1,771	△37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779	761	18	
(사업운영비)	-	12	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 ('23년) 전국 42개소, 80,599명 지원(상담·사례관리 18,491명, 역량강화프로그램 52,321명, 사례관리 3,471명, 자조모임 6,316명)

○ (출산비용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사산 포함)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하여 총 927명분 지원
- 시군구,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협업하여 제도 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지원)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출산비용지원) 매년 여성장애인 출산 감소 추세에 따라 출산비용 지원인원 감소

향후추진계획

○ (교육지원)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의 교육프로그램 및 대상자 지속 확대

○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평가 및 교차·다중차별 개선 전략 수립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주요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재활바우처)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및 휴식지원 등 양육지원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미·여가, 직업탐구·자립준비 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06	194,047	18341	10.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27,032	138,288	11,256	8.9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7,829	54,887	7,058	14.8
▪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357,738	100,852	39.3
(부모·가족지원)	4,064	4,06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및 지원인원 확대
  * ('22년) 월 평균 지원단가 18만원, 지원인원 91,044명 → ('23년) 월 20만원, 97,469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 '22년 840시간 → '23년 960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2년 567명 → '23년 1,000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가족 여행(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2년 11,030명 → '23년 14,00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 경감
○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제고
- '23년 실인원 수 : 부모상담 1,047명, 가족휴식 14,566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양육지원 지속 확대 추진 ('24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지속 노력
- (장애아양육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일부 본인부담 하에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서비스 지원인원과 돌봄시간도 확대

○ 부모 상담,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 및 대상자 지속 확대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5.)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26.~)

○ 장애인 거주시설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주요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시간을 확대 및 모형 개발 등 지원 강화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 자립대상자 조사·발굴,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LH 매입임대주택 등), 소득(생계·주거급여, 연금 등),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검진 등 서비스 통합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전·후 모든 과정을 지원

*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적공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357,738	100,852	39.3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173,504	197,963	24,459	14.1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500	17,563	16,063	1,070.9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	14,192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	40,484	-	-
▪ 장애인활동지원	1,991,879	2,284,604	292,725	1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	전년대비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834	5,982	1,148	23.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834	5,982	1,148	23.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로 낮시간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주택 지원(광주광역시 2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 규모 추정을 위한 1차 연구(~'23.6.)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 하위법령 개정, 실행모형 마련을 위한 2차 연구('23.8.~)

'23년 이행실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확대 및 제공단가 인상('23.1월~) * 대상자 수 : ('22) 10,000명 → ('23) 11,000명, 제공단가 인상 : ('22) 14,800원 → ('23) 15,570원 - 농어촌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23.7월~) * 농어촌 지역 소재 제공기관 차량이동지원 인정시간 확대(22→33시간) - 장애인 활동지원 동시 이용자 제공시간 연계 차감제 단계적 축소·폐지를 통한 보장성 강화('23.1월~) * (기본형) 연계차감제 폐지, (확장형) ('22) △56시간 → ('23) △22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 지속 확대* * (기본급여) 대상자 수 : ('22) 107,000명 → ('23) 115,000명 -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 가산급여 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X1 점수 성인 446→426점, 아동 347→327점), ** 제공단가 인상 : ('22) 2,000원 → ('23) 3,000원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서비스단가 인상* * 제공단가 인상 : ('22) 14,805원 → ('23) 15,570원 ○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지원 강화 - (자립) 총 103명*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 및 서비스 연계 * 장애 유형 : △지적 76명, △지체 14명, △뇌병변 9명, △기타(시각, 청각 등) 4명 * 자립 이전 거주 유형 : △거주시설 85명, △학대피해쉼터 7명, △단기거주시설 2명, △입소대기 9명 - (참여지역) 총 25개 지자체(광역 6, 기초 19) - (주택) 총 194호 확보 및 공급(LH 매입임대주택 등) - (전담인력) 66명 배치(사회복지사 등)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23. 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광주광역시, 20명) 및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의 기반 마련('24년, 2,340명) ○ 제도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대폭 증가 * ('22) 9,211명 → ('23) 12,676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증가 * 이용자수 : ('22) 118,380명 → ('23) 128,959명(10,579명) / 만족도 : ('22) 90.1 → ('23) 91.8 ○ 자립장애인(77명)의 지역사회 자립 후 생활을 분석한 결과(한국장애인개발원, '24년 3월), 당사자의 삶의 질, 선택권, 사생활, 외부활동 등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지속 상승(좋음 이상 평균 79.8% → 83.1%) ○ 국토교통부(LH)와 시범사업 필요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연 2회) ○ 장애인 거주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시설 및 보호자 우려) 장애인 거주시설의 조사 거부, 보호자의 돌봄 부담 등 우려에 따른 반대로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有 ○ (주택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장애인 입주 반대), 편중된 주택공급(인구 소규모 지역 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확보의 어려움 有

향후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 및 제공단가 인상 지속 확대를 통해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서비스단가 등의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돌봄 부담경감 추진 ○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 * 예)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에 해당되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본사업 전환('26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추진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을 보장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 보호

주요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 추진
- 적극적인 홍보, 안내 등을 통하여 지원 실적 증가 도모
- 국선변호사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조력 전문성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진술조력인을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추진
- 장애인 의사소통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관련 업무 매뉴얼 개선 추진
- 장애인 진술조력 사례 공유 및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교육 실시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1,632	272	2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12,560	2,853	29.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 2023년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심화과정에 '장애인학대 사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과목을 개설하여 장애인학대 개념, 사건 유형,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특수성 등을 교육('23. 7.~10.)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23. 10.)

○ 진술조력인
- '22. 1.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에 장애인 특성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된 교육 과정 개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법접근성 향상
- 장애인 전문가 위주(재활심리사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옹호기관 근무경력자 등)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23. 15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필요적 선정 요건으로 피해자의 장애 유무를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23년 장애인 피해자 대상 1,127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4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총 10명 증원, 배치('24.)
-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시행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24. 1.)
-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 4.)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24)
- 진술조력인의 장애인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개정 추진('24. 상반기)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상 제도 홍보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24.)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생활교통복지과
과제목표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주요내용	○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23. 7.)하고, '26년까지 상향된 법정대수 100% 달성 추진 및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24시간 운행 등을 위해 운영비 국비지원 추진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24.1월 시행)			

관련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24,560	232,427	7,867	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확보대수 기준을 기존 중증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법정대수 상향(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23.7)

○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간 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국비 지원('23.7~, 운영비 23년 예산 237억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지속 지원('24년 예산 603억원)

○ 다양한 장애유형·수요 등을 고려하여 침대형 휠체어 등도 탑승가능한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교통약자법령 개정, '~24)

○ 전국 어디서나 앱·전화 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5)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보장 -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접근, 동원권 개선 및 사법 접근성 보장			
	주요내용	○ '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보행약자가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의 고도화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 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 디자인 코리아(Design Korea) 페스티벌 :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축제 ○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 * 현행 : 건축물의 일부 용도(서점, 세탁소, 탁구장 등)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의 BF 인증제 의무인증 대상에 현행의 초고층건물, 지하연계복합건물에 더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을 추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방 법 : 17개 시도 지자체 시정조치 및 소관 중앙부처 이행계획 수립요청 - 기 간 : 2023.3. ~ 2023.11. ○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 국제교류를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의 국내적용 방안 모색,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한 민·관·산·학의 연계시스템 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 확대 및 형성 * 491명(236팀) 참여 전년대비 참여자 135% 증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92.46점 달성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23년 378명 참석/ 예술의전당) ○ DK 페스티벌 실시: 11월 1일~05일 코엑스(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27개 작품 전시) ○ 국내 최초 접근성 분야 8개 기관의 민·관·학 유니버설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 복지부, 문체부, 산통부,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민간) KCC, 한경국립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23년도 인증실적 2,420건(예비인증 1,676건, 본인증 744건) ○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없는 사법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사회적 인식 고취 필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실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실시 ○ 유니버설 디자인 공감주간 행사 참여자 증가 - '22년 대비 '23년 유니버설디자인 행사 참여자 증가(1,423명→2,887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가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컨트롤 타워의 부재 - 고령사회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자 증가와 국제사회의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증대

향후추진계획	○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의 고도화 추진 ○ 국제교류를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의 국내적용 방안 모색,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한 민·관·산·학의 연계시스템 구축 * 「모두가 누리는 우리동네」 국제세미나 개최(3개국: 미국, 영국, 한국, 24. 9.)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 확대 및 형성 *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건축, 관광, 제품분야, 24.3.~24.9.) ○ 소규모 근린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 BF 인증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진술조력인을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801	80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품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사적 교육관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전문과정 강사양성(44명), 보수교육을 통한 강사 역량 강화 및 재위촉(76명) - 인식개선교육기관 추가 8개소 지정(누적 30개소) - 장애인식개선 지정기관 실적평가 및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침 및 지원물품 제작 및 배포 - 장애공감주간 운영 및 장애공감 캠페인 실시 - 인식개선 광고 제작 및 지상파·온라인 등 공익광고 송출 - 공무원/교직원 대상 이러닝콘텐츠(2종/14차시 제작 및 이러닝 탑재) - 중증장애인 참여형 교육 콘텐츠 제작(7개팀) 및 표준콘텐츠 탑재 및 활용 - 개발완료 콘텐츠에 대한 영문자막 보완 제작 - 콘텐츠 종합관리 DB화: 동영상 및 도서(232종) 아카이브 구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기관 및 강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강사양성체계 운영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로 사용자 맞춤형 교육환경 기반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을 고도화(예시: 전문, 특별)하여 사용자의 교육 선택폭을 확대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으로 장애공감문화 조성 노력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건강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1.11~'22.10.)을 통한 평가 및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연계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8,281	8,442	161	1.9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8,281	8,442	161	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운영
- 등록 주치의 675명, 등록 장애인 3,802명('23.12월말)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기준 등록주치의·장애인 현황 주간보고, 심평원 정보시스템 기준 이용현황 월간보고 체계 구축하여 상시 운영

○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업모형 내실화, 수가 확대 등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23.10월)
- (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모든 장애인), 방문횟수 확대 등

○ 신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지원(3개소) 및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운영(3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TF운영(4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운영 - 등록 주치의 675명, 등록 장애인 3,802명('23.12월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업무 정착 및 3개소 재지정 심사 등을 통하여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방안 검토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내 방문재활 시행 법적근거 마련 등 장애인의 건강문제 및 의료서비스 욕구를 반영 개선 추진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 협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 추진

○ 주기적인 현장간담회 추진(월1회)으로 사업운영상 어려움 개선 및 연계·소통 강화

1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25.)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토대로 '00년부터 5년마다 편의 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계획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 확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연구 예산 미확보

향후추진계획	○ '24년 정책연구용역 선정을 통한 연구비 확보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기 간 : 2024.4. ~ 2024.11.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주요내용	○ 장애인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사후관리 등 ○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거주공간 및 치료, 의료, 양육서비스 등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2,702	3,172	470	17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비)	1,634	1,675	41	2.5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비)	876	1,227	351	40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1,142	1,14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내실화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중앙-지역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전체 정기회의체 운영 및 지역기관 현장지원
  * 관장회의(2,6,10월/총 3회), 팀장회의(6, 11월/2회), 권역별 사례컨퍼런스 개최(3회), 전국대회 개최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효율성 제고 및 업무편의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 종사자 교육(기본·보수교육,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가 교육), 기관장 교육 실시
  * 기본교육(1회), 공통교육(2회), 역량강화교육(2회),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가 과정교육(1회), 기관장 교육(1회)
- 신규입사자지원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2.17.)

○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23.10.)
- '22.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분석

○ 신고의무자 교육 영문자료 개발 및 배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심 학대예방 홍보활동
- SNS 게시(42회), 카드뉴스, 웹진 등 홍보자료 발간, 학대예방포스터 등 개발 및 배포(9,298개소)

○ 피해장애인 쉼터 19개소 운영

	○ 피해장애아동 쉼터 4개소 추가 설치 착수(인천·울산 각2개소/ 포함 총 10개소) ○ 장애인학대 예방·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3년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평가 지표개발 연구' 용역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실시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보도 권고기준 수립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학대의심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학대예방 인식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기능 강화 ○ 학대의심신고 접수 후 신속대응체계(72시간 이내 출동) 개선 추진 ○ 홍보활동 다변화로 장애인 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학대대응체계 마련 등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수요자 중심 교육 인프라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교육 내실화 도모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 특성 및 수요 등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이러닝 시스템 정식 운영에 따른 온라인 교육 제공 - 업종별·장애유형별 등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확대 - 문화·체험형 인식 개선 위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815	5,764	949	19.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육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및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이러닝 시스템 운영(신규, 16,201명 수료) 및 교육포털 기능 확대* * 이러닝 교육 메뉴 신설, 장애인 고용 인식수준 진단 척도 탑재 등 ○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확대 - 업종별·장애유형별·인식수준별 모듈형 콘텐츠, 웹드라마 "이동식 노무사", LMS용 콘텐츠, SNS 기반 숏폼 콘텐츠 등 교육콘텐츠 10종 개발·보급 ○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결합한 문화·체험형 교육 확대 실시를 통환 교육 효과 제고 - '21년 5개소, 152회 → '23년 9개소, 199회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체험형 교육 참여인원 증가 및 교육분야 종사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 (교육횟수) ('22년) 187회 → ('23년) 199회, 6.4% 증가 - (교육인원) ('22년) 19,996명 → ('23년) 38,251명, 96.4% 증가 -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22년) 120명 → ('23년) 154명, 28.3% 증가* *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 창출 등이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수상** ○ 장애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기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 제거 등으로 '22년대비 13,393명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인원 증가 - (장애인 고용률) '22년, 3.19% → '23년, 3.24%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년 경영실적보고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강화 - 교육 콘텐츠 소외 대상 외국인 근로자, 인사담당자 및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대상별 콘텐츠 개발 - '24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사업 선정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강화 ○ 문화·체험형 교육 수행기관 및 예산 확대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 효과 제고 * ('23) 9개소(13억) → ('24년) 11개소(22억)

43	Ⅲ-4-⑪	변호사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조인력과
	과제목표	○ 변호사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주요내용	○ 지방 거점별 장애인 시험장 점진적 확대 추진 -대전(2023)→대전・부산(2024)→대전・부산・광주(2025)→대전・부산・광주・대구(2026)→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2027)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시험장 - 대전・부산・광주 3개 지역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시험장 확대 운영 - 2023년도 운영 예정이었던 대전 이외 부산·광주 지역까지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 시험장 운영 지속 추진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주요내용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357,738	100,852	39.3
(공공후견 지원)	3,505	3,515	10	0.3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460	46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후견 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절차 전 과정 등 지원('13년~)
- 공공후견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을 통한 후견인 활동 지원 및 양성

○ 발달장애인 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22.5월~'23.12월)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총 120명의 발달장애인에 재산관리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후견 심판청구,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및 후견인 양성 등 - 공공후견 심판청구 690건, 활동비용 1,805명, 후견인 양성 827명('23.12월 기준) ○ 발달장애인 재산의 안전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정적 자립 지원 * 신탁재산 21억원 관리 및 사용지원 3,017회('23.12월 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후견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의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및 본사업 전환 준비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팀명	선거관리과
	과제목표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 안내			
	주요내용	○ 유관 기관(보건복지부 등) 대상 거소투표 관련 안내 협조 요청(중앙선관위) ○ 기관·시설의 장 대상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관할선관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보건복지부에「2023. 4. 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요청」문서 발송('23. 2. 24.) ○ 보건복지부에「2023. 10. 11.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요청」문서 발송('23. 8. 22.) [협조요청 내용] -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 전국 병원·요양소에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유관 기관(보건복지부 등) 대상 거소투표 관련 안내 협조 요청(계속) ○ 기관·시설의 장 대상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등 안내(계속)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18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선 이후 변화와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방안 검토하되,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제외 근로자 실질적 감소 방향을 우선 검토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개선을 통해 저임금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적극 연계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24.11월 개원 예정)

주요내용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작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진행('22.2~'24.8.)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장애인전환지원	3,744	3,712	△32	△0.9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장애인전환지원)	3,744	3,712	△32	△0.9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1,906	88,585	6,679	8.2
(경기남부직능원신축사업)	16,405	19,695	3,290	20.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직업재활시설과 보호고용 근로장애인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가제도 개선 이후 적용제외를 받기 위한 작업능력평가 인원 증가 폭은 제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작업능력평가 실시 인원: ('21년) 9,589명 → ('22년) 10,169명 → ('23년) 9,930명

*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 ('20년) 720개소/12,712명 → ('21년) 773개소/13,600명 → ('22년) 792개소/14,228명

○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인가 절차 간소화를 폐지('23.1.20)하고, 인가제도 엄격화(작업능력평가 1회 → 2회 실시 등) 지속적 추진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성공

- 전환지원 참여 직업재활시설 186개, 전환지원 참여 근로장애인 877명, 전환성공 인원 85명
- 전환성공률 지속적 상승 ('21년) 8.3%→('22년) 8.5%→('23년) 9.7%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사업주지원금 단가 인상(80만원→90만원)으로 채용사업체 유인 강화, 전환 활성화 기반 마련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

- 수도권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진행('24.8월 준공 예정)

* 지하1층~지상4층, 실습관・협력관・생활관・다목적강당으로 구성, 연면적 22,386㎡(6,771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증가에도 '인가제도 엄격화' 및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적용제외인가 증가 폭을 제한하는 효과 ○ 전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장애인 전환성공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로 채용사업주 지원 용이성 확보 * 전환성공 유형 확대(시설 내 자체전환 추가), 근로계약 기간 단축(1년 계약→6개월) ○ 전환지원 우수 직업재활시설 고용지원부 장관상 포상(3점)으로 사업 참여 동기 유발 ○ 사업 고객만족도 결과 종합만족도 88.8점으로 전년대비 2.9점 향상 - 수당 지급에 대한 만족도 높음, 지원 인원 및 기간 확대 및 시설 지원금 신설 요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24.8월 준공 예정) * 훈련 규모 300명, 연간 1,000명 서비스 수혜 기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대상 장애인을 직접 보호, 훈련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나, - 현행은 전환성공 시 대상 장애인(성공수당)과 채용사업주(지원금)에만 지원이 있고, 사업에 참여한 직업재활시설에는 오히려 경제적, 업무적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

향후추진계획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원활한 전환 배출·유지를 위한 다각적으로 지원 강화 - (장애인) ▲연장참여 중 직무지도 지원 가능토록 추진, ▲장애인 인턴제* 중에도 전환성공수당 지급 * 인턴약정서가 전환성공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인정(6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등) - (채용사업주) 전환 후 안정적인 근로유지를 위해 ▲사업주지원금 인상, ▲사후관리 강화 - (참여시설) ▲전환성공 배출 시설에 우선 참여 기회 부여, ▲전환성공 인센티브 신설(60만원) ○ 우수기관 노하우 공유, 관련 연구,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우수기관 포상) 전환성공에 기여한 시설 포상 및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노하우 공유 - (사업개선 연구) 국내·외 전환 관련 실태조사, 해외 유사제도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여성장애인 적합직무로 네일아트 등을 검토, 분석 후 훈련직종으로 운영 추진 예정

46	Ⅲ-5-①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주요내용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 학대 예방의 날(6.15) 행사의 확대, '나비새김' 캠페인노인 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활성화 추진
- 학대 감지 응급 신고, 영상녹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시설 내 학대 사건 예방
-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 연구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대응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 일자리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예방효과 확대**
- 노인 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순 조사 거부, 방해, 거짓 진술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 확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노인보호전문기관	11,919	12,354	435	3.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258	1,277	19	1.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8,405	8,730	325	3.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2,256	2,347	91	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행사 확대**
  · 실시간 방송 송출 및 콘텐츠 업로드 영상송출(4건), 실시간 시청자 수(944명) 참여
  ·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공익광고 SBS러브FM(33회), SBS파워FM(54회), BTN라디오(22회), SBS파워FM 특집방송(4건, 10회) 송출

- "나비새김" 캠페인 등 운영('23. 6. 15.~8. 15.)
  ·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 추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노인인권보호 약속 동참 1,192명 참여

- 전국민 신고앱 다운로드 활성화 캠페인
  · 일상생활 속에서 나비새김 로고를 찾아 캠페인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윙즈(Wings) 투어" 153명 참여
  · SNS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 의무를 다지는 "새김 윙즈(Wings)" 243명 참여

- 노인학대 예방 공익광고 제작, 송출 등 캠페인 홍보 실시

<노인학대 예방 공익광고 제작, 송출 등 캠페인 실적>

홍보내역	홍보상세	진행건수
SNS 홍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유튜브) 나비새김 캠페인송 스케치 영상 조회수	4,352
	- (유튜브) 홍보대사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영상 조회수	515
	- (유튜브) 2023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영상 조회수	390
	- (유튜브) 새김리플라이 협회장 영상 7종 조회수	1,065
	- (인스타그램)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및 이벤트 참여 안내(게시글)	12
	- (페이스북)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및 이벤트 참여 안내 게시글)	4
KTX 자막광고(추석)	- KTX 객실 내 노인학대 신고 홍보 노출 횟수	937,440
합계		943,778

- 경찰청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홍보 협력
  ·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신고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112,000부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연계 포스기 홍보
  · 전국 CU, GS25, 7-ELEVEN, C·SPACE, emart24 편의점 점포(약40,000곳) 내 포스기 홍보 송출
- 신신제약 기업 후원 연계 사업 진행
  · 학대 피해 어르신 대상 신신제약 통증케어키트 600개 지급

<나비새김 캠페인 기간 내 신고앱 다운로드 결과>

구글	애플	계
2,098	265	2,363

* '23. 6. 15.~8. 15. 기준

- **응급신고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시설 내 학대 사건 예방**
  · AI모니터링 상담 비즈콜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15개소) 시행, 어르신 436명, 모니터링 7,157건 진행
  · 재학대예방을 위한 Sefe-Zone 사후관리 강화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22개소)시행, 어르신 165명, ICT 총 179대 설치, 교육훈련 682명, 심리상담 2,029건 서비스제공
-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 연구**
  ·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 방법 고도화 및 전문 조사 인력양성 Lv0. 교육과정 71명 수료, Lv1. 교육과정 61명 수료, Lv2 교육과정 12명 수료, 보수교육 28명 수료, 핀포인트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 1회 진행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대응**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38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총 20개소 중 국비지원 시설 확대 18개소→19*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1개소, (쉼터)전남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국비지원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일자리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상담서비스	135,078	28,392
복지서비스 연계	19,234	1,738
법률서비스 연계	557	60
의료서비스 연계	1,456	273
보호서비스	1,857	-
정보제공 서비스	85,063	18,468
소계	**243,245**	**48,931**

구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노인	이용노인
식사제공	51544	1625
법률서비스 연계	29	-
의료서비스 연계	4821	21
상담서비스	10353	1135
프로그램	51503	1737
계	**66,747**	**2,781**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및 확보를 통해 예방 효과 확대 - 노인 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 · 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노인학대 사례집(가정편, 시설편), 각 1편 제작,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결정문 1편 제작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기관운영(1권), 사례개입(2권) 등 제작 · 노인학대 담당 공무원 대상 시설학대 개입 절차 교육 온라인 실무플랫폼, 4시간 교육 과정 시행 · 유관기관 공동 업무 매뉴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제작 · 유관기관 협력지원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개입 및 운영 질의(29건), 법률자문(12건), 언론보도 사례 개요 작성(28건) 실시 -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순 조사 거부, 방해, 거짓진술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 확보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시행(23.12.14)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매뉴얼 배포(1건), 피해노인 개입기술 배포(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 노력 ·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 운영 활성화: '23. 4.~5. 다운로드 건수 920건, '23. 6.~7. 다운로드 건수 2,786건으로 약 3배 증가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행사, 녹화 방송 송출 4건, 노인 학대 예방 공익광고 119회 송출 등 -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7.1% 감소) 예방 · ICT기기를 활용한 AI 상담 진행(436명, 7,157건 서비스 진행) 재학대 발생 Safe-Zone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기를 가정 내 설치(총 179대 설치 및 총682명 교육훈련, 2,029건 상담 서비스 제공)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접근성, 서비스제공 강화로 사후관리 대응 *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1개소, (쉼터)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1개소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분쟁사례 조정 등 피해노인 권리보장 강화 - 중앙상정심의소위원회 (9회·15건),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7회·14건) 심의를 통한 분쟁사례 조정 및 권리 보장 강화 - 현장조사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법안 마련(23.6.13)을 통해 조사 실효성 확보 마련 - 사례·판례, 매뉴얼 총 7권, 협력지원 총 69건, 공무원 온라인교육 과정 4시간 신설하여 실무 체계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공익광고)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송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KTX, 지상파 라디오 등)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의 근거에 따라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향후추진계획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신고 필요성 인식 제고 ○피해노인보호 및 학대행위자 대응(시설, 병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노인복지시설 내 생활 노인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3. 6. 시행) ○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교육 및 인권 보호 제공 - 노인복지생활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시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9,199	단년도사업	-	-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55	157	2	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단년도사업으로 과제완료

'23년 이행실적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지자체 배포('23.6)
-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4개소(99.9%) 설치 완료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활동
- 노인복지생활시설 인권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6개 시도 1,907개 시설 지정하여 목표 대비 69% 달성
- 인권교육(노인인권, 한 걸음 더 다가가다) 실시
  * 교육 모수(69만 명) 대비 95%(653,418명) 이수 및 교육만족도 4.18점
  * 학습지원 결과(민원대응) 기관전체 민원응대 91,039건 중 25,177건(27.7%) 노인인권교육 민원 차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인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수급자의 안전성 향상 ○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노인 인권 인식 제고 및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하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CCTV 실태점검 실시 계획('25~)
○ '25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건강정책과, 노인건강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및 사업 수행 지역 전국확대 추진
○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추진
- 대상자 발견으로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안과검진 등 실명예방사업 추진
○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건강관리				
(노인실명예방관리)	1,862	2,054	192	10.3
(노인무릎관절수술지원)	3,293	4,082	789	24.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본사업 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 시범사업 실시('23.12월~)
- 의료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시행*
  * 109개 시·군·구,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명 참여('23.12월 누적 기준)

○ 저소득 노인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노인 개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제외)
  * ('18.) 4,889명(7,718안) → ('19.) 5,429명(8,321안) → ('20.) 5,458명(8,334안) → ('21.) 4,968명(7,564안) → ('22.) 5,462명(7,295안) → ('23.) 4,706명(7,020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 지원
  * ('18.) 1,087명(1,659건) → ('19.) 1,722명(2,549건) → ('20.) 1,735명(2,537건) → ('21.) 1,705명(2,484건) → ('22.) 1,741명(2,491건) → ('23.) 1,555명(2,192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선 시범사업에서 환자 관리 방식 강화,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 의무화 등 추진하여 노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질 제고
○ 저소득 노인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인 삶의 질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3년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전년 대비 지원 건수 감소
  * (실명) ('22) 2,020백만원 → ('23) 1,862백만원
    (무릎) ('22) 2,992백만원 → ('23) 2,693백만원(데이터 구축비 600백만원 제외)

향후추진계획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24~)

○ '24년 관련 예산 증가로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목표
  * (실명) ('23) 1,862백만원 → ('24) 2,054백만원
    (무릎) ('23) 2,693백만원(데이터 구축비 600백만원 제외) → ('24) 4,082백만원

49	Ⅲ-5-④	단체 · 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노인지원과
과제목표	○ 단체 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주요내용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노인여가시설 중심으로 노인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 창출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 - 노인복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비 50%	2,350	2,385	35	1.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국 6,850개소에 7종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강좌 개발·보급

* **(신규확대)** '23년 목표 6,794개소 대비 100.1%달성, **(디지털 격차 해소)** 자체 교육교재 발간 및 찾아가는 스마트폰, 무인기기 사용법 등 교육 실시 및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 마련·보급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요 >

① 건강운동(체조·댄스교실, 웃음교실, 요가 등), ② 건강관리(건강검진, 한방치료, 방문간호 등), ③ 교육·상담(정보화, 어학, 노인상담 등), ④ 여가활동(음악, 바둑 등), ⑤ 권익증진(성교육, 학대 및 자살예방교육 등), ⑥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⑦ 공동작업장 운영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대회(우수기관 수상 및 우수사례 공유, '19.~'23 매년 8개 기관 수상['23년 장관상 3개, 대한노인회장 표창 5개] 및 '23년 우수직원 8명 수상 (장관상 8개)

○ 전국 232개 노인복지관에 115명의 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및 기자재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사업' 운영*,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81개소),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38명) 및 어르신 서포터즈(240명)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홍보·웰다잉 문화 확산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 연계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대상자·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노인 만족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노인여가 활성화) 노인복지관·경로당의 여가·건강프로그램확대

- (경로당 기능 강화) 다양한 교육·취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7종 프로그램을 확대한 경로당 ('24년 목표 신규 7,009개소)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개인별 사례관리형 서비스, 사회참여 교육 확대 및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 등 추진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주요내용	○ 1:1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 알선 강화 ○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복지·금융·간병 등 **장애요인 제거** ○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취업희망하는 장년층 모집**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민취업지원제도	1,225,455	942,515	△282,940	△23.1

*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연령과 무관하게 편성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중장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23년 60세 이상 장년층 0.7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전체 취업취약계층 지원은 29.9만명)
- 현장의견을 토대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등 보장성 강화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40만원 한도)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참여자 1,354명(장년층 포함 전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949회)
  * 사례관리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개최('23.11월)

○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선제 발굴, 고용서비스로 연계**

- 복지수급자(지자체), 범죄피해가구(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23년 서울시 등 40개 기관과 MOU체결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23년 60세 이상 장년층 0.6만명 취·창업**(전체 취업취약계층 취·창업은 16.1만명)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전체 취약계층) 중 17.1%가 부양가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수혜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참여자(전체 취약계층) 1.4만명 증가 * (22년) 28.5만명 → (23년) 29.9만명(증 1.4만명) ○ 취업상담·직업능력 향상·취업알선 등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확대·강화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 모집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금융위,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성실경영실패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금융-복지 연계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참여자 취업장애요인별, 역량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중('22~) -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국민연금 재정계산	90	-	△90	△10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임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5차 재정계산)**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재정전망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 발전방안 수립(~'23.10)

* 사용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재정계산위 22차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 22차례,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14차례 개최하여, 재정추계·제도개선방안 논의

○ **(종합운영계획)**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국회 제출**('23.10.)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5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체계 정립

- 재정추계 결과,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집 총 25종**(전체 5,621p)를 **함께 제출·대국민 공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후소득보장 강화,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발표** -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연금개혁은 노사관계,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쟁점이 얽힌 과제** -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국회 주도 사회적 합의 추진)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 연금개혁 논의 적극 지원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질적 수준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내실화
* '23년부터 '27년까지 공립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충

주요내용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지역(53개 시·군·구) 중심,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립 요양시설 단계적 확대
-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운영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수준 담보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관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노인요양시설 확충	54,765	21,711	△33,054	△60.4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40,091	18,582	△21,509	△53.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공립요양시설 7개소 신규 신축 지원
* ①충남 부여, ②전남 강진, ③서울 관악, ④대전 본청, ⑤경기 화성, ⑥경기 파주, ⑦경남 창원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제1판)」 지자체 배포('23.6)
- △지정갱신제 개요, △심사절차, △지정 심사기준 포함
*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제1판)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개최(3회, '23.6)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립요양시설 7개소 신규 신축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연구용역을 기초로 갱신 절차, 갱신 심사 대상군 분류, 갱신 심사 지표기준 등 갱신 심사 표준매뉴얼 검토 - 전문가·이해관계자(27인) 자문의견 수렴, 연구용역 최종보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건축비 예산지원 단가가 낮아 지방비 부담으로 신축 사업 지원신청 저조 * (예산지원 단가) 1,980천원/㎡, (조달청 노유자시설 3개년 평균 건축단가) 3,182천원/㎡

향후추진계획

○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립요양시설 53개소 확충
* ('23) 7개소, ('24) 8개소, ('25) 12개소, ('26) 13개소, ('27) 13개소

○ 지정갱신심사시기 도래('25.12)에 따른 지정갱신제 표준 매뉴얼 개정(제2판) 작성(~'24년 하반기)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갱신심사 기준 확립,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연계한 전산 구축 및 지자체 담당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25년 상반기)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지과

과제목표

○ 농지연금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통해 노후 생활 지원 대상 확대
-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품 지속 개발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 연장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홍보 채널 다양화

○ 기존 가입자 해지율 감소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존 상품 지급 방식 개선
-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 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관련예산

(농지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지연금(융자)	228,237	242,309	14,072	6.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3년 기준 **누적 가입 24,590건**을 기록하며 **목표 초과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홍보 어려움, 농가 소비 위축 등으로 신규 가입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제도개선**과 **홍보 강화** 등 노력의 결과 **신규 가입 회복 추세**

* 연도별 신규 가입 건수: ('19) 3,209건 → ('20) 2,606 → ('21) 2,080 → ('22) 2,253 → ('23) 2,882

○ **'23년도**는 **신규 가입 목표**(2,367건)을 **21.8% 초과**한 2,882건 신규 가입 달성 등 성과

< '23년 목표 대비 가입 실적 >

(건, %)	'22 실적(A)	'23 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C/A-1)
		목표(B)	실적(C)	달성률(C/B)	
누적 가입	21,708	24,075	24,590	102.1	13.3
신규 가입	2,530	2,367	2,882	121.8	13.9

□ '23년 본예산(2,282억원) 대비 **15.3% 증액**된 2,631억원을 **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

	□ '23 농지연금 상품 조건을 다양화하고 가입·변경 조건을 완화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 담보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 우대형 상품 도입** ○ **중도 상환 횟수 제한**(3년1회)을 **폐지**하여 **상환 부담 완화** ○ 만 63세부터 가입 가능한 **20년 기간형 상품 추가** ○ **담보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 추가 ○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60세→55세)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사업홍보** ○ 신문, 방송, SNS(네이버,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 유관기관을 활용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리플렛 발송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제도개선으로 **평균 월지급금 상향**('21: 95만원 → '22: 99 → '23: 103), 농촌지역 고령·은퇴농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23년 말 기준 24,590건(누적) 가입 및 1조 3,534억원 연금 지급 * (누적 가입건수) ('19) 14,492 → ('20) 17,098 → ('21) 19,178 → ('22.) 21,708 → ('23) 24,590 * (예산) ('19) 1,539억원 → ('20) 1,776 → ('21) 1,848 → ('22) 2,408 → ('23) 2,631 ⇒ 농지연금 지급을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 노후 생활 부족 자금**(연평균 12백만원)* **보전** * (출처) 2022년 농가 경제 조사 * **고령농 생활부족액**(12백만원) = 농가소비(28백만원) - 농가순소득(16백만원) ※ '22년 농가경제조사 70세 이상 농가기준 ** **연평균 농지연금 지급액**(12백만원) = 농지연금 평균 월지급액 103만원 ('23년말 기준 누적가입자)×12개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령·은퇴농 지원 강화 및 연금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담보농지 대상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관계부처(행안부) 협의 - 예산 범위 내 사업 규모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추진 - 은퇴직불금 연계 연금 상품 신설('24) 및 운영 활성화 ○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고령 농업인과 그 자녀 대상 타겟 홍보 추진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관련 절차 준수			
	주요내용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근로 개시 신고안내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불법고용이나 고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방문취업동포는 잦은 입출국으로 인해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 체류규모를 250천명으로 유지 ○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결정방식 변경('23.1.1~) -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 지정(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23.1.1~'23.12.31.) -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취업활동기간(3년, 재고용 1년 10월)을 확대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점검('23년) -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 * 점검대상 3,005개소 중 6,657건 위반 확인 → 시정지시 6,542건, 고용제한·취소 30건, 과태료 25건, 사법처리 5건(전용보험 미가입 4건, 연장근로제한 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포의 총 체류규모 유지정책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 규모를 250천명 이내로 유지하여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 * 외국국적 동포(H-2) 체류현황: '21년 125,453명 → '22년 105,567명 → '23년 103,981명 ○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 고용 또는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동포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불법고용 방지 및 고용절차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지속 ○ 내실있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개시 신고 등 고용절차 준수 인식 제고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체류관리과
	과제목표	○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동포의 국내 체류 관련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 위한 체류·사증 제도 개선 - 동포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을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허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동포의 미성년 자녀(F-1자격)의 체류기간을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허용 - 동포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동반(F-3) 체류자격을 허용하여, 주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5.동반(F-3) 대상에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추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선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용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출신 국가별 요구조건 폐지 및 장기적 관점에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일원화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 외국국적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시 동포중점 교육기관 선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동포중점운영기관 지정(40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맞춤형 과정 운영 -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동포를 위한 한국사회이해 기초(1,2) 과정 개설 및 교재 개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10,097	10,439	△342	△3.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동포중점운영기관 지정 및 동포중점반 운영 - 343개 운영기관 중 40개 동포중점운영기관 지정 - '23년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20개반 360명 교육참여 ○ 한국사회이해 기초(1,2) 부교재 및 교안 개발 완료('23.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포 중점반 및 맞춤형 과정 운영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사회통합지원 강화 ○ 한국사회이해 기초(1,2) 부교재 개발로, 동포 맞춤형 교육 확대 기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동포 맞춤형 과정 추가 개설 및 활성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규 지정('24. 12.) - 동포 밀집지역 중심으로 동포운영기관 확대 지정 ○ 한국사회이해 기초(1,2) 부교재 출간('24. 8.)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주요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입양기록물을 이관하여 공적관리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일원화 ○ 국외입양인 권익보호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모국방문, 멘토링 등 사후서비스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입양인 사후서비스지원)	(436)	(564)	(128)	(29.3)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입양기록물 조사 연구)	(-)	(623)	(623)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입양기록물의 공적관리, 입양정보공개청구 일원화 등 법적근거 마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3.7.18)

○ 입양기록물 이관 대비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예산반영('24년 623백만원)

○ 국외입양인을 위한 시민권취득 지원, 모국방문, 멘토링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 지원('23년 34개 단체, 37개 사업 지원)

○ 국외입양인의 가족찾기 서비스 제공, 친생부모 및 가족 간 상봉지원('23년 모국방문단 1,322명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기록물 공적관리 등 기반 마련 ○ 가족찾기 서비스, 모국방문, 모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실시('24.7~11)

○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 및 실적 모니터링(지속)

58	Ⅲ-6-⑤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주요내용	○ 외국인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 지속적 추가·보완 ○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의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 기여를 위한 노력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예산	'24.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62	16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선(안)」 관련 국가통계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23. 2. 24. ~ 3. 2.) - (조사주기 단축에 따라 항목별 조사연도 조정) 특성항목* 조사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한국어 능력'은 짝수 연도에서 매년, 고용 관련 항목은 홀수 연도, 체류실태 관련 항목은 짝수 연도로 조정 * (비전문취업·유학생) – (방문취업·재외동포) – (영주/귀화허가자) → (비전문취업·유학생) – (영주/귀화허가자·재외동포) - (조사항목 개선) (신설) 비전문취업 대상 특성항목 중 '구직비용' (삭제) 직장 내 외국인(귀화자) 비율, 이전 직장에서 동일 업종 여부, 담당 업무의 전문성 정도 등 - (특정 대상만의 조사항목을 모든 체류자격으로 확대)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대상 '직장 변경 희망, 직장 변경 이유' 등 특성 조사항목을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여 조사 ○ '23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3. 5. 14. ~ 5. 20.) - (대상) 2만 5천명 ('23. 5. 15. 기준 만 1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 2만명, 최근 5년 이내 귀화자 5천명) - (방법) 면접(귀화허가자, 동포, 비전문취업 등), 인터넷 조사(유학생 및 전문인력) - (예산) 16억 8,900만원 (법무부 1억 6,200만원, 통계청 15억 2,700만원) ○ '법무부 - 통계청' 업무협의회 ('23. 10. 5.) - (주요 내용) '23년 조사 실시 현황(응답률, 조사 불가 원인 등) 공유, '24년 특성항목 조사대상(재외동포) 조사표 항목 최종 확정, '23년 통계 결과 및 '24년 조사표 관련 향후 일정 공유 등 ○ '23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 ('23. 12. 18.) - '법무부 - 통계청' 공동 발표형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한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 ○ 「취업비자 총량제(시범사업)」 기초 통계자료 제공 등 외국인 고용 및 인력수급 정책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준비·실시 - 공동 작성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24. 2.) - 법무부 홍보 채널을 통한 '24년도 본조사 홍보 ('24. 5.) - '24년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24. 12.) ○ '23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24. 4.) - 체류 외국인의 가정·고용·경제·언어 등 한국생활 현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경제 등 관련 이민정책 수립 기여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 이민자 조기적응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재한외국인 대상 출입국 민원 및 체류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 제공 ○ 재정착난민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1,059	964	▽95	▽9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4,446	4,322	▽124	▽3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125	99	△26	△20.8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097	10,439	△34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및 교육 내실화
- 농·어촌 지역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23.4.~'23.11.)
- 조선업종 외국인력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23.5.)
-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및 마약류 확산에 따라 마약류 예방 강사 양성('23.8.) 및 예방 교육(시민교육) 실시('23.11.)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하는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23.12.)
-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연중)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재한외국인 출입국 민원 안내, 각종 생활정보 제공('23년 2,533,782건)
- 외부 공공기관 지자체 제3자 통역서비스(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21개 기관)
- 전자민원 신청절차 안내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재정착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
-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교육 등 실시
-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밀착형 멘토링 등을 통한 맞춤형 정착지원
-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 적응도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 실시('23. 9. ~ 11.)
- 재정착난민 제도 체계화 및 멘토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착난민 멘토단 간담회' 실시('23. 10.~11.)
- 정착지 다변화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연중)

* '23년 미얀마 등 12명 수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민자의 우리사회 조기 정착 및 적응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실시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21개 모국어 제공 출입국 체류 상담 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 ○ 재정착 난민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1345콜센터 운영 관련, 콜 응답률이 66%로 최근 유학생, 산업 인력 등 외국인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상담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로 서비스 제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방안 지속 추진 ○ 재정착 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지속 ○ 재한 외국인 대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지속

60	Ⅲ-6-⑦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민과 외국인·이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확대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주요내용	○ 국민과 외국인·이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개최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컨텐츠 제작 - ①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발간·배포, ② 세계인의 날 주제영상 제작·배포 등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수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세계인의 날 행사	3,113	3,100	△13	△0.418
▪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130	90	△40	△30.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 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3. 5. 19. (금), 법무부장관, 주한외교사절, 이민자 등 약 650명 참가 ※ 17개 소속 기관에서 자체 혹은 지자체 협업 방식의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병행 ○ (제10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23. 10. 29.(일), 이민자 및 국민 약 3,000명 참가 ○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이민자의 우수 정착 사례를 37건 발굴하여 사례집 제작·배포 ○ (제16회 세계인의 날 주제영상) 국민과 이민자의 상생 관련 영상 제작·배포 ○ (이민자·다문화 인식개선 홍보영상) 외국인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영상 2편 제작·배포 ○ (연구용역)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 수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세계인의 날 기념식, 한마음 걷기축제 등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증진 ○ 미담사례집, 인식개선 홍보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행사 관련 예산 감소에 따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행사 규모 축소

향후추진계획	○ 어울림의 장 확대 및 다양화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 외국인이 어우러지는 행사 개최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스포츠 활동, 문화 행사 등) ○ 이민자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외국인)이민자 멘토단, 이민자 네트워크 (국민)사회통합협의회 등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61	Ⅲ-6-⑧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4,641	7,934	3,293	7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전 지방관서에 지역협력·근로개선·산업안전 부서가 협업하여 '외국인력 체류관리TF' 전담 조직 설치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규모 확대 ('22년 3천여개 소→'23년 5,500개소)

○ 「농업 분야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기간 및 대상) '23.9월~12월,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6개소

- (조사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등

○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시행

- 사업주 신청에 대해 지방관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가점 부여 및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점검('23년)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숙소 등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점검대상 3,005개소 중 6,657건 위반 확인 → 시정지시 6,542건, 고용제한·취소 30건, 과태료 25건, 사법처리 5건(전용보험 미가입 4건, 연장근로제한 1건)

- 숙소실태조사(2,412개소)를 통해 냉·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 기숙사시설 기준 현장지도 및 불법가설건축물 적발시 허가취소·제한(30건) 등 엄정 조치

-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

* '21년 3,826개소 → '22년 10,107개소 → '23년 9,933개소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언어 및 상담지원

구분	합계 (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3자통화	번역상담 등
건수	406,443	353,618	11,180	39,572	2,073

○ 송출국 현지 EPS센터 등을 통한 휴면보험금(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

- 총 2,701건, 19억원(출국만기보험 302건, 8억원/귀국비용보험 2,399건, 11억원)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업장변경 제도개선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취업생활 적응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주 교육 지속 추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24~)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 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안 예산반영 노력 지속 - 상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담원 역량교육 내실화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지속적 제고 ○ 송출국 현지 EPS센터 등을 통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추진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합리적인 숙식비 공제 개선방안 마련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17.2) 하였으나 숙식비 징수 상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노사이견 지속 - 일부 사업주가 1실을 여러명이 사용케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여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 문제가 있어 공제 금액·기준 개선이 필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2.9월부터 노사정 실무자가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 통해 지침 개정 논의를 진행 ○ '23.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의결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 '23.11.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지방관서별로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방관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명시 · 사업주가 숙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 숙소비 산정근거 제시, 공동거주시 1/n, 가설건축물은 지역 월세 최저액 미만 등 권익보호협의회에서 마련 · 숙식비 징구 방식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범위 내, 임금에서 사전 공제시 동의, 분쟁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안내 · 기타 *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으로 사후정산 원칙, 근로기준법 기숙사 요건 준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사간에 분쟁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점검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다누리콜 센터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46,131	38,178	35.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 ~ '27) 수립('23.4월) * 4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32개 소과제, 72개 세과제로 구성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포털다누리(www.liveinkorea.kr),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 - 민간단체·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사이트 운영,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확대 등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 ('23년) 360,997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개인·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속 확대 * ('18) 152개소 → ('19) 183개소 → ('21) 203개소 → ('23) 207개소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이용자 : ('18년) 96,321명 → ('23년) 119,573명 - 다문화가족 진로설계 지원 사업 지속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다문화 친화적 사회 조성 -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 요소 점검·개선 연구를 통한 차별 해소 - 쉬운한국어로 쓴 한국생활안내 자료 배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23년 기초학습 지원 이용 연인원 : 145,371명, 진로설계 지원 이용 연인원 : 36,541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갈 예정 ○ 다문화 한부모·본국 귀환 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가구유형별·정착주기별 지원방안 마련 및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정착단계별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운영기관 확대(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주요내용	○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농촌문화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우리 농업·농촌 및 가족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333	717	△616	△4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추진**

가.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943명)하고, 영농 정착 의지가 강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1맞춤형 농업교육(548명)

- (기초) 기초 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 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1:1 맞춤형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실습 중심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업)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인, 청년여성농업인, 6차산업 우수농업인 등

- (다국어 책자 제작·배포) 농촌 결혼이민여성 출신국 비중이 높은 순으로 다국어 교육 기본교재와 농업·농촌 용어집 제작 배포

  · 기본교재를 5개 국어로 각각 제작·배포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알기 쉬운 농업·농촌 용어집을 6개 국어로 통합 제작·배포

  * 한글,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영어(교재), 일본어(용어집)

- (경진대회) 제4회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개 부문(우수 농업, 사회활동, 누리소통망(sns) 활용 부문) 총 9명(대상 3, 우수상 6)을 선발·시상하고, 부문별 수상 스토리 책자 제작·배포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워크숍 개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격려 및 네트워크 형성, 이민여성과 여성농업인 멘토들의 소통의 장 마련

  · 결혼이민여성 가정 「자두커플」의 농촌정착기와 농업 소득 사례 발표로 농업과 농촌정착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파

	나.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은 현장과정과 온라인(미래세대캠프) 과정으로 운영(767명) - (현장과정)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및 관계 향상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활동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 교육기간 : '23.6～8월, 다문화가족 간·지역사회 내 이해증진 및 농촌 문화·체험 등 527명 - (미래세대캠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후계 세대로 양성 · 온라인교육 : '23.8.7～8.8., 전국 농촌 다문화가정 자녀 및 지역 청소년(초·중·고교생) 200명 · 집합교육 : '23.8.17.～8.18., 농업·농촌 정책, 농생명 분야 진로탐색 등, 4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 정착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지원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실시를 통해 우수교육생 선발 및 시상 * 3개 부문(우수농업, 사회활동, SNS활용) 총 9명(대상 1, 우수 2) / 시상식 : '23.10.12. - 교육멘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멘토교육 및 멘토-멘티 간담회 실시 - 교육성과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 (현장과정)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교육, 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 (청소년캠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차세대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세대캠프 운영 * 온라인 및 집합교육 병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요구를 반영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 개편 추진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및 연말 워크숍을 통해 우수 교육생의 교류기회 확대 ○ 결혼이민여성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추진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주요내용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숙식 제공 및 구조, 출국,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186	192	6	3.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외국인 피해자 지원시설(1개소)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 (비상근 통역사)배치 등 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총 73명 대상으로 의료183건, 법률67건, 치료회복 프로그램 60건, 귀국지원 14건
- (지원성과) 취업 25명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3.12.31.기준)

인원 (명)	합계 (건)	현장긴급 구조	수사의뢰	수사지원			수사동행	소송지원	소년보호 재판	법률지원 상담	기 타
				소계	기소	피소					
19	67	4	·	·	·	4	·	3	2	·	15

* 기타 : 출입국 체류지원(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신용회복신청,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 지원시설에서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특성에 맞는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외국인지원시설 지속 운영 및 내실화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숙식 제공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법률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에 입소기간 상관없이 시설 거주 허용 및 자활 참여자지원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프로그램) 지원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모국어 상담, 무료 법률·의료 서비스 제공, 숙식· 주거지원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주요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7,760	7,961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5,939	6,230	291	4.7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운영)	1,335	1,379	44	3.2
(이주여성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76	-	△76	△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46,131	38,178	35.5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5,532	5,644	112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94.2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상담 서비스 제공(93,263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정책 홍보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복합적 가정 내 문제 상담 진행
* 상담건수 '22년 208,656건→'23년 211,196건, 3자통화 '22년 39,360건→ '23년 15,790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회복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 ○ 다누리콜센터-경찰서 간 협조체계 구축, 전담 경찰관과 연계한 폭력 관련 상황 공조 및 수사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관계기관 실무자 인권감수성 향상 및 촘촘한 지원망 연계 기반 강화
○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통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강화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과제목표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주요내용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학교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 확대			
	관련예산	2023년 특별교부금 15,830백만원 (공교육 집입 안내, 한국어 학급 운영)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법무부 정보 연계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안내 -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난민 자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연 2회 국내학교 진입 절차 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 외 14개 언어로 번역 제공(가족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380개소 5,760부 배포) ○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초·중등) '22년 424학급(278개교) → '23년 501학급(302개교) - (유치원) '22년 15학급(13개교) → '23년 24학급(18개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어려움 경감 ○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개정 및 현행화 추진 - '24년 개정 사항 현행화 및 배포 예정('25.02)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어학급 확대 추진 ○ 한국어학급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확대

68	Ⅲ-6-⑮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출입국심사과
	과제목표	○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내용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개정 - 중대범죄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등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살인, 마약,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에 대해 강화된 입국규제 적용 지속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 및 면제·해제 지속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강화된 입국규제를 적용하여 재입국 차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를 운영하여 동포 입국기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지속 추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인권침해방지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요내용	○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 ○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정책기반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524	291	△233	△44.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인신매매등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교육부총리)」 개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및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심의·확정('23.3.27)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개발·고시('23.3.27), 활용(1,432명 적용/55명 확인)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홍보광고 제작(30초)・ 유튜브 게시(243만회 조회), 가이드북(5천부), 리플릿(11개언어/16만부), 카드뉴스(4종) - 동영상 교육 교재 개발 및 나라배움터등 탑재·활용(법적의무교육 대상자 187,403명 이수) ○ 「중앙권익보호기관」내 민관합동 「사례판정위원회」구성・운영('23.9.4)/피해자확인서 발급(3건)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 설치·운영(중앙권익보호기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중심으로 피해상담, 신고접수, 사례판정, 구조지원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신고의무자 등 관련종사자 교육자료 개발 및 인신매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피해자 식별지표를 12개국 외국어로 번역 배포(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선원정책과
	과제목표	○ 선원직 기피현상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지속 증가하게 되어 이들의 인권보장,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60세 이상 선원 비중은 약 37%로 사회 일반 고령화율(약 26%)보다 높은 수준, 업종별로는 근해어선(54%) → 내항상선(53%) → 원양어선(29%) → 외항상선(19%) 순 ** (외국인선원 수) ('07) 9,916명 → ('14) 22,696명 → (23) 30,436명으로 현재 전체 선원 중 외국인선원 비중은 약 49.9% 수준			
	주요내용	○ 선원근로감독관 교육실시 ○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26년까지 한국인선원 수준으로 상향 ○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외국인 선원 인권 관련 선원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확대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 선원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인신매매 예방 지식 함양 * (일시/장소/참석자) '23.4.19~4.21/해양수산인재개발원/선원근로감독관 등 ○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52,385명 이수)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한국인선원의 85% 수준으로 상향 * ('22) 1,914,440원 → ('23) 2,114,494원(한국인 선원의 85%) ○ 선내 인권침해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 기관의 인권보호 시책 확인·공유(4.26./9.25./11.29.)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3.20~4.7/10.23~12.15)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송출국(인니) 정부와 지속 협력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선원노동인권교육을 '23년부터 의무화하여 선원 인권의식 제고 ○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기준 개선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주요 송출국(인니)과 협력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선원근로감독관 정기 직무교육 내용 지속 개발, 교육일수 확대(3일→5일) ○ 선원 노동인권교육 지속 실시 ○ '24년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한국인 선원의 90% 수준으로 상향 ○ 선내 인권침해예방 네트워크 지속 운영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외국인 선원 주요 송출국과 협력 지속 추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인권기획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확대			
	주요내용	○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 기회 부여 ○ 사건 기소 시, 사건처분결과 및 재판일시, 장소 등 통지 등 피해자 참여권 보장 조치 강화 ○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법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내실화 방안 마련('23. 6.) ○ KICS 기능 개선('23. 6.) - 구공판 처분(구공판이 포함된 처분) 시 피해자 문자통지 기본문구에 재판 절차 진술권 안내 문구 추가 - 타관이송 처분시 피해자 문자통지 기본 문구에 이송 청 표기 ○ 'KICS '피해자지원제도 안내 문자 발송'(안내문구 마련) 기능 적극 활용 일선 청 지시('23. 10.) ○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적극지원 협조 요청」 등 일선 청 업무지시를 통해 지원 대상 적극 발굴 독려('23. 11) ○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23. 12) - 생계비 등 지원금 상한 증액 및 지원 대상 확대 - 경제적 지원 신청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체계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KICS 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금 상한 증액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질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일선 검찰청, 유관기관, 타 관공서 등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또는 피해자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 지속 추진 ○ 피해자지원 분야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및 실질화 도모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3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요내용	○ 성착취, 노동착취,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 사건 엄정 처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적극 활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취업 빙자 외국인 여성 성매매유인 사범' 구속 기소(광주지검), '미얀마 한국인 감금 및 투자사기 강요 사범' 구속 기소(대구지검) 등 인신매매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인신매매범죄를 비롯한 중대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병과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확립 ○ 검찰 소속 전직원 대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온라인 교육 실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전국 일선청 전파 - (요지) ① 인신매매범죄 사건 송치 및 처분 등 수사·재판 단계별로 식별지표 적극 적용, ② 피해자로 식별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하여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적극 지원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적용 사례 : 총 10명(성매매, 노동착취 사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식별을 통한 피해자 지원 조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 추진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적극 활용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권리 및 보호·지원 안내 확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KICS 탑재** -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자체 식별지표를 개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성매매 등 피해정황이 있는 범죄에 대해 활용하도록 권고 ○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신설** - 범죄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공통 안내서 외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안내서를 신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피해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신규 개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에 대한 신규 교육을 개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경찰청	과・팀명	수사심사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 제공 - 피해자에게 적합한 보호·지원 제공과 신속한 피해자 식별을 위한 노력			
	주요내용	○ 신규 피해자지원단체와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지원 확대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을 통한 신속한 피해자 식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피해자 지원단체와 신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새로운 피해자 지원단체와 신규 업무협약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원의 다양화 * 해양경찰청-(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23. 7.) 간 피해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신매매등 피해자식별지표 활용을 통한 피해자 확인으로 신속한 보호·지원 제공 - 식별지표 사용으로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3명 식별 후 장애인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존 피해자지원단체 외 신규 지원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현장경찰관의 인신매매등 피해자식별지표 사용률 저조 - 피해자식별지표 사용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사용 독려 *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포함 현장경찰관 대상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교육 필요

향후추진계획	○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보호·지원 제공 - 피해자 초기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피해상담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 연간 1회 이상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하여 피해상담 능력 배양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과제목표	○ 이주배경아동의 공교육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 내실화 ○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주요내용	○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안내 문자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 ○「출입국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교원의 통보의무 면제사실 학교 및 유관기관에 안내 ○ 현장 수요에 맞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학생 재학 현황을 고려하여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하여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주배경가족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지속 강화 추진			
	관련예산	2023년 특별교부금 20,530백만원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액)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법무부 정보 연계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안내 -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난민 자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연 2회 국내학교 진입 절차 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 외 14개 언어로 번역 제공(가족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380개소 5,760부 배포)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코디네이터 채용하여 공교육 진입·정착 지원 및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초·중등) '22년 424학급(278개교) → '23년 302학급(501개교) - (유치원) '22년 15학급(13개교) → '23년 24학급(18개교) ○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징검다리 과정) 초·중학교 입학예정 이주배경가정 자녀 대상 사전 준비교육 운영('23년, 67개교 794명)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23년, 529개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이해도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이주배경학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개정 및 현행화 추진 - '24년 개정 사항 현행화 및 배포 예정('25.02)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어학급 확대 추진 ○ 한국어학급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확대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 이주배경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2105587, 정부) 1소위 상정('23. 8. 31., 11. 15., 12. 18.) - 타 법령에서의 보호 정도를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범주를 명확히 한 법무부 수정안 제출 * ❶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❷영주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 통과('24. 5. 7.) - 정부안(2105587)과 서일준 의원안(2107002)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 위원회 대안의 내용은 법무부 제출 수정안과 동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29.)

향후추진계획	○ 22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 발의('24. 6. 17.)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2200541, 서영교) ○ 향후 국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논의 시 적극 협력하겠음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체류·의료·법률지원 등 기본권 보장 필요			
주요내용	○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서·학업·법률서비스 등 제공 ○ 취·창업 교육 진행 등을 통한 귀환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마련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46,131	38,178	35.4
국외다문화가족 지원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한-베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상담
- 총 상담건수 : 640건, 550명
- 상담방법 : 내담/ 전화/ 온라인상담/ 화상면담

○ 한-베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운영
- 한국어교실 319명 참석

○ 베트남 북부지역 귀환결혼이민 당사자 조직 구성
- 자조모임 291명 참여

○ 귀환결혼이민자 자립지원을 위한 취창업교육 추진
- 취창업교육 149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베다문화가정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법률지원 ○ 한-베자녀와 결혼이민자 및 한-베가족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귀환결혼이민자 취창업 자립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베트남 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한-베가족의 자녀를 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귀환 결혼이민자 발굴 및 정책지원 수요실태조사 추진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난민심의과

과제목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난민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난민제도 개선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용
○ 국가정황정보 고도화

주요내용

○ 난민심사 인력 확충,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법령 제·개정 및 난민 제도개선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난민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난민심사 역량 강화	16	16	-	-
(난민심사관 교육)	9	9	-	-
(직무교육 교재 발간)	7	7	-	-
(난민통역 평가)	40	40	-	-
▪ 난민통역인증제 등 위탁	158	158	-	-
(난민통역 인증제)	80	80	-	-
(난민통역인 교육)	78	78	-	-
▪ 난민위원회 운영	38	38	-	-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	192	192	-	-
▪ 국가정황정보 전담기관 업무협의	-	17	신규	신규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5개 언어 148명 난민전문통역인 신규 위촉('23. 1.)
-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교육(6회)* 실시
  * 총 162명 교육(3월 32명, 4월 29명, 6월 10명, 8월 19명, 9월 40명, 12월 32명)
- 난민(전문)통역인 대상 통역능력평가(4회) 및 보수교육(2회)** 실시
  ** 총 200명 교육(6월 117명, 9월 83명)

○ 난민법령 제·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활동
-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을 개정하여 통역비를 인상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 처우 개선('23. 5.)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접수증 등 서식의 안내사항 추가, 오기 정정 등('23. 12.)
- 근거리 통역인 부재,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안정적 난민심사를 제공하고자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정·배포('23. 12.)
-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국가안보 관련 「난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3. 12.)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난민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23. 2.)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아동편' 제정('23. 4.) 및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4회)

	* '아동 심사'('23. 2.), '인도적 체류'('23. 8.), '난민소송 패소사례'('23. 9.), '환경변화에 따른 강제이주'('23.12.) - 난민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서 추가(6개 언어→22개 언어) 번역 완료('23. 12.) - 법무부-UNHCR 난민조사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2회*) * 초급 과정('23. 7.), 심화 과정('23. 12.)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 등에 대한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실시('23. 8.)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사업 실시('23. 12.) ※ 미국 국무부, 호주 외교통상부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가보고서 등 38건 번역·감수 -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배포(4회)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을 통한 민간 전문 통역인 확보 ○ 난민법령 제·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활동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통역수당을 인상하여 난민통역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훈령(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개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제도 개선 - 면접기법 교육, 워크숍 등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한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보장 - 난민 통역인의 통역능력 평가 및 교육 등을 통해 난민통역의 대외 신뢰도 제고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심사 체계 마련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난민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 다국어 번역본 제공 확대 등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제정,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 전문성 강화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 난민신청자 출신국에 대한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배포,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사업 추진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통해 난민담당자의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가안보 등 난민법령 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정식 도입 ○ 난민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본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주변국 정세 불안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 전문인력 충원 및 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
과제목표	○ 난민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난민 등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433	481	△52	△12.1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57	59	△2	△3.5
(난민교육비)	106	106	-	-
(난민신청자 구호 및 교정비)	270	216	△54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난민 등 정착 지원 강화
- 난민신청자 처우 제도(생계비, 취업, 주거, 의료비, 교육 등)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23. 1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한국어 수업 등 정착 지원(연중)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홍보 등을 위해 리플릿 제작·배포('23. 6.)

○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정비
- 참전용사 후손 등으로 확인되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기간에 따라 생계유지 요건 완화('23. 12.)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난민 지원체계 구축('23. 3., 9.)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인천중구 가족센터(3.10.),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시흥시 센트럴병원(9. 1.)
- 난민인정자 처우 관련,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및 협업방안 마련을 위한 '난민처우협의회' 개최('23. 7.)
- 국제적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지속적 협력
- 난민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지속적 협력

○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세계난민의 날 기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23. 6.)
- 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대사전)에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 추가 등재('23. 8.)
- 난민정책 시행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난민정책 뉴스레터' 분기별 배포('23. 9.)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주자격 변경 요건 정비를 통해 난민인정자의 안정적 국내정착 환경 조성 ○ 국내외 관련 단체,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조속한 한국사회 정착 지원
-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

○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익 기여 및 난민 인식개선 제고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화			
주요내용	○ 정책추진 환경 변화를 고려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정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5,987	△335	△2.1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0,981	18,757	△2,224	△1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보호기간 탄력적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거주지 보호 기간)**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센터 위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변보호기간 재실시)**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 운용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 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가능

* ① 법률 제19947호, 2023.12월 외통위 통과, 2024. 1. 9. 공포, 7. 10. 시행, ② 법률 제20185호, 2023.12월 외통위 통과, 2024. 2. 6. 공포, 8. 7. 시행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정착기본금을 지속 증액 추진,「**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발령('23.12.19.) 및 시행('24.1.1.))

- '23년부터 세대별 정착기본금 각 100만원(8백→9백만원), '24년에는기본금 100만원 추가 인상*하여 정착기본금 1천만원 시대(1인세대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률 개정 2회('24.1.9 및 '24.2.6 공포), 예규 개정 1회('23.12.19 발령)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정착금 인상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 후속조치 등 정착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탈북민 피보호의사 확인, △제3국·국내 출생자녀 대상 교육지원 확대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예정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 · 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일자리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사항인 만큼, 일자리 창출로 탈북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탈북민 삶의 질을 개선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운영	37,061	36,273	△788	△2.1
(자립·자활 지원)	4,384	4,510	126	2.8
(정착금 등(미래행복통장) 지급)	12,957	11,808	△1,149	△8.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일자리성공패키지)**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직업탐색 및 준비과정을 거쳐,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취업클리닉 250명, △스피치 교육 161명, △일 체험 136명, △취업박람회 등 105명 참여

○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 등 기창업자 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자 사업화 지원, 1:1 컨설팅 전문가 지원단 운영 등

구분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자원	신규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
		생활밀착형	아산상회		
창업지원 실적(명)	298명(6.5억)	6건(51.5백만원)	2건(14백만원)	319회	358명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해, 농진청·지자체와 협업하여 단계별 영·귀농 지원(29명 귀농창업)

○ **(취업지원)** 진로설계, 구인·구직 등록, 동행면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	알선	동행면접	대면상담	전화상담
취업지원 실적(건)	1,544	1,818	1,240	1,597	469	6,007	13,779

○ **(교육·훈련)** 채용연계 단기 연수 프로그램 및 직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단기연수)** 직무경험 축적을 통한 채용확대를 위해 단기연수프로그램 지원(142개 기업, 167명 지원, 94명 채용)
- **(직업역량강화)**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취업연계 심화 직업훈련 과정 △전문직 양성과정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심화 직업교육 실시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취업연계 직업훈련	전문직 양성과정
421명(494과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기반 공공기관 취업전략,모의면접(20명)	7개 과정 56명 교육 진행 중	56명

* 취업바우처 :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 형식의 교육비 지원(만18세~59세)

* 재북·재남 경력 활용,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실기실습처 지원(간호사, 소방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등)

○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만기 수혜자 증가를 통한 탈북민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 기여

- 안정적 사업 운영을 통해 만기 수혜자 증가(*만기 수혜자 수 : '18년 17명→ '19년 49명→'20년 169명→ '21년 398명→ '22년 433명 →'23년 415명)

○ **(일자리박람회)**「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12.1.,코엑스), △기업 채용, △취업 지원 △공공기관 홍보 및 채용계획 설명 등,

- 24개 공공기관 포함 139개 기업 참여, 탈북민 1,248명 참여 및 2,900여건 상담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중심의 사업 추진 및 양적·질적 확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 -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및 만기 수혜자 증가 등 - '14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구인-구직자 매칭 기회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 채용기업 세액공제,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 후속조치 추진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주요내용	○ 거주지 초기 정착지원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5,987	△335	△2.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128	7,228	100	1.4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549	3,337	△212	△5.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남북통합문화센터,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 '23년 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북한이탈주민 8,500여 명

-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남북생애나눔대화 △센터 자원봉사단 2기 활동 등)
- 탈북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발굴·확산 병행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제적 위기발굴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23.12.)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자체 위기지표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상시 관리('22년 1,200명, '23년 6,000명) 및 적시 위기 포착
-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사업(유제품 배송) 추진(562명)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생계곤란, 질병보유 등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선정) 63명 지원

○ 하나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지속 추진

- 지역적응지원(9개 분야)을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으로 통합·개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 전입 초기 위주의 지역적응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애기간 전반에 대해 통합적·포괄적·위기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성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 '23년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43,798건 서비스지원 55,671건 등 총 99,469건 지원

-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4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개정(~'23.12.)

* 초기집중교육 대상자로 비보호북한이탈주민 포함

○ 거주지 적응 지원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담당자 워크숍' 개최('23.2.21.)를 통해 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 △지역협의회 지침 개정 안내 △지자체 내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역할 토의 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23.3.) ▪ 참석수당 지급 기준 명확하게 규정, 회의비로만 사용되던 예산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등 * 지역협의회 총 230회 개최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을 기획·시행하여 거주지 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으며,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 ** △국고조금 500백만원중 426백만원 집행(85.4%), '22년 대비 집행률 27.9% 증가 △'23년 지역협의회 1개 소 추가 설립(전남 영암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지역협의회 활성화 도모 * '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3년 실적 평가) 항목은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 서비스 제공·연계한 통합안전지원 실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선제적 위기대응)**「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개발, 복지부 위기정보 연계 위기의심 상시관리 대상 발굴 및 지원 ○ **(하나센터 역량 강화)**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으로 통합·개편,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개정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 체계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현장 중심 통합안전지원 강화 위해 유관기관간 협업사업 확대 - 통일부-복지부 간 탈북민 위기정보 공유 지속 확대를 통해 신속한 위기대응 토대 마련 - △고령 독거가구 안심돌봄 시범사업 확대('25~)등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가정보원	과·팀명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신속한 조사, 조사종료 후 하나원 이동 대기기간 단축 등 임시보호기간을 법정시한(90일)보다 단축하도록 실질적 추진 * ('18.2)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을 개정,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조사 전·후 면담 등을 통해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외국제도 연구용역, 인권보호관의 정책·제도개선 자문,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체계 지속 개선			
	관련예산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조사·임시보호기간 최소화 - 신속한 조사로 탈북민 조사·임시보호기간 단축(평균 60일 내외) ○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생활실 방문 등을 통한 탈북민 상담 확대(2022년 129건 → 2023년 349건)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외국제도 연구용역 시행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를 통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속한 조사로 실질적인 탈북민 임시보호기간 단축 ○ 탈북민이 변호사로부터 인권·법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제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임시보호 체계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탈북민 입국자 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비 필요

향후추진계획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친화적 조사·생활환경 조성 지속 추진 ○ 탈북민 입국자 수 변동에 따른 조사·임시보호 관련 대책 점검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과제목표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탈북학생의 역량 강화 및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			
	주요내용	○ 담임·교과교사 1:1 멘토링, 성장 멘토링,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지속 실시 ○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 등을 통해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학부모 교육 내실화 ○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적응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지원			
	관련예산	○ 2023년 특별교부금 2,844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과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멘토링 실시 -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55명)의 안정적 적응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전·현직교원이 2년 이상 장기멘토링 진행 - (심리상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학생(80명) 대상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학부모 27명)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진로 코칭 - 진로진학 지도 참고자료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진로상담(58회) 실시 ○ 탈북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탈북학생(24명) 대상 진로희망분야 전문가 멘토 1:1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학생이 놓일 수 있는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 탈북학생이 소수 재학하는 학교를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 및 장기 멘토링 운영 - 위기에 놓인 탈북학생 대상 신속하고 전문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담팀(돋움지원팀) 운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 대상 교육 지원 방안 마련 ○ 현장의 심리상담지원 요구 확대에 따른 가족상담 및 심리상담 예산 및 사업 확대 ○ 탈북학생 지원하는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제고			
주요내용	○ 탈북청소년 부적응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비대학 및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 일반학교 학업중단율이 높은 점을 고려,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노력(통일전담교육사 등) -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증가에 대응, 특성화·대안학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학교 지원_인가 대안학교(5)〕	4,827	4,827	-	-
▪ 청소년 교육기관 지원 〔대안교육기관(6)+방과후공부방(7)〕	1,330	1,330	-	-
▪ 공동생활시설(그룹홈 19개소) 운영지원	610	61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영어교육·학습멘토링 등 교육지원, 정규학교 진학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강화, 탈북청소년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대안학교 운영지원 강화
-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 2,068백만원, 인가 4개 학교(여명, 하늘꿈, 드림, 장대현) 2,759백만원 지원

○ 일반학교 재학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초·중 23개교 20명 배치, 400명), 방문학습지(월평균 1,097명), 화상영어교육(월평균 127명) 지원

○ 맞춤형 멘토링 지속, 진로진학 지도, 통일미래인재육성사업 등 탈북대학생 학습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

○ 탈북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속 지원 △방과후공부방(7개) △대안교육시설(6개) △그룹홈(19개)

○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대학진학과 대입 준비 지원
- 대학 학비지원(203대학, 1,680명 대상 46억), 진로진학지원단을 구성 및 온라인 맞춤형 상담, 특별전형 입시자료집 및 입시핸드폰(요약본) 제작・배포

○ 제3국 및 남한 출생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확충
- 제3국 출생 대상 양육가산금 증액(1인 400만원 → 450만원), 이중언어강사 배치, 맞춤형 교육교재 등
- 남한 출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겨레중고등학교 입학 기회 제공

○ 탈북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리 제도 정비
- 보호자・후견인 선정절차 및 관련 원칙 법제화, 연락체계 재정비, 생활실태 전수조사('23.8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존 성장 멘토링 운영을 비롯해 찾아가는 진로상담, 담당교원 연구 등 멘토링 역량강화 노력 병행 ○ 탈북청소년 대다수는 일반 학교에 재학,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등을 통해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탈북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멘토링 확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4.6.27.~8.6.) 중
- △'제3국 출생자녀' 교육지원(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한국문화와 언어 등) 근거 마련 및 학력인정 절차 규정신설 △탈북민 자녀의 양육(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무연고청소년 등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2.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이행상황 종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0	2	18	0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7	1	6	-	
2.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4	1	3	-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4	-	4	-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5	-	5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1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추진중
2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중
3	Ⅳ-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추진중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추진중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일부완료**
6	Ⅳ-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추진중
7	Ⅳ-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추진중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추진중
9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일부완료**
10	Ⅳ-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추진중
11	Ⅳ-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추진중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추진중
13	Ⅳ-3-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추진중
14	Ⅳ-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추진중
15	Ⅳ-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추진중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추진중
17	Ⅳ-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추진중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추진중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추진중
20	Ⅳ-4-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팀명	디지털전략팀
과제목표	○ 디지털 심화시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 제시			
주요내용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기존의 규범체계,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 제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	3,800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	1,000	-	-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	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국무회의 보고('23.5.2)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대학 총장, 주요 학회장, 기업CEO, 청년세대(MZ) 등 간담회 개최('23.7.27, '23.8.8, '23.8.18, '23.8.25, '23.9.1)
- 각계의 사회적 논의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국무회의 보고, '23.9.25)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국무회의 보고, '23.9.25)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상시)

* 이행점검(분기별), 집중 사회적 공론화(6월~), 부처 합동 정책연구(7월~12월, 복지부·고용부·여가부), 실태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연말)

○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네트워크* 구축('24)

* ▲(글로벌 논의체) OECD ▲(디지털 권리) 英 옥스퍼드대·Demos ▲(디지털 쟁점·사례) 加 UBC·토론토대

2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전략팀
과제목표	○ 디지털 심화시대에 개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디지털 정책 수립 추진			
주요내용	○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고, 디지털 심화시대의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26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	3,800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	1,000	-	-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	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국무회의 보고, '23.9.25)

○ 디지털 심화시대의 범정부 대응현황을 분석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및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과기정통부를 비롯 기재·교육 등 26개 부·처·청 합동('23.10.30~12.29)

**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23.11.16~12.13)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회의 총3회 개최('23.10.30 '24.1.30 '24.4.3)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통한 디지털 심화시대의 기본권 보장 및 혁신 동력 확보 -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부처 협의('24.1.30, '24.4.3)를 거쳐 20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 과제 선별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상시)

* 이행점검(분기별), 집중 사회적 공론화(6월~), 부처 합동 정책연구(7월~12월, 복지부·고용부·여가부), 실태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연말)

○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네트워크* 구축('24)

* ▲(글로벌 논의체) OECD ▲(디지털 권리) 英 옥스퍼드대·Demos ▲(디지털 쟁점·사례) 加 UBC·토론토대

3	Ⅳ-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추진			
주요내용	○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전 국민의 성숙한 디지털윤리 의식과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간 21만 명 이상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3.~'27.) - 디지털 윤리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연계 대국민 행사 개최('23.~'27.)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디지털윤리 교육)	5,224	5,224	-	-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941	889	△52	△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윤리 교육)**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디지털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30.1만명)

※ 기술 발전(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및 수요층 변화(직장인, 가족 등)를 교육 추진에 반영

○ **(대국민 인식 제고)**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 활동 추진

- **(국민참여형 캠페인)** 창작콘텐츠 공모전(6.1.~10.6.), 디지털윤리 주간*(8.28.~9.3.), 디지털윤리대전(유공포상, 12.15.)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전국 6개 체험관, 피서지(해운대), 업무지구(광화문, 여의도) 등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윤리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디지털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6개소(부산·광주·경기·대전·서울·전북) 체험관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 국민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 - 교육 수혜자 대상 만족도 90.1점, 청소년 교육 전/후 디지털윤리 의식개선도 11.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계속)

- 인공지능의 건전한 활용과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주제를 확대하고 실습형 교육으로 수혜자의 교육 효과성 제고

○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추진(계속)

-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및 디지털윤리 주간, 창작콘텐츠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개최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 · 제도 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팀명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목표	○ AI 윤리·신뢰성 실천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AI를 윤리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			
주요내용	○ AI 제품, 서비스 기획·운영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의 분야별 확산 ○ AI 기반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로서 'AI 윤리영향평가' 시행 -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 10대 핵심요건에 대한 AI 제품·서비스 영향평가			
관련예산	(정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정진)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 신뢰성 기반조성(AI 윤리체계 마련)	900	-	△900	순감
▪ (일반)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AI 윤리 확산 기반조성)	-	500	50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기업의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채용 분야 특화 점검표 개발
- 채용 분야 현장 적용 컨설팅 진행 및 기업 윤리점검표 개발 지원(1건*)
  * 제네시스랩 AI 채용 솔루션 윤리점검표
- 실제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채용 분야 특화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마련(1건*)
  * ('22) 챗봇, 작문, 영상 + ('23) 채용 분야

○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목적	- AI 윤리·신뢰성 실천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AI를 윤리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 - AI 제품·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제도·정책적 조치 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 - AI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기업, 시민사회, 학계, 공공(정부) 등에 제공하고, AI 제품·서비스를 보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배포·활용하도록 장려
평가주체	- 정부 (평가 과정에 산·관·학·연 평가위원단,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평가대상	- AI 제품·서비스군
평가요소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에 대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영향 - 윤리·신뢰성 측면에서 AI 제품·서비스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 적용 가능한 긍정적 영향 촉진 전략 및 부정적 영향 완화 전략
체계	평가대상 선정 (과기정통부·KISDI) ⇨ 기초 분석 (KISDI·전문가 워킹그룹) ⇨ 영향 평가 (평가위원단·국민포럼단·KISDI) ⇨ 제언·보고서 작성 (평가위원단·KISDI)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윤리지침 마련을 지원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AI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뢰확보 및 수용성 제고에 기여 ○ AI 윤리영향평가는 지표가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핵심요건으로 '인권보장'을 포함 - AI 제품·서비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제도·정책적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AI 윤리영향평가 시범 시행('24)
- 평가 결과는 초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4.11)과정을 거쳐 최종 공개 예정('25)

○ AI 윤리 자율점검표의 분야별 확산 지속 추진('24)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인공지능이용자보호대응팀
과제목표	○ 편향적·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생성·유통을 방지하고 알고리즘이선별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추구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월)			
주요내용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에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100	830	△270	△24.5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570	470	△10	△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이용자패널조사 내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 책무' 문항을 편성하여 서비스 제공자 책무에 대한 패널(이용자) 인식을 조사·분석

- 이용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지녀야 할 책무(투명성, 공정성)를 세부문항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 책무'에 대한 이용자 인식변화 분석(22년과 23년 수치 비교)

* 추천 서비스에 대한 **알권리**(콘텐츠 선별기준 등 관련정보 공개), 다양한 **선택권**(정보 수정·삭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 개요(조사결과는 보도자료('24.6.20)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

- □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2년 10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가구원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 □ (표본 수) 2,777 가구, 4,581 가구원(22년 패널인 3,184 가구, 5,378 가구원 추적조사)
- □ (조사 방법)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 □ (조사 주기) 1년
- □ (조사 기간) '23년 10월 1주 ~ '23년 12월 1주(총 9주)

결과분석

추진성과	○ 패널(이용자) 대부분이 작년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책무*가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됨 * 추천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의 선별기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콘텐츠 제작자가 인간 혹인 인공지능인지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제작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등 11가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장기적으로 분석(시계열 분석)

- '24년도 패널조사 추진 시에도 '인공지능 추천서비스 제공자 책무' 문항을 포함
- 인식 변화가 발생한 시점(변곡점)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맥락 조사를 통해 변화 원인 분석 실시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팀명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목표	○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주요내용	○ 메타버스 기업 약관·가이드라인 등에 실천윤리 핵심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 지원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가능한 실천윤리 보급·확산			
	관련예산	(방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VR·AR콘텐츠 산업육성 (VR·AR콘텐츠 개발지원)	180	150	△30	△16.67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원칙을 구체화한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23.12.27) - 기본조항 40조 및 공급·창작·이용 각 40조 등 총 160개 조항으로 구성 ○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교육영상 15종 및 교육자료 13종을 비롯한 개발자와 운영자 교육자료 등 개발 및 보급·확산 - 실감교육 콘텐츠 현장 체험 운영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초중고·대학·학부모 대상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실시(3,500명)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특임장관 면담(4월),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 면담(6월), OECD 글로벌 기술포럼(6월), 스위스대사관 XR위크(9월) 등에서 윤리원칙 소개·공유 - 이노베이션스퀘어, SW·AI역량강화 등 19개 국내 유관사업, OECD 38개 공관(2월), 해외 9개국 539개 산·학·기관에 윤리원칙 배포 - 영역별 주체별 실천윤리 이슈별 경험 유무와 인식수준 조사 등 추진을 통해 실제 적용 및 준수 여부 등 검토 ○ 메타버스 자율규제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현황 공유 및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 이행방안 논의('23.10.25)

결과분석	추진성과	○ 메타버스 활용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메타버스 윤리 제시 및 보급·확산 -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보급·확산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 문화를 활성화하고, 메타버스에서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 추진에 기여 -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정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 · 팀명	인공지능이용자보호대응팀
	과제목표	○ 메타버스 서비스의 다방향적·입체적 소통 방식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해소를 통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주요내용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및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 제시 -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기본원칙 이행 점검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수립·공개 - 이해관계자 및 주요사업자 의견 수렴('23.11월) *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구성·운영('22년) ○ **(모니터링)**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기본원칙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준수 여부 조사를 위한 대상 사업자 리스트업 및 설문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6가지 원칙 및 자율적인 사업자 실천규범(안) 제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이행 실태 조사('24.9월~) ○ 메타버스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25~)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 · 팀명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제목표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주요내용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연구를 추진하여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처리유형 및 침해요인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 도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정책연구 추진('23.5.~12월)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방안, 개인정보 보호 범위 및 침해 요인 등 분석 ○ 메타버스 실천윤리 마련 지원 -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실천윤리(안) 마련(민관 TF, 민관간담회, 실무조정회의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메타버스 실천윤리 내 "개인정보 보호" 기본조항 마련 -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영역주체별(공급, 창작, 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체적인 행동양식 적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없음

6	Ⅳ-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주요내용	○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계속),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유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	-	-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	80	80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포털 뉴스·동영상 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알고리즘, 제평위 운영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일정 기준의 포털사에 대해 제평위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23.11월)

○ 디지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자율기구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 대외 공개('23.5월)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23.11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플랫폼 자율규제의 목적과 법적 근거 규정, 정부가 자율규제 촉진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3.11.16.) 폐기

향후추진계획

○ 제22대 국회에 재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4.6.28, 정부발의) 입법 지원(계속)

7	Ⅳ-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유엔 차원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유사입장국과 '신기술과 인권' 분야 협력 확대 ○ 디지털 인권 보호 관련 국제 거버넌스 형성 논의 적극 기여			
	주요내용	○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 지속 주도 ○ '신기술과 인권' 분야 결의안·선언문 등 적극 참여, 다자무대 논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증진 강조 ○ 온라인 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등 소다자협의체 논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53차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여 컨센서스 채택(7.14) -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권 증진을 강조하고 관련 원칙들(투명성 증진, 비차별 보장, 인권 영향 평가 도입 등)에 대한 인권이사회 공통의 인식 도출 ○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 ▲"기술표준 수립 절차와 인권의 관계" 제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전문가협의 참석(2.15.) ▲제52차 인권이사회 계기 "대테러리즘과 신기술" 제하 부대행사 공동주최(3.16)" ▲"신기술과 민주주의, 인권" 제하 제9회 글리옹 인권 대화 개최(5.25-26) ▲제53차 인권이사회 계기 "기술표준 설정절차와 인권" 관련 부대행사 공동개최(7.7), "AI와 인권" 관련 부대행사 공동후원(7.12) ▲제54차 인권이사회 계기 '디지털 국경 거버넌스' 제하 부대행사 공동후원(9.18) ▲영국 Wilton Park 주관 '인권과 신기술' 회의(11.29-12.1) 참석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고위급 행사 계기 '신기술과 인권' 라운드테이블(12.12.) 참석 ○ '신기술과 인권' 관련 결의 및 공동발언 참여 - ▲제52차 인권이사회 일반토의 계기 신기술과 인권 공동발언(3.17) ▲제53차 인권이사회 건강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 계기 신기술과 건강 관련 공동발언(6.22) ▲제54차 인권이사회 계기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권' 결의 공동제안국(10.12), 사이버폭력 패널토의 계기 공동발언(9.27) ▲제78차 유엔 총회 3위원회 '디지털 기술 맥락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결의 공동제안국(11.14) ○ 온라인상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회원국 가입(8월) - ▲제54차 인권이사회 계기 '감시기술 위험 및 안전장치 중요성' 관련 공동발언(10.4) ▲'인터넷 차단과 선거' 관련 공동성명(10.10.) ▲FOC 전략조정회의(11.14-15)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사회 내 '신기술과 인권' 관련 담론 형성 및 발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인권이사회 내 '신기술과 인권' 결의 지속 주도 ○ 인권이사회 및 총회 등 계기 신기술 관련 논의 적극 동참 ○ 온라인자유연대(FOC) 등 소다자협의체 적극 참여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필요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주요내용

○ (배움터 운영)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인프라 공간을 활용 기반의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 도서·산간지역을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에듀버스', 키오스크·VR기기 등 디지털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디지털체험존' 등 현장 체감형 교육 운영

-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등 수준별 교육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 생애·계층·지역별 애로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 수준별 디지털교육 예시 >

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디지털 기초	**디지털을 알고, 친숙**해지기	온라인계정 생성, 앱스토어 등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 교육
디지털 생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익히기	키오스크, 모바일 교통,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예: 지원금 신청, 정부24) 등
디지털 심화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익히기	AI, 기초코딩, 앱개발, 피지컬컴퓨팅, 데이터 등
디지털 특별	디지털 기반 신기술 체험하기	신기술 체험(예: 3D프린팅, 드론), 가족과 함께하는 SW·AI체험, 분야별 전문가 강연 등

○ (온라인플랫폼)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플랫폼(디지털배움터.kr)을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디지털 역량교육 장소 및 커리큘럼 정보, 디지털역량 자가진단 조사 등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디지털배움터 운영)	69,840	(사업이관)*		
▪ 디지털역량강화교육 (디지털배움터 운영)	-	27,936		

* `24년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이관 및 지특회계로 변경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집합, 실시간 온라인, 에듀버스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제공하여 ‘23년 99.6만명 교육 - 엑셀, 한글 등 사무관련 교육이 아닌 키오스크·모바일 등 실생활 관련 교육을 위주로 제공하여 학습 만족도 매우만족(96점) 수준 유지 - 전국 1,0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였으며, 민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과 보안 주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발굴 및 추진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체험존 240개소 및 온라인 에뮬레이터를 도입하여 키오스크, 태블릿,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약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99.6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제공 -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의 교육전후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도는 평균 47.1%로,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효과적인 교육 제공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6.2%(‘22년) → 76.9%(‘23년)로 증가하였고, 디지털 배움터 이후 매년 상승 추세* * (’20) 72.7% → (‘21) 75.4% → (’22) 76.2% → (‘23) 76.9&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민이 원할 때 상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및 반복·실습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광역지자체별 상설배움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실생활 교육과 상담, 실생활 디지털 문제해결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경로당 등 수요 단체들와의 협력을 통해 생성형 AI, 실생활 디지털 교육 제공 -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접근성 강화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도서관정책기획단
	과제목표	○ 가상 모형(digital twin)*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차세대 도서관 구축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국가 지식정보 서비스 향유 *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이 만든 물체, 또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			
	주요내용	○ (가상 모형 서고 구현) 이용자 접근 불가능한 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서지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가상 모형 기술 기반 서고 구현 ○ (메타 큐레이션) 데이터 에셋 구축 및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도구 개발 제공으로 이용자 참여형 메타 큐레이션 구축 ○ (공간 구축 및 연계) 콘텐츠 창·제작 환경 마련 및 차세대 서비스 향유 공간 하이퍼포럼(콘텐츠 리딩룸, 가상서재, 소셜룸, 힐링룸) 제공 ○ (홍보 및 협력) 가상도서관 플랫폼 참여 및 홍보, 국제 회의 사례 발표 참여 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문화기술 R&D를 통한 가상 국립도서관 시범 콘텐츠 구축 - 시범 콘텐츠 기획 및 선정('23.1.~4.) - 미션 시나리오 설계 및 저작도구 화면 설계('23.4.~'23.9.) - 테스트 베드 설치 및 연동 테스트('23.6.~'23.10.) - 체험관 설치 및 초실감 콘텐츠 개발·구축('23.7.~'24.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험관 설치 및 초실감 콘텐츠 개발·구축을 통한 디지털 문화향유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3년 기재부 예산 미반영으로, 문화기술 R&D 사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함

향후추진계획	○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 '24년 이후 기재부 예산요구 미반영 및 문화기술 R&D 사업 종료('22~'24)로 인한 과제 추진 예산 부재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과제목표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국민 통신복지 증진			
	주요내용	○ 내항선 해상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 선박에 설치된 바다내비 단말기 등을 활용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 의료키트 보급,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관련 교육 등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 바다내비 앱 및 단말기를 통해 연안선박에 바다날씨, 해양교통상황 등 안전운항 정보와 함께 선원 건강관리 정보 등을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3,751	3,109	△642	△17.1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484	484	0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23.3.28.)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협의회 개최('23.4.6.)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선('23.4~8.)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선박 모집('23.4.24.~5.9.)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사전교육('23.8.3.) ○ '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승인(보건복지부, '23.11.17.) ○ '23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안정화 사업(라디오 서비스 개발 포함) 추진('23.8.17.~'24.2.13.)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시행 - 대상선박 : 100척 / 응급의료 지원 : 2명, 2건 / 건강상담 지원 218명, 251건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스템 개발 - 바다내비 앱과 단말기에서 안전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지속 추진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범운영

9	Ⅳ-2-②-㉮	디지털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원정책과
	과제목표	○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주요내용	○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을 위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포함한 중장기('24~'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4.25.) - 전문가, 관련 단체,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고,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하여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 - 기존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 지표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장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총 교사 정원은 감축 추세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9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산부	과・팀명	SW인재정책팀

과제목표

○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과정을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기술분야로 확대*('23~)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

* AI·블록체인 중심 → AI·블록체인, 데이터, IoT, 네트워크 등

주요내용

○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Data·N/W·IoT 등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함양한 실무형 SW·AI 인재 양성

* ①수도권(서울), ②동남권(부산·울산·경남), ③동북권(강원·경북·대구), ④호남권(광주·전주·전남·제주), ⑤충청권(충남·충북·세종)

관련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8,708	33,816	△4,892	△1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과정 확대를 통하여 산업 맞춤형 실무형 인재 8,684명 양성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뒷받침

- 지역의 디지털 신기술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권역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23년 총 8,648명 : (기술분야별) AI 5,888명, 블록체인 1,110명, 데이터 1,094명, N/W 200명, IoT 392명, (권역별) 수도권 1,549명, 동남권 1,784명, 동북권 1,946명, 충청권 2,022명, 호남권 1,383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실무형 디지털 신기술 인력 확대하였으며, 지역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수요기반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격차 해소

-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5대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거점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 및 빅테크 기업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추진('24년 5,846명)

- 국내 우수 인재의 글로벌 수준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구글, 엔비디아, 네이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10	Ⅳ-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디지털을 보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정보접근성 제고

-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추진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주요내용

○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공공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접근성 보장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운영

*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품목을 고시로 우선 지정(「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22.5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 유형(시각·청각·지체 등)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품·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신체·인지적 제약을 해소하는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	4,713	5,063	350	7.4
(정보접근성제고)	4,595	2,116	△2,479	△53.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23년 이행실적

○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험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시험평가 공정성,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전문 직무교육, 키오스크 검증 시뮬레이션 등 추진

-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 및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협의체 등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 검증서 발급 기업의 접근성 개선 사례 및 기술 정보 제공
- 키오스크 제조·개발사,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H/W 및 S/W 개발 시 필요한 정보접근성 표준·접근성 검증 기준 등 전문교육 추진
-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대상 우선구매제도, 검증서 통과 키오스크 현황 등을 안내·홍보 추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의 학습, 사회참여, 경제 활동 등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 유형의 125종의 보급제품 선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체험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체험전시회 개최
-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디지털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 등)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보급지원 확대('22년 4,000대 → '23년 5,300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우선구매제도 운영) 무인주문기(주문), 도서대출반납기(유통), 무인발권기(발권) 등 3종 검증 및 판매(카페, 도서관, 지하철역 등)를 통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확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 유형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125종) 총 6,603대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생활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촉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웹 접근성 표준이 '22.12월 개정되었으나 심사원 교육기간 및 웹페이지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체의 준비기간 등 필요로 바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

향후추진계획	○ 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한「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에 적용 추진('24년) - 인증 심사항목 : (현행) 22개 → (개정) 33개 (추가항목 예시 : 문자 단축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등)

11	Ⅳ-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정책과, 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구에 발전된 정보통신장비(ICT)를 설치 운영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 구현 ○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주요내용	○ 신속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 5종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514	29,267	753	2.6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13,196	13,077	△119	△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 신규 추가 발굴 및 설치 지속('23.2월~)
○ 서비스 만족도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관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3년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종사자 인력 대상 지침 및 역량강화 전국 17개 시·도 교육 및 의견수렴(1월~2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상·하반기 간담회 실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및 대상자 현장방문 실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및 포상
○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 운영보건소 확대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참여보건소 확대('23. 88개소 → 141개소(+53개소))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 및 배포(3월)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사업참여 보건소 대상 성과대회 개최 및 우수 지자체 표창 수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통해 대상자 확대, 응급상황 신속 대응 및 서비스 질적 관리 강화 -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하여 '23년 238,806대 설치 -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 '23년 155,373건 조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족도 조사 87점 달성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참여 보건소 확대 및 사업질적관리 강화 - 사업참여 보건소 확대(88개소 →141개소, 57,664명 서비스 이용) - (사업만족도 조사) 전체항목 평균 91.9점 달성 - (건강관리 현황) 신체활동 개선율 62%, 식생활 개선율 52%, 악력유지율 61%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등 신규 장비 및 기능을 추가한 신규 사업 추진(4차 1.2만대, '24년)하여 대상자 단계적 확대* 추진
* 1차 10만가구, 2차 9.5만가구, 3차 10만 가구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7)
* ('24) 178개 보건소 → ('25) 200개소 → ('26) 230개소→ ('27) 261개소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데이터진흥과
과제목표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			
주요내용	○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증서비스 발굴 ○ 대국민 마이데이터 인식제고 활동 추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7,200	3,810	△3,390	△4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정보주체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서비스* 및 활용서비스** 등 6건 신규서비스 발굴
* (종합관리 서비스, 3건) 개인 등의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통제 등 지원
* (활용서비스, 3건)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이종분야 간 데이터 융합 서비스

○ 국민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교육 및 컨퍼런스 등 추진
- (아이디어 공모전) 미개방 분야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총 126건 접수 및 6건 시상
- (온라인 교육) 대국민 마이데이터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4종 제공
- (컨퍼런스) 국내외 동향 및 최신 정보 제공 위한 컨퍼런스 개최, 총 1,988명 참석(온라인 1,705명, 오프라인 283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원사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6건) 발굴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정보주체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융합한 국민 생활에 초점을 맞춘 유용한 서비스 발굴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확보와 편익 향상을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활동 추진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및 발굴,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 홍보 추진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공공지능정책과
과제목표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			
주요내용	○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중심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13,577	10,351	△3,226	△23.8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12,312	9,070	△3,242	△26.3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1,240	1,258	18	1.4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25	23	△2	△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서비스 확대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46종 확대

- ('22) 누적 59종 → ('23) 누적 105종

□ 인식 제고 활동

○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9.22.) 및 시상식(12.22.)

- 총 134점 접수, 총 11점 선정: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6명)

○ 이용기관 만족도 조사(11.8.)

- 결과 81.72점(3개 분야 10개 항목)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누적 105종 제공 ○ 서비스 이용량 연 3억건 ('23년, 누적 4.5억건) 돌파 - '22년 1.2억건(150%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를 통한 대국민 공공 마이데이터 인식 제고 추진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팀명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과제목표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매년) ○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3,197	7,650	△4,453	△239.2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87	7,546	△6,759	△958.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적 근거 마련('23.3.)

○ 마이데이터의 데이터 형식 표준 및 전송규격 등 기술규격(안) 마련(신규부문 5개, 기존부문 5개)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ISP '23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신설하여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소통·협력 중

향후추진계획

○ 마이데이터 하위법령(안) 개정('25.3.)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1차('24.12.)

13	Ⅳ-3-②	보안취약계층 역량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정보보호산업과
	과제목표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보안역량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사이버위협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제품·서비스 도입 지원 - 특히, 별도의 보안전담 인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모델인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확대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 보안 전문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원격에서 보안 기능 전반을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10,500	5,900	△4,600	4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원규모 : 컨설팅·솔루션 300개社, SECaaS 1,200개社 지원 ○ 지원결과: - (컨설팅 및 솔루션) 324개社 지원, 보안솔루션 328개 도입 지원 ※ '23년 정보보호 수준 향상도 18.2% 달성 - (SECaaS) 1,231개社 지원, SECaaS 1,237개 도입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컨설팅 및 솔루션) 324개社 지원을 통해 '23년 정보보호 수준 향상도 18.2% 달성 ○ (SECaaS) SECaaS 도입을 통해 12월 한달 간 479만건의 보안 규칙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 이 중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1만9천건 차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솔루션, Secass 지원 등 지속 추진

14	Ⅳ-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추진			
	주요내용	○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계정보 일괄변환 제도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하위법령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위원회 구성 시기에 따라 추진상황 변동 가능			

'23년 이행실적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23.12. 국무회의 의결) -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 CI 일괄변환 규제체계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연구반 운영(~12월) - '23년 중 법 통과에 대비 관련 시행령(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터넷상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국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시행('24.7월) ○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입법 취지, 조문 해석, 법규준수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해설서 발간('24.9월)

15	Ⅳ-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주요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 사업자 자율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하고 전문가·이용자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 - ’23년도에 신규로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선 및 신설 검토 등 실효성 있는 평가방안 마련 및 평가(‘24.~)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운영지원)	300	336	36	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보호 업무 시범 평가
- 디지털플랫폼 평가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항목 마련
  * 선정 기준 : 이용자 수, 운영 서비스, 이용자 인식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 평가항목 : 디지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보호에 대한 평가항목 마련
- 네이버, 카카오, 구글을 디지털플랫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평가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보호 유도 - 시범평가로 평가결과 비공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계획 의결(’24년 5월)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24년 6~11월)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의결 및 공개(’24년 12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국제형사과
	과제목표	○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동남아시아 신생 사법협력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을 통해 주요 인접국들과 형사사법공조 강화 * SouthEast Asia Justice Network : ’20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지원 하에 만들어진, 동남아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간 직접 소통 창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이행입법 추진 - ’23. 2.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초청을 받아(’22. 10. 가입신청서 제출)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South East Justice Network)*에 가입(’23. 1.) 및 서울에서 최초로 대면 총회 개최(’23. 4., 총 19개국 약 100명 참석) * SEAJust는 ’20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아세안 국가(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미국, 루마니아 포함 총 20개국이 가입(’24. 11.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SEAJust 가입 및 최초 대면 총회 개최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공조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주요내용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113388호) 입법논의 지원 - 위장수사 확대 취지 유사 법안 비교 - 위장수사 제도 해외입법례 검토 - 위장수사 현황 분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권칠승, 2202039호) 입법 논의 지원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복귀 지원			
주요내용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삭제,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이관	595	-	△595	순감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지원)) * 사업이관	-	613	613	순증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2,593	3,475	88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실시
- 국외에 서버를 둔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 사업자 대상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삭제 권한을 가진 해외 유관기관(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적극적 삭제 지원
* 지원 현황 : 276천 건(삭제 지원 245천 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36천건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0 → 14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피해자 지원 강화
* 심층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현황(‘23) : 24,582건

○ 디지털성범죄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사항 논의 등 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
* (구성)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유포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조치 *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으로 7,500건 이상의 피해영상물 삭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00건 포함)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연중)

○ 디지털성범죄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사항 논의 등 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

16	Ⅳ-4-①-㉰	‘디지털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 · 팀명	형사4과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주요내용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개정 법률 반영 등으로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신설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 강화 도모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및 전담검사 지정·운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등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과제목표

○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주요내용

○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 성능 고도화
- 지속적인 성능 고도화로 탐지능력 향상

관련예산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일반연구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105	105	0	0

* 상기 예산 105(단위:백만원)는 사이버수사과 시스템 2개(사이버수사시스템, 불촬탐지 시스템) 비용이므로 ‘불촬탐지 시스템’에 투입한 전체 예산은 아님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 성능 고도화
- 지능적 추적 회피 사이트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불법 성인 사이트의 동영상 플레이어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탐지시스템의 탐지능력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시스템 고도화

○ ’23년 탐지실적
- ’22년도 48건 차단, ’23년도 136건 차단으로 탐지능력 향상되었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불법촬영물 탐지능력 향상
-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추적 자동화
  *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추적 자동화 기능 고도화로 ’22년 대비 280% 이상 차단 실적 증가 (△’22년 48건, △’23년 136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불법촬영물 전담 인력 부족
- 시스템 운영 담당자 1명(타 업무 겸직 형태)
  * 시스템 운영 및 탐지 등의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타 업무 겸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함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 시스템 고도화
- 서울시 등 우수 시스템 견학 및 기술이전 협의
- 불법사이트의 빈번한 주소변경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 신기술 연구

○ 전문 인력 확충 노력
- 시스템 개발·운영 인력 및 신고·차단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제목표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검토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 제21대 홍정민 의원 발의(‘21. 11. 18. 의안번호 21-13388), 법사위 계류중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부산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시스템‘을 연계, 부산시는 피해영상물의 해시값을 경찰청에 검색 요청 →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 ○ 수사 중 확인되는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 연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운영	300	3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연계 완료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심위-여가부 등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보호 총 56,945건 연계(‘22년 대비 53.6% 증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연계 완료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심위-여가부 등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보호 총 56,945건 연계(‘22년 대비 53.6%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범인검거에 더불어 피해자보호 내실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주요내용	○ 정부·민간 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연도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법안이 발의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논의를 요하는 안건이 선정될 경우 수시 개최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지원하는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민관협의회) 방통위(주관)·관계부처(법무부·여가부·검찰청·경찰청)·방심위·민간사업자협회·학계·법조계·플랫폼사업자(카카오·구글·메타) 참여 협력방안 논의(‘23.3.9) - (관계기관 협의회) 방통위(주관)·법무부·여가부·검찰청·경찰청 부처 참여 협력방안 논의(‘23.6.27)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3.12.5.～’24.1.15.), 각부처 의견조회(’23.12.28.～’24.1.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삭제지원, 제도개선 등 부처별 추진현황 및 협조필요사항 공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계속(’24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조치로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 지정 고시 개정 추진(’24년)

17	Ⅳ-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주요내용	○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지원 -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안 제출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스토킹처벌법」개정 완료('23. 7.)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 ○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115468호)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스토킹처벌법」개정 완료('23. 7.)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2대 국회에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

17	Ⅳ-4-②-㉯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제목표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기존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주요내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누리캅스의 '사이버 공간 불법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검토 등 대응 및 입법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361	36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사이버범죄 예방강사(115명)이 한해간 총 2,949회 교육 실시

○ 누리캅스의 불법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통해 총 100,078건의 불법정보(마약, 자살유발정보, 불법총포, 불법게임물 등)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예방을 위해 △불법촬영물・피싱사이트 삭제・차단 요청(27,500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범죄예방 홍보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등 제공

○ △SNS계정 불법 유통 근절 협의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S/W 개발 추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적용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국민 사이버예방정보 제공을 통한 사이버범죄 및 불법 행위 발생 차단 ⇒ 체감치안 만족도 제고 ○ 사이버범죄 검거인원 9.7% 제고('22년 72,230명 ⇒ '23년 79,297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장애요인)** 사이버범죄의 전반적인 증가추세('22년 230,355건 ⇒'23년 241,842건)에 따른 수사관의 업무량 과중 및 해외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추적 난이도 상승

향후추진계획

○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범죄는 물론, 사기 등 재산범죄와 사이버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및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전반적인 체감치안 증진 도모

○ 지속적 교육훈련・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민관협력 등을 통해 경찰 수사관의 사이버추적역량 강화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대상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 미디어교육원 중심의 협업네트워크 강화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마련

주요내용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년)제 등 확대를 통한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23~'25)
○ 지역거점을 활용한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로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구축
○ 유아 대상 놀이형 교육 및 청소년 교육과정·진로탐색 과정 연계교육 등
○ 미디어교육원 활성화, 미디어교육사 제도 운영 및 국가공인자격증 추진
○ 온라인 차별·비하표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관련예산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미디어교육사업	3,542	3,085	△457	12.9
▪ 신문윤리심의지원	2,800	2,680	△120	△4.3

(언론재단 자체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개발 등	2,885	3,950	1,065	36.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치원, 특수학급 맞춤형 과정 개발 등으로 아동·청소년 32,622명에게 미디어교육 지원
○ 지역 언론사, 지역 대학, 권역별 군부대 등과 협업해 지역민 6,328명에게 미디어 교육 추진
○ 미디어교육사 1급 자격시험 최초 실시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전문가 199명 양성
○ 심의기구 자율심의 활성화
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적 - 268개 매체, 2,673건 심의
②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실적 - 141개 매체, 11,331건 심의
③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적 - 864개 매체, 26,043건 심의
④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최초 130개사 공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이수자를 전년대비 59.2%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 기반 강화
○ 지역별 거점 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 진입장벽 완화로 지역민 미디어교육을 전년대비 106% 수준으로 보급해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권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충(1급 64명, 2급 341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 등 늘어나는 미디어교육 수요 대응 기반 마련
○ 자율심의 건수 전년 대비 7.5% 향상 통해 언론계 자정활동 확대
- 3개 심의 단체 심의건수 전년 대비 7.5% 향상('22년 37,247건 → '23년 40,047건)
○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위반기사 권고 이행건수 목표 대비 125%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미디어 노출 연령과 사용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교육 인프라는 미흡한 상태 - 미디어교육의 교과과정 반영 및 미디어교육사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필요

향 후 추 진 계 획	○ 미디어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교사 미디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 및 미디어 전문 강사 육성 ○ 학교 밖 청소년, 노인, 산간도서 지역민 등 대상별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토대 마련 ○ 놀이형 유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신설로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지원 ○ AI를 활용한 진로탐색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확대 ○ AI 활용 기사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등 심의기준 강화, 자율심의 성과관리 활용 체계화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지속 실시(혐오·차별 표현 등) 및 시정권고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온라인 혐오·폭력 등 디지털 위험도 증가

○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지원을 통한 국민 미디어 역량 함양

주요내용

○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개인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 교수자 양성의 전문성 확보,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연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 제도 운영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시청자권익증진, 디지털미디어소통역량강화)	4,811	5,085	274	5.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 배움의 현장에 방문하여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유아 55개 기관, 초중고 403개교, 대학 42개교 등)
-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운영(236개 강좌)
- 전국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상설 미디어교육·체험 제공(이용자수 102.6만명)
- 대구·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12월)으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다문화·노인·학교밖 청소년·도서산간 지역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172개 기관)
- 직접 센터로 찾아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483회)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강사 공신력 및 교육의 질 제고 위한 신규 강사 양성과정 운영(입문 1회, 전문 1회)
- 전문성을 갖춘 강사 양성(입문 77명, 전문 40명) 및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국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 역량을 갖추고,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며 미디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 한계 존재, 지역·계층별 미디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 - '23년 교육 공모 접수 결과, 신청기관 944개 중 38.9%인 36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역민 대상 미디어교육 운영,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지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 운영 등(계속)

○ 온라인 혐오표현, 미디어 중독 등 미디어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고도화 및 체계화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온라인 상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강화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등			
주요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계속) ○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26~)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통신심의 활동)	3,455	3,211	△244	△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온라인 상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 시정요구

- 차별·비하 정보 주요 유형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심 의	1,580	1,369	1,700	2,336	6,985
시정요구	473	308	1,222	1,644	3,647

결과분석

추진성과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을 통해 시정요구 증가 * 시정요구(건) : '22년 1,222건 → '23년 1,644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 강화

*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목표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분석·대응 방향 제시
- 인공지능 위험성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연구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위험성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전장치 마련 및 국민의 생명·재산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확산 등 효과적인 위험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위험영역 사업자에 대한 고지의무 및 신뢰성 확보조치 책무 부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인공지능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 등 규정

○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헌법적 가치의 변화 방향성 검토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관련예산

(정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신뢰성기반조성)	850	850	△0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진행
- 인공지능기본법안 마련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의결('23.2월)
- 시민단체・인권위 의견 수렴 및 수정안 마련('23.12월)

* AI 관련 7개 법안의 통합안 마련 및 추가 상정 법안(안철수·황희 의원안)을 검토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23.9월~12월)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분석 및 헌법적 가치의 변화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검토, 제도적 개선안 제시

* (명칭) 인공지능사회의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 제정안 마련을 통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적 접근 - 산업 발전 지원과 함께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 포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공지능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법안에 반영하기 어려움 - 생성형 AI 등 신기술 출현에 따른 지속적인 법안의 보완 필요(단계적 입법)

향후추진계획

○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 협력 강화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험기반 안전관리체계의 제도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

○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체계 운영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인공지능이용자보호대응팀
과제목표	○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 사이의 균형 있는 규제 마련			
주요내용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전문가 토론의 장 마련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및 민관협의회 개최 ○ 인공지능 서비스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제 연구반* 구성·운영('23. 7~9월)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100	830		△24.5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230	184	△46	△20
(이용자보호 정책개발)	120	96	△24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사회적 활용·확산에 따른 이용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챗GPT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혁신성과 이에 부응하는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논의('23.3월)
-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의 진화 양상과 민관의 이용자 정책 발전 방향 논의('23.5월)
- 기반 모델로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확장 추세와 신규 이용자 정책 이슈 조망('23.6월)
-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유해성 대응을 위한 자율규범 및 규제입법 사례('23.9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제5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23.12월)

* (주제) 'Generative AI and Human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확산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이용자 보호 원칙, 권리·책임 내용, 의무 사항 등 체계화
- 연구반 구성·운영('23. 7~9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인공지능 관련 주요국 정책·기술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도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위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주요 규정 사항 등 법안 초안 작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인공지능 확산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고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 운영('24.7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이슈 논의 등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개최('24.9.30.)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4.말)

20	Ⅳ-4-⑤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진단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치유서비스 지원
-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단계에 따른 수준별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공존질환(우울증, ADHD 등) 위험군 청소년에게 병원 치료비 지원
- 전담상담사 배치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지원기반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청소년육성기금)	2,193	-	△2,193	순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지자체보조) 제외 예산	-	1,643	1,643	10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702	2,749	47	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977	1,002	25	2.6

※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과 일반회계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이 '24년 하나의 세부사업(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으로 통합 편성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병원 치료 연계, 치유캠프 운영, 부모교육, 상담사 양성교육 등 추진
  * 치유서비스 지원 56,835명, 상담 180,740건, 추가심리검사 3,275명, 인터넷 · 스마트폰 치유캠프 총 8회 151명, 가족치유캠프 총 15회 311가족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 기숙치유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연중, 22회)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을 총괄하는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54명),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128만여명) 실시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발굴(4-5월)
  * ('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230,634명 발굴

○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진단조사 대상을 초1(보호자 조사)로 확대(7월)
  * ('23년) 초1 보호자 조사로 관심군 16,699명 발굴

		○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지원(3-9월) * ('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180,740건, 치료비 793명 지원 ○ 초등생·보호자 대상 가족치유캠프, 중·고생 대상 인터넷치유캠프 운영 * ('23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8회 151명, 가족치유캠프 15회 311가족 지원, 초1 및 보호자 대상 초등1연령 가족치유캠프 2회 시범운영(30가족)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 치유프로그램 상시 운영(22회, 469명) ○ 초등 저학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해소 자석전단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홍보(EBS)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54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1,565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초등 1학년 보호자 대상 진단조사를 최초로 7월에 시범실시, 향후 본조사에 포함 실시 필요 ○ 온라인 상 다양한 매체 등장에 따른 대응 필요

향후추진계획	○ 온라인 상 다양한 매체 및 역기능 등장에 따라 진단조사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로 조사명 변경 - 과의존 저연령화를 반영하여 '23년 시범 실시한 초1 대상 보호자 조사를 향후 본조사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조기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지속 추진

V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1. 기업과 인권	

이행상황 종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1	0	11	0	-
1. 기업과 인권	11	-	11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추진중
1	Ⅴ-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추진중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추진중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추진중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5	Ⅴ-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추진중
6	Ⅴ-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추진중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추진중
		(2) 고충처리	
8	Ⅴ-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추진중
9	Ⅴ-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추진중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추진중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확보 - 개발협력 사업 참여기관의 인권존중 책임강화			
	주요내용	○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사업장 인권 책무성 제도 강화 ○ 파트너 인권경영 확산 지원 및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파트너사 대상 인권 교육 및 '개발협력과 인권' 교육 제공 - 인권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및 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위험 소개 - 개발협력 사업현장 인권침해 예방 방안 및 코이카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안내 ○ 해외 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구축 - 영문 홈페이지 내 해외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비 ○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주요 행사 진행 시 수어 및 문자 통역 시행을 통해 인권침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주요 간행물 제작 시 문자-음성변환 어플리케이션 활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파트너사 대상 인권경영 의식 확산 - 파트너사 대상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총 348개 기관, 744명 인권 교육 수강 ○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주요 행사 진행시 문자통역 병행 및 동영상 내 자막 삽입 (누적 조회수 8,364회 이상, 2024.1.16. 기준) - 기관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파트너사 대상 교육 확대 및 인권 경영지원 강화 필요 ○ 다양한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도입

향후추진계획	○ 파트너사 대상 인권경영 도입지원 지속 - 개발협력 사업 참여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활동 지속 확대 ○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다양한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도입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정책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방안 연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연구 실시 ○ 기업과 인권 관련 학술대회·포럼 주최를 통해 국내 정책추진 토대 마련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참여 -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3.2.)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 발간 ('23.12.) *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발간물을 활용하여 기업 및 일반 국민 등 대상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별도 예산 없음 ○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은 국내 시장 현실, 기업 환경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 논의 필요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활동 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기업과 인권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AA 대상 사업체에서 제출하는 임금현황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개선 적극 유도 ○ AA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1,790	△690	△27.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946	1,127	181	1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감수 및 정합성 분석 등 실시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현황 등'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4.6%였으나, '23년에는 29.3%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산업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이행			
주요내용	○ 산업발전법 개정('17.12월)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5년 마다) 시행근거 마련・이행 ○ EU 등 ESG 규범화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2,413	2,377	△36	△1.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4개 업종별(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수출 기업 500개社에 대해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사업 추진

○ 업종별 네트워크 포럼 통해 업종별 ESG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실사 등 이슈에 공동 대응

결과분석

추진성과	○ K-ESG 가이드라인 제공 및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사업 통해 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 ESG 규범화에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지속가능경영확산 사업 정상 추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이행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조달청	과・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제목표	○ 공공조달부문에 참여하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			
	주요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약자지원, 고용창출, 고용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당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공공조달 부문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지속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23.3.2)으로 여성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 대표자의 채취임 또는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사이 공백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인정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존속기간(3년미만 : 0.25점, 3년 이상 -5년 미만 : 0.5점) 에 따라 가점 부여 ○ 조달청「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전부 개정('23.6.30)으로 사회적기업 등 모든 기업에 동등한 기회 보장 - 그동안 우수제품 위주 관급자재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자기업 등의 기술제품도 선정 가능 *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 ○ 사회적 약자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범위 상향(5천만원→1억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23년부터 1억원까지 소액수의계약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기업 지원실적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금액(억원) / 48,967 / 53,494 / 57,896 / **63,561** ○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금액(억원) / 10,213 / 11,610 / 11,512 / **12,243** ○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금액(억원) / 4,558 / 5,166 / 5,410 / **5,86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 지원 지속 확대 -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 획득비용 절감 - MAS 적격성평가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신용등급(경영상태) 평가 및 서류제출 면제를 통한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팀명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제목표	○ 어린이 사고 예방,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정착			
주요내용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사업	1,640	1,606	△34	△2.1
(어린이제품시험인프라구축)	1,640	1,606	△34	△2.1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어린이제품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	320	288	△32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신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도입('23.10), 영세기업 인증지원 확대('22. 131개 → '23. 557개) 등 추진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3개(유치원 26개, 초등학교 7개) 지정·운영(9,96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69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2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충북안전체험관(청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충돌시험을 위한 시험동 건축('22.12.) 및 전기설비, 항온항습, 소방 설비 구축 완료('23.12.)
- 시험동內 테스트벤치, 충격흡수시스템(응급브레이크 등), 측면충돌장비, 조명시스템, 속도 및 상해데이터 취득장치, 영상데이터취득장치 도입 완료('23.12.)
- UN/ECE/R129를 부합화하여 국내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안 마련('23.12.)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놀이기구(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신설('23.10)
- 신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3.6~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6,100명) 대비 약 245% 이상 성과(15,091명) 달성 *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수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계획대비 장비구축 진도율 100% 달성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23.11.3.) 및 업계 간담회('23.11.22.)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신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지속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더미 등 장비가격 인상으로 사업지연 없이 장비구축 완료 필요

향후추진계획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및 신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용역 지속 추진 ○ 오프라인 교육 위주의 교육방식을 교육인원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평가 장비 구축 완료('24.12.) * 더미, 더미 교정장비, 충돌용 벤치 주변장치 등을 도입중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고시('24.下.) * 예고고시('24.6.17.~'24.8.16.) 및 안전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24.6.26.)

5	V-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			
	주요내용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방향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아동의 노동과 부당처우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반영)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 조치(근로조건 개선,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의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실시('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에 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의 기초자료 마련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현황과 유효성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아동 근로권익 실현을 위한 관계 부처의 이행현황 모니터링(지속)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방향 검토(지속)

5	V-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아동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아동 근로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홍보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근로조건개선지원	16,675	11,896	△4,779	△28.7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23	1,613	△10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 청소년 상담, 교육, 홍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등
- 청소년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지속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4,734회·100,245명 대상 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 실적: 상담 37,733건, 권리구제 1,105건

○ (자율개선 등 컨설팅 지원) 취약계층 다수 분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청소년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8,985개소 지원

○ (노동포털 오픈) 청년층에 친숙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오픈 → 비대면·원스톱으로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 (권리구제)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 (노동법 정보제공)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비롯하여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지속 강화 ○ 취약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강화를 통한 청소년 등 근로자의 근로권익 실현 - 노동관계법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등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고용 사업장 등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속 운영

6	V-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의 ‘기업과 인권’ 증진 노력 동참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주요내용	○ ‘기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ILO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참하며 관련 논의 참여 ○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 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증진 노력 동참 – ▲제53차 인권이사회(6-7월) ‘기업과 인권’ 결의(공동제안국 참여)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제9차 회의(10.23-27) 참석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 ▲제12차 ’기업과 인권‘ 포럼(11.27-29) 참석 및 폐막총회 연설(국내 동향 소개 및 효과적 구제수단 확보 방안 제안) ▲영국 Wilton Park 주관 ’인권과 신기술‘ 회의(11.29-12.1) 참석(신기술 관련 기업의 책임 등 논의에 참여)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 계기 '신기술과 인권' 라운드테이블(12.12.) 참석(기업의 신기술 설계, 개발, 사용 과정에서 인권중심접근 필요성 등 논의)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기구 질의 대응 – ▲캐나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관련 특별절차 서한 접수 및 답변(3월) ▲사우디 네옴프로젝트 관련 특별절차 서한 접수 및 답변(6월) ▲미얀마 금융기관 관련 인권 특별절차 서한 접수 및 답변(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 다자무대에서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UNGPs)’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유엔기구 질의에 답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기여하고 우리의 현황 및 입장 공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UNGPs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지속 독려 필요

향후추진계획	○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 및 우리 입장 적의 개진 ○ 유엔기구 질의에 답변 및 정보 제공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지속 기여

6	V-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참하여 관련 논의 참여 ○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주요내용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기구 질의 대응 - 캐나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관련 특별절차 서한 답변('23.1.),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관련 특별절차 긴급청원 답변('23.6.), 미얀마 금융기관 관련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서한 답변('23.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질의에 답변·정보를 제공하여 인권메커니즘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 적극 참여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국제기구 질의 지속 대응

6	V-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주요내용	○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111차 ILO 총회('23.6.)에서 산업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약자 보호 등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 개혁 추진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조연설 및 노사정 논의 참여 ○ 제347차, 제348차, 제349차 ILO 이사회에 참여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논의, 결사의 자유 협약의 파업권 포함여부 관련 논의, 산업안전 강화 세계 전략 등 주요 의제 논의 참여 ○ '23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발표를 계기로 개최한 제53차 고용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소외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 대응 방안 공유 ○ UN 인권협약 심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소개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ILO 협약 비준, 이주노동자 보호, 노조 활동 등 추진계획 및 정책적 노력 설명 * 자유권 규약: 성별 임금격차 해소 조치, 공무원·교원 및 특고 등 노동권 관련 개선사항 등 적극 설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격 및 피해가 예상되는 디지털 소외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을 알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기구 회의 의제 발굴 시, 적극적 대응 ○ 수석대표 등 정부발언 시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 현지 최신 고용·노동 이슈 관련 간담회, 세미나 개최, 교육 등 해외진출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와 노사분쟁 예방

○ 주요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 및 제도, 현지 고용·노동 이슈, 문화 등 관련 자료 제작·배포함으로써 현지 인사노무 지원 및 노사관계 안정 도모

주요내용

○ 현장지원반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직접 지원(진출기업 인사노무지원 세미나)

○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 Q&A 온라인 세미나 및 ESG 기초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정보 제공 강화

-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 인사·노무 Q&A 제작, 알기 쉬운 베트남 노동법 핸드북 제작, 현지 노동이슈 조사(뉴스레터) 발송, 지원자료 e-book 제작, 포럼 콘텐츠 영상 제작, 베트남 노동법 교육 동영상 제작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해외현지 노사협력지원	319	200	△119	△3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현지 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장 지원

- 현장지원반 파견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 세미나 개최(베트남 2회, 캄보디아 1회)

출장지	장소	일정
베트남	호치민, 동나이성	2023.07.17. ~ 07.20.
캄보디아	프놈펜	2023.10.26. ~ 10.28.

○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 해외진출기업(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Q&A 온라인 세미나 개최('23.10월)
- 2023년 한-중 고용노동 온라인 간담회 개최('23.11월)

○ 국내·외 최신 ESG 트랜드 및 인권 실사 대응 전략 등 노동인권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 전략 세미나 2회 개최('23.3월, 9월)

* 온라인 세미나 개최 및 동영상 유튜브 게재

○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정보 제공 강화

- 지원자료발간 (8국 9종: 미얀마,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 해외 현지 재외공관(대사관) 및 무역관을 통한 발간물 배포(오프라인, e-book 온라인)
- 안내서 저자가 직접 소개하는 안내서 활용법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재

구 분	해당국가	비 고
노무관리안내서 발간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영상제작
인사·노무 Q&A 발간	태국,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기 쉬운 노동법 핸드북 발간	베트남	영상제작
노동 법령집	인도	

- 해외통신원 운영: 정보 시의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 35회(7국 대상 국가별 5회)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도국 현지 세미나 운영으로 현장 지원 역할 확대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확산을 위한 기초역량 교육 지원 - 국내·외 기업 ESG 교육이 부족하여 기업측에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요청 ○ 수요자 중심의 인사·노무관리 지원자료집 및 Q&A 발간 등을 통한 자료의 현장성·적시성 강화 ○ 노무관리 안내서 저자의 국가별 주요 노동이슈 소개 등 동영상 강의와 국별 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지원자료 활용도 제고(국별 뉴스레터 발송 확대(35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가별 전문가, 기업 실무자, 관련 법·제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자문단 운영으로 지원자료 품질향상 및 콘텐츠 강화 ○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공급망 내에서 노동인권 실사 강화 및 법제화에 대비하여 국내·외 중소기업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안내서 발간을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의 ESG분야 실무 대응지원

8	Ⅰ-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피해구제과

과제목표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마련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 운영
- 피해신청자의 신속한 건강피해 판정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속도 제고
- 생애주기별 건강모니터링, 법률구조사업, 의료상담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신속한 국민 건강피해 구제 체계 마련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이행 기반 구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연착륙을 위한 피해구제 모의 운영 및 조사지침 마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5,121	15,127	6	0.04
▪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개선(살생물제)	376	379	3	0.8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위·재심사위 운영)	27	27	-	-
(살생물제품 예비조사·본조사)	326	326	-	-
(살생물제품 구제계정 출연)	3	6	3	100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교육·홍보)	20	2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신속·공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진**
- 피해신청자 7,891명 중 5,667명에 대해 피해인정, 1,596억원의 구제급여 지급('23. 12월 기준, 누적)
- 가습기살균제(PHMG) 폐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암 피해 구제계획 마련 및 개별 폐암 피해자 구제 개시('23.9월~)
- 재심사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인정 여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재검토 추진('23.2~,11회)

○ **가습기살균제 추가분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안정적인 피해구제 지속 운영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 대상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23.5, 23개사 대상, 1,250억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 법률상담·소송대리*,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3차)** 발간 등으로 피해자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적극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 피해자 및 (유)가족의 가해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교육·상담 제공, 소송비용 지원 등 어려움 해소(174명 신청)

** 만성상기도염증·급성하기도염증·만성폐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결과 수록('23.12)

- 기존 건강관리 밀착상담(콜링유) 개선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적극 추진으로 만족 제고('23년 146명 신청)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12개소) 권역별 운영을 통해, 건강모니터링 대상자 중 2,764명 참여
  → 소아·청소년 등의 내분비내과 성장클리닉 진료 등 참여자의 호소질환에 대한 연계진료 적극 지원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모의 운영 추진('23.5.30.~'23.12.18.)** - 연구용역(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방안 연구Ⅱ)을 통해 제품별, 피해 유형별 피해조사 및 심사 시뮬레이션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 지침 마련('23.9.21.)** - 모의 운영 결과를 통한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내용·절차, 분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규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회, 3.22, 6.27, 7.20, 9.26.)** -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및 위해성 평가 등 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필수자료 미제출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습기살균제 판정대기자 적체 해소*** * 조사판정 완료자가 직전년도('22) 대비 약 3배 증가(1,251명 → 3,833명) - 장기간 판정을 기다린 피해자의 건강피해 판정 완료 및 구제급여 지급, 피해인정 범위 확대로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재원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구제급여 지급 및 제도운영 기반 마련 ○ **신속·공정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 기반 구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 지침 마련, 피해조사단 교육 등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구체화 및 피해조사단 업무역량 강화로 살생물제품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대기자 적체는 해소했으나 향후 신규질환 등을 이유로 재심사 요청 건의 증가 예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 증가에 따라, 지원사업 분야 확대 요구 증대 - 타부처 사업과 협업·연계를 바탕으로, 신규 여가서비스 지원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에 대비한 이행 기반 강화 필요 -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차질 없는 피해구제 필요

향후추진계획	○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요청 건 증가 대비 재심사 전담병원 추가 운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교육·보건분야 등)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이행 기반 강화 - 살생물제품 기초자료(물질·제품 정보)를 활용하여 살생물제품 피해 원인제품 조사, 환경노출조사 등 피해조사 세부 항목 구체화 -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유관기관(환경부·과학원·기술원) 업무 협업 추진

9	Ⅰ-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제목표	○ 위해제품 리콜이행 점검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제품안전 경각심 제고 및 제품안전관리 확보			
주요내용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 HelpDesk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리콜이행을 적극 지원 - 리콜 미이행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보완명령 및 재점검 실시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제품안전관리 확보 - (유통시장 감시)소비자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협력기관: 6개 소비자단체 - (리콜제품 구매 차단)정부기관(국표원·환경부·식약처)의 위해제품 판정 시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 협력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리콜제품 판매 중지)리콜제품의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사와 협력 * 협력기관: 온라인유통업체 ○ 리콜제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등 배포, 대학생 등 안전지킴이를 통한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7,211	7,211	-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2,126			
불법·불량제품 단속		1,595		
리콜이행점검		531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500	50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리콜 이행현황 1,511건 점검 및 리콜 이행 HelpDesk 1,385건 상담하여 사업자의 리콜이행 적극 지원 -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보완명령 및 후속점검 실시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유통시장 감시)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리콜제품은 (온라인)통신판매중개업체 등에 판매 차단 요청, (오프라인)판매업체 현장점검 후 리콜사업자에 통보하여 판매 중지 * 협력기관: 6개 소비자단체 - (리콜제품 구매 차단)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중소 유통매장 확산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실시 * 협력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리콜제품 판매 중지)쿠팡, 11번가 등 주요 19개 온라인 쇼핑몰社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콜제품 회수 및 유통차단 협의 * 협력기관: 온라인유통업체 ○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즉각적으로 유통차단이 필요한 위해제품, 사회적 이슈제품 등 위해 동향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주요 온라인 쇼핑몰사에 공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업체 이행점검건수 1,511건, 리콜이행 HelpDesk 상담 1,385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리콜업체 이행점검건수(건)	975	1,156	1,392	1,511
Help Desk 운영 상담(건)	365(시범)	1,034	1,315	1,385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유통시장 감시)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의 모니터링 결과 1,968건 리콜제품 유통의심 내역을 확인하여, 1,094건 판매중지 - (리콜제품 구매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사업 등을 통해 ‘23년말 기준 259,523개 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용 중(전년 대비 11,045개 매장 증가) - (리콜제품 판매 중지)유통사 간담회 연 2회(6월·9월) 개최하여 리콜제품 회수 및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 협력 강화 ○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온라인 쇼핑몰 16개사 대상으로 위해제품 카드뉴스 연간 15회 공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위해제품 리콜이행점검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을 위한 리콜이행점검 지속 이행 및 HelpDesk 운영을 통한 리콜사업자 적극 지원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사, 지자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및 리콜제품 관련 정보 확산 등 홍보활동 지속 추진

9	V-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자동차정책과
	과제목표	○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 제도 운용			
	주요내용	○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시정률 제고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동차 안전도 강화 (자동차제작결함조사)	7,247	7,773	526	7.3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22.12.) ○ 자동차 시정조치계획 요건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23.5.)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내용 및 진행사항 보고 의무 등 개선 ○ 시정률 보고기간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23.5.) - 보고기간은 시정률 90퍼센트까지로 정하여 리콜 시정률 현실화 및 관리 용이 ○ 리콜 시정률 점검 및 자동차제작사에 리콜 재통지 명령(분기별, 계속)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현행화된 자동차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아 리콜 알림서비스 확대 추진('23.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리콜 시정률 점검 및 자동차제작사에 리콜 재통지 명령(분기별, 계속)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현행화된 자동차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아 리콜 알림서비스 지속 추진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해외투자과
과제목표	○ OECD 동료평가를 통해 NCP 운영개선,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실시			
주요내용	○ NCP(국내연락사무소)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채널 운영 ○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NCP 홍보 확대 ○ 해외진출기업 기업책임경영 인식 강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투자유치기반조성 - 투자유치활동비 (한국NCP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330	340	10	3.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한국NCP 운영을 통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지원 및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 이의신청사건 처리(신규접수 2회, 기존 진행중인 건 종결 2건), 한국 NCP 위원회 개최(5회), OECD 보고(3회) 등
- 조정절차 개선 등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NCP 민간위원 임기만료로 신규 위촉(2명)

○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외 설명회 등 개최
-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세미나(7.6), 공동학술대회 개최(6.30./12.8.), 이의신청 사건처리 보도자료 배포(12.19)

○ 해외진출 다국적기업 대상 홍보
- 월간 베트남비즈니스 뉴스레터 게재 2회, 베트남 KOTRA 무역관 및 코참 2022 가이드라인 사례집 배부

○ 언론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
-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국문 및 영문 각 2버전), 온·오프라인 광고물 신규 제작, 오프라인(지면) 광고(한국무역신문, 12.18), 유튜브 동영상 광고 게재(11~12월), NCP 홈페이지 관리(수시)

○ 자료발간 및 연구조사
- 2023년 각국 NCP 분쟁사례집 국영문본 제작(총 16개 문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개정버전 번역 및 배포(12월), 한국NCP 조정절차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국NCP 활동보고, 기업책임경영 관련 동향 파악 등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NCP 운영제도 개선 ○ 이의제기사건 분쟁사례집, OECD 발간물의 번역・발간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전파에 기여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 ○ 세미나, 포럼,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일반대중의 국제적 기준 인식 제고 ○ 해외진출기업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촉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 홍보 지속적으로 강화
○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동료평가 등 반영한 한국NCP 운영개선 지속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	과·팀명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피해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및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노력 지속 -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는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절차의 중복과 지연 방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상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1년 10월 정부 발의)이 국회에 계류되다가 '24년 4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됨			

'23년 이행실적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1년 10월 정부 발의)이 국회 계류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단체소송 활성화)이 폐기됨에 따라 법 개정 재추진 필요 - 다만 남소 우려 등으로 인한 업계 반발로 인하여 난항 우려

향후추진계획	○ 소비자기본법 개정 검토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31	3	28	0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4	1	13	-	-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7	2	15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 · 외 협력 】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	VI-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추진중
2	VI-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추진중
3	VI-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일부완료**
4	VI-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중
5	VI-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추진중
		(2)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추진중
6	VI-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중
7	VI-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추진중
8	VI-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추진중
9	VI-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중
10	VI-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추진중
		(3)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중
11	VI-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중
12	VI-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중
13	VI-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추진중
14	VI-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추진중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5	VI-2-(1)-①4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추진중
16	VI-2-(1)-②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중
		(2) 학교 교육	추진중
17	VI-2-(2)-①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추진중
18	VI-2-(2)-②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추진중
19	VI-2-(2)-③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추진중
20	VI-2-(2)-④	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과제완료('23)**
		(3)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가 교육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1	Ⅵ-2-(3)-①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2	Ⅵ-2-(3)-②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3	Ⅵ-2-(3)-③	③ 군 장병 인권교육	추진중
24	Ⅵ-2-(3)-④	④ 변호사 인권교육	추진중
25	Ⅵ-2-(3)-⑤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추진중
26	Ⅵ-2-(3)-⑥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중
		(4)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	추진중
27	Ⅵ-2-(4)-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중
		(5) 인식 개선	추진중
28	Ⅵ-2-(5)-①	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29	Ⅵ-2-(5)-②	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30	Ⅵ-2-(5)-③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완료('23)**
31	Ⅵ-2-(5)-④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Ⅵ-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 비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주요내용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유네스코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250	200	△50	△20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관련 국내현황 및 예상쟁점 사항 검토('23.1.~12.) ○ 한국의 SDG4 이행 중간점검을 통해 교육 형평성 목표 모니터링 및 분석('23.5.~11.) ○ 제 7회 SDG4-교육 2030 포럼 개최, SDG4 중간점검 결과 공유('23.1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SDG4 중간점검을 통해 국내 교육 형평성 현황 점검 및 세부 현황 과제 발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협약이 비준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권리, 의무 관련 분쟁 등의 발생 및 확대로 혼란을 야기할 우려

향후추진계획	○ 「1960 교육차별 방지 권고 및 협약」 국가보고서 제출(~'24.9.)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검토(계속)

1	Ⅵ-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주요내용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제인권증진	226	241	15	6.6
국제인권 역량강화	226	241	15	6.6
(인권정책 개선 연구)	55	35	20	3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55 -> ('24)35

'23년 이행실적

○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 ('23. 1. 4. 가입, '23. 2. 3. 발효)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23.9.~'23.12.)

- '유엔 사회권규약 개인진정 결정례 연구'를 통해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기반한 개인진정제도 및 기접수된 개인진정 결정례 현황 정리, 사회권위원회 법리 파악, 대한민국에 가지는 시사점 등 분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법리를 토대로 사회권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검토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 생산 ○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인권조약의 추가 가입·비준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법령 제·개정 필요성, 비준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조약 또는 선택의정서 가입·비준 관련 연구 지속 추진

2	Ⅵ-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를 통한 인권 보호·증진			
	주요내용	○ UN「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제1항 (g)호(가족의 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에 대한 유보철회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민법 제781조 개정 후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 민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사항			

'23년 이행실적	○ 제8차 심의 최종견해 47번에서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계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협약 제16조 제1항 (g)호를 유보철회할 것을 권고 - 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해서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신중한 추진 필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민법 제781조 개정(법무부 소관) 여부에 따라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3	Ⅵ-1-(1)-③-㉮	국제인권조약 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 법무부, 여가부 공동 추진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및 특별절차 참여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노력 및 국제협력 강화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매커니즘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 외교부는 국제인권조약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주무 부처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 조사 시 협의 및 관계부처 면담 실시 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9.4-9.12) 지원 - 외교부 장관 면담 및 법무부·통일부 등 타 정부부처 인사, 시민사회, 탈북민 면담 조율 *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수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별보고관 활동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관심 제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25) ※ '22.1월-6월간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22.6월 국가보고서 제출 후, 현재 위원회측 심의 일정 접수 대기 중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정보의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지속			
	주요내용	○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조사 시 협의 및 관계부처 면담 실시 등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제인권증진	226	241	15	6.6
국제인권 역량강화	226	241	15	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여('23.1.),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후속보고서 제출 및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23.10.), 제4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답변서('23.7.) 및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23.11.)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절차 기준 마련 - 유엔 인권메커니즘 워크샵('23.4.) -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대상 유엔 인권메커니즘 전반 및 당해 주요 업무 계획 설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부처·기관 대상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부처간 협업 체계화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를 통한 조약 이행 및 인권 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절차 적극 참여 ○ 국가보고서, 심의 등 국가보고절차 이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 협력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노력 소개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			
주요내용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 ○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30	100	70	2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 연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 현황을 점검 및 분석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절차가 변경*되면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25년 이후 예상) * < 변경 절차('23.9월) > (기존) 국가보고서 제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채택 → 추가보고서 제출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민간보고서 기반 사전쟁점목록 채택 → 국가보고서 제출

향후추진계획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계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안내 일정에 따라,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25년 이후 예상)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통한 인권 보호·증진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심의 준비 - '18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사전질의 답변서 제출('23.6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국내 이행 노력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완료과제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완료('24.5.14)

4	Ⅵ-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주요내용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원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활동 수행하며,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에서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3,924	4,102	178	4.5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1,800	2,040	240	1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내)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 지원

- (교사 양성) 초·중등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23년 선발) 제9기 중앙 선도교사 67명 및 시·도교육청 선도교사 593명 선발
- (진로 체험기회 제공)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을 활용한 국제기구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 (대학 내 강좌 확산 지원) 대학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확산을 위한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 개발, 특강 및 수강생 활동 지원 실시
  ※ ('23년) 대학(7개), 대학원(4개) 대상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발 지원(약281명 수강)

○ (국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선도

- (국제행사 개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사회 내 의제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선도
  * 제8차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23.10.18~19., 102개국 2,800여명 참석)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23.11.11., 60개국 130여명 참석) 등
- (국가별 확산 추진)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개발 지원, 개도국 대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지정*** 등 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추진
  * ('21-'23) 라오스, 르완다, 인도네시아, 조지아, ('22-'23) 가나,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부탄
  ** 세계시민교육 청년리더십 워크숍('23.4월) 및 교사교육가 국제연수('23.7월) 실시
  *** ('22)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 ('23) 6개국(인도네시아, 라오스 추가)

○ (온라인 기반 마련)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ODA 대상국 '맞춤형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 온라인 확산 기반 마련
  * 세계시민교육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언어 지원
  ** ('23) 온라인 기본강좌 19종, 심화강좌 9종, 특강 13종 연중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593명), 원격교육 강좌 운영(2개 과정 신규개발 포함 28개 강좌 운영), 대학·대학원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11개 강좌), 제8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10월, 102개국 2,800여명 참석),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 테이블(11월, 60개국 130여명 참석) 개최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속 지원 - (초중고) 교육자료 개발·보급*, 선도교사 선발, 체험활동 기회 제공, 수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기반 확대 지원 * 혐오발언 대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핸드북 시범 적용 및 최종본 발간 및 보급('24. 11.) - (대학) 대학(대학원 포함) 내 커리큘럼 개발 및 학생활동·특강 지원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술 기반 강화 지원 - (국외) 세계시민교육 의제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고 개도국 교육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지원(ODA)

5	Ⅵ-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협의 절차를 정례화하여 국가보고서 내용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			
주요내용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견해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이행방안 검토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포럼 개최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 추진을 위한 도서 발간·배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제인권증진	226	241	15	6.6
국제인권 역량강화	226	241	15	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협의
- 제4차 UPR 심의 후속조치 간담회('23.4.),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간담회('23.8.)

○ 2023년도 제1차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서면 개최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정부답변서(안) 보고 및 제3차 NAP 이행평가 심의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포럼 개최
-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23.9.)

○ 국제인권기구 견해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등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에 따른 관보 게재('23.1.), 다자조약 국문본 번역개선작업에 따른 자유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정정 관보 게재('23.6.), 제4차 UPR 실무그룹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게시('23.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보고절차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보고서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 ○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기구 견해 등의 번역본 관보·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일반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일정으로 학술회의·포럼 등 개최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조약 및 조약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6	Ⅵ-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주요내용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국가별·주제별 인권 논의 및 결의 적극 참여 -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나라 주도 이슈 적극 추진 ○ 국제사회 관련 논의에 건설적 역할 수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253	3,943	690	21.2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175	211	36	2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내 국가별·주제별 인권 논의 및 결의에 적극 참여 - 제52차 인권이사회(2-4월) 계기 △외교장관 기조연설 시행(2.28),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공동발언 주도 및 총 18개 공동발언 참여, △20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인권 COI 10주년 기념 부대행사 주최(3.21) 및 3개 부대행사 공동후원 - 제53차 인권이사회(6-7월) 계기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 및 13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건강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시 공동발언 주도 및 16개 공동발언 참여, △AI와 인권 부대행사 공동 개최 - 제54차 인권이사회(9-10월) 계기 △국별·주제별 인권 관련 총 7회 발언, △13개 공동발언 참여, △18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2개 부대행사 공동후원 -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우리나라 심의 대응 및 여타 회원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 제53차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여 컨센서스 채택(7.14) -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권 증진을 강조하고 관련 원칙들(투명성 증진, 비차별 보장, 인권 영향 평가 도입 등)에 대한 인권이사회 공통의 인식 도출 * 우리 정부 주도 하 격년으로 상정하는 '지방정부와 인권' 후속 결의는 '24.9월 상정 예정 ○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 제52~54차 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 관련 부대행사 4차례 공동 주최 또는 후원 - "신기술과 민주주의, 인권" 제하 제9회 글리옹 인권 대화 개최(5.25-26) 등 국제회의 개최 -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고위급 행사 계기 '신기술과 인권' 라운드테이블(12.12.) 등 국제회의 참석 ○ 인권이사회 및 총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결의 및 공동발언 참여(총 6회) ○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1.30., 서울) 등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논의에 건설적 기여 - 우리 외교장관 주최 하 주요국 및 국제기구 고위급 연사 40여명 참석 * 유엔 안보리에서의 WPS 의제 증진 논의 / 동 계기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적극 참여를 통한 인권 증진 기여 ○ 국제사회의 논의 증진 기여 및 관련 이슈 선도를 통한 우리 정부 위상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조 하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에서 국제 인권 증진 논의에 지속 참여

7	Ⅵ-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지속 확대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253	3,943	690	21.2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175	211	36	2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확대
- UNHCR 난민최고대표보(4월), 난민최고부대표(11월) 방한 등 한-UNHCR 고위급 교류 지속
- '23년 UNHCR 자발적 기여금 2,213만불 지원 및 '24년 2,844만불 공약(12월 관련 회의 계기)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에 지원 지속(연 200만 유로)

○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개최(3월, 대통령 및 외교장관)
- 제3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12.1., 서울)
- 민주주의공동체(CoD, Community of Democracies) 각료회의·운영이사회· 집행위원회참여 및 재정 기여 지속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진출 적극 지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19.~'22. 임기), 유엔 사회권위원회('19.~'22. 임기), 유엔여성기구 집행이사국('23.~'27. 임기),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위원국('20.~'24. 임기), 민주주의공동체 집행위원국('22.~'24.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2. 임기), 유엔자유권위원회('21.~'24. 임기),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21.~'23. 임기),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20.~'23.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22.~'25. 임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22.~'26. 임기), 유엔 난민기구 고위급('21.~ 방글라데시부사무소장) 진출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 ○ 국제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난민 관련 국제기구의 예산 소요 및 재정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 기여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 존재

향후추진계획

○ 인권 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인권·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속

8	Ⅵ-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인권기반 사업성과 관리체계 확립 ○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발굴 다각화 노력 ○ 개발협력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고도화함으로써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			
	주요내용	○ 인권기반 사업성과 관리체계 확립 - 사업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발굴 다각화 노력 - 평화, 젠더, 장애 등 이슈별 권리증진 사업 확대 ○ 개발협력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고도화함으로써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 - 인권영향평가 제도 및 인권위험관리 책무성 시스템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분야 사업품질관리 체계 구축 - 사업 품질검토 회의 진행시 인권 주류화 검토 실시 - 인권분야 성과 프레임워크 지속 활용 및 교육권, 식수권 등 분야별 성과 프레임워크 개정 ○ 평화, 젠더, 장애 등 이슈별 권리증진 사업 확대 - 사업 기획단계 기간(2년), 각 프로젝트 내 권리증진 사업구성요소 개발 및 배치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및 인권위험관리 책무성 시스템 강화 - 해외 인권침해 구제 신고 창구 구축 및 운영 - 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 국내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관련 정책 개발시 이해관계자 협의 부족 ○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이해관계자(사업수행기관)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향후추진계획	○ 이해관계자(사업수행기관)의 참여에 기초한 인권기반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속 추진 ○ 해외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창구 개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등)

9	Ⅵ-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 기부 활성화 및 기부투명성 강화를 위한「기부금품법」개정 추진

주요내용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추진
- 자원봉사 영역 확대, 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개선,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등

○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를 위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관련예산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561**	**13,527**	**966**	**7.7**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확산)	280	196	△84	△30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2,579	2,579	-	-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114	103	△11	△10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295	1,166	△129	2.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293	8,483	190	-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 지원)	-	500	500	-
(자원봉사 가치 기념 및 교육 거점 조성)	-	-	50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3~'27) 과제에「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포함('23.3월)

○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 온라인 활동 및 자격제도 관련 조항 포함 및 협력체계 개선 필요(자원봉사계 간담회, 4차례)

○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23.11.23.)

○ 기부금품 상세내역 공개 및 유사서식 통폐합 등 서식 개선을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완료('24.1.1.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추진 행정적 기반 마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에 대한 자원봉사계 공감대 형성

○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기부금품 수입·지출내역 등 시스템 공개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등 규정으로 투명성 강화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기부자의날·주간 및 유공자 포상 규정 마련

○ 기부금품 모집·사용 세부내역 작성으로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유사서식 통폐합, 일부 서식 작성 자동화로 기부금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기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제도 및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기부금품법 개정 완료 및 법 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 등 반영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기부금품의 정의·범위 확대, 목적사업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마련 등

향후추진계획

○ 자원봉사기본법 개정 연구용역 및 전담반(TF) 구성·운영을 통한 개정안 마련(~'24.8월)

○ 자원봉사기본법 법안 발의 및 심사 대응(~'24.12월)

○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현장 점검('24.7~9월)

10	Ⅵ-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과제 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주요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463	3,929	△3,534	△47.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500	3,250	△3,250	△5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운영 및 관리)	81	81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평가 및 교육)	280	196	△84	△30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402	402	-	-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고도화)	200	-	△200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심사·선정('23.1.~2.) : 180개 사업, 6,500백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차 보조금 교부('23.4.~5.)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워크숍 실시('23.4, 5. 12.) : 3회*

* (1회차) 보조금 교부신청방법 및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2회차) 사업평가계획 안내, 보조금 집행등록 가이드라인 설명 (3회차) 최종보고서 작성안내, 집행등록 유의사항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23.7, 10., 11., 12.) : 4회*

* (1회차) 공익사업 예산 및 집행관리 운영 (2회차) 비영리조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3회차) 기획안 구상과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 (4회차) 비영리조직이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23.7.~8.)

* 사업추진현황, 집행지침 준수여부, 증빙자료 구비현황 등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23.9.)

* (회계평가) 1차 보조금의 집행률, 집행등록률, 보완필요금액, (사업평가) 사업기획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23.9.~11.)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실시('24.2.)

*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등록 지연도, 사업홍보, 사업성과 등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미흡단체(60점 미만), 회계평가 미흡단체(50점 미만), 부적정 집행액 1백만원 이상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선정 배제
  · 평가결과 우수단체(상위 30%)에 다음연도 사업선정시 가점부여(상위 10% 3점, 차상위 10% 2점, 차차상위 10% 1점)
  · 전전년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자체 SNS(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미공개시 다음연도 사업선정시 감점부여(미공개시 △2점 감점, 공개 시 0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는 0점)

결과 분석

추진성과	○ 뇌전증(구 간질) 인식개선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인권향상에 기여 ○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권 등 공익활동 증진 ○ 회계・실무교육 마케팅 및 홍보, 성과관리 교육 등을 통한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공익활동 지원사업 전체 사업유형 中 인권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의 부족

향후 추진 계획

○ 인권향상 유형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강화

○ 보조금 지원 단체별 집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교육 등 실시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대북정책협력과 /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주요내용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 논의 지속 참여,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협력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 외교 추진	582	647	65	11.17%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148	14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고위급 협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가. 정상 공동성명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4.26, △한-캐나다 정상회담 공동성명(5.17)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5.22)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8.18) △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9.6)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9.6) △동아시아정상회의 의장성명(9.7) △한-영 다우닝가 합의(11.22) △한-네덜란드 정부간 공동성명(12.13) 나. 고위급 협의 결과문서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성명(2.13)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4.7)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7.1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7.14) △세계인권의 날 기념 주간 계기 한미일·알바니아 공동성명(12.15)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12.21) 다. 한미간 공조 - △외교장관, 美 북한인권특사 임명(10.13) 직후 접견(10.16) △한미 북한인권 협의(11.15)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10.16) 공동 주최 등 ○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등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지속 참여 - 유엔 인권이사회(4.4) 및 총회(11.15) 북한인권 결의 컨센서스 동참 및 공동제안국 참여(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경우 5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8.17) 참여(동 회의는 6년만에 재개)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 -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9.4-12) 계기 외교장관 예방(9.11) 및 관계부처 면담 주선 등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상·외교장관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교류 계기 주요 의제로 북한인권 논의 및 각종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의지 발신 ○ 6년 만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 정식 재출범(11.15)을 비롯 유사입장국과 북한인권 관련 협력 강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고위급 협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지속 ○ 유사입장국과 양자 북한인권 협의 개최 추진 ○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등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지속 참여 ○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참여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북한인권정책 제안·소통의 장으로서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협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5,794	3,310	1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실시,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국내·외 북한인권 공론화 △문화예술행사 등 약 62개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시민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등 실시
  * △인권실장, 단체 대표자 간담회(4.14.) △보조사업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4.27.) △보조사업 평가·교육 용역계약 체결(6.12.) △보조사업 단체 대상 교육(10.20.)

○ **「북한인권 상호대화」 북한인권 쟁점별 토론회 8회, 종합토론회 1회 개최**
- 기존 연 1회 → 총 9회로 확대 개최해 구체적 현안을 토론
  * '21.3월, '남북한 인권협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제, 13개 단체(26명, 당일)
  '22.3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협약' 주제, 11개 단체(29명, 2박3일)

구 분	일정(안)	주 제
토론회	'23.9.7.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
	'23.9.14.	국군포로, 납북·억류 국민 문제
	'23.9.21.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
	'23.10.12.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
	'23.10.19.	북한인권 분야 탈북민들의 역할과 활동 증대 방안
	'23.10.26.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
	'23.11.9.	북한인권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3.11.16.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방안
워크숍	'23.11.30.	종합 토론회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면담) △장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특별보고관 면담(9.11., 10.17.) △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10.17.) △장관, 영국 의회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접견(2, 9, 10월)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대상 북한인권 설명회 개최(10.19.) △장관,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 대표단 면담(10.23.) △차관, 휴먼라이츠워치 상임이사 면담(10.24.) 등 - (토론회 등)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토론회(4.24.)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7.11.)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방한 계기 토론회 개최(2.10.)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12.18.) 등 - (기타) △북한인권실상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전시(5월~11월, 서울·목포·대전·美워싱턴·獨함부르크) △'북한인권 영화 다시 보기' 행사(9.13.~15.)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 - 북한인권법 관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 발송(8.30.)' 등 국회화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 원활한 이행 추진 -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업무로 규정된 시민사회 활동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효과 - 북한인권 방탈출 게임 등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국민 관심 제고 ○ 쟁점별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통해 10대 정책제언 도출 - 시민사회, 학계, 탈북민, 대학생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총 9회를 개최, 상호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 관련 공감대 형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2024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관리·평가 및 사업 홍보 적극 추진 ○ 청년세대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추진, 참석자와의 소통·공감대 형성에 주력 ○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감대 형성 노력 경주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팀명	-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기록·보존·관리 - 북한인권 기록의 체계적 분석, 보존·관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록검증과 책임규명 준비 등에 필요한 국내외 북한인권 연구·분석자료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9	278	39	16.3

과제개요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통일부 이관 자료 및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보존·관리 - 북한인권기록(문답서) 이관 자료 분석 완료, 인명카드 작성 및 자료분석평가회의 개최 -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관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체계적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 지속 추진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주요내용	○ 미국, 일본 포함 유사입장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사입장국(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가. 정상회의 공동성명 -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8.18)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성명(9.7)을 비롯한 각종 아세안 관련 결과문서에도, 납북자·억류자 문제 포함 북한 관련 인도적 사안 해결의 중요성 강조 나. 주요국과 협의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협의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포함 북한인권 문제 논의 - 한미 북한인권 협의(11.15)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논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요국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논의 및 각종 결과문서를 통해 동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 확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미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논의 및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납북자대책팀
과제목표	○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남북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문제 협의·해결 추진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남북관계 차원의 해결 노력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			
주요내용	○ 법제도 개선 등 인도적 상황개선 기반 조성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사업 확대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노력 및 납북피해자·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 도모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대비 증감	전대비 %
합 계	732,658	592,243	△140,415	△19.1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22	504	82	19.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지원	323	406	83	25.7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436	416	△20	△4.6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73	1,419	△54	△3.7
▪ 구호지원	107,008	96,307	△10,701	△10
▪ 민생협력지원	604,969	475,314	△129,655	△21.4
▪ 이산가족교류지원	18,027	17,877	△150	△0.8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도적 대북지원 국내외 여건 조성 및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분야별 인도적 상황진단 세미나 및 행사 개최(6회) △ 국제기구 협의 (34회) △민간단체 및 전문가 면담(42회)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및 고시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등 (6회)
- △대북지원사업자 제도 폐지 및 대북 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등 통일부 고시 2회 개정('23년 4월, 11월) △북한주민 접촉신고 신고 수리 등 질서관리 (27건)
- △ 24년 남북협력기금 대북지원 예산 5716억원 편성(<구호지원> 963억원, <민생협력지원> 4753억원) △대북지원 추진 의사 지속 표명('23.4.26. 한미정상 공동성명)

○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지속,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23.3.) 및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23.9.)
-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23.2.)
-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23.7~12.)
- △영상편지 제작(1,022편) △유전자 검사(1,112명)
- △추석 계기, 장관 고령이산가족 위로방문(9.26.) △연말 계기, 차관 독거 이산가족 위로방문(12.22.) △이산가족과 지역별 취약계층 이산가족 방문(12.18.~22.) △설·추석 계기 임진각 망배단 참배 지원
-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6회, 495명)
- 이산가족 단체 국고보조(8,200만원) 및 활동지원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납북자대책팀 신설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범정부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 △전후납북자 보상금 지급 결정(5건) △무주택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2건) △귀환 납북자 사회적응 지원(7명) △납북자단체 국고보조(전시 1억원, 전후 1.85억원) △가족 위로방문 및 단체 면담(30회) △귀환납북자·국군포로 별세 시 조문(3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북지원 재개 시 북한 취약계층에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 - 통일부 고시 개정 및 대북지원정보시스템 개선 등,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내외 협조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달성에 기여 ○ **이산가족 교류기반 사업을 지속 추진, 안정적인 이산가족 정책 기반 마련**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발표, 향후 3년간 이산가족 정책 방향 제시 - 향후 교류재개와 이산가족이 사후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영상편지 제작·유전자 검사 추진 - 이산가족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위로사업 추진, 정책만족도 지속 상승 *「2023년 이산가족 초청행사」 만족도 : 91.6%(전년대비 2.4% ↑)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다각적 노력을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에 기여** - 납북피해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실시하고, 가족·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 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지속, 북한의 미호응 등으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미진전

향후추진계획	○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 북한이 지원에 응할 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성 있는 인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노력 ○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이산가족 위로사업 지속 추진, 대화 재개시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교류방안 협의 및 해결 노력 ○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면서, 피해자·가족·단체 소통·지원 확대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업경영정책과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협력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위도지역 작물생산성 향상기술개발	4,317	0	△4,317	△100.0
▪ 남북산림협력사업	6,922	2,818	△4,104	△59.3
▪ 종자 및 묘목 생산・관리	-	2,818	2,818	순증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고위도작물생산성향상기술개발 과제 완료 ▪ 남북산림협력사업, 종자 및 묘목 생산・관리 정상추진

'23년 이행실적

○ 남북 간 농업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북방지역 식량작물의 재배환경 분석과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

- 북한 북부 유사기후지역 벼 이앙시기에 따른 품종별 출수반응 구분
  * 북-중 접경지(단둥) 벼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반응 구분(4유형)
- 포트묘 재배를 통한 북한 저온지역 벼 재배 적응성 향상
  * 포트묘 재배를 통한 북한 저온 지역 적응성 향상(강계 등 4지역)
- 북방지역 적응 유색미 품종의 가공 적합성 평가
  * 북방지역 적응 유색미 설기떡 및 발효주 가공적성 평가
- 국내 조, 기장, 메밀 품종의 강원도 북부 중산간 지역의 파종한계기 및 수량성 평가
  * 파종한계기 : (조) 중생종 6월하순, 만생종 6월 중순, (기장) 중생종 6월하순, 만생종 6월 중순, (메밀) '양절메밀' 8월 초순, '쓴메밀' 7월 중순
- 고위도 지역 발생 식량작물 주요 해충 동정과 발생 시기 탐지
  * 벼 줄기가해 해충 '이화명나방' 2세대, '벼밤나방' 3세대이상 발생 탐지
  * 옥수수 '조명나방' 연중 3세대 발생 및 '콩나방' 1~2회 발생 탐지
- 북방지역 비옥도 증진을 위한 농업환경 기초자료 구축
  * 농업지대 구분, 농업지대별 기상 분석, 농업지대·해발별 경지면적 추출
- 위성영상 활용 북한지역 농경지 비율 변화 및 간석지 분석
  * 황해남도 농경지비율 : '80년대말 40.1% → '00년대말 50.4 → '10년대말 54.3
  * 대계도 간석지 면적 정밀분석 : (참고문헌) 87.2 → (위성분석) 90.17㎢
- GIS 기반 북한 지역별 주요 채소 작물 적정 재배시기 판별 시스템 개발
  * 배추 등 주요 채소 지역별 및 기간별 적정 재배 기간 설정

○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자원비축・활용)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나무의 종자 확보와 묘목을 생산하며 남한 산림사업 육성에 우선 활용
  * (종자) 現 36톤 비축, (묘목) 370만 그루 규모
- (북한 동향 분석) 북한 산림 및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등에 제공
  * '23년 1,294건 수집, "북한산림 톺아보기" 웹 발간(매월), 상・하반기 정기간행물 발간(2회)
- (전문인력양성) 산림협력의 학문적 저변 확대를 위한 논문 공모(10개팀), 북한산림 이해과정 교육 운영(40명)
- (교재발간) 남북 간 산림협력에 필요한 산림 전문 공통교재 발간(식・약용 식물 재배 및 연료림 조성)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 (산림재해 대응) 정부 및 학계 등 협업으로 접경지역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 (산불) 현장토론회(3월), (산사태) 산악기상관측망 도입(3개소), (병해충)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8만마리) - (산림실태조사) DMZ 내 산림실태조사 실시(2개소, 3~4월) 및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모니터링(3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기후대에 적합한 벼 품종 선발 등 농업협력을 위한 최적 품종, 재배기술 자료 확보 - 북한 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품종 선발, 재배적지 및 파종한계기 설정, 적응 품종 가공 적합성 평가, 북한지역 농업환경 기초자료 구축 등 ○ 국정과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및 남북산림협력 재개 대비 기반을 구축 * 산림종자·묘목 비축, 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3개소) 운영, 공통교재 8종 및 논문 40편 확보 ○ 통일·남북산림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유도 *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11회), 민간단체 컨설팅(19건), 청년참여 200여명, 센터 이용객 4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고위도지역 작물생산성 향상기술개발사업 국가R&D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종료 ○ 국제정세 및 경색된 남북관계로 업무 추진 동력 상실 - 정부는 교류·협력보다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안정에 노력 ○ 남북산림협력 부서 폐지 및 기능 축소로 국정과제 수행 어려움 * '23년 7월, 남북산림협력팀(5명) → 임업수출교역팀(2명)

향후추진계획	○ 고위도지역 작물생산성 향상기술개발 사업 종결('23년) ○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시설과 자원은 국내용으로 활용 - 조성·비축된 자원과 센터 등 기반시설을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 및 산림교육 강화에 활용 ○ 민간협력 및 국민 소통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지지기반 지속 유지 - 업무협약 단체(종교·민간)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추진 - 청년(대학생) 대상 남북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남북 간 보건복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달성			
	주요내용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상 건강권 차원에서 남북 간 감염병 대응 협력 필요			
	관련예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 중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역량강화사업' - ('23년) 80백만원, ('24년) 전액 삭감* * 재단 이월금 50백만원 편성하여 추진 중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최근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도주의적 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20.6.16.) 이후 북한의 반복적 핵·미사일 도발('21.7.27.), 남북 통신선 차단('23.4.7.), 오물 풍선 살포('24.5~) 등으로 남북 소통 어려운 상황 - 이에 불구하고,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식 발표**('22.5.12.) 후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검토*** 했으나, **북측의 수용 거부로 불발**됨 * 북측 요청에 대비 백신 및 주사기·진단키트 등 지원 물품 확보방안, 전달방법 등 검토 ○ 이에 **직접적 지원보다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제고에 주력 추진 중** - **(인적 역량강화)** 국내 북한 보건의료 관심자 대상으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과정 진행 ・(주요내용) 북한 보건의료 현황,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미래, 기후변화, 국제사회 이슈가 북한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 북한 보건의료 관련 교육 ・(주요대상) 의료인, 공무원, 대학생 등 ・('23년 실적) 74명 - **(네트워크 구축)** 관계단체/기관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저변 확대 ・(정보 공유) 대북지원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업무협의(총 5회), 통일부 북한 사업 추진방향 공유 회의(1회), 북한코로나 19 연구를 위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참여(5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북한 사업 경험공유 발표(6월), 남북 보건의료 협력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프로그램 진행(3회), 북한보건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9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력 역량강화)** 대상/수준별 교육 운영(입문,기본,심화)을 통한 보건 의료인력 및 국민 대상 북한 보건·인도적 지원 관련 인재 양성 ○ **(네트워크 구축)** 국내 유관 기관(복지부, 통일부, UNICEF,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및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심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남북 관계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도주의적 협력 추진에 애로 ○ '24년도 전액 삭감 등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 중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역량강화사업'

향후추진계획	○ 향후 남북 간 대화 재개가 본격화되면, 통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 방안 모색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림청	과・팀명	임업수출교역팀
과제목표	○ 남북대화 재개 시,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및 산림보호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주요내용	○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남북산림협력사업	6,922	2,818	△4,104	△59.3
-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302	-	△302	순감
- 고성평화양묘장 운영	1,127	-	△1,127	순감
-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	2,254	-	△2,254	순감
- 철원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	2,254	-	△2,254	순감
- 남북산림협력 사업운영	485	-	△485	순감
- 토양오염정화 안정화	500	-	△500	순감
▪ 종자 및 묘목 생산・관리	-	2,818	2,818	순증
- 특용양묘장 운영	-	2,818	2,818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자원비축・활용)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나무의 종자 확보와 묘목을 생산하며 남한 산림사업 육성에 우선 활용
  * (종자) 現 36톤 비축, (묘목) 370만 그루 규모
- (북한 동향 분석) **북한 산림 및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등에 제공**
  * '23년 1,294건 수집, "북한산림 톺아보기" 웹 발간(매월), 상・하반기 정기간행물 발간(2회)
- (전문인력양성) 산림협력의 학문적 저변 확대를 위한 논문 공모(10개팀), 북한산림 이해과정 교육 운영(40명)
- (교재발간) 남북 간 산림협력에 필요한 산림 전문 공통교재 발간(식・약용 식물 재배 및 연료림 조성)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 (산림재해 대응) 정부 및 학계 등 협업으로 접경지역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 (산불) 현장토론회(3월), (산사태) 산악기상관측망 도입(3개소), (병해충)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8만마리)
- (산림실태조사) DMZ 내 산림실태조사 실시(2개소, 3~4월) 및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모니터링(3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정과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및 남북산림협력 재개 대비 기반을 구축 * 산림종자・묘목 비축, 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3개소) 운영, 공통교재 8종 및 논문 40편 확보 ○ 통일・남북산림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유도 *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11회), 민간단체 컨설팅(19건), 청년참여 200여명, 센터 이용객 4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정세 및 경색된 남북관계로 업무 추진 동력 상실 - 정부는 교류・협력보다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안정에 노력 ○ 남북산림협력 부서 폐지 및 기능 축소로 국정과제 수행 어려움 * '23년 7월, 남북산림협력팀(5명) → 임업수출교역팀(2명)

향후추진계획

○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시설과 자원은 국내용으로 활용
- 조성・비축된 자원과 센터 등 기반시설을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 및 산림교육 강화에 활용

○ 민간협력 및 국민 소통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지지기반 지속 유지
- 업무협약 단체(종교・민간)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추진
- 청년(대학생) 대상 남북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13	Ⅵ-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기획과 북한인권증진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주요내용	○북한인권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발표 ○범정부 협의체「북한인권정책협의회」 활성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5,794	3,310	1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수립·발표('23.12.26.)**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체계

비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목표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추진방향	·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자유권 및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 추구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과제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북한인권법 제15조에 근거,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담은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보고(9.7.)**

- '22.9~'23.8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 포함

○ **정부 내 북한인권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북한인권정책협의회」운영**

- 정책 추진방향 논의 및 유관기관별 정책 추진현황 점검('23.4.10., 8.25., '24.1.22.) 및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23.10.25., 11.9., '24.5.17.)

결과분석		
	추진성과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노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8개 추진과제 이행 등 노력 지속

13	Ⅵ-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팀명	-
	과제목표	○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주요내용	○ 통일 대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9	278	39	1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 -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에 대한 북한의 통제 수단과 인권침해 실태」 용역 완료('23.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 외부정보와 문화유입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북한인권 실태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전문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정책수립 기반 구축

14	Ⅵ-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기획과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과제목표	○「북한인권법」이행 정상화			
주요내용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노력 지속 경주 -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북한인권증진위원회」구성·운영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 인권상황 파악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기록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5,794	3,310	133.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22	860	138	19.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9	278	39	1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북한인권법」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

- '북한인권증진위원회'(통일부장관 자문기구)를 구성·운영*('23.3.6. 통일부훈령 발령)을 통해 민관협력 및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 등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3.10., 4.13., 6.30., 9.22., 11.21.)

* 북한인권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국내외 북한인권 공론화 및 문화예술행사 기획·개최 등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요 >

o (위상)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 자문기구

o (역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함

-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구성) △이정훈(연세대, 위원장) △김범수(세이브NK) △김태훈(북한인권) △제성호(중앙대) △홍성필(통일과 나눔) △김성민(자유북한방송) △김일주(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원재천(한동대) △박은영((사)크레도)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백범석(경희대)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23년 141명), 조서결과 기록(법정 문답서 등) 원본 법무부 이관**

○ **2023년「북한인권보고서」최초 공개발간**(3.30. 국문본 2,500부, 7.7. 영문본 1,500부)

- 국내외 관계기관에 배포 △정부기관 △주한외국공관 △주한국제기구 △주한NGO △재외공관 △미

	국무부 △국내외 연구소 △국내외 인권단체 △관계기관(민주평통 등) △기자단 등 - 보고서 발간 계기, 국내외 설명회·학술행사 등 공론화 활동 실시 * △「2023북한인권보고서」 설명회(독일, 5.29~6.2.) △북한인권알리기 토크콘서트(5.10.)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행사 부스 운영(5.26~27.)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강의(5.17.) △발간 계기 좌담회 패널 참석(7.11.) △주한 외국공관 브리핑(10.19.) 등 ○ **북한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에 대한 북한의 통제 수단과 인권침해 실태」용역 추진('23.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북한인권법」 이행 노력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통해 북한의 현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 모색 지원 ○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및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개 보고서 지속 발간 ○ 체계적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 지속 추진

15	Ⅵ-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교육 진흥 추진			
	주요내용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참여 -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3.2.)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안 검토
	미흡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지연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 시 적극 협력

16	Ⅵ-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과・팀명	연수과, 스마트교육팀
	과제목표	○ 원내 통일교육 과정 내 북한 인권 관련 과목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에 관한 이해도 제고 ○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북한인권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관련 대국민 이해 제고			
	주요내용	○ 원내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관련 교육 커리큘럼 확대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차세대전문가과정 등 원내 주요 교육과정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기초하여 「북한실상 알리기」 적극 전개 ○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 -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 대상 탈북민 우수강사를 「북한실상 알리기」 핵심 전달자로 지속적 활용 ○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북한인권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북한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 등 SNS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70	5,695	625	1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원내 장·단기 교육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교육 확대 편성 - (북한이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및 북한인권 실상 영화 관람 등 - (인권교육)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통일부장관 특강,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북한 인권 전문가' 특강 등 진행 - (현장견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 실시 ○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북한인권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북한인권 문제와 향후 과제」 △「북한인사이드 : 북한 사회와 주민 이해」 등을 운영 ○ 북한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 등 SNS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추진 - △「북한인권 문제와 향후 과제」(업데이트) △「탈북민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통제와 인권」 △탈북민 작가(강춘혁, 도명학, 오혜선, 오성철) 작품 관련 영상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관련 영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에게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부각 및 북한인권 개선 촉구 ○ △북한 인권 실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및 평가 등 이해하기 쉬운 북한인권 교육 콘텐츠 운영 및 개발
	미흡 또는 장애요인	

추진계획	○ 원내 교육 시 북한인권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실상 알리기」 확대 전개 ○ 탈북민 우수강사 지속 발굴을 통해 탈북민 강사 풀(pool) 확대 및 통일안보 대표 강사로 육성 ○ 북한인권 교육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운영·개발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16	Ⅵ-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 교육 및 홍보 지속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진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제인권 역량강화	226	241	15	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제인권 책자·번역본 발간·배포
- 「2024 국제인권조약집」('23. 12.)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23.12.)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
- 「8컷으로 알아보는 세계인권선언」('23. 12.)
- 「Q&A로 알아보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편 - I 편」('23. 12.)
- 「Q&A로 알아보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편 - II 편」('23. 12.)

2023년 [제18호]

2023년 [제17호]

2023년 [제16호]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 관련 책자 및 뉴스레터 발간·배포 등을 통하여 인권 의식 제고 및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 확산에 기여
미흡 또는 장애요인	○ 대국민 인권 인식 제고 및 인권 이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 모색 필요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국제인권 의식 증진 노력

17	Ⅳ-2-(2)-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육콘텐츠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친과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주요내용	○ 교과용 도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요소 내용 검토 및 반영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상시 점검 - 국·검정도서는 수정·보완 체제를 상시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실시			

관련예산

(국고(일반회계), 지방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국고(일반회계))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사업)	1,011	975	△36	△3.6%
▪ 교수학습 자료개발(지방비)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1,375	1,174	△201	△14.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23년 이행실적

○ 교과서 수정·보완 체제 운영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질 관리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사후관리
  *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제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인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환류

- 현장 교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교과서 모니터링단 중 양성평등·인권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여 교과용도서의 인권 내용 검토 및 인권 의식 함양 도모

- 양성평등, 인권·다문화·재외동포교육 전문가 중 공모를 통하여 위원으로 위촉('23년 12명)하고, 초등 수학·사회·과학 교과용도서의 양성평등·인권 분야 모니터링 시행 후 연 2회 보고 및 결과 환류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3년 검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8,181건 중 양성·평등 인권 전문가 의견에 따라 83건*의 교과서 및 지도서 수정 * (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설명 정정(여러분 모두의 승진을 축하합니다→우리 회사는 장애 또는 다른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채색 정정(모든 사람 피부색 동일→다문화 구성원 추가) 등 ○ 2023년 교과서 모니터링단 중 양성평등, 인권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여 본문*과 삽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총 25건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권고 * 본문 검토 : 편견과 왜곡,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정체성, 다양성과 균형성 등 ** 삽화 검토 : 성별, 다문화, 장애, 노인, 가족, 지역 이미지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시스템을 활용한 교과서 질 관리(매월)

○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인권친화적 교과서 관리(중간보고회('24.8월), 최종보고회('24.12월))

18	Ⅵ-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원양성연수과
	과제목표	○ 자격연수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주요내용	○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시도교육청에 자격연수 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요청 ○ 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시 교원 자격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인권 존중’ 등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23.12.12.) ○ 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 사항‘ 포함 안내(‘23.3.9.) * 인권(양성평등 포함) 교육 및 생명 존중(자살예방 포함) 교육(‘18년~), 예비교원의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0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지원 ○ ’2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자체 운영점검*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원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5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시도교육청 안내 예정(‘24.하) ○ 교원양성기관 대상 예비교원 양성평등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24.하)

19	VI-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장애 인식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수**가 재학 중인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 ('14) 87,278명 → ('23) 109,7103명, ** ('22)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3.3%			
	주요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대상 확대 ○ 학교별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실시학교 비율 : ('23) 94.14% ○ 일반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참여 학교 수 : ('23) 3,601개교 ○ 장애 인식 개선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자료 : ('23) 초등학생용 팝업북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디든 좋아" 총 1,640권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이해교육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라디오)* 송출 및 교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공모전(백일장, 수업사례)**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장애이해교육을 적극 조력 * (유아) 애니매이션 "춤추는 민지", (초등) 동화·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영상물 "대한민국 1교시-손잡고 한 발짝 더", (중등)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린다" ** (백일장) 학교급별 시·산문 등 4개 부문 총 2,130명 수상 및 7개 팀(개인) 수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수교육운영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체 학교 대상 장애이해교육 지속 ○ 민간과 협력하여 학교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자료 개발·보급

20	Ⅵ-2-(2)-④	인권친화적 대학 · 학교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인재양성지원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과제목표	○ 대학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통한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지원			
	주요내용	○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22~'23)을 통해 센터 확산 및 우수사례 발굴 지원 * ('22) 7개교, 5억 원/ ('23) 10개교, 8억 원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 마련 ○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교규칙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 실시			
	관련예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800	-	△800	△100.0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의 조기 안착 지원 및 우수 모델 발굴 추진 * ('22) 500백만원, 3개 유형, 총 7개 대학 → ('23) 800백만원, 3개 권역, 총 10개 대학 -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통해 우수모델 발굴 ※ 예시) 사건처리 핸드북 제작, 인권 공모전 개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마련 및 시도교육청 안내('23.11월) ○ 제17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23.3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조사 결과, 대부분 인권센터를 기 설치 또는 설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23.11월 기준) ※ 총 392개교 중 357개교 설치(91.1%)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지원 ○ 제17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청 인권교육 주요 성과공유 및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대학인권센터 설치는 의무사항이나 여전히 미설치된 대학 존재 ○ 국고 지원을 통해서는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인권센터의 자생적·독립적 발전에 한계

향후추진계획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제 구축 - 대학인권센터 현황 조사 실시('24.下) -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 제고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정보공시 항목 반영 예정('25. 下) ○ 시도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상황 모니터링(상시)

21	Ⅵ-2-(3)-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원행정처	과・팀명	사법연수원
	과제목표	○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 충실 ○ 법정언행 및 법정운영기술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 연수과정 실시			
	주요내용	○ 「국제인권법과 법관」 연수 - 국제인권법 개관, 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국제인권보장체계의 이해와 실무, 형사절차와 정보인권, 사회권 규약의 적용 등에 대하여 논의 ○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법원 전반의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사법지원의 활성화 및 장애법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관그룹의 형성·유지 방안을 모색 ○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법 그리고 법원에서의 젠더에 따른 시각차이, 소수자 보호 등에 관하여 논의 ○ 법정언행컨설팅 - 단독재판장 보임 대상 희망 법관, 별도 선정한 합의부 배석판사 등을 대상으로 1차 법정 블라인드 모니터링, PSRI 직무스트레스 검사, 2차 영상모니터링 실시 ○ 법정운영기술 개선 연구 세미나 - 법정언행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방안 모색, 단독·합의재판장의 바람직한 법정운영 기법 공유 및 토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법관 연수(23년 57개 연수 전체금액) ▪ 법관 연수(24년 59개 연수 전체금액)	800.26	800.26	–	–
▪ 법정언행컨설팅	168	173	5	△3

※ 법관연수 예산은 각 연수별로 예산이 특정되어 배정되어 있지 않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국제인권법과 법관」 연수 – 2023. 5. 22.(월) ~ 2023. 5. 23.(화) – 전국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47명 연수 참가 ○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3. 6. 8.(목) ~ 2023. 6. 9.(금) – 전국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62명 연수 참가 ○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3. 6. 26.(월) ~ 2023. 6. 27.(화) – 재판과정에서의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78명 연수 참가 ○ 법정언행컨설팅 – 2023. 9. 1.(금) ~ 2023. 12. 31.(일) – 단독재판장 보임 대상 희망 법관, 별도 선정한 합의부 배석판사 등 174명 참가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2023. 10. 20.(금) – 희망 법관 중 30명 참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국제인권법과 법관」 연수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협력 하에 진행된 전문분야 연수로, 차별금지, 정보인권, 사회권 규약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어 연수법관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음. 강의내용 또한 충실하여 관련 사건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연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장애법연구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달장애 등 강의주제 선정, 발표자, 지정토론자 섭외 등을 진행하였는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얻은 성공적인 연수로 평가됨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재판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젠더이슈를 다룬 실무 강의 뿐 아니라 법관 개인으로서 젠더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관한 특강,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젠더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좌로 구성되어 연수법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성공적인 연수로 평가됨 ○ 법정언행컨설팅 -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및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법정언행의 개선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법정언행 컨설턴트, 오랜 법관 경력이 있는 원로 법조인의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여러 직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종합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법정언행과 재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는 유익한 세미나였던 것으로 평가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법정언행컨설팅 - 매년 대상 법관의 수 및 배정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다변화에 따라 컨설팅 내용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컨설팅을 담당해 온 업체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컨설팅 내용을 점검할 필요 또한 있음

향후추진계획	○「국제인권법과 법관」 연수 - 격년으로 홀수 해 진행 예정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4. 5. 20. ~ 2024. 5. 21. 실시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4. 6. 10. ~ 2024. 6. 11. 실시 ○ 법정언행컨설팅 - 2024년 상반기부터 진행 중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2024. 9. 30. 실시 예정

21	Ⅵ-2-(3)-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인재개발과
	과제목표	○ 국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 제고			
	주요내용	○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全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안내('23.11.24.)

《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中 》

□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교육 운영**

○ 국민 체감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

- 해당 정책 주관부처 협조를 통해 주요 계기별 직장교육 운영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책 교육과정 등 참여

F6 **주요 정책교육**

구 분	주요 내용
인권의식	▸ **(내용)**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 **(협조)** 인권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1개 기관 대상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 기관별 자체실적 작성·제출(1월) → 확인·점검, 기관인터뷰, 우수사례 평가(4~7월) → 종합평가 결과통보(9월)

-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인권·장애인·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를 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全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인권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인권의식 제고 * 국가인재원, 경찰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관세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중앙경찰학교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을 반영하여 각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안내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22	Ⅵ-2-(3)-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제고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 교육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거주자·취업·신변보호담당관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 실시(「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과정) : 총 3회, 63명 교육 - (1기) △기간 : '23.3.14(화)~17(금), 3박4일간 진행(집합교육 3일, 현장견학 1일),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26명(거주지 4명, 취업 8명, 신변 14명(경찰 11명, 방첩사 3명)) - (2기) △기간 : '23.6.21(수)~23(금), 2박 3일(합숙 교육),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19명(취업 5명, 신변 14명(경찰 10명, 방첩사 4명)) - (3기) △(기 간) '23.9.12(수)~15(금), 2박 3일(합숙 교육),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18명(거주지 2명, 신변 16명(경찰 12명, 방첩사 4명))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전국 경찰 약 900여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23년 연중 계기 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인식개선 제고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24년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대상 워크숍 시 인권교육 실시 : '24년 하반기 예정 ○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에 공문 송부 등 협조 요청 - 보호담당관 과정 강의 목록 제시, 업무 관련 정보 공유 효과 등 적극 홍보

22	Ⅵ-2-(3)-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주요내용	○ 법무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직렬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권교육	214	204	△10	△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감수성 훈련(19회/470명)
- 교정 9회/246명, 보호 4회/92명, 출입국 3회/63명, 검찰 3회/69명

○ 검사, 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검사: 5회, 49명 / 수사관: 11회, 117명)

○ 외부 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3회/1,544명)
- 교정 5회/184명, 보호 11회/328명, 출입국 2회/56명, 검찰 15회/976명

○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6회, 119명)
- 교정 1회/26명, 보호 2회/24명, 출입국 1회/9명, 검찰 1회/11명, 통합 1회/49명

○ 제4기 내부 인권강사 59명 위촉(2023. 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도 인권교육 계획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훈련 15회(검찰 3회, 교정 9회, 보호 4회, 출입국 3회),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4회(직렬별 1회), 1: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12회(검사 2회, 검찰수사관 10회)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설을 통한 인권교육 확대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인권침해진정사건 분석결과 및 주요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신설하여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의식 증대 노력

○ 내부 인권강사 역량 강화
- 외부 강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기법 및 시민사회의 선진 인권의식, 최신 인권자료 공유 등 내부 인권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22	Ⅵ-2-(3)-②-㉰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립과 실시로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 정립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 향상			
	주요내용	○ 체계적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 확대 ○ 경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인권 교육의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교육	52	52	△0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경찰인권보호규칙」*에 따라, 3개년 「제2차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23 ~ '25년) 수립('23. 10. 30), '24년 연도별 인권교육 종합계획 시행 同 규칙 제18조는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제1차 계획('18 ~ '20)과 고도화 계획('21 ~ '22)에 이은 2차 종합계획을 수립 ○「'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24. 2월)에 인권교육을 적극 편성하고,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와 협력·지원 체계* 구축 * '24년부터 △인권강사양성 공동운영 △「경찰인권교육협의회」에 참여·교육체계 지원 협의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찰청 주도의 통합관리 강화)** 인권교육 시 폴넷 「인권업무지원시스템」에 △관서명 △내·외부강사 △교육인원·시간 등을 입력, 본청(인권과)은 모니터링 이행력 확보 ○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23년 국가인권위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연 2회), 「경찰인권보호규칙」에도 근거규정 마련 예정 * (역할) 교육체계 설계, 내·외부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안 마련 등 자문 ○ **(인권강사단 인력풀 구축)** 「경찰인권보호규칙」상 年 필수 인권교육시간(6H) 충족을 위해 △내부인권강사 확대* △외부인권강사(36명) 모집·운영 * '인권 동료강사' 신설, 인재개발원 강사양성과정 확대 年 1회(20명) → 4회(80명) ○ **(인권전문교재 제작)** △인권교육 기본서('20년) 업데이트 및 국가인권위 진정·권고집* 제작·배부 △인권강사용 교재 개발 연구용역(치안정책연구소) * '18~'22년 진정·권고 통계 및 권고 사례 분석, 진정 대응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인권문화 콘텐츠 활성화)**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인권소식지 △인권영화제 △인권아카데미 △인권주간* 등 진행 * '23년부터 세계인권의 날(12. 10.) 전후로 1주일간 직원 관심을 끄는 인권 행사 집중 진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의 한계 ○ 지역경찰관들이 교대근무로 인권교육 외 추가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갑질근절,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교육내용을 보완·발전시켜, 경찰관의 인권교육 수용성 향상 노력 - 내·외부 인권교육 역량의 지속적 강화

23	Ⅵ-2-(3)-③	군 장병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군인권총괄담당관실
	과제목표	○ 군 장병 인권교육을 통해 군 장병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향상			
	주요내용	○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인권교육, 인권교관 인권교육, 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군인권교육	361	368	7	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인권교육 운영
- 국방대 지휘관 인권과정 운영(4회/63명)
- 국방부·인권위 공동 지휘관 인권교육(3회/54명)

○ 부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 운영
- 국방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7회/243명), 국방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9회/365명)

○ 군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의료, 수사, 교정, 법무, 상담, 훈육, 모니터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11회/523명)

○ 사이버교육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인터넷 나라배움터 인권의 이해과정(20회/5,673명), 군인 인권의 이해과정(20회/13,860명)
- M-MOOC 인권의 이해 특강과정(20회/35,146명), 군인 인권의 이해 특강과정(20회/37,851명), 인권교관을 위한 인권교육과정(20회/8,750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 부대 인권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인권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부전문강사 지원(120회)

○ 장병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국군 인권교육 교재(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제작·배부
- '수사업무종사자 인권교육 교안' 제작·배부
- 군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군 인권강의 동영상 2편 제작·배부
- 국방홍보원과 협력하여 인권 관련 프로그램(행복한 군대 이야기) 43편을 제작하여 방영·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군(진급자) 및 연・대대장 등 지휘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 ○ 인권교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향상 - 인권교관 인권교육 결과 인권의식 점수가 평균 16.9점 상승(교육 전 64.9점 → 교육 후 81.8점), 인권교육 평균 만족도 97점 ○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인권교육 이수 ○ 외부인권전문강사가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교관 및 부대의 인권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질높은 인권교육 제공 ○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부하고,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인권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부대 인권교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보호 의식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부대 지휘관의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 고위정책결정자과정(장군진급선발자) 인권특강 실시 - 국방대 지휘관 인권교육과정(연대장・대대장) 운영(연 4회) - 인권위와 협업을 통한 지휘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연 15회) ○ 군 인권업무종사자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 인터넷 나라배움터 2개 과정, 인트라넷 M-MOOC 3개 과정 - 인트라넷 M-MOOC에 2개 과정 신설 추진 ○ 부대 인권교육에 민간인권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확대 ○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화 콘텐츠 개발 - 인권위와 협력하여 각 군별 간부용 인권교육 교안, 각 군별 병사용 인권교육 교안, 훈육업무 및 의료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교안 제작 - 국방홍보원과 협력하여 '군플렉스(군쪽이의 인권상담소)' 프로그램 제작·방영, 영상 자료를 군인권지키미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활용

24	Ⅵ-2-(3)-④	변호사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무과
과제목표	○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제고			
주요내용	○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원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33	744	△29	△3.8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지원)	274	232	△42	△15.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연수과정에서 변호사 윤리교육 실시
- '23. 5.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1학점 부여
- '23. 변호사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연수 2시간 실시
○ '23. 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리 교육 실시
○ '23. 8.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3. 9. 대한변호사협회 공직퇴임변호사 윤리교육 실시
○ '23.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회의 참석하여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확대 방안 개진
○ '23. 「법조윤리협의회」회의 참석하여 법조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협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기존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속적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의 강사 파견 및 윤리교육 지원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지속적 협의하여 변호사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25	Ⅵ-2-(3)-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지역복지과

과제목표

○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을 통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주요내용

○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직무소진 해소, 이를 통한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과정, 직급별 교육 과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정, 위기가구 발굴 과정 등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240	폐지	-	-
(사회복지 교육훈련)	660	폐지	-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165,029	-	-
(사회복지 교육훈련)	-	46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총 20과정 124회 4,868명 수료
-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6과정 69회 1,966명 수료
- (직급별 교육) 5과정 33회 856명 수료
- (지역사회보장계획) 6과정 11회 1,893명 수료
- (강사양성) 3과정 5회 153명 수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 공직 생애 전 주기적 역량 강화 교육 체계 강화
- 기본적인 복지 가치와 역할 인식을 통한 복지업무수행 기반 조성

○ 지역사회 보장 및 민관협력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 현장감 있는 지역복지 발전 방향 모색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현안업무 등으로 교육 취소(이탈 현상) 다수 발생
○ 지역별 수료 인원 편차 발생

향후추진계획

○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 수요조사 결과 반영 강화로 효율적인 교육계획 수립
○ 세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수행체계 강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소진 해소 및 직무이탈 방지 교육 확대

26	Ⅵ-2-(3)-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보호자립과
과제목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인권 옹호역량 강화,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 아동인권 개념 이해, 인권 민감성 훈련(활동, 토론) ○ 개인정보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618	4,962	△656	△1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2,702	3,172	470	17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801	80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영문자료 개발 및 배포
- 신고의무 직종 관련기관 67개소 자료 배포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교육 : 총 5회 150명 교육 실시('23.3~11월)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총 12회 363명 교육 실시('23.3~11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중 영문사용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함으로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 ○ 아동 권리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병행실시에 따른 아동 인권보호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운영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 및 전문화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26	Ⅵ-2-(3)-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 및 전문성 확보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2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46,131	38,178	35.5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5,532	5,644	112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원, 인권보호 방안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약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의식 및 전문성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종사자 교육추진(지속)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안전지원과 교육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 보호 교육 등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분야 강사사례비	36	3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탈북민 양성평등·인권교육과 관련 △여성인권과 양성평등(3시간)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2시간) △가족분야 생애설계(4시간) △자유민주주의 이해(2시간) △준법교육(2시간) △알기쉬운 인권이해(2시간) △법률피해 구제사례(2시간) 등 총 19시간 교육 실시

○ 탈북민 양성평등·인권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단계 사기피해 예방교육(1시간)을 신설하고, 법률사례교육(분소)을 확대 개편(2시간→3시간)

○ 하나원 양성평등·인권교육 기본교재인『사회생활』개편 발간('23.6월)

- 자유민주주의, 생활 법률, 결혼과 가정생활 등 추가·보완

○ 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을 통해 지역 전입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양성평등, 비폭력대화, 자기이해 등에 대한 개별 및 집단상담 진행 △법률교육(생활법률, 인권, 기본권, 노동권, 법적 구제절차 등) 및 상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 양성평등·인권 의식 함양 제고 - '23년 하나원 수료 탈북민 교육생 144명 전원 인권교육 실시 - '23년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초기집중교육 108명 수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24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은 △실제 사례 및 현장 체험 교육 △법률 교육 △체육 활동 등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생 맞춤형 교육 추진

- 탈북민 정착과정을 연극으로 만들어 교육생 대상으로 공연할 예정인바, 극본에 성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등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 교육시간을 확대

○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담 등 통합안전지원 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 계획에 반영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진행, 아동권리 이슈 공론화			
	주요내용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권리 이슈 공론화 ○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아동권리 향상에 대한 대국민 아동권리포럼 포럼 개최(4회, 총684명 참석) * (주제) 1회차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투자방향, 2회차아동권리와 기후환경, 3회차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 4회차아동에게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한 아동참여 보장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보호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학계, 아동 및 시민단체 등의 포럼 참석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이슈를 공론화하여 아동정책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4년 아동권리포럼 추진(1회, '24.11월 예정) ○ 2024년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추진('24년 하반기 예정)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 근로자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1,256	1,005	△251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 * '23년 입국후 취업교육 E-9 73,989명, H-2 19,174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근로조건 권리구제 강화 -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해 93,163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 지속적 운영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통해 근로권익 침해사례 예방 및 근로청소년 보호의식 제고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교육 및 홍보 추진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 보호교육 등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대상별·내용별 추천 콘텐츠 발굴 및 보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양평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4,147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이관	329	-	△329	순감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84	3,415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이관	-	229	229	100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7,606	7,953	347	4.6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사업종료	1,273	-	△1,273	순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7,760	7,961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 *사업종료	58	-	△58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23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북한이탈여성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사업 종료

'23년 주요 이행 실적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4종) 및 교보재(4종) 개발
○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인권보호 교육 추진(46회, 436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발달장애인 양육자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개발·보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인권보호 교육 운영을 통한 폭력 예방 및 안정적 정착지원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24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포함하여 교육 추진
○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24.~)

28	Ⅵ-2-(5)-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지역 양성평등센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지역 성 주류화,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 관련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 청년·학부모 등의 주민참여형 정책모니터링 실시
- 취업·주거·안전·맞돌봄(부모가 함께 아이돌봄) 문화 확산 등의 소통 프로그램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4,407	4,075	△332	△7.5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1,288	917	△371	△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 버스정류장 유모차 진입로 개선(전북), 지하철 역사 수유실 접근성 개선(인천) 등

○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소통 기회 마련

* 맞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지역별 간담회 추진(6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체감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맞돌봄,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지역별 청년·중장년 소통·공감 간담회('24년 6회 예정) 실시 및 지역별 특색 있는 양성평등 의제 발굴
-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지속 추진

29	Ⅵ-2-(5)-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과제목표	○ 생활 속 차별 언어 등 표현 개선과 평등 실천문화 확산			
주요내용	○ 생활 속 차별 언어 등 표현 개선과 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국어사전의 차별적 표현 개선 및 공공언어 진단 시에 차별 언어 사용 점검 - 사용자 의견 및 내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속담, 뜻풀이, 용례 등에 있는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정비하고 올바른 용법 제시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속 차별적 언어 표현 사용 사례를 조사하고 진단하며 공공언어 감수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2,005	1,748	△257	△12.8
▪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2,186	1,918	△268	△1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소통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 진행(11회)

* 소통성 평가 기준

	소통성 평가 기준
1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2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3	보도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되었다.
4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5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6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 공공언어 감수 시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점검

○ 국어사전의 차별적 표현 정비

- 장애 관련 표제어 뜻풀이 및 용례 정비(85건), 성차별적 용례 수정(10건)

* 국어사전 정비 예시

표제어	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지적 장애	뜻풀이 수정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 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추 신경계통에 장애가 생겨 정신 발달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재활	뜻풀이 수정	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함.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거나 훈련을 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함.
사람(을) 잡다	용례 삭제	그 여자, 얼굴은 별로이지만 그 예쁜 목소리는 사람을 잡는다.	-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도자료 평가 11회 실시('23년 1~11월) ○ 장애, 여성 차별적 요인이 있는 뜻풀이, 용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권위적 · 차별적 표현 진단을 위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별적 어휘나 표현을 기계적으로 일괄 추출할 수가 없어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사전에 실린 어휘나 용례는 경우에 따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바,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 국어사전의 뜻풀이 용례 등에 있는 차별적 표현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30	Ⅵ-2-(5)-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친화기반과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진행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맞돌봄 사진전 등 홍보 추진 ○ 가족정책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센터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가족정책 홍보)	1,900	-	△1,900	△100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가족센터 홍보 사업은 부처 내 홍보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제 완료	

'23년 이행실적	○ 가족센터 홍보 추진 - 가족센터·대표번호 홍보영상 집중 송출('23.3~11월) * TV(KBS1) ('23.3~9월), SNS광고(23.5,9,11월), 옥외광고(23.9월)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 진행 - 가족서비스 이용자 우수사례 및 주요 가족사업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등 SNS 콘텐츠 제작 등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자체 콘텐츠 제작 - 가족센터 이용독려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23.8~11월) ○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23.6~11월) * 접수 1,740건, 시상 17건, 최종수상작 전시('23.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 가족센터 및 대표번호 홍보영상 집중 송출, 주요 사업 관련 홍보콘텐츠 확산 * TV(KBS1) 평균시청률 3.65%('23.3~9월), SNS광고(유튜브, TVING, SMR) 누적 조회수 23.6백만회('23.5.1.~5.31., '23.9.1.~9.30.), 옥외광고(KTX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日 합계 396회 송출('23.9.1.~9.3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24년 사업폐지로 향후 추진계획 없음

31	Ⅵ-2-(5)-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주요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실적	○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참여 -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3.2.)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안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지연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 시 적극 협력